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의안 번호	283
----------	-----

제안연월일 : 2018년 12월 18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I 관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II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8. 11. 2(금) ~ 11. 15(목) <14일간>

※ 제284회 정례회 : 2018. 11. 1(목) ~ 12. 20(목) <50일간>

-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주요 감사대상 업무

- 2017. 11월 ~ 2018.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진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Ⅲ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대상 선정 기관 : 232개 기관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현황

구분	계	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
계	232	3	29	19	27	13	45	44	6	4	42
위원회의결	154	3	10	7	27	7	7	41	6	4	42
본회의결	78	-	19	12	-	6	38	3	-	-	-

※ 감사대상 기관 : 당초 계획 대비 1개 기관 감소(보건복지위원회)

■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별 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 의결 선정기관(78)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8)
운영위원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기획관 ○ 비상기획관 ○ 정보기획관 ○ 민생사법경찰단 ○ 행정국 ○ 재무국 ○ 평생교육국 ○ 인재개발원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평생교육국 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립청소년드림센터 -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기획경제위원회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 경제진흥본부 ○ 일자리노동정책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 강북근로자복지관 ○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8)
환경수자원 위원회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사업소 : 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 상수도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 :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 남부수도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아리수정수센터 : 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딱도아리수정수센터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 ○ 시민소통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교통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8)
보건복지위원회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본부 ○ 시민건강국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 1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능력개발원 ● 서부여성발전센터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여성공예센터 디아리움 ●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상상나라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복지본부 소관 : 1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어르신들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인권센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늘편한집 ● 해맑은마음터 ● 신아재활원 ● 서울역쪽방삼당소 - 시민건강국 소관 : 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라매병원 ● 동부병원 ● 북부병원 ● 서남병원 ● 장애인치과병원 ● 고양정신병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154)	본회의의결 선정기관(78)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총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업소(6개소) 포함 ○ 소방재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학교 - 서울종합방재센터 - 특수구조단 - 소방서(24개소) ○ 물순환안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재생센터(2개소) 포함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기술심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시험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株)탄천환경 ○ (株)서남환경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계획관리 위 원 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주택건축국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교 통 위 원 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본부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교 육 위 원 회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17개)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관(4개)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11개)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IV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운영위원회 (13)	서윤기	노식래 이영실	김경영, 박기재, 박순규, 양민규, 오중석, 이동현, 임종국, 한기영, 홍성룡, 이성배	박노수, 박남기, 박태현, 김석기 박순종, 김우영, 강택기, 김혜진 이양숙, 김덕영, 노문호
행정자치위원회 (11)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한태식, 김태한, 박희숙, 신희 김정덕, 조용주, 최석훈, 정희 김남현, 김경선, 강태영, 잔일 고은하, 김고은, 이보람, 경희 상군
기획경제위원회 (12)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강상원, 신익수, 주우철, 김성만 김나래, 이강수, 이수호, 이라 김용우, 노혜미, 박은샘, 미라 최범준
환경추진위원회 (12)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김선희, 김달호, 이재호, 박귀수 피재황, 조창훈, 김진태, 윤수 장진영, 김경혜, 김상입, 서광 최우현, 방우리, 한채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김경욱, 강헌, 장선경, 이지영 김창균, 박지혜, 김현정, 한근 류선실, 이순복, 주창현, 은비 심형준, 이원준, 최윤미
보건복지위원회 (11)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정창훈, 김동현, 이문성, 한영근 이미영, 이정화, 이지현, 유덕 김일경, 강상원, 김영진, 서영 송예진, 조형섭, 장일진, 김성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2)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이상근, 임기준, 진현우, 신민표 박남권, 심현보, 권혁일, 최은 신행숙, 공혜석, 정재설, 임태 김성연, 박희황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3)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조정래, 오정균, 김성수, 강천수 이상연, 이성훈, 임경숙, 최정 한봉수, 정희희, 최은섭, 한영 김다운, 송명희, 김한울, 이 김봉환
교통위원회 (13)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김동수, 박종길, 장훈, 유선 조성준, 조도형, 장희춘, 유은 박은영, 조준영, 광광수, 유희 김유라, 안진주, 임상걸, 최혜 김유라
교육위원회 (13)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김창범, 박광선, 이준석, 임학식 신선교, 이원상, 정진국, 이형 최원종, 하혜정, 이지현, 백경 이민이, 이중희, 지병철, 은 김지수, 최용석, 조지훈

V

감사 일정 및 장소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5(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청 비서실 ○ 서울특별시 정부부시장실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11.02(금)	10:00	○ 재무국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1.05(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사법경찰단 ○ 인재개발원 		
	11.06(화)	10:00	○ 행정국(자원봉사센터 포함)		
	11.07(수)		○ 감사자료 조사 및 정리		
	11.08(목)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국 -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포함 		
	11.09(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국 - 민간위탁 기관 		
	11.12(월)	10:00	○ 서울혁신기획관		
	11.13(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획관 ○ 비상기획관 		
	11.14(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1.15(목)	10:00	○ 종합감사(미진부분 집중감사)		
기획경제위원회	11.02(금)	10:00	○ 서울연구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1.05(월)	10:00	○ 서울시립대학교		
	11.06(화)	10:00	○ 서울디지털재단		
	11.07(수)	10:00	○ 기획조정실		
	11.08(목)	1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11.09(금)	10:00	○ 서울산업진흥원		
	11.12(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진흥본부 ○ 서울시립과학관 ○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1.13(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주) ○ 가락시장정산(주) 		
	11.14(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노동정책관 ○ 서울특별시 교술교육원(4개소) 		
	11.15(목)	14:00	○ 종합(미진) 감사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간			
환경수자원위원회	11.02(금)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11.05(월)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11.06(화)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사업소 : 3개소		
	11.07(수)	10:00	- 서울대공원, - 서울식물원		
	11.08(목)	10:00	○ 서울에너지공사		
	11.09(금)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 : 8개소		
	11.12(월)	10:00	- 아리수정수센터 : 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11.13(화)	10:00	○ 한강사업본부		
	11.14(수)	10:00			
11.15(목)		○ 자료정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02(금)	10:00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4:00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11.05(월)	10:00	○ 서울역사박물관		
		14:00	○ 서울시립미술관		
	11.06(화)	10:00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4:00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11.07(수)	10:00	○ 문화본부		
	11.08(목)		○ 자료정리		
	11.09(금)	10:00	○ 대변인		
		14:00	○ 시민소통기획관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11.12(월)	10:00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14:00	○ 교통방송		
11.13(화)	10:00	○ 관광체육국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11.14(수)		○ 자료정리			
11.15(목)		○ 자료정리			

위원회명	감사 일정		대상 기관	감사 장소	비고
	월 일	시간			
보건복지위원회	11.02(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 관련 시설(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여성발전센터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보건복지위원회 의 실	
	11.05(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11.06(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정책실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11.07(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복지재단 ○ 장애인 관련 시설(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인권센터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해맑은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 재활 관련 시설(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역쪽방삼당소 		
	11.08(목)		○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11.09(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노인 관련 시설(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11.12(월)	10:00	○ 복지본부		
	11.13(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 위탁병원(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 고양정신병원 ○ 정신보건시설(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정보건강복지센터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11.14(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건강국 ○ 직영병원(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 공공보건의료재단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11.15(목)		○ 자료정리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1.02(금)	10:00	○ 안전총괄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05(월)	09:30	○ 안전총괄본부 - 도로공동탐사 현장 및 월드컵대교 건설 현장	현장 확인 감사	
	11.06(화)	10:00	○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07(수)	10:00	○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08(목)	09:30	○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타운 공사현장	현장 확인 감사	
	11.09(금)	10:00	○ 물순환안전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2(월)	09:30	○ 물순환안전국 -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현장 확인 감사	
	11.13(화)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11.14(수)	09:30	○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현장	현장 확인 감사	
	11.15(목)		○ 감사결과 정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1.02(금)	10:00	○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1.05(월)	10:00	○ 도시재생본부		
		14:00	○ 지역발전본부		
	11.06(화)	10:00	○ 지역발전본부		
		14:00	○ 도시계획국		
	11.07(수)	10:00	○ 도시계획국		
		14:00	○ 도시공간개선단		
	11.08(목)	10:00	○ 주택건축국		
	11.09(금)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11.12(월)	10:00	○ 서울주택도시공사		
11.13(화)		○ 감사자료 정리			
11.14(수)	10:00	○ 도시재생본부 ○ 도시계획국 ○ 지역발전본부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5:00	○ 도시재생본부 ○ 주택건축국			
11.15(목)	14:0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원회명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월 일	시간			
교 위 원 통 회	11.02(금)	10:00	○ 도시교통본부	교 통 위 원 회 의 실	
	11.05(월)	10:00			
	11.06(화)	10:00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등		
	11.07(수)	10:00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11.08(목)	10:00	○ 서울교통공사 -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등 자회사 포함		
	11.09(금)	10:00			
	11.12(월)	10:00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등		
	11.13(화)	10:00	○ 서울시설공단		
	11.14(수) ~11.15(목)		○ 감사결과 정리 및 자료수집 등		
교 위 원 육 회	11.02(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11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서 울 시 교 육 청 감 사 장	
	11.05(월)	10:00			
	11.06(화)	14: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 육 위 원 회 의 실	
	11.07(수)	10:00			
	11.08(목)		○ 자료정리 및 감사준비	교 육 위 원 회 의 실	
	11.09(금)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11.12(월)	10:00			
	11.13(화)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11.14(수)	1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기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14:00	○ 서울특별시교육청 종합감사		
	11.15(목)		○ 감사결과정리		

VI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

위원회명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사항	비고
기획경제위원회	11.15(목) 14:00	경제진흥본부 종합(미진)감사	○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운영사업단장	증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1.02(금) 10:00	도시재생본부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증인
	11.05(월) 10:00			
	11.08(목) 10:00	주택건축국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센터장)	증인
	11.09(금) 10:00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대표) ○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용지보상처장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대표)	증인
	11.12(월) 10:00			
	11.09(금) 14:00	서울주택도시공사	○ 동남권유통단지 푸드코트시설 (전대계약으로 인한 피해자 2명)	참고인
교통위원회	11.02(금) 10:00	교통본부	○ 카카오모빌리티 ○ SK텔레콤(주) ○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 한국맥도날드(유)	증인
	11.05(월) 10:00			
	11.08(목) 10:00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현대로템(주) ○ (주)다원시스	증인
	11.09(금) 10:00			
교육위원회	11.13(화) 10:00	교육행정국	○ 서울상도유치원(원장) ○ 다단구조안전기술사무소(소장) ○ 탐 건축사무소(건축감리) ○ 아주엔지니어링(토목감리)	증인
			○ 시공사(대표) ○ 기술자문	참고인

VII

감사결과 (총괄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계	4,156	1,881	810	1,465
운영위원회	95	44	38	13
행정자치위원회	358	195	84	79
기획경제위원회	718	244	201	273
환경수자원위원회	393	128	152	1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6	129	104	123
보건복지위원회	675	353	33	289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81	207	20	5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308	117	82	109
교통위원회	313	200	23	90
교육위원회	659	264	73	322

시정·처리요구 사항 ----- **1,881건**

■ 운영위원회 ----- **44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26건

1. 투자·출연기관의 직원 정수와 임원 정수를 비교해 보면 임원수가 많은 곳이 있는데 임원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임원이 장기 공백 상태인 기관이 있는데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람.
2.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보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부할 때 시의원과 사전협의하고 형평성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3. 용산공원 버스투어 관련 시의회는 배제되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용산공원 관련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에 서울시 출신이 아닌 혁신적 인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5. 공무원, 공기업 임원 및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데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6. 특정인사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용역을 수주하는 등 회전문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주시기 바람.
7. 민간 또는 타 자치단체와의 MOU체결이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8.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연도별 계획서를 보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문제점 개선 없이 양적인 부분을 확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정해주시기 바람. 또한 자치구와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예산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9.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3년 동안 611만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는데 위탁 판매하는 티켓에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시정해주시기 바람.
10. 지방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발행되어야 하나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피소사건이 많은데 서울시가 공사계약 위반 등과 같이 막대한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서 손실을 회수하여야 할 것임.
12.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범시행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13.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
14. 여의도 한강공원 밤도깨비 야시장은 이용하는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쓰레기, 음식냄새, 배달존, 음란텐트,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15. 최근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09년 7월에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련한 특별법관련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소급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5년간 임대료 동결 등 과도한 부대조건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16. 남산터널의 경우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혼잡통행료 징수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던지 개선책이 필요함. 또한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권익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람.
17. 지방의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이미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 각 부서에 공지했으나 여전히 자료제출시 이와 같은 사유로 자료 미제출 혹은 부실제출이 반복되고 있으니 시정바람.

18. 디지털재단 임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고, 다른 기관들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조치 후 보고해 주기 바람.
19. 뉴딜일자리가 공공근로 수준의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2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출범한 자회사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정책이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재차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해 주기 바람.
21. 시장 취임 이후 16회 걸쳐 조직개편을 시행했는데 빈번한 조직 개편이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오해가 언론에 비취지지 않도록 근본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시의 관련 상임위 소관부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해주기 바람.
22. 조직개편에 따른 각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고려를 충실히 이행할 것
23.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장기 공백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이들 인사를 시의성과 타당성 있게 결정해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해주기 바람.
24.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절차를 개선된 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에 있어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처우의 차이가 없도록 개선할 것.
25.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시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시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26. 서울시 발주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예산증액 관행을 개선할 것.

□ 시의회사무처 : 18건

1.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기간이라도 주말에 직원식당 방향에서 의원회관 2층 으로 통하는 출입문 개방 검토
2. 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시 이행실적 평가 미실시 사유
3. 의원회관이 10시면 소등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기간이라도 소등시간 조정 검토

4.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최저가로 낙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
5. 별관2동은 출입증이 없으면 통행이 불편하고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만 이용 하도록 되어있어 개선필요
6. 입법지원관의 채용방식이 실무와는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 체계 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이 시급함.
7. 의정활동 홍보광고 예산 집행률이 낮음. 의정활동 홍보광고 사업을 효율적·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검토
8. 여론조사 실적을 보니 특정 지역, 특정주제에 치우친 것 같은데 전체 의견 수렴 등 개선 노력이 필요
9. 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청년특별위원회 지원금 지급 검토
10.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규정」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라급)’에 대한 대외직명 (입법지원관) 명시 검토
11. 계약투명성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해서는 조례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저조한데 관련 조례가 의미 없는 것인지 검토 바람.
12. 제9대 의원에게 제공한 노트북 등 고의 미반납의 경우 개선책 마련
13. 퇴직금 지급기간 준수 철저
14. 시립미술관 주차장 이용시 후문 출입구가 입차는 되는데 출차는 되지 않아 개선 필요
1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②항에 규정된 의원의 누적출석일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범위, 방식에 대해 검토
16. 계약투명성 심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여부
17. 행정사무감사 관련 책자를 적정부수만 인쇄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
18. 의원회관 9층 샤워실의 샤워꼭지 물줄기가 약하므로 조치 필요

□ 서울혁신기획관 : 32건

1. 마을활력소 등의 공간개선사업의 목적은 주민들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조성 첫해에는 활동이 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운영비 등의 문제 때문에 활동이 침체해지고 있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사업이 묶여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불만이 많음. 주민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제안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임.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현장 활동가 불만이 있으니 개선하기 바람.
3.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인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10월말 기준 참석률이 너무 낮음.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강사의 자질 및 강의내용에 관한 비판의 글을 봤을 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인권교육은 중요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기 바람.
4. 서울시 엠보팅앱을 활용한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객관성이 담보가 안 됨. 이권개입방지 등 공정성을 위한 엠보팅 반영률 50% 비율을 조절할 필요성 있음.
5. 시민참여예산 선정 관련 엠보팅을 통한 투표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민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기 바람. 엠보팅 참여율이 낮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6. 인권교육 등 의무교육이 연말에 일괄 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7. 민간위탁기관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및 법적검토 후 내부감사 조치하기 바람.
8. 각 소관 위원회 위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심의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9. 민간위탁기관의 재위탁 공모율이 상당히 높는데 운영에 관한 사례는 재위탁 할 수 없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대해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NPO지원센터의 위탁은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위탁 업체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했는데 개선하기 바람.
11. MOU체결 등 양해각서를 받는 행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기 바람.
12. 서울시 NPO지원센터 2017년도 소관위원회 위원에게 컨퍼런스 세션 구성 과정에서 500만원 지급 건 및 2018년도 총 4건 위원들과 사업을 하고, 2건에 의해서 270만, 675만원 지급한 적이 있음. 이는 조례, 서약서, 상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임.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위원의 NPO지원센터 사업 참여의 사례가 다른 위원회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전 위원회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람.
13. 청년교류공간이 교육연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숙박으로 운영되고 개인인권을 위해 CCTV를 가리고 있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야간 연구시 직원이 반드시 상주해야 함.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시정 바람.
14. 청년허브 강당을 사업적 성격인 재개발조합총회에 대관하는 등 시설 운영 목적이나 대관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된 사례가 있는데 개선하기 바람.
15. 혁신파크는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열악한 시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외면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음. 서울혁신파크 전반적으로 시설개선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6. 협치 분야의 사업집행율과 집행 예상액이 저조한 부분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
17. 청년자치정부 관련하여 청년자치정부 수립시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청년문제의 핵심인 일자리와 주거관련 권한이 없이는 청년자치정부가 청년들을 대표할 수 없음. 적극적인 재검토를 바람.

18.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중복, 반복 지원에 대한 언론보도 등 외부 지적 사례가 있는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19년 사업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9. 보조금 중복지원에 대한 개선과 지원금이 명확한 심사에 의해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0. 서울혁신파크 및 청년청의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1. 수탁기관 변경으로 책임을 물을 기관조차 사라짐. 서울시의 민간위탁금을 80억원 가까이 수탁받아 집행하면서 서울시 사업을 아무 때나 사정 변경이 생기면 협약해지를 요청해도 되는지 의문이 듦. 수탁기간동안 거의 전직원이 이직하고 새로 입사했음. 이래서 민간위탁 사무의 연속성, 책임성이 보장될 수 없음. 민간위탁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22. 2017년 결산기준 불용률은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규모(2.3%)보다 높은(17.3%) 14억7천만원임.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23.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이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정보에 어두운 소규모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4. 마을 밥차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 자치구에 편중돼 있고 기 시행중인 부서 (인생이모작지원과, 자활지원과)가 있음에도 추가 시행이 적정한지 의문임. 또한 일반시민에게 무료 급식 제공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법적 검토 바람.
25. 밥차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하며 동일한 곳을 재방문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서울시 예산을 특정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안 보고바람.
26. 2017년 민간위탁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며 불용액이 전체의 12%로 평균(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2018년 집행률도 50%미만이 있음 연말에 몰아서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27. 민간위탁 사업개시 한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음에도 2월 말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늦어도 1월초에는 제출하여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28. 청년수당 관련하여 사업근거가 부실하며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며 담당 인력이 매우 부족함. 인력확충 및 참여자 관리 방안 검토 후 보고바람.
29. 청년수당 현금인출 악용사례가 너무 많으며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하고 있음. 현금인출 할 수 없는 방안 마련하여 보고 바람.
30. 2020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세부적 추진계획이 전혀 없음. 2014년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문제를 알고도 구체적 계획에서는 소외된 측면이 있음. 빈곤·은둔·니트 청년의 지원을 위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지역밀착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람
31. 민간수탁 기관이 사용료 등 수입금을 자체 사용.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남. 법에 맞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집행이 공정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바람
32.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서울시의 위원회가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지고,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음. 서울시의 각종위원회를 관리·총괄하는 부서로서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비상기획관 : 14건

1. 2015년 설치된 안보정책자문위원회는 법적 설치근거나 기준이 없음. 3년간 적법하지 않은 위원회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집행해온 것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2. 각 민방위대비 자치구 평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음.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
3. 민방위 관련 자치구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4. 안전교육센터가 위치한 7개구를 제외한 18개구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대원들이 균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연구할 것.
5. 민방위 장비 6종에 대해 내구연한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구입계획을 검토하여 확보율이 지나치지 않도록 할 것.
6. 민방위 훈련 통지서 전달방법에 대해 직접전달, 전자전달, 등기전달 중 효과

- 적인 방안 연구를 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비상기획관 제출자료 중, 미비한 자료들이 있고 이에 대해 기 지적된 바 있음. 반복되고 있는 점들을 보완하여 추후 재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8. 각 자치구마다 민방위 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민방위 교육을 잘 활용하면 생활안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민방위 대상자들의 불참률 제고 및 시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9. 비상시 음용수 확보율이 16.6%. 음용수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물품임. 지나치게 낮은 음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7월 임시회에서 2018년도 을지연습 취소로 인해 훈련 예산 2억 2천 만원에 대한 감축추경을 하기로 하였는데 실시하지 않음. 11월 말까지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금고에 묵혀 있었음 이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것임. 조치바람.
 11. 을지훈련 취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함에도 홍보가 매우 미비함. 훈련관련하여 시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을지훈련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고 있음. 국가 훈련인 을지훈련을 100%시비로 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시에 넘기는 것임. 국비 유치 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3. 서울시의 미래지향적 안보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맞춤형 안보정책개발 비(3천만원) 예산을 일반용역으로 편성한 것은 학술용역으로 편성 시 용역심의회의 심의나 용역결과를 첨부하는 등의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듦. 서울시 안보시책을 세우기 위한 것을 단순 자료 통계를 잡기위한 일반용역이 되면 안 됨. 2017년2018년도 용역결과 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진정 시책에 도움이 되었는데 일반용역으로 분류된 이유 등을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할 것.
 14. 2015년도에 제정된 서울시 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세부 시행규칙 등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조례상 규정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는 업무해태로 보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함.

□ 정보기획관 : 14건

1. 양극화, 지역격차 해소에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중 교육, 문화, 정보통신 계층간격차가 심화되어짐. 중구와 동작구 4.5배 차이를 보이고, 중랑구. 도봉구 인구밀도가 높음에도 와이파이 설치는 부진함.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데이터 걱정 안함. 데이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임. 서울시가 구축한 와이파이를 설치한 곳은 대부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있어 상당히 이율배반적임.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설치되기 바람.
2. 최근 3년간 폐기된 공공앱 23개, 개발비 10억여원임. 서울시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지양하고, 공공앱의 필요성, 유사·중복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앱 중 평점이 낮은 것과 사용률이 저조한 공공앱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4. 25개 자치구 CCTV 연계, 통합체계 구축 시 백도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위한 대책 마련, 의회보고 바람
5.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200만 화소이하 CCTV에 대해서 교체 사업을 예정하고 확대하려고 하는 바, 그에 대한 관리와 교체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 할 것
6. 현재 우수한 인력들을 시대흐름에 맞게 충원할 수 있는 인력 계획을 세우기 바람
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외부업체에 용역으로 주고 있고 동일 동일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몇 년째 하고 있어, 업무 및 정책 등이 외부업체에 종속화 될 수 있음이 우려됨으로 정보주도권을 정보기획관에서 잡고 있도록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2018년 예산이 9억임에도 효과성이 없음. 관련 설문조사도 없고 시민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도 어려우며 모바일도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음. 또한 모바일, 웹사이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지하철 역 등에 터치스크린을 설치 등 대안 마련하기 바람.
9. 에스플렉스센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이전 등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 필요.

10. 25개 자치구중 자치구에서 CCTV구매 및 설치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CCTV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자치구간 인구 등이 감안된 예산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며, 2019년도부터 예산지원방법이 변경되는 만큼 예산이 많은 자치구와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간 불균형이 초래하지 않는 방안 마련할 것.
11.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명칭을 자의적으로 '스마트 시티 기구'로 바꾸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조례 개정과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임. 재발방지 및 향후 대책 마련바람.
12.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집행부에서 '스마트시티 기구'라고 명칭을 자의적으로 부르면서도 홈페이지 검색은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로 검색해야 접속이 가능함.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13. 서울시는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으로 매년 10억의 예산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홈페이지 관리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음. 회원도시 는 145개 임에도 홈페이지에는 59개만 회원도시로 나오고 있으며 관리가 매우 허술함 당장 조치해 주기 바람.
14. 서울시는 조례상 매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미이행하고 있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과 활용성이 일반국민수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민생사법경찰단 : 16건

1. 사무관리 집행내역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보면 총액은 맞으나 세부내역이 다름. 모두 전용해서 사용하였음. 기본원칙은 지켜주기 바람
2. 민사경 소속 직원의 재직기간이 짧아 전문성 떨어짐. 민사경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조직에 비해 재직 기간이 길어야함에도 2년 미만 재직 직원이 다수이며 특히 부동산수사팀, 보건의약수사팀에 전문성 갖춘 인력이 드물어 제대로 수사가 어려워 보이며 이에 대한 인사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바람.

3. 민사경의 핵심은 행정지식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 경험에 의한 수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재직기간으로 인한 전문성 미비 보완 대책과 직렬간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해주기 바람.
4. 치안활동비 포함 특사경 수사활동비의 상향에 대해서 공식적인 협의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유선으로 협의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예산반영을 위해 제도적 조치를 강구할 것.
5. 법정 의무교육을 직무역량 교육 등의 자체교육을 할 시 단순한 당부사항으로 교육하여 의무교육 이수로 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의무교육이수에 대해 실효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산바람.
6. 전문관 증원의 속도를 높여주기 바람
7.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들의 가점, 수당,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치안활동비 신설에 노력해주기 바람
8. 민생사법경찰단 직무역량 교육을 8일간 실시하지만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 지속적인 교육체계 및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을 노력해 주기 바람.
9. 사회복지 수사분야를 8월에 신설하였는데 논란이 많은 분야인 만큼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
10. SNS를 통한 홍보시 실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수사실적에 대한 홍보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음. 보도자료를 올리는 정도의 관리라면 시민들이 외면할 것임. 제대로 관리하기 바람.
11. 자치구 파견은 인원구성이 잘 되어야 함에도 구성의 틀이 없으므로 인력구성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2.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장구 충원이 필요한 바 특사경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3. 2년 이하의 재직자들이 많다는 건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됨. 교육이나 기법연마가 필요하며, 수사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수사 전문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인원증가에 따른 수사장비 증가가 필요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3년간 50%이상의 예산이 12월에 집행되고 있음. 연말에 몰아서 수사장비를 구입하지 말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하기 바람.

15. 민생사법경찰단 홈페이지 신고내역에 대한 답변이 2017년에 비해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2018년도 답변은 10월 4일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달고 있음. 시민의 제보에 신속한 반응을 보여주고 조치해 주기바람
16. 2017년과 2018년 신고건수를 보면 갈수록 홈페이지 신고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핸드폰 어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긴급신고 번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행정국 : 19건

1. 찾동의 민선7기 계획은 복지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매우 작은 사업단위를 통해 동네 안에서 인간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개선필요.
2. 서울시의 모든 주민센터에 대한 일률적인 사무공간 개선사업을 지양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맞춤형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3. ESS설치에 대한 투자대비 비효율성, 대기업 친화 등에 대한 문제점 개선 필요
4. 민사경의 파견 직원의 재임기간이 짧고 전문성 없는 인원이 자치구에서 파견되는 실정이며. 대부분 1년 미만 근무 후 자치구로 복귀하는 상황임. 행정국에서 전체적인 인사행정 전반을 다루는 만큼 부서별 인사배치에 신경을 써야함. 특히 민사경 같은 특수 조직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사를 하는 조직인 만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배치와 더불어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해 업무를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5. 공용차량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시민카드의 편의성 미흡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하여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바람.
7. 대외직명제의 통일이 안 되어 있음. 행정포탈과 상이하여 내외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통일하여 시민의 혼란을 해결하기 바람.
8. 대학생 인턴 관련하여 서울시청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꿀알바’라고 함. 공무원의 사명감과 노고가 폄하될 수 있음.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대학생 인턴을 팀으로 만들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계획 제출바람.

9. 민원 관련하여 불친절 평가가 응대태도의 문제가 아닌 민원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인지를 구별하여 징계가 필요.
10. 공무원 법정 의무교육 타 실국에 비해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연말까지 모든 직원이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1. 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예방대책(패널티 부과 등) 마련과 특별교부금 교부시 시의원 및 지역 구의원과의 사전협의 필요
12. 서울시 공무원의 10%인 1108명이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전세자금 대출, 공무원의 국내외훈련 등에서 일반직과 차이가 있음. 임기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개방형직위 국가직과 지방직의 채용인원, 임용기간 등이 다름. 이는 고용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음.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검토바람.
14. 2012년 이후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만여명, 체계적인 공무직 인사제도와 노동조건 개선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공무직 급여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교육·휴가·휴직 등 행정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공무직의 과중한 업무분담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문제 지적. 이에 대한 향후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5. 2018년 10월4일 서공노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하위직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달라’는 신문기사나 공무원 1호 봉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에 못 미치므로 개선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공무원노조와 협의나 대화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6.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비판형 기사(주민자치사업단의 민간위탁과 동자치지원관 채용과 급여지급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담당실국에서 적정한 홍보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할 것.
17.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법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출연금에만 의존해서는 독립적이거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음. 이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금지 기부금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18.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에서 광범위하게 복지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개선방안 마련
19. 서울자원봉사센터의 SNS가 활성화가 덜 되어 있음. 게시물이 자원봉사 유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를 바람.

□ 재무국 : 34건

1. 국정감사에서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서울시의 잘못을 지적받은 건 서울시의회로서 상당히 불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 행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음. 죄송하다는 표현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임.
2. 2016년 대비 2018년 8월까지 과오납이 3배가량 늘어났음. 과오납이 일어나지 않는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교육제도 개선하였으나 변화된 것이 없음. 교육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지 횡수만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의 피로도만 높일 수 있음.
4. 지방세연구원의 해외비교연수 사업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바람.
5. 지방세연구원의 해외비교연수 지원액이 권익위에서 금지 권고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 직원 동행 여부'와 '지방세연구원 경비부담액'이 서울시 여비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전수 조사해 보고하길 바람.
6.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내역과 의회에 미보고 사항 지적.
7.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사용하는 예산과목으로 미리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했음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며, 사용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8. 시금고(신한은행) 대출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부담에 대한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예산 반영기준을 기초실과 협의하여 진행하기 바람.
9. 법률적인 검토가 면밀히 되지 않는 행정이 재무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시정하기 바람.
10. 상품권 지급 관련 임금성격의 지급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부서별로 구입내역을 공개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11. 평잔액 등 자금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며 유휴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12. 빈집활용 및 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더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기 바람.

13.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시민편의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바람.
14.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생기는 세입 결손 관련 재무국과 기초실의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재무국은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말 것.
15. 시금고 은행 변경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기존시스템을 공유하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시금고 선정기준 중 지역사회 개혁 부분에 있어서 신한은행은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썼고 이는 서울시의 계획과 맞지 않음. 지역사회 개혁 계획안이 아닌 협력 사업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하는지를 평가기준으로 해서는 안 됨. 지역사회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17.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S-TAX의 만족도 조사를 서울시 엠보팅시스템으로 하는데 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어플의 사용자는 매우 불만이 많음. 또한 기존 시금고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2018년 4월까지만 답변을 달고 이후 답변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조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작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음. 3일만에 1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정밀하게 하기는 불가능함. 관련 규정을 지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일한 지적이 없기를 바람.
19. 체납징수 과오납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바람.
20. 체납차량 합동단속 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21. 10년간 고액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징수실적은 매년 감소되고 있음. 고액체납자들의 날로 지능화되는 은닉수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2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개원 후 연구실적 8년간 연평균 8건. 올해의 경우 연구실적 5건임. 연구요원 확보도 8년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구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23.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기준이 2014년 1월1일 바뀌었음에도 홈페이지는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음. 신고건수도 2016년, 2017년 각각 2건으로 제도가 정체되어 있음.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재검토 바람.

24.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의 세무직 비중이 높음 팀장급 이상은 세무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임용하여 변화가 필요함.
25. 38세금 징수과 포상금으로 매년 4억원이 쓰이고 있으며 수납액과 목표액 달성률이 감소했음에도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서울시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부분임 시정해 주기를 바람.
26. 서울시 조직개편의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등의 물품관리 효율화 방안의 성과가 미비함. '아나바다 물품 효율화' 사이트는 담당자가 있으나 2014년 이후 사이트 운영이 안 되어 있음. 재무효율화를 위한 조치바람.
27. 일반재산 수탁기관 선정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음에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음. 재검토 및 추후 방안 보고바람.
28.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임. 동법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일 것과,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출연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 합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정하여야함. 현재 모순된 법령운영현황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을 통해서라도 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통제 수단을 마련하여 제도를 정비하기 바람.
29. e-tax 운영 관련 일반과세와 중과세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5년이 지난 법인이 증자등기를 할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해서 개선하길 바람.
30. 공채매입률이 경남은 5% 서울시는 25% 정도인데 공채매입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서울시 세입이 68억정도 증대되는데 이에 대한 조례개정 노력이 요구됨.
31. 사유지매각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대형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음. 이를 총괄할 통일된 기준으로 조례 제정을 건의함.
32. 공채매입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 공문 기타 자료를 제출할 것.
33. 최근 3년간 시효결손처분 전 시효중단 노력을 위해 조치한 자료, 가족 명의, 위장이혼 등 은닉 조사현황 제출할 것
34. 공유재산관리강화대책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의 정보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상 정보가 불일치하는 점에 대해 각 부서에 정비를 요청한 문서와 정비현황을 제출할 것.

□ 평생교육국 : 40건

1. 보라매 청소년수련관과 아이월은 같은 법인이지만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서를 같음. 종합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목적이 다른데 운영계획이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승인한 것이라면 매우 큰 잘못임.
2.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평가지표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통계자료와 실제사례를 제출하기 바라며 해당 자료가 맞는지 의문임.
3. 은평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 이에 대한 검토 조치바람.
4. 은평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의 예산집행이 매우 저조하여 예산의 과대편성 문제가 있음.
5. 은평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지원사업은 예산을 이미 다 소진하였음.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없으며 학교마다 100만원씩 지원 하는 단순 사업인데도 예산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
6. 서울청소년수련관은 계획된 목표인원과 실제 참여인원 수의 차이가 너무 큼.
7. 수서청소년 수련관은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없음 청소년 수련관이 목적없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8. 보라매, 목동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평가지표를 활용한 통계자료, 평가통계자료를 적용한 실제사례 제출.
9. 청소년 쉼터 관련 - 장기 가출청소년은 가정과괴, 가정폭력, 친족성폭행 등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있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비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문인력의 배치와 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한 이직률 감소에도 힘써야함.
10.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많은 사업이 있는 반면 700% 초과하는 사업도 있음.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무관리비의 예산 편성시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기 바람.
11. 성북청소년수련관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또한 청소년시설(은평, 미디어센터, 성동)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는데,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수련관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이나 계약직 직원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히 검토하기 바람.

13.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홈페이지 점검 및 시민 참여성을 높이기 위해 수 용률 제고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4.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은 평생교육국의 업무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으로 본 사업의 성격 및 추진타당성을 분 석하고 사업의 이관 또는 활용방안,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청소년 의회와 참여위원회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중복 참여자에 대한 문제를 조치해 주기를 바람. 중복성이 있을시 청소년 위 원들이 집중할 수 없으며 법적 모순이 발생함.
16. 청소년 수련관에서 4차산업 관련 교육이 코딩, 드론, 로봇 3가지만 존 재하며 진로교육시에 방향성 교육이 추가 되어야 함에도 특정 직업(파 티쉐, 목공예 등)에 대한 유도만 하고 있음. 학교와는 다른 수련관에서 만 할 수 있는 4차 산업 교육, 진로교육을 하기 바람.
17. 시립 청소년 시설 제출자료가 매우 부실함.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감 독을 하고 있지 않음. 늘 상 있었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 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 바람.
18. 시립 수련관 운영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임의로 규정을 만들고 있음. 시장 승인을 받지 않고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건에 대해 조례에 맞는 징계하기 바람.
19. 수서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은 청소년 수련관 이외에 서울시에 독서 실 1곳을 하고 있음. 청소년시설 전문가라고 보기어려움에도 청소년시 설 관장과 법인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것에 의문임. 법인이사장과 수 련관 관장이 같으면 스스로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조치가 끝나버림. 해 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20. 서울시 조례상 일요일에도 운영하게 되어있음에도 미래진로센터는 운영 하지 않으며 당직근무자도 찾아볼 수 없었음. 규정대로 시행해주기 바람.
21. 미래진로센터 프로그램이 청소년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 지 않고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있음. 해당 사업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2. 청소년 수련관에서 4차산업 관련 교육이 코딩, 드론, 로봇 3가지만 존 재하고 있음. 4차산업 관련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안을 검 토바람.

23. 민간위탁시설의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지만 청소년 시설은 별도의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담당 직원들이 매우 불편해 하며 조례상에도 맞지 않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치바라며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방안을 검토바람.
24.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지도점검이 미비하다고 보이는 바 지도점검 강화할 것.
25. 종로청소년 수련관의 운영부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기 바람.
26. 가족자연체험시설 성과지표의 평가항목을 참석 만족도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도록 재검토하여 전면적인 개선을 하기 바람..
27.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의 선발기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해당 공개모집 자료와 선정된 인원의 자치구와 중복여부를 확인을 철저히 하기 바람.
28. 청소년 코디네이터 사업이 민간위탁임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음. 추후 이와 비슷한 예산지출 사항이 있을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동의를 받기 바람
29. 자유시민대학 - 자유시민대학을 100개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근거리 선호때문이라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6.7%에 불과함 100개소 설치에 대해 재검토 바람.
30. 현재 민주시민 교육의 위탁을 흥사단에서 하고 있는데 흥사단은 서울시 학습지원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 센터 등 4개의 시립청소년 시설을 수탁하고 있음. 청소년 전문성과 민주시민 전문성은 다름. 재검토 바람.
31. 보라매 청소년시설의 예산집행이 상당히 저조함 제출자료를 보면 149개 항목 중 107개 항목이 50%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특성화 사업 15개 중 10개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을 과대편성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평생교육국은 면밀히 조사해 주기바람.
32. 동 청소년시설은 80개의 예산 항목 중 집행률 50%미만이 40개 이상이며 2016년 채용현황이 12명 공고 후 17명을 채용하였음. 또한 수영장 강사 채용이 없으며 시간선택제, 단기근무자 등이 포함된 자료와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섞여있음.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작성하고 평생교육국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바람.

33. 강동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인 한국 청소년 연맹은 8개의 시립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인력의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청소년 연맹 안에서 인사교류를 통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34. 화곡 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인 흥사단은 청소년 사업뿐만 아니라 민족통일, 교육운동 등을 하고 있음. 현재 흥사단에서 5개의 서로 다른 분야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성 검토가 필요하며 법인내의 인사교류를 통한 비전문가 채용 여부를 조사하기 바람.
35. 평생교육국 지도 점검시에 회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업무미숙이라 치부하여 넘어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회계상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전문성 문제이며 수익성 사업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임. 동대문, 광진 청소년 수련관은 감사적발 내용중 회계 관련이 20건이상씩 있음. 앞으로는 회계 문제 발생시 수탁금지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6. (서울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시설 수탁법인과 청소년 시설 간은 독립적인 시설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시설 관리운영 지침 상 홍보,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수탁법인명칭 사용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시설 인력채용공고문, 사업공고문 등 행정문서에 수탁법인명으로 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바람.
37. 청소년 시설 수탁기관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으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예외적인 것임. 2018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30개 기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학이 운영하는 시설이 평균 점수에 못 미침. 위탁업체 선정 시 대학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음.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인재풀 개선점 많음. 지역사회에서 능력·경험이 풍부한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8. 도농상생 공공급식 보조금 지급기준이 높아 보조금 신청률이 저조함.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절한 선으로 조정할 것. 1대1 매칭 방식으로 서울지역과 매칭 외 지역은 오히려 판로가 제약되는 역차별이 발생, 매칭 외 지역이나 서울지역에서도 더 저렴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친환경 유통센터와 비교해서 보다 강화된 품질관리가 필요함.

39. 서울장학재단 임원 규정에 의무와 책을 이행하지 않는 임원은 심의한다고 하는데 꾸준히 출석을 안 한 임원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월달 종강개정 등을 통해 이사의 임기 관련 개정을 하기 바람.
40. 서울장학재단 회수내역 중 많은 수가 이중수혜인데 이를 위한 조치사항이 필요하며 추가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람.

□ 인재개발원 : 7건

1. 최고의 관리자로서 인재개발원장이 2018년4월~10월까지 10차례 내 부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원장이 내부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것은 옳지 않으므로 시정바람.
2. 경력직 공무원 중 변호사 채용시 자격요건만 명시하고 경력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우수한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3. e-러닝 교육과정 이수현황을 볼 때 의무교육외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므로 전체 e-러닝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4. 서울시 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신입 공무원 연수를 서울시 연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5. 인재개발원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청탁금지법 개정시행령에 맞게 일치시키고, 이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길 바람.
6. 원고료 지급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원고료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 지급된 원고료는 전액 환수 조치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7. 집합교육 수료가 연말에 집중되고 미흡한 수요예측으로 학습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상반기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하반기에 몰리지 않도록 검토바람.

□ 감사위원회 : 8건

1. 공익감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 편성 사항을 보면 2억원 편성했고 2018년 예산을 감액했는데도 집행율이 부진함. 공익감사단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공익감사단의 체질개선 요청.
2. 분야별로 성과가 좋다면 포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포상명칭의 중복 사용 등의 포상금 사용은 재고해야 하며, 행정상 중복 포상보다는 통합을 통해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고해 주기 바람.

3.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포상금의 중복지급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3가지 포상금에 대한 대상 및 지표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바람.
4.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지난 정기회의(2018. 9.21.)시 위원이 위원회의 권한에 벗어난 안건을 제안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음. 집행부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근거한 명확한 위원회 내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바람.
5. 청백리 경보시스템 처리시 처리건수로 통계하지 말고 사유 및 세부내역을 기입하여 작성하기 바람.
6. 청백리 경보시스템에 의해 업무시간 이외에 법인카드 사용이 적발되면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함 점점 증가추세임에도 감사위원회 조치가 없으며 인사이동 이후 전임자의 잘못을 후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검토 후 조치해 주기 바람.
7.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까지 143일, 153일, 200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등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처분결과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60일 이내에 감사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8.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이 자치구와 사업소에 치중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본청감사를 실행하여 낮은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1건

1. 시민참여 옴부즈만의 참여율의 큰 편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아예 참여를 안 한 사람부터 17회까지 편차가 큼. 시민참여 옴부즈만은 애초에 구성원에 문제가 있음. 옴부즈만의 취지를 살리고 전문인력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이 요구됨.
2. 민원배심법정에서 시민배심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3.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용제도 관련 「서울시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채용요건을 준수하여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위원의 자격이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조례개정하시기 바람.

4. 서울시 자치구에 민원배심법정 제도가 있어 옴부즈만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차별성을 갖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시민배심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시민들에게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위원의 신분보장에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한시임기제 제도 등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례개정을 건의함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도에 출범하여 해수로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시의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맡은 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주시기 바람.
8. 시민감사 청구권을 시민단체장에게 주는 것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임. 분야별 대상사업 선정시 시민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을 우선 선정하는 반면에 일반시민이 감사활동에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없음.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고 바람.
9. 2018응답소 현장 민원사업 포상금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일방적 방침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0. 시민옴부즈만위원회 청계별관 청사사용이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상의 지방청사 표준 면적기준에 어긋남(5급 상당 1인기준 7㎡인데 2인이 23.3㎡사용). 법령과 조례에 맞게 시정바람.
11. 금년도 1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민원종합평가에서 서울시 민원처리 만족도가 제일 낮은 등급인 보통을 맞음. 민원처리 주무부서로서 서울시 전체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해 유념해서 시민의 행복과 시정의 신뢰도가 나아질수록 관리해주시기 바람.

□ 기획조정실 : 16건

1. 시민들은 단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예산성과급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쉽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동일선상의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음. 평가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2. 한시기구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8개 기구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법을 위반한 3급 이상 기구에 대한 시정하기 바람.
3. 예산성과급 제도 관련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수령액이 많은 차이가 있음. 예산성과급 제도의 경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포상금 지급제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마다 채용공고 및 경력 산정 기준 등이 다름. 특히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응시자 제출서류 반환'과 관련하여 위법의 요소가 있는 공고가 많고, 6개월에서 1년 미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기간제 직원 출신들이 차별받을 수 있으므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모든 기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5.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온라인 투표가 실적 위주의 투표가 되고 있어 문제임.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함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문관들 중 조례에서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국외출장 등)나 급여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일부 자문관의 일탈로 비취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7.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성격과 형태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인 성과지표로 경영평가를 하고 있음.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이 결정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방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음연도 10월로 너무 늦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서울연구원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나 가장 좋은 평가등급을 받아 31억의 성과급이 지급됨. 서울연구원의 특성상 많은 연구원들이 포괄임금 외에 외부출장, 강연을 통해 부수입을 얻고 있으며 성과급까지 지급되는 상황에서 타 출자·출연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려가 됨. 보통 포괄임금제는 무료노동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으나 서울연구원은 그 반대인 경우이며 연구직 외 일반 행정직, 전문직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것도 시정이 필요함. 다른 사례들을 비교하여 급여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고하기 바람.
9. 민간위탁, 민간보조사업 관련, 사업의 주체인 민간이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매년 부정수급 등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경미하다고 생각됨. 금전적 손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2018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르면 30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와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진흥본부는 올해 추경으로 올린 서울페이 관련 30억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함.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시정하기 바람.
11. 2018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으며,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경우 300여명의 위원을 수시로 구성 해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당시 조례 개정 근거 혹은 상위법 위반 여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문 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추후 보고 바람
12. 투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여성 비율을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음. 여성 비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라며, 위원회 설치 조례의 성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기초실 산하 위원회의 경우 시정해주시기 바람
13.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시 재계약에서 배제되나, 공모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공모단계부터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으로 편성하여 발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15. 디지털재단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비정규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정규직만 받았다고 확인되었음.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지 확인해보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16. 한강몽땅 행사 추진과 관련, 행사 이후 특별휴가 실시하라는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날 똑같이 준비하고 일하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분들은 이틀을 췌는데 현장인력은 하루만 준 사례가 제보됨. 일하는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인하고 시정 조치해주시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 : 27건

1. 장기안심상가 조성과 관련하여 환산보증율 책정을 시도지사에 조례로 위임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주기 바람,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한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2. 상가자산화 사업의 경우 실적이 낮은 편이고, 오해의 소지도 있으며, 주점 등 제외되어야 할 업종이 지원받은 적도 있으므로 사업사후관리 및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함
3. 상가매입비 사후관리 현황 점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용자주체인 서울신보와 함께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경진본부가 발주한 수의계약 건수와 비율이 높고,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향후 공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5.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도심제조업 관련하여 향후 4년간 추진될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중복·유사한 사업은 지양하기 바람
6.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민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참석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리모델링 지원의 경우 일부 건물주가 이익을 보게 되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매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밤도깨비 야시장에 참가하는 개별업체들이 1일 참가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주변상권과의 갈등, 교통혼잡, 소음, 청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주체인 오니트 컨소시엄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기벤처부에서 시행했던 야시장 역시 폐장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의 적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제고하기 바람
8. 푸드트럭 영업 확대가 기존상권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9. 경진본부 산하 29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4/4분기에 지도점검이 집중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특히 서울주얼리센터, 서울영상산업센터 등 매년 중복되는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함
10. 서울시 운영 23개 센터는 대부분 신축건물, 리모델링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흥릉바이오허브의 경우 조성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고, 2016년부터 사업계획이 매년 변경되어 조성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향후 정확한 예측과 추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길 바람
11.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의 쇠퇴대응방안으로 노트르담 마켓홀처럼 명소화, 집적화하자는 박원순 시장의 의도였으나, 단순 현대화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경진본부가 지침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원래 의도에 맞도록 할 것
12. 준공업지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을 산업입지화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요망
13. 소상공인지원법과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소상공인 지원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특히 사실상 다른 개념인 소상공인정책과 소공인정책에 대한 구분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4. DMC랜드마크 용지를 비롯한 미매각 용지와 관련하여 매각에만 집착하지 말고,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람. DMC랜드마크 용지 반환소송과 관하여 서울시 일부패소가 확정된 과정이 1심과 2심은 유명로펌으로 대응하다가 3심에서 국선변호인으로 대응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답변하기 바람.

15. 서울브랜드 관련 아이서울유, 메이드인서울, 하이서울브랜드를 쓰고 있음. 아이서울유는 서울시 홍보브랜드, 메이드인서울은 봉제, 하이서울 브랜드는 일반기업으로 서울브랜드 3개를 혼재하여 사용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16. 창업 보육 관련 위탁업체, 소관부서, 시설 등이 산재되어있음. 이는 창업 보육의 체계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창업 보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돈할 필요가 있음.
17. 서울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 중 스마트앵커 조성은 5년 동안 20개의 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나 올해 2개, 내년 2개 등 진행 상황이 매우 더딤. 앵커시설조성의 경우 부지선정의 어려움, 지역민과의 마찰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더딘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됨.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18. 전통시장 고객 유인을 위한 스마트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을 위한 서울페이 사업의 정책 목적이 다름. 스마트페이의 경우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서울페이 도입으로 인해 내년 사업은 예정이 없음. 즉흥적이고 시대편승적인 사업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야 함. 향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목표를 수립하여 단기적인 성과로 사업이 종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스마트페이사업의 참여주체들을 서울페이로 유인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9. 공공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 약45억원이 투입되면서 R&D사업예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선정과정 중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매우 간략하게 작성되고 있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20. '아름다운 구두 네트워크' 시민참여예산 예산 중 애초에 잡혀있지 않았던 항목인 드라마 협찬으로 1억원 비용으로 지출됨.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전체예산에 1/4 규모를 사전 계획에 없었던 항목, 드라마 협찬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음. 예산 계획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하고 본래 목적에 맞는 예산사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21. 전통시장청년육성사업관련 2년 사업동안 폐업율이 절반가량이었음. 현재는 기존 창업 청년들 임대업만 지원하고 있고 신규 상인은 모집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 2년 만에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단순히 임대료 지원 등으로 청년을 전통시장에 유입시키겠다는 안이한 계획은 단기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뻔한 계획이었다고 생각됨. 이에 사업 시작 전 충분한 논의와 가능성을 염두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 구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2.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간편결제시스템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페이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간편결제시스템 중단 될 것으로 보임. 유사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용대상이 다른 만큼 융합해서 사업 동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시고 본래 잘 추진되던 사업 신규사업위해 중단하는 일 없도록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람
23. 서울바이오허브 실험동 장비 운영 관련 장비운영지침이 있음. 내용을 보면 입주한 업체의 규모와 맞지 않게 너무 엄격한 부분이 많음. 예를 들면, 장비를 고장 냈을 경우 변상조치, 원상복구 등 시험동에 들어오는 장비가 고가임을 감안하면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겐 매우 부담일 수 있음.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실험이 가능할지 염려스러움. 운영지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임.
24. 주얼리센터의 업체당 일평균매출이 7만원에 불과한 등 비용 대비 성과가 저조한데 개선하기 바람
25. 장애우라는 말은 쓰지 않음. 업무보고 용어 사용에 시정 바람
26. 장기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으로 나왔는데 실제 선정된 곳을 살펴보니 젠트리피케이션과 연관이 없는 지역들이 선정되어 있음. 선정 기준을 검토가 필요해보임. 또한 현 장기안심상가 관련 기본 데이터인 주소부터 실제 없는 주로로 작성되어 자료수집에 유의를 요함.
27. 창업카페, 창업디딤터, 창업성장센터, 창업허브 등 창업지원시설의 명칭과 지원내용이 너무 유사하여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람.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길 바람.

□ 일자리노동정책관 : 26건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센터직원의 출장 등 근태에 관한 내용이 다수 지적되었고, 관계규정 정비 등을 요청 받았음. 그러나 여전히 사경센터와 협동조합센터 직원의 대외출장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규정 정비 뿐만 아닌 직원근태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사경센터 컨설팅 강사의 전문성과 강의 내용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사회적경제와 무관하거나 실제 창업 경험이 없는 강사 다수라는 지적이 있었음. 강사위촉 규정이나 자격에 대해 정비할 것
3. 기술교육원 혁신대책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관련 용역을 지난 2013과 올해 시행하였는데 용역결과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혁신 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시간 끌기로 보임으로 기술교육원 혁신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바람.
4. 남부기술교육원은 직원숙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숙소를 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시정 요구
5. 중부기술교육원의 경우 간부임명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미 준수 했음. 관련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6.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감사원 서울시기관운영감사 결정문을 보면 서울시는 우리은행이 민간기관에 지급한 시정협력사업비 1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기부하도록 한 행위를 인사자료로 관리하도록 통보받았음.

※ 문제가 된 사회투자기금 수탁기관 '한국사회투자'는 현재도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참여하고 있음.

서울시는 2차례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서울시가 시정협력사업비 부당이득반환소송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법률자문은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부분일뿐이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고 있음

또한, 관련자 중 1명은 감사원 감사 직후인 2016년 12월 의원면직하여 1주일만에 출연기관 부원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통보 직전에 의원면직을 허가한 사유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을 검토하기 바람

7. 2012년 비정규직화 지침시행시 전환심사원칙을 시달했는지? 정규직화 방침결정은 언제였는지? 2012년의 원칙이 지금도 통용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며, 2017년 7월20일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에 고용승계와 공정채용, 현근로자 전원전환, 결격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 원칙이 있었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각 기관별로 진행하지만 지침과 통계는 노동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고용세습의혹이 의혹에 불과한 것인가?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바람
8. 뉴딜일자리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지만 당시 제공된 자료에 일부 오류의 가능성이 보이므로 확인할 것
9. 뉴딜일자리 예산불용률이 높은 편이므로 주의하고, 일부 세부사업에서 뉴딜일자리 참여배제 대상자임에도 선정되거나, 특정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성격의 사업이 사업으로 선정되거나, 기간제 근로자인 학예사 대신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대체한 예도 있음. 뉴딜일자리 기본 취지와 다르게 세부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세부사업 실행부서별로 뉴딜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거나, 뉴딜일자리 숫자 늘리기 형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10.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산하기관 근로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세금감면 등을 통해 강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등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노동복지센터마다 인건비의 차이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할 것
12. 시·구 상향적 협력일자리창출 등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지표로 적용되고 있음. 함께누리몰 구매실적이 포함되며 자치구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평가지표와 항목을 적용받고 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실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자치구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지표를 재구성하고 획일적 평가를 시정하기 바람.
13.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진행속도가 느림. 시장 임기내 25개구 설립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람

14. 서울형강소기업 지정관련 기업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사유가 매우 단순함. 어렵게 선정된 만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함. 강소기업 선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15. 뉴딜일자리 언론보도 및 자체평가에서도 단기적 공공 근로성격에 그치거나 단순업무성격의 뉴딜일자리 배치로 취업성으로 이어지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뉴딜일자리 수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으며 내년엔 900억대의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음. 일자리 수도 많고 참여 인원도 많은데 경험치를 위한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민간과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관리가 필요한 만큼 양을 늘리는 사업이 아닌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계획 및 단기, 중장기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 보고 바람
16. 뉴딜일자리 관리하는 뉴딜매니저 또한 뉴딜일자리 참여자인데 이분들은 근무해도 최대 2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같은 뉴딜일자리 종사자가 뉴딜일자리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음.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함
17. 뉴딜일자리 관련 민원을 보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뉴딜일자리를 한 분 중에 회계나 세무기장 업무 대응을 맡는 등 세무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또한, 사경센터 세무업체가 뉴딜일자리 인원이 한 업무를 업체가 한 것처럼 보고해 용역비를 받아가는 등 뉴딜일자리 관련 법 위반 행위나 문제가 생길만한 사안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됨. 상황이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나 경험을 위해 뉴딜일자리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안이만큼 애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관리, 검토, 계획 등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 후 보고바람
18. 민주노총 지원관련 예산 편성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령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민주노총 내부사정에 따른 상황발생이라고는 하나 예산 편성하는 서울시에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의 경우 대부분 민주노총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에 참여시키거나 운영을 맡길 때 예산 수령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19. 농수산물식품공사 자회사인 농수산물시장관리회사의 경우 노동준중구현 서울시의 기조와 달리 여러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농수산물시장관리 관련 노동쟁의가 몇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음. 노무관리에 있어 농수산물식품공사와 자회사가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더 심각한 것은 노동관련 서울시 중점 정책에 관련한 공유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듦.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노동준중 구현을 위한 세부 사안과 방침에 대한 허부기관과의 공유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 마련 필요함.
20.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예외적 조건이 아니면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나 잘 안 지켜지고 있음. 서울의료원의 경우 내용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사용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일시/간헐적 업무로 판단한 업무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바로 신규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원은 서울시 관할 이기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할 의무가 시에 있다고 판단됨. 의료원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계획에는 향후 5-6년 동안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일시간헐업무를 사유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음. 전환심사위원회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나 서울시 가이드 라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 투출기관 전환심사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보임. 점검 후 향후 계획 보고 바람.
21. 직군통합에 따라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일하게 됨.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설명되거나 논의조차 없어 갈등이 발생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22. 산하기관의 포괄임금제 문제 많음. 세종문화회관 등은, 처우개선수당 등 차별이 시정되어야할텐데 이에 대한 실태가 점검이 된 적도 없음.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함.
23. 산하기간 청소노동자 휴게실 실태 문제가 있음. 시정계획 등 제출, 보고해 주기 바람.
24.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발표하나 생활임금의 산입범위가 2017년에 통상임금으로 바뀌면서 최저임금과 비슷함. 관련하여 점검 후 보고바람.

25. 노동권인센터 직원이 2년넘게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인데 관련해서 시정바람.
26. 시 산하기관 장애인 채용률 미달 사업장 있음. 디자인/관광/50+재단 등 조치 필요. 결과 알려주기 바람

□ 서울시립대학교 : 35건

1. 대운동장 및 농구장 우레탄 공사에 설계비용 1,0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다른 유사사례를 비교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2. 시립대 로스쿨의 연령별 합격률을 보면 다양한 경력자를 변호사로 양성 하자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30대 미만이 많음. 전형기준이 로스쿨 도입 취지에 합당한지 검토하기 바람. 또한 로스쿨 졸업생 등의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학과 등에 대한 집중적 육성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3.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서양미술사 강사가 문제된 적이 있었으나, 올해 1학기 다른 수업 강의를 다시 맡게 됨.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강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공과대학 실험실의 화학 냄새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특수마스크 공급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 바람
5. 기숙사 건립에는 대지와 많은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만 그 여건이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동대문구청의 협조로 인근 원룸 건물주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임대 형식으로 추진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6. 시립대 홈페이지 '총장에게 바란다'에 제기된 민원 중 시립대 재직교수의 부정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음. 관련하여 겸직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시립대 재직교수들의 겸직현황 및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겸직에 제한을 둘 것.
또한 시립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7. 예산관련 보고자료는 국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8.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다자녀가정 선발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9. 인문학 분야 연구 논문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10. 서울시립대 운영조례를 바꾸어 경상비는 자체예산(현장실습 지원, 일용비 등의 운영비용)으로 해결하고 시지원금은 인건비, 장학금, 대규모 시설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지원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11. 수시전형 입학생 모집시와 편입학생 모집 시 경쟁률이 높음에도 등록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12.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음주운전,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징계가 매우 낮고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더 엄격한 징계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교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13. 100주년 기념관 건립보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한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함. 제2공학관의 경우 적치된 실험 도구들 및 냄새로 인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또한 안전성 여부도 염려가 됨.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나 당장 냉, 난방 시설 등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시립대 교원들의 의지라고 생각됨. 학교 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임을 고려하여 당장 시급한 사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4. 미래융합관 조성에 있어서도 사전에 안전문제 및 학생학습 공간을 고려한 예산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5. 학교 홍보 예산으로 조·중·동 일간지 지면광고가 유독 많이 지출됨. 학생들과 학부모들 대부분은 지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추세인데 지면광고를 통한 홍보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됨.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대학 평가 관련 세부영역을 보면 교육여건 부분이 2위로 점수가 잘 나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수 연구부분임.(국제논문 피인용 등 하위권), 총장님이 재직하는 4년 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351위에서 1,000위까지 떨어짐. 이는 학교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임.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7. 시간 강사 채우 관련 강사법이 통과되어 내년에 시행됨.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수반될 듯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하기 바람
18. 전임교원비율이 교육부 정원도 못 채우고 있으며 타 대학에 비해 많이 떨어짐.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계가 있으므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입학사정관제 모집전형이 인문, 자연, 과학 모든 학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전체 12명의 출신전공이 인문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서울대의 경우 총 26명의 입학사정관 중 인문계열 전공자 14명, 자연계열 전공자 12명으로 비율이 비슷함. 입학사정관 출신전공 비율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함. 점차 늘어나는 학생선발 인원과 역할에도 올해 입학사정관 인원 충원은 1명에 그침. 또한 근로형태도 비정규직으로 시립대의 소극적인 인적투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20. 2017년 회계 결산자료 중 부식비를 세미나 비용으로 전용하거나 100주년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100주년 사업비로 전용한 것이 있음.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21. 학교운영비 지급수수료에서 10백만원 감액 후 도서인쇄비 10백만원 증액한 사유가 '시의회 자료 증가' 등을 기재되어 있는데 제출자료가 많은 경우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 바람
22. 대학정보공시 항목 중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교원의 참여가 저조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교육자료 또한 과거 10년도 넘는 자료가 게재되어 있음. 향후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양질의 교육자료로 대체해 주기 바람
23. 학생상담센터 자유게시판 내 부적절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개설 취지 맞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
24. 안전시설 개선 요청 내용 중 6월~7월 요청한 내용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5. 기숙사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 기준에 충족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 연말 건립에도 불구하고 타대학에 여전히 낮으므로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6. 폐기물 적체문제 및 기타 해충, 청결 등의 학교 환경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람.

27. 농어촌 전형 관련 안내가 미비하여 입학이 취소되었다가 재입학 되는 경우가 있었음.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8. 가짜 국제학회 참가실태와 관련 서울시립대 소속으로 와셋 34명 오믹스 5명으로 중복참가를 제외하면 총 31명임. 언론보도 및 정부의 실태조사 이전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무늬만 학회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텐데도 참가한 것은 시민세금 낭비이자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라도 생각됨.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기 바람
29. 인조잔디, 우레탄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만 천만원을 지출하였음. 실질적으로 바닥만 설치하는데 설계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지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30. 운영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31. 시립대 소속 위원회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여성비율이 낮음. 하나의 성별로 기울어지지 않게 변화노력이 필요함.
32.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사회문제 현상에 대해 시립대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완료 처리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매우 미흡하니 향후 충실하게 조치결과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람
 - 청년실업, 일자리 등 노동문제, 여성젠더 문제 등 현 사회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
33. 2016년 2017년 징계현황자료 관련해서 제출 자료마다 다름. 확인해서 보고하길 바람
34. 시립대 예산 중 여성안전관련 예산 확인이 어려움. 성폭력, 성희롱 관련 10건중 5건 학내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에 대해 신경써주길 바람(CPTED 참조). 여성관련 범죄가 사전예방이 될수 있도록 문화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35. 산학협력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규직 전환 추진이 필요함

□ 서울연구원 : 30건

1.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원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고 연구원에 맞는 임금 체계인지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2.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2017년도 사업 중 2건, 2018년도 사업 2건이 홈페이지 연구결과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음. 이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특정단체 소속으로 연구원장이 활동했던 곳으로 시민들에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에 서울시와 유관한 단체나 조직의 사람들이 독식하고 서울연구원이 일부 단체의 용돈벌이를 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가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외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답변자료에 중복 또는 잘못된 내용이 일부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성을 보다 높여주기 바람,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이 답습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기 바람.
4. 채용심사위원 부적격 관련 중앙일보 기사가 있었음. 심사위원 위촉시 제척사유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바람.
5. 행감자료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15회 이사회를 실시했는데, 2018년은 정기회를 제외한 나머지 3번의 이사회가 서면의결을 했음. 추후 서면의결을 최소화하여 내실있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6. 서울연구원 자체감사에서 출장여비 중복지급과 여비 관련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 지금까지의 일이 답습 반복되지 않고 체계적인 감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7. 서울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강의, 자문 등 원외활동이 많은데 근무시간 내 활동이 많음. 대외활동을 관련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운영하기 바람.
8.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로는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발송되지 않고 있음. 발송된 연구보고서가 제대로 도착하는지 여부 등 연구원 간행물 배송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9. 퇴직금 지급액 중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센티브까지 평균임금에 산입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람.

10. 서울연구원의 용역 중 '행동경제학'관련 3건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한 사례로 볼 수 있음.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한동안 운영하지 않던 초빙연구위원을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울시 전직 공무원들의 예우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초빙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2년 임기이나 주진우 초빙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임. 지나친 전관예우가 아닌지 검토하고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연구원 평균 연봉이 고액임에도 연구실적에 편차가 크고 실적이 없는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연구원 연구책임(박사)들의 1인당 연구과제 수는 평균 2.9건인데 비해 연구 실적이 2건 이하 연구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질을 고려하면 단순히 실적 건수로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가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13. 정부가 일반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 연구원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연봉제를 폐지하였음. 또한, 초과근무 수당을 서울시 경영평가에서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연구원의 연구직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지원부서 직원들도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연봉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 등 부수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등 모순점이 발생됨. 서울연구원의 연구직 근로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4년 개정 이후 15년간 정체된 보수규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임.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군별 상이한 보수규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시정하기 바람
14. 유연근무제, 외부출강 등 복무관리 제도 검토하여 서울연구원 본연의 직무의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연구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간행물, 보고서의 경우 유료판매 되는 것은 판매실적이 거의 없고,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에도 실제 읽히지 않고 대부분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매년 각종 보고서 및 간행물 제작비용은 5억8천, 배송 비용은 4천9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발간 형태가 진부함. 최근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등 각종 전자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매체를 이용한 발간 및 SNS로 발간현황을 보내주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16. 연구원의 최근 5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14년도 7위, 15년 1위, 16년 6위, 17년 6위, 올해 3위로 등락이 심함. 서울연구원 위상에 걸 맞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연구원의 수입 70%가 서울시 출연금인데, 연구원의 세출과 세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이 높고 미처분 이익금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 출연금을 줄일 필요가 있는 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8. 2016년과 2017년 대비 올해 학술논문발표 실적이 24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매년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술논문 발표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등에 관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현재 서울시의 주요시책사업인 '서울페이'와 관련 핀테크, 소상공인 등 전문연구원이 있는데도 연구용역이 한 건도 없음.
서울시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그 타당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서울시의 연구용역 위탁이 없으면 연구원에서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전(남북관계 부서 신설 필요성 등)에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서울시와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연구할 수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하는 직원과 최고 3천 5백만 원을 받는 직원이 있는데, 이는 연구원들의 연구독려와 사기진작 효과보다는 조직의 위화감만 조성할 것 같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센티브 운영방식 전반에 있어서 개선하기 바람.
21. 2018년도 채용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채용에 대한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 외부적인 문제제기 없도록 해야 함
22. 서울연구원의 홈페이지는 다른 시도연구원과 비교하여 미디어의 방식이 부족함. 유튜브 및 SNS 등의 미디어 매체로 제작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시민들의 반응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3. 서울연구원의 IT장비의 경우 자료분석, 통계 프로그램 구매내역은 없다.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차원 높은 장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수요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서울연구원 연차 축진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음.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잘 하려면 휴식이 필요함. 연차축진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5.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물론 유관기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입지와 네트워킹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외부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음으로 본연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원외활동 과다여부 및 일부 연구원의 과다편중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균형 있는 외부활동이 될 수 있도록 허가를 엄격히 해주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6. 서울시가 노동, 성평등,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8년 노동분야 관련 연구는 1.3%이며, 이중 여성의 노동관련 연구는 단 1건임. 노동 분야를 전공한 전문 연구인력 및 연구수행의 확대가 필요함
27. 연구자문위원회에서도 노동분야 연구를 제안한 적이 없음. 자문위원회 위원 중 노동전문가가 없는 것도 문제임
28.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부서장이 직원을 교육하고, 교육 일 자리에 없는 분들도 전원 참석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음. 성희롱 예방 교육 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보고해주시길 바람.
29.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쪼개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없는지, 단기간 연구자들이 차별 혹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람.
30.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용계약서에 연구과제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른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계약서에 명시되기를 바람.

□ 서울농수산물공사 : 24건

1. 일본산 수산물과 버섯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 휴대용 방사능 기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세슘과 요오드만 검출할 수 있을 뿐 다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수산부류 중도매인 평가 중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이 현재 담보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평잔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치가 50% 이상이 되면 감점폭이 지나치게 커져서 점포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시고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

3. 온라인(이미지) 경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생산자, 유통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니 사전에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시의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률인 농안법에 의해 효력을 잃은 사례들이 있음. 조례는 자치입법권이고 고유 권한인데 상위법률에 의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와 함께 농식품부에 대한 협의와 설득 노력, 장기적으로는 업무규정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규정한 농안법 관련 규정 삭제 건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5.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WTO에 제소하여 올해 2월 우리정부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상소가 진행 중임. 만약 상소에서 패하면 일본 수산물이 밀려들어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락시장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6.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사업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아무리 장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1조가 작은 예산이 아님. 현대화사업단에서는 1조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현대화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7. 시설현대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서울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8. 노점상 전통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단독응찰로 유찰됐는데, 유찰 후 21분만에 바로 재공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음. 단독응찰이 되었으면 더 많이 응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홍보를 강화했어야 함. 앞으로 용역 발주 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람.
9. 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너무 많으니 현황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나 협의회는 정리하시기 바람. 또한 위원회 존속기한, 수당 등을 명시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제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관리하시기 바람.
10. 하차거래 추진에 따라 출하자들, 특히 제주도 양배추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도와주시고, 산지 농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 받는 하차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11.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설정한 조례 시행규칙 무효 확인 소송에서 올해 서울시가 패소하여 출하자 부담이 가중되었음. 보다 면밀한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설정 및 소송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12. 작년은 수입당근에 이어 올해 바나나, 포장쪽과 상장예외품목 지정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였고 이번에는 거래집행 정지까지 시켰음. 법원이 한번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으려면 굉장히 힘들 것임. 생산자와 출하자를 위한 일이므로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대한 더욱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림.
13. 수산시장의 오래된 문제인 기록상장과 형식경매는 모두 탈법, 불법거래임. 특히 정가수의매매는 전부 기록상장임.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림.
14.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독점 문제 해결 없이는 시장 발전이 없을 것이고 이는 유통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임. 물류센터나 외부 대형유통업체보다도 가락시장의 유통비용이 더 높다는 것은 그 피해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임. 공사에서 적극 나서서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 주시기 바람.
15. 수산물은 산지에서 경매된 것을 시장에서 이중경매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통비용도 늘어나고 시장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계당국에 진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16. 최근 공정위에서 도매시장법인 담합으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경기에 상관없이 해마다 수십억원의 이익이 발생되고 있음. 또한 대부분 대기업이 대주주로 되어 있어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모습도 거의 없음. 이러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수탁 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정하기 바람.
17. 도매시장법인에서 해마다 과도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8.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종속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합정산 조직이 필요함.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19.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친환경 농산물 수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올해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

감소했으며, 시장축소국면이 있는데 급식관련 수요가 늘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단순한 수요 공급계산에 의한 예측이 아닌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바람

20. 서울농수산물시장관리 수탁계약 예산을 보면 청소관리, 교통관리, 시설관리 등 인원이 확인되는데, 민원내용 중 청소 안되거나 질서유지 안된다는 내용 등이 있음. 상인들은 24시간 청소가 되길 바라지만 인원부족 등으로 자회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청소하는 인원들의 급여 또한 상인들의 관리비로 충당되는 구조 또한 현실적이지 않음. 또한, 자회사와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근본적인 관계개선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서울교통공사 산하 출자회사들의 자회사 등 비교적 노사협약이 잘되고 있는 곳에 자문을 구해볼 것을 건의드리며, 당사자들과 대화 많이 나눠 노사문제 원만히 해결되고 시장민원도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바람
21.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품목별 가격표를 보니 거의 대부분 가공품이고, 가공품 중에서도 친환경 보다 일반상품 훨씬 많음. 센터에서 공급하는 가격도 가락시장 경락가와 비교하면 하품 수준의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음. '친환경'유통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람.
22. 가격심의위원회에 2년 이상 소속된 위원 중에 도매법인 직원이 있는데 자기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 활동하지는 않을 것임. 업무의 투명성 향상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 선정 시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람.
23.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직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진행했으며 동기관이 이런 예외적인 상황임. 자회사 전환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사가 직접고용을 했어도 연 12억 정도 절감되고 자회사로 하면 상여금을 200%를 주더라도 결국은 8억 원이 넘는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있음. 현재 자회사 직원들이 받는 상여는 연 45만원으로 공사 직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농수산물 시장관리 대표이사가 자회사 직원을 단순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임금의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 심각한 유감을 포함.

연구용역 결과와 지금의 조건을 비교해서 자회사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람.

24. 수산물 납품업체는 모든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것이 원칙인데, 2018.2월에 가자미살 등 3개의 예외 품목이, 3월에도 오징어링 등 7개의 예외 품목이 추가되었음. 총 10개 품목이 예외품목으로 되어있음. 원칙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예외 품목을 늘려가는 것은 원래의 기준과 가치에 맞지 않는 운영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 서울산업진흥원 : 37건

1. '아이마켓서울유' 브랜드 사용 관련하여, 오프라인 매장과 홈페이지 등 사용처별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통일하기 바람.
2. 다누리 매장관리가 안 되고 있음. 현재 6명이 10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매장에 확인해 보니 8시까지 근무한다고 함. 또한, 매장 크기 및 관리인력 대비 입점 상품의 매출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임. 또한, 시민청 매장은 유동인구도 많고, 시민이용률이 많은 곳으로 매장 효율화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잘 검토하고 성과가 잘 나오도록 운영 해주시길 바람.
3. 올해 다누리 시민청 매장의 입점 기업 55%가 교체되었음. 입점 물품 수를 보면 별로 변화가 없음. 정확한 기준과 사유로 제품을 교체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매장의 입점 제품 선정과 관리·운영에 신경써주시길 바람.
4. 수탁 및 고유사업 관련, 진흥원의 수탁 사무가 많음. 지난 의회의 지적 사항에도 고유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수탁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수탁사업은 줄이고 고유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람.
5.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관련하여, 추경으로 국비는 이미 결정되었고, 시비가 없어서 추경으로 어렵게 매칭 하였음.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람.

6. 입주기업 임대료 인상 일방통보의 부정기사가 있었음. 보도가 되자 진흥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명을 하였음. 입주자에게 이런 부분을 전가 해선 안 되며, 진흥원 설립 및 지원 취지에 어긋남.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시되,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성을 더 반영하고 검토바람. 인상 검토 시에는 관련 법령 적용 전에 보증금 청구,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등은 지양바라며 입주기업의 처우개선에 노력바람.
7. 하이서울브랜드 관련, '17년도 일부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슈가 있었으며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 시켰음.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및 브랜드 관리바라며,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하기 바람.
8. 성수 IT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바람. 또한 인쇄, 수제화 분야 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서 이분들이 소외 안 되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람.
9. 일자리 창출관련 성과지표 목표치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실적도 달성하였음. 전시용 일자리 창출사업, 지표상의 일자리 실적 창출이 아니길 바람. 행사위주의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람.
10. 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 독자성은 지휘감독기관인 서울시가 보장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표이사 부재 시 당연직 이사가 승계하는 건 매우 문제 있음. 이걸 의회에서 개정토록 하겠음. 출자기관은 간부 중 상당수가 이사로 등록됨. 이에 대해 진흥원 차원에서도 조치바람.
11. 서울창업허브 관련,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분산되어 있던 여러 창업시설들을 통합하여 창업허브를 '17년 6월에 개관하였음. 매출,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올해 3월, 정부에서는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건물에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여 서울 창업허브에 입주한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센터로의 유출이 우려됨.
정부의 혁신센터와의 여러 지원사업과의 중복부분 등 잘 조율하여 운영해주시길 바람.
12. '18년도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관련, 공모한 사업 3개 과제 중 1개 과제가 1차 평가 탈락하였음. 그런데 1차 선정된 일부 기업의 경우, 이미 서울시 주차계획과의 사업발주를 통해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을 운영 중임. 해당 사업을 위해 기 진행 중인 설치물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바람.

13. 통상임금 관련하여 특정 업무수당이나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문제로 노조와 소송 중임.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함. 직원들이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하고 관리하기 바람.
14. 연체료, 가산세,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비용과다계산 등을 포함한 벌금 과징금 내역이 있음. 횡수와 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바람.
15.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이서울브랜드와 서울의 도시브랜드 '아이서울유'와 혼동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브랜드의 연속성 및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으나, 기존의 하이서울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서울시민 차원에서의 만족도 부분도 체크바람.
16. 하이서울어워드 관련, 1만여 개의 상품을 발굴하였음. 대부분의 상품과 제품이 패션분야임. 상품의 양이 늘어난 부분에 따른 질적 저하 부분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철저히 관리바람.
17. 2015년 하이서울브랜드 활용한 제품 총 매출액이 1조 5천억원임. 수출실적은 4억달러로 적은 실적임. 참여기업이 브랜드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브랜드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하이서울브랜드 엠블럼 개선 등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18. 위원회는 현재 33개 운영 중임. 하지만 10월말 기준으로 한 번도 개최가 안한 위원회도 있음. 올해는 직원 징계건 및 채용도 있었음.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한번밖에 개최가 안됐음. 또한 동대문소름 패션자문단, 사업발전 자문회 등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해주시길 바람.
19. 인사 규정에 따르면 승진, 채용, 징계에 관한 사항에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최 하도록 되어있음. 심사위원 구성과 진행방법은? 규정 등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바람.
20. '17년 7월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변경됨. 그러나 진흥원은 올해 10월 이사회 시 명칭이 변경됨. 진흥원과 유사한 사업으로 협력해야할 정부 기구의 조직 명칭을 너무 늦게 개정하였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잘 대처하기 바람.
21. 하이서울브랜드 지원 기업 목표가 1,000개로 매출 없는 기업도 상당수임. 목표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1,000개를 억지로 선정한다는 생각

이 들 수도 있음. 이 사업은 브랜드선정·관리·지원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22. 최근 3년간 창업 지원관련 제출 자료를 보면 진흥원을 통해 창업, 판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이 100%임. 통계청 발표 자료에는 자영업자 1년 생존율이 59%, 5년은 17.9%인데 진흥원은 100%임. 100% 생존율이 의미하는 것은 전시성, 보여주기식 지원으로 비취질 수 있으며 기존에 잘 운영되는 우수 기업만 심사해서 선정하고 공간지원과 판로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혹시 폐업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23. 뉴딜일자리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생활을 위한 경험치 축적하기 위해 가급적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함. 그러나 계약 기간이 짧거나 중도 퇴사자들 또한 상당부분 발견됨.
단기간 계약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최장 21개월 근무 가능하다면 장기간으로 근로계약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람
24. 사회적기업 1,500만원 지원금액 영수증내역 확인해보니 교육, 워크숍 명목등의 비용지원이 많은데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필요한 지원일수도 있지만, 이런 지원 외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고민해 지원해주시기 바람.
25. 판로지원관련 유명인터넷 오픈 마켓 이용하고 있으며, 하이서울 브랜드도 지원내용은 대체로 판로지원으로 보임. 사업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홍보가 잘 안된다기보다 브랜드의 특징을 알리지 못한 브랜드 홍보부족으로 보임. 현재 서울시 여러 단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로 교육, 판로안내차원에서 머물고 있음.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경쟁력이나 생산성 높지 않은 것도 사업성과 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품성 높이고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 바람
26. 다누리 시민청 매장을 방문해 봤음. 판매를 위한 홍보물 비치 수량도 적음. 매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개선해주시길 바람.

27. 하이서울 쇼룸의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의 지적사항 보니, 쇼룸 매뉴얼 비치, 매장 청결 등의 지적이 있었음. 직원들 처우 및 청결관련 사항 개선해주시기 바람
28. 하이서울쇼룸 사업은 투입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임. 매장 전체 매출액 대비 지원기업의 연도별/월별 매출 실적이 너무 낮음. 매출이 저조한 사유가 홍보용 매장이라고 할지라도 매출이 너무 낮음. 하지만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는 달성 한 것처럼 보임. 서울시의 기회비용에 비해 장소가 아깝고 낭비되고 있음. 숫자의 목표치 달성이 아닌 기업의 매출 증진 및 사후관리에도 잘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길 바람.
29. '18년도 외국인무역인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절반 이상이 중국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해보임. 그리고 저조한 다른 지역의 무역인도 함께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 고려바람.
30. '17년도 경영실적평가 관련, 기관평가는 떨어졌음, 특히 공통지표의 기관장 리더십 부분이 뚝 떨어졌음. 조직 관리부분도 낮음. 기관장 성과급 작년 내역을 보니 진흥원은 S에서 떨어진 A등급을 받았고 4위로 대표는 높은 성과급을 받았음. 떨어진 지표들이 기관장 부분인데, 결국 진흥원 직원들이 낮아진 성과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은 그만두고 나감. 지표산정에 문제가 있어 보임. 평가표를 만드는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관장으로서 중간에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31. 대표이사 채용관련 지원서 작성 시, 10월말 기준의 양식을 봤음. 가족사항등이 기재되어있음. 서울시와 SBA 는 채용 시,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고 있음. 기관장 채용 시에도 인력 채용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음. 조치바람.
32.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의 육성지원 관련, '14년부터 현재까지 입점기업과 매출이 크게 늘었음. 하지만 480 여개 입점기업 중 매출액이 없는 곳이 66%임. 100만원 미만인 기업을 포함하면 80%가량 됨. 매출 없는 기업을 성과지표에 넣어서는 안됨. 구매내역을 보니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구매한 것이 대부분임. 이런 지원기업, 매출을 진흥원 성과지표에 다 산정하고 있음. 이걸 문제가 있으니 성과지표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함. 적극적 홍보와 지원책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3. 하이서울어워드 제품의 인증이 월 평균 50개에서 연말이면 월 5000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선정 시기 패턴에 문제가 있어 보임. 제대로 된 선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성 있게 선정하고 운영하기 바람.
34. 이런 어워드 상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로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출한 실적을 어워드 우수상품의 매출이 아닌 기업의 전체 매출을 실적을 잡고 있음. 이것은 문제임. 또 어워드 사업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형 플랫폼 연계 지원한 것 이외에 무슨 지원을 한 것인지? 기획 전 프로모션 지원이 효율적인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됨. 이런 식으로 핵심성과지표의 목표를 만들고 달성률 관리하는 것은 개선바람.
35. 글로벌 판로개척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도 없이 내부 추천과 동의를 통해 선정하였음. 공정함에 문제 있어 보임. 회의는 또 얼마나 개최되는지 검토바람.
36. 외국인 무역인 양성 및 해외 판로개척 관련하여 해외전시회 실적을 보면 대부분 B2B 아닌 B2C로 향후 판로 개척에는 도움이 안되어 보임. 단발성 판매에 그치는 것은 문제임. 그리고 이를 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역시 문제이므로 개선 바람.
37. 진흥원의 KPI는 양적인 수치달성 보다는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적인 부분 보완하고 검토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18건

1. 업무추진비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연중 균등하게 집행하기 바람
2.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채용관련 문제가 드러났으나, 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리가 최종적으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완화되었음. 최근 사회적 분위기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채용비리와 관련한 인사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채용관련 비리에 대해 징계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
3. 중복보증을 지양하여 중복보증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
4. 추심위임업체 선정 시 수수료 배점을 높이기 바람
5. 소액 장기 미수채권을 추심위임회사에 위임하기 보다는 장기 미수채권을 조사해서 소각할 채권은 소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람

6.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 19년도 예산 운영비 16억이 편성되어 있음.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업설명서의 내용도 부실하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음. 예산 사업에 대해 의회와 논의하는 등 관련절차를 준수해주기 바람
7. 불친절한 응대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객만족도 지표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초과근무수당 관련 산정 기준과 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9. 영세 소상공인 지원 관련 바쁜 자영업자들을 불러 집합교육 등을 시키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됨. 스마트 시대에 맞게 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재원확보를 위해 건물 공실을 최대한 줄여 임대료 수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공공기관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진입장벽 낮추고 형편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 강구해주기 바람
12. 부실채권 장기 잡혀있는 신용불량자 경우, 재단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실질적인 계획을 검토바람
13. 장기부실채권 보유시 기타 부대비용 발생하기 때문에 주빌리은행과 같이 일정정도의 구제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재단에서도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종합적인 구제체계를 검토하기 바람
14. 신용보증재단의 지점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환경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며,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단체로 나가 창구를 비워있었음. 어려운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및 점심시간 운영 등을 철저히 추진해주기 바람.
15. 재단의 주 수입원은 출연금, 이자, 보증료, 사옥 임대 수입임. 그 중 임대 수익은 공실률이 늘어남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음. 단순히 수요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실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의원요청 자료는 실명으로 기입 요청

17.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합의한 인원충원 계획 실행 촉구. 근로 시간 단축이 업무강도 높이는 것으로 치환되지 않게 노동환경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람

18.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된 연내일정 늦어지지 않도록 진행바람.

□ 디지털재단 : 25건

1. 2018년 9월 5일자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사규정에 채용비리 관련 징계규정을 반영하여 채용비리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2. 디지털재단 교육의 대부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수준이며 외 부용역으로 실시되고 있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전문성이 높은 심화과정의 운영 등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교육 관련 인력 확보와 더불어 유료교육 및 특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3. 디지털재단은 시민인지도 조사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15개 기관 중 14위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현황 및 게시물 조회수를 보면 이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교육시설 이용 및 장비 이용, 재단의 출판물에 등을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 및 보도자료 적극적 배포 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재단의 채용규칙이나 임용규칙에 별도의 규정 없이 경력채용기준 중 인턴과 1년 미만 경력은 불인정한다면 여러 업체에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조치 하기 바람
5. 재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음'이라고 명시 부분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법률에 취지에 맞도록 시정할 것
6. 자문위원단 운영에 따르면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17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18년 현재까지 1차례만 개최하였음. 또한 위원 임기는 1년임에도 최초 임용 후 2차례나 연임하고 있음. 전문적이고

급변하는 디지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시정하기 바라며, 또한 무분별한 위원 연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7. 위탁운영비를 전액 주고 위탁운영기관에서의 수익은 서울시로 다시 반납케 하는 구조는 출연기관의 독자 운영, 독지 기반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많음. 디지털재단 자체수입 구조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재단 보수규정의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에서 하위직인 6급과 7급 직원의 연봉 하한액이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7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
9.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2차례 정관 변경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음. 향후 정관 변경 시 보고하기 바람.
10. 향후 조직개편으로 디지털재단이 경제진흥본부에서 정보기획관으로 담당실국이 변경되는데 사전에 의회와 교감이 없었던 점은 문제임.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와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 바람
11. 디지털재단 업무추진비 내규 규정을 살펴보면 심야시간대나 주점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10건의 적발사항 중 내부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4건만 환수조치 한 걸로 드러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및 그 사용에 대한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여 향후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2.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물품 구매율이 전년도에 비해 약 55%정도 감소한 점은 문제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3. 디지털재단의 「공무국외여행내규」 제4조에 따르면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 작성하여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총 7건 중 단 한건을 제외하고 정확한 사유 없이 규정을 위반함. 또한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결과보고서도 부실함.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반드시 승인기간 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14. 재단의 애플비즈니스센터 운영과 관련, 재단에서 고유사업으로 이관 받았는데도 외부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기업의 수요가 높음에서 단순 행정적 관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운영 관리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15. 디지털재단의 연구 결과물들이 서울시 정책입안의 배경이 되므로 명확한 연구방향이 중요한데 서울시 출연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경향이 있음.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16. 서울시 경영평가 지적에 따라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있으므로 분기별 계획적인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임.
17. 4대폭력 예방교육 관련 이사장은 단 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을 착실히 받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시 이사장 교육관련 내역도 첨부하기 바람.
18. 재단은 2016년도 설립 후 현재까지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 및 추진 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 적이 없었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않음.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차후 철저히 수행하기 바람.
19. 법인카드 내역 확인 결과, 다수의 카드가 발행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많이 있고, 지출과목 역시 부적정한 것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일반 민간업체와는 달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업무추진비 집행 등 카드 사용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20. 관용차 블랙박스를 요구하였는데, 일반적인 기관도 아닌 빅데이터 관리 등을 위해 출범한 디지털재단임에도 단 하루치만 보관하고 있다고 함. 이럴 경우 관용차 운영 중 각종 사고 관리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모든 제출 자료는 성별 분리하여 제출 요청
22. 임원 성별 비율 제출 시 당연직 이사가 누락된 사항 지적
23. 재단과 민간의 협약체결 등에서 시민들의 정보제공 부문이 포함될 때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장치 설치 요구
24. 비정규직들의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차별 시정
25.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 전환 사유에 대한 질의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과정 시정 요구

□ 기술교육원 : 6건

1. 기술교육원 회계감사에 지속적으로 시·국비 정산 지적, 분리정산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2년간 변경사항이 없음. 시정바람.
2. 남부기술교육원 징계·인사위원회는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음. 하나의 성별로 구성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바람.
3. 남부기술교육원 징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징계(시험감독 수당지급 및 식재료납품 관련 등)에 대해 위탁되어 있는 재단의 대표이사 독자적인 판단으로 감경되는 과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 필요.
4. 중부기술교육원 현 원장이 기획처장일 때, 원장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교육원 식탁위탁업체로 선정하여 한 달 운영하고 다른 업체로 넘겼던 상황,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교직원으로 시작하신 점 등 운영상 우려되는 상황은 정리가 필요함.
5. 중부기술교육원 퇴직위로금이 규정없이 지급되었는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이 없도록 관리점검이 필요함.
6.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관련 외부 단체 발기인들의 인건비의 상승 지적 및 그 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있음. 예산이 이대로 집행되는 것이 우려스럽고 관련하여 조치결과가 필요함.

□ 기후환경본부 : 38건

1. 서울시가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태양광 위주로 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의 다른 한축인 연료전지 보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고장, 방치 사례가 많고 별도의 통신비까지 지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향후 추가 보급을 하지 말고, 보급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및 쓰레기 수거를 철저히 할 것.
3.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투기 및 처리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4.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사업장 배출량 저감이 미진함. 적극적인 배출량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5. 시민(주민)참여 사업의 경우 부적절한 내용 및 예산 편성으로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많음.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참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6. 녹색서울시민실천 공모사업에 근거 없이 동일사업이 반복하여 3년 연속 선정된 바, 이와 같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7. 전기차 충전기 호환성, 결제방식, 모니터 크기 등의 개선이 미진함. 기 보급 운영 중인 충전기 개선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8.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시행은 비용 대비 효과성, 대상, 지속가능성, 조례 근거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 향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 추진시 면밀한 검토 및 시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9. 석면건축물의 등급별 관리는 의미가 없음. 서울시내 석면 함유 건축물은 조속히 제거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할 것.
10. 음폐수 불법처리가 성행하고 있음. 실제 음폐수 처리가 발생하는 타 시도와 공동 대처할 것.

11.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교육 및 홍보대책, 자원조달 방법 등 미비점 지적, 조례의 취지에 맞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및 2030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수립 촉구
12. 에너지백서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백서가 연차별 시행계획, 예산집행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게재되지 않은 점 지적, 내용 보완 요청
13. 조례에 공포하도록 규정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기후변화백서,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
1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촉구
15. 종합계획 평가 및 성과검증 등을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미구성 지적, 모니터링단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촉구
16.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잡은 것과 평가가 성과 중심임을 지적, 성과지표를 정확히 세우고 평가 시 각 사업별 문제점 및 대안 제시
17.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 마련 미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 수립 지원(미 수립 지역 독려) 및 전담조직 구성 독려, 자치구 예산지원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것과 기후변화시책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 등 지적, 자치구별 형평성에 맞고 기후변화시책 시행에 맞는 예산 편성 요청
18. 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을 위해 각 부서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계획 수립하도록 독려
19.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시행
20. (기후변화기금 운용 관련)한국가스공사 배당금 재원 실적 저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 등 기금안정성 확보 노력
21. 기후변화기금 사업추진 관련, 융자성 사업은 줄고 비융자성 사업이 늘어나는 점 지적,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기존 융자성 사업 활성화와 신규 융자성 사업 발굴, 비융자성 사업은 정확한 평가를 통해 조정
22. 기금의 운용 관리, 예금 이율은 높이고 융자 이율은 낮추는 방안 검토
23. 기후변화기금운용 심의위원 위원회 참석률 저조 지적, 참석 독려 및 신규 위촉 시 정리
24. 전문가 자문단 미구성 지적, 구성 운영 검토

25. 채권관리 적정하게 운영
26. 소음·진동관리에 대한 종합시행계획 작성 시 중장기적 목표 및 기본방향, 소음·진동 관리방안, 연도별 소음진동 저감 대책 등이 포함되도록 내실 있게 작성
27. 소음지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소음·진동관리 지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
28.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조치 시행계획 수립 검토
29. 조례에 의거 공표토록 되어있는 소음측정망 설치 후 상시측정자료, 측정망 설치계획, 소음지도, 연차보고서 등에 대한 공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적시에 시행
30. 소음·진동관리 자문위원회 구성
31. 예산편성 시 집행률 등 검토하여 적정하게 편성
32. 최근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 및 공사장 지도건수 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철저한 행정지도·점검 대책 마련
33. 대형공사장 24시간 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소음측정기기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행정조치 및 지도 강화. 소음·진동 관련 법규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처벌(관급공사 패널티 등) 강화
34. (승용차 요일제 및 마일리지 관련)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결과가 이후 사업시행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점 지적, 평가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촉구
35.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관련)수집관리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근무평가 등 지도감독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 수집관리인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 촉구
36.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포함한 공용 충전기 설치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고 있고, 실제 충전기 이용률이 저조함. 향후 충전소 설치시 기 설치 충전기 이용현황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기 바람.
37.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량 자치구 보급사업에 일부 특혜 시비가 없도록 구매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할 것.
38. 조례에 근거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차기 위원회 구성시 지적 사항을 반영할 것.

□ 푸른도시국 : 15건

1. 문화비축기지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 과다하므로 공개입찰 등 계약방식을 다양화해주시기 바람.
2. 문화비축기지의 계약내역 중 현수막 거치대 등 집행예산이 과다한 계약이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3. 서울시 직영관리공원 22곳 중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은 9곳 공원에 대하여 시급히 설치를 완료하기 바람.
4. 공원 현장 근무 직원들이 2년에 한번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예산 투입 확대 등 적극적인 계획 및 대처 필요.
6. 녹지활용계약 적극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7.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위원회 운영관련, 위촉직 위원 참여율 제고 요망. <성평등기본조례> 상의 규정을 준수, 성비에 불균형이 없도록 구성
8. 공원이용프로그램 예산이 특정 공원에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공원별 적절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9. 공원별 이용 및 효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
10. 시관리공원의 공원조성계획도를 최근 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
11. 생애주기별 테마공원(숲) 조성·운영 계획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권역별, 자치구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고 균형 있는 공원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전지역 필요조사 실시
12. 생활권공원 내 금주 관련, 관련법 개정 전까지 자치구와 협의하여 금주 강화 대책 마련
13. 민원에 대한 답변 상세하고 성의 있게 답변, 반복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 기간이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성실히 답변
1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유형별 단속 강화할 것. 특히 불법상행위와 연계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대한 단속 강화. 수락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이른바 '한철장사'식 개발제한구역 훼손 및 상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실시 및 감시·관리 강화할 것.
15. 어린이대공원 자산 및 물품이 보다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바람.

□ 서울대공원 : 17건

1. 폐사 원인 및 진료기록, 보유현황 등 동물 기록관리가 자료별로 서로 일치하도록 동물 진료 관리 철저히 해주기 바람.
2. 서울대공원 목표가 불분명하고,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보다 충실히 계획해 주기 바람.
3. 동물원 시설 안전진단 연차적,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4. 사전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유형별 예방대책 마련
5. 공원 이용활성화 사업 관련, 전반적인 이용자 감소(Hits, 교육인원) 보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활성화 방안 마련
6. 식물수집·연구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수립 검토
7. 동물 사료 예산 편성 적정성 검토(2017 85% 집행, 전시동물 줄었는데 2018 예산 증액)
8. 평균수명 전 폐사, 사고외상 폐사 줄일 수 있도록 관리 강화
9. 전시동물 전산 기록관리, 가격평가 등 오류 줄이기 위한 지침 마련
10. 유전자 분석연구(유전자원 보관실적, 성감별 실적, 개체 인식칩 실적, 생식·체세포은행 및 인공번식 연구, 체세포 보관 실적 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11. 멸종위기종 연중 번식생리주기 연구 관련, 연구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12. 세입예산 과다편성으로 징수율 감소, 과다 편성한 추경 세출예산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발생 등 지적, 적절한 예산편성 요청
13. 2014년 비전수립용역에 따른 타당성 용역 결과들이 안 좋아 실현되지 못한 점 지적, 다시 진행 중인 비전실현 전략수립 용역 충실하게 진행 요청.
14. 2004년부터 방치되어 있는 종합안내소 활용계획 수립
15. 판매시설 등 사용수익허가시설의 계약기간 및 이행보증금 부과 기준을 수립하는 등 공평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서울대공원 내 설치된 공공미술품인 김성수 동상이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 심의위원회, 시민소통분석관 등과 협조하고 친일에 대한 과오 적시가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할 것.
17. 치유의숲 운영 및 서울대공원 축제행사 전문인력 부족, 위탁운영이 아닌 내부 담당자들이 운영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 19건

1. 방수·방식사업의 계약 해지로 인한 소송 가능성과 예산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함. 구조물의 점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하자의 원인규명 및 대안 제시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기 바람.
2. 광암정수지 방수·방식 하자 및 서부수도사업소 방수·방식 계약 취소 등을 계기로 정·배수지의 향후 하자처리 및 방수·방식 공법에 개선 방안, 공정별 하자책임 등을 검토하여 개선된 시설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고도정수처리장 입상활성탄의 흡착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인 요오드 흡착력, 메틸렌 블루, TOC 제거율의 측정치가 일반 상식과는 다르며 그 결과 역시 일정치 않음.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상수도 시설시설 지진전문가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필요예산 편성 검토
5. 환경부 지침에 따른 지진대비 종합계획 수립
6. 진동에 의한 누수 예방을 위해 내진보수보강
7. 누수발생이 많은 아연도 강관과 스테인리스관 보완대책 마련
8. 2020년 노후관 교체 후 배관 수명 측정 등을 통한 지속적 유지관리 대책 마련
9. 홍보종합계획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적시에 시행되지 못한 사업은 예산 추경에 반영, 용역/대행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실시
10.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상수도(아리수)에 거부감을 가지는 부분(물탱크 및 낡은 수도관, 안정성과 편리성 등)을 잘 분석하여 홍보 계획 수립
11. 지역언론 활용 홍보 시 특정지역, 특정지역 언론사에 홍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서울 전 지역 균형 있게 홍보
1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내부진단 필요(시편채취 등), 누수 빈발하는 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체 검토, 남은 노후관로들에 대해서도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누수발생 최소화
13.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4. 수돗물시민평가단 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활동 미미한 평가단원 조정. 기존 활동을 평가하여 시민평가단이 적극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 마련

15. 수돗물평가위원회 출석률 제고, 활성화 방안 마련
16. 정원대비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충원계획 수립(기술직군에 대한 대책 등)
17. 경영평가 관련, 항목별 달성률(평점) 50% 이하의 사업소, 기관장 리더십 평점 낮은 사업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우수 사업소, 우수 사례 등에 대한 포상금 외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18. 학교 음수대 설치한 학교에서 별도의 정수기 사용은 서울시의 음수대 설치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정수기와 음수대를 병행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할 것
19.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중 자치구별 절약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사업 시행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음. 절수설비 등 물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에 자치구의 계획 수립 없이 본부 독자적 시행계획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으며 탁상행정의 단면임.

□ 한강사업본부 : 19건

1. 한강 수상협회 및 단체(윈드서핑장 등)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히 감시·감독 할 것.
2. 높은 민원율과 낮은 이용율을 보이는 한강 캠핑장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3. 한강공원 호안 조성 및 복원과 관련해 중복 사업 구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한강 수상택시는 택시 사업을 경시하고 면허시험장 등 부대시설에 대해 서만 주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5. 한강 수상택시에 대한 홍보 노력이나 영업 의지는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함
6.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보수 근거 명확화하고, 위반사항 철저히 점검 할 것.
7. 여의샛강 유량확보사업은 예산대비 효과성에 대한 외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재검토 할 것.
8.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관제센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공간 활용방안 마련
9.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정비

10. 자전거관제센터에서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전용된 예산, 스마트파킹 도입 예산 등 불용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11. 스마트파킹 사업 추진 시 주차장 관리 업체들과 사전 의견 조율, 자전거관제센터처럼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12. 본부에서 관리하는 비품들 내구연한 등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13. 서울함 공원 운영 관련, 최초 운영계획에 맞게 운영, 철저한 운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14.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형평에 맞게 재검토(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포함)
15. '따릉이' 운영에 따른 한강 자전거대여소 피해여부 정확히 파악하여 재계약 시 반영
16. 암사초록길 조성사업 관련, 더 이상 늦추지 말고 2019년에는 사업 필요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추진
17.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안전대책 철저히 수립
18. 지구별 쓰레기 처리 현황 평가하여 단속강화 등 대책 마련
19. 한강 내 각종 행사 간, 무분별한 푸드트럭 진입 등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강화 요망

□ 서울에너지공사 : 20건

1. 시민위원회의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으로 되어 있으나 시민위원회가 에너지공사의 대부분의 업무계획과 추진과정과 결과 등을 모두 '공유'하며 공사 내 주관부서의 업무까지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해보임.
2.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정관에 따라 회의록 작성·공개
3.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할 때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4. 이사회 회의내용(회의록)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5. 성평등 조례 및 에너지공사 정관 등에 의거, 이사회 구성원이 특정성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6. 정관 변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7.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정확히 파악하여 정원 기준 수립

8.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성비 규정에 맞게 조정
9.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수와 성비 규정에 맞게 조정
10. 시민위원회 참석률 저조한 위원들 정리 및 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
11. 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규정에 맞게 월1회 개최하거나 개최 필요성이 없다면 현실에 맞게 규정 변경
12.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저조한 분과 활성화 방안 마련
13.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 원인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조정
14. 재해보전적립금 적립 필요성 검토
15.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16.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경영본부장,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담당 과장 서둘러 충원
17.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관련, 기후환경본부·서울대공원과 함께 업무 협의, 긍정·부정적 요소들 잘 검토하여 서울시 입장 정하고 사업 진행,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여부 잘 판단하여 예산수립
18.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심층 컨설팅 결과 중 직무관련 만족도 낮은 에너지연구소, 중점개선영역인 리더십과 노사관계, 평가제도 문제(인사평가 포함), 승진 적체 문제, 노사 의사소통 문제, 이직 의사 많은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원인 분석하여 대안 마련
19. 지사별 발전기, 보일러, 배관 등 설치 관련, 노후된 설비 보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20. 신정플랜트 가동 중단 관련,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비상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대변인 : 4건

1. 해외언론 홍보대행사업비 지급 정산부터 지급일까지의 소요시간 개선해 주기 바람
2. 해외미디어취재지원 사업 관련 한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가 공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3. 언론간담회 내역 관련 제출한 의원요구자료마다 상이하므로 향후 요구 자료 제출시 유의하여 작성해 주기 바람
4. 비영리법인 지도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기 바람

□ 시민소통기획관 : 10건

1. 많은 자문수당 지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소통자문관을 운영한 것은 그 필요성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니, 향후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철저한 업무 검토가 필요함
2. 서울미디어메이트 운영 개선을 보면, 원고료를 인상하여 콘텐츠 영역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고료 인상이외에는 개선사항이 없음, 원고료 인상 말고 다른 분야도 포함해서 개선해야 함
3. 서울영상창작가 평가기준에 따르면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이 경력점수가 부족하여 평가에서 선정 안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 개선 필요
4. 제2시민청(삼각산시민청) 방문객 수가 제1시민청과 비교시 27.5배 차이를 보임, 제2시민청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 홍보나 온라인 신청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5.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남녀간의 성역할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젠더 관련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6. 서울시 SNS 운영실태 종합분석평가 용역에 따라 폐쇄 권고된 SNS 계정에 대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타 부서와 잘 협조하여 폐쇄하는 것이 필요.
7. “꼼꼼한 서울씨”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꼼꼼한 서울씨 활동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된 사람들이 시민청을 방문했고, 시민청 인지도 등도 점검을 하였음. 그러나 이미 조사내용을 다 알려준 다음 설문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함

8. 삼각산시민청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분야의 남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9. 상품문화디자인 국제공모전 자료를 보면, 한국문화디자인학회와 MOU를 체결했음에도 MOU체결현황에는 누락되어 있음
10. 외국어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언어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함. 비용절감을 위해 대표 도메인만 두고 언어만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홈페이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람.

□ 문화본부 : 23건

1.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지원금만 받고 폐업 등으로 지정취소가 되지 않도록 지정 이후 사후 조치에 유의할 것
2. 문화예술복합단지 추진과 관련, 중앙투자심사 통과 및 중앙부처 협의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
3. 본부와 재단 및 사업소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 시정하기 바람.
4. 관리라는 관료주의적 표현보다 소관 재단 4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단지원팀으로 문화관리팀의 팀명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것.
5. 문화시설과가 발주한 연구용역이 2차례 준공지연 된 것과 관련, 평가위원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며,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6. 문화본부 소관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본부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경영평가 향상을 위한 본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7.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영산재에 대해 예산 변경을 통해 태고종에 지원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위원회 심의 미진행 등) 존재
8. 통합수장고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관 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9.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대상지역 선정시 합리적인 검토 필요
10. 김장나눔행사를 야외(서울광장)에서 하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으므로 개선 필요
11.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관련 지역주민 민원 (차고지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필요
12. 통합수장고를 황성에 건립하는 것은 원거리 및 운영에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 소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부지를 서울 인근 지역으로 재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3.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삼청각 한식문화관 조성)을 다른 예산을 활용하여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4.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은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할 것
15. 도서관 장기 연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16. 2018 정조대왕능행차 재현행사 고증 부실 및 행사 진행 미흡함. 또한 행사 취소시 사후 안내조치 미흡하며 행사 참여인력 출연료(인건비) 미지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17. 서울시 관리 공공미술작품 중 명패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관리 철저 필요.
18. 공공미술 작품수를 늘려나가는 것보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을 잘 관리해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19. 풍납토성 주민에 대한 특별공급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필요 및 이주대책 수립 시 도시재생본부의 재생사업 등과 연계방안도 검토 필요.
20. 서울문화로바캉스 관련 부정적 언론기사에 대한 대응 미비 및 차기 행사시 날씨 등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21. 서울문화로바캉스 미니 인공해변 조성은 예산낭비이며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함
22. 재단의 기본재산을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 필요
23. 경영평가시스템이 재단특성에 맞게 객관적이고 독자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바람

□ 관광체육국 : 11건

1.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간 보험금 차이 해소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출장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적절한 조치 필요
3. 잠실야구장 쓰레기 적화장 장애인 착취 사건 관련업체를 계속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검토해 주기 바람
4. 북촌 관련 오버투어리즘에 대해 마련된 대안들이 상당부분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행정에서의 관점이 아닌 실제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5. 글로벌 마케팅과 디지털 마케팅 사업에 있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지 만 현실은 고비용 저효율로 보임. 유튜버 왕홍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보기 바람

6. 서울시 관광정책의 기초자료로 정책방향을 결정함에 중요한 토대가 될 서울시 외래관광실태조사의 중간보고를 보면 표본의 수가 적고 연령별로 가장 많은 20대의 경우 총16인중 남성은 2명뿐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보기 어려우니 향후 연구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 보완을 확실히 할 것
7. 관광체육국이 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재단으로 이관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임. 앞으로 재단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관광정책과 및 사업과의 역할론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관광체육국의 조직개편이 필요해 보임
8. 서울시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9. 서울시체육회 채용관련 사무처장이 인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채용 규정 등을 확인하여 채용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람
10. 시보조금을 받는 대회에서 대회 협회장 등이 친인척 관련 업체를 활용한 물품구매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1. 관광정책팀 업무에 관광재단 지도감독이 있는데 관광재단 운영지원으로 변경 요청

□ 교통방송 : 12건

1. 미수납액이 해마다 발생 및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미수납액 대책 마련 필요
2. 직원의 90%가 비정규직인 것에 대한 정규직화 진행상황 설명 및 방안
3. 교통FM은 현재 김어준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듯한데 김어준씨가 방송을 중단할 경우 대책 마련 필요
4. 미수금 업체는 부도 등 부실 업체 등으로 판단되는데 계약당시 업체 현황을 모르고 계약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대책 마련 필요
5. 최근 2년간 광고협찬 수입현황을 보면 뉴스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다른 프로그램의 수입은 저조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6. 최근 3년간 성희롱 등 예방교육 명단을 받았는데 전직원이 참여하였는바 대리 참석이 의심됨, 이러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7. 방통위 재허가 권고사항으로 시청자위원 구성시 다양한 계층·연령대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바, 20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다양화 하고, 추천단체에서도 학부모, 청소년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게 조치

8. 교통방송과 관련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가 필요한데 최근 '한겨레21'의 교통방송 작가들에 대한 기사에 대해 해명보도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됨
9.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tbs내 직군 별 갈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필요
10. 교통방송 여론조사시,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에 직접 반영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
11.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t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함.
12. 행안부 재심의 결과, 독립성 확보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이 권고된 바, 방송운영 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고민과 대책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 6건

1. 아이들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와 관련한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통제는 아이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고 부모들의 불친절 경험은 박물관에 다시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친절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주기 바람
2.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결과 일부 자치구는 실적이 많은 반면, 5개 자치구는 방문 실적이 없음. 지역별 편중 없이 수혜지역을 균형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미방문 자치구에 대한 참여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문화소외계층'이란 말은 장애인, 소외지역 주민이 대상일 것임.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이름에 '문화소외계층'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해 주기 바람
4. 2017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낙찰차액 임의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1천만원을 또 예산 변경하여 낙찰차액을 사용함. 소액이라도 집행잔액으로 두어야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산 편성 시 증액은 지양해야 할 것임
5. 최근 해외 박물관 화재 발생 사례에서 보았듯이, 보험 평가액이 1,316억에 달하는 소장 유물 관리에 있어서나 시민 다중이용시설로서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에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서울역사박물관에 걸맞는 대응 매뉴얼을 강구해 주기바람
6. 어보 스탬프 관련 불친절 민원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무자를 배치해 주기 바람이며 이런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내년에 반드시 확인해 보겠음

□ 서울시립미술관 : 10건

1. (서소문)본관 앞마당에 장애인(휠체어) 접근이 쉽도록 해주기 바람
2. 소장작품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선정이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작품을 구매하는 것은 집행부가 소홀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기 바람
3. 예술가 길드 예산변경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음. 시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정한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하지 않도록 하길 바람.
4. 하나의 전시회에 여러 업체에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5. SeMA 벙커 운영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책 마련을 하길 바람
6. 홈페이지 방문과 검색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홍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3년간 20개구에서 운영하였는데, 신청을 하는 곳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주기 바람
8. 시민미술아카데미는 최근 3년간 매년 1억7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참여인원이 줄어들고 있음 이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바람
9. 미술관 소장작품 확보를 위한 절차와 프로세스, 위원회구성을 명확히 할 것
10.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13건

1. 학생 할인 같은 경우 할인매수 제한으로 인해 예매를 할 때 여러 번 구매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2. 장애인석(휠체어석)은 인터넷 예매가 불가능하고, 전화나 현장구매만 가능한데 현장에서 장애인여부는 서류를 통해 확인하므로 인터넷 예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 미취학 아동은 공연 등에서 배재되어 있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술지원 및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함
4. 자치구에 가서 하는 연계공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세종투자개발(주)의 세종홀 관련 계약이 민간위탁의 형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보여지며 해당 계약종료 이후, 세종홀 관련 다른 계약 방안을 모색할 것
6. 연말기준으로 18년 예산편성 당시 세종홀 위탁수수료 수입(예산편성 내역 상세), 실제 위탁수수료 납입금액(증빙자료제출), 수입달성률을 정리하여 다음 임사회까지 보고하기 바람
7. 삼청각 미화용역직원 민원 관련하여 협력회사 직원이지만 사안에 비해 가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8. 세종문화회관 극장에 적합한 공연을 발굴하고, 유료관매량을 활성화 할 것
9. 무대노후시설 개선안 사업비 280억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이라면 세부 내역을 면밀히 재검토 할 것
10. 9개 예술단 중 국악관현악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예술단은 모두 적자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적절한 수지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11. 기획사에 고객 응대 메뉴얼 등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불친절응대를 경험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람
12.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17년에 이어 2018년의 서울시정책 준수 및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율이 낮아 전체적인 평가점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선하여 향상시키기 바람
13. 세종문화회관은 광화문에 있는 극장이며, 광화문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이니만큼 티켓 예매 대행사의 영어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증대에 힘써야 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9건

1. 18년도 자주재원 수입 달성 예상률이 56.2%에 그치고 있어 경영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2년 연속 음반발매 관련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옴. 예산편성에 있어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임
3. 자치구로 찾아가는 사업의 경우, 신청한 자치구만 검토하지 말고 다양한 자치구의 구민들이 시향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자치구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바람

4. 외국인단원 임차주택 회수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단 점거한 것에 대하여 조치하기 바람
5. 경영전략 및 중장기계획 컨설팅 진행에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향이 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할 것
6. 자주재원확보에 관한 지속적인 지적에 대해 개선책을 만들어야 함
7.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출연금의 한계로 인한 공연품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8. 예산의 전용.이용.사업 변경 발생 시 변경과목에 대한 세부내역기재 요망(자료작성 부실)
9. 교육훈련비 집행율이 저조하므로 의무교육 및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일 것을 요청함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10건

1. 생활문화매개자양성사업 심사위원 구성 시 공정한 심사진행을 위해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시 지역사회 공헌/환원 여부 등도 심사기준 및 평가요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 바람
3. 서울시사업과 문화재단의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추진해야 함
4. 사전에 결재를 득해야 하는 검직허가와 관련하여 시작 후 신고사례 다수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바람
5.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높아졌으나 17, 18년 중복 지원받고 있는 공간이 많음.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재검토 해보기 바람
6. 임차비 외에 지원되는 공간 운영자 인건비가 공간규모별, 운영사업별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지급 기준을 정리하기 바람
7. 메세나 사업, 예술 후원 사업에 더욱 힘써주기 바람
8. AED 미설치 공간 확인하여 2019년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9. 서울시 출연금과 기본재산 자체 재원을 구분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은 최소화하여 사업에 투입하길 바람
10. 경영평가, 경영진단을 통해 재단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바람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9건

1. 연사료 기준 관련 내규 수정해주시기 바람
2. 디자인위크가 디자인위크, 패션위크, 새활용위크를 통합한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방침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 세부 계획 없이 예산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3. 신규사업인 디자인브랜드화 사업안에 기존의 공예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 디자인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임. 디자인재단의 정체성을 찾을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4. 디자인클라우드 로고 시민참여 공모전의 경우 중도에 계획 변경되어 당초 공고내용 중 일부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계획바람
5. 패션위크 및 트레이드쇼 관련 바이어 초청 비용에 비해 수주 실적이 매우 낮으므로 수주 실적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6. 기부 및 후원의 실적이 재단의 규모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실적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디자인재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을 확립하기 바람
8.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고 혁신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함
9. 수의계약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7건

1. 전략경영본부장이 장기간 공석인데 조속히 채용하기 바람
2. 해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방법에 개선이 필요함
3. 초청인사 강사료 및 연사료에 대해 행자부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 할 것
4.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운영 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현지 홍보채널이 중국, 러시아에만 진행중인데 홍보채널을 미국, 일본, 몽골로 확대 할 것
5. 재단운영의 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와 신속한 업무협조로 고유사업을 확정하기 바람

6. 여성기업을 통해 수의계약시 대표가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검사·확인하기 바람
7. 직원 불친절 민원에도 불구하고, 18년 직원대상 CS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재단출범이후, 시민만족도 및 경영평가결과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람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5건

1. 재단설립 얘기가 나온 이후로, 주요 서비스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2. 중장기 발전방안 TF결과보고서 내용이 재단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 재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TF구성 및 연구용역, 컨설팅 등에 예산 낭비하지 말 것
3. 연결만족도, 응대태도 만족도, 문의파악 및 답변 정확성, 신속성 모든 부분에서 시민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포상은 하고 업무저몰입자 관리는 안하고 있어 관리자가 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임
4. 응대율 및 서비스레벨 향상이 필요함
5. 빅데이터 등 상담처리데이터에 대한 연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여성가족정책실 : 57건**

1. 키움센터의 틈새 돌봄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 부작용, 중복 등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함. 이에 대한 검토 후 사업 진행 필요
2. 키움센터는 아직까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데, 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없는지 검토 필요.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80% 정도가 관련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무원의 성인지 수준이 매우 낮는데, 이에 대한 대책 필요(실효성 있는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필요 등)
4. 어린이집의 중식시간은 대체로 일정한데 비해, 간식 및 석식시간은 기관별, 지역별 편차가 많음. 지침 등을 통해 일정범위의 시간대로 통일 해주기 바람.
5. 여성노숙인 시설의 관리가 부실하고,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업무와 일정 부분 겹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한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관리 필요
6.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몰카’적발 실적이 0회인데, 점검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제출받은 받은 자료와 지역구에 확인해 본 결과가 다름. 제출된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사지급내역을 확인하면 강의일자보다 지급일이 앞섬. 관리가 안 되고 있음
8.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본인 센터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고, 센터 간 교차 강의를 반복됨. 이에 대한 시정 필요(강의실태 재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등 법적조치 검토)
9.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상황부 관련, 자료요청 시 하루만에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함. 근무상황부 관련 시스템 마련 할 것
10.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정기적으로 강의를 나가는 등 잦은 외부강의로 어린이집을 비우게 됨. 이에 대한 제도 정비와 방침 필요

11.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감사 실시할 것
12. 원장·보육교사 교육을 평일을 피해서 할 것
13. 여성가족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교사 교육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교육방식도 낫음. 보수교육자체를 고칠 것
14.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관리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 할 것
15.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노래방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함. 외부장의 등 외출이 잦고 업무추진비 수시로 사용함. 또한 근무시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물품 구매함. 원장 교체 검토 및 해당 어린이집 감사 할 것
16.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치구 센터를 총괄 할 수 없다는 조례 법리검토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방안 마련 필요
17.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음. 대체교사 인력 부족하여 많은 충원 필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8.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사 교육, 인력풀 이용률 저조, 운영미숙 등 문제가 있음. 센터 역할 재정비에 대한 검토 필요
19.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부담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수입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사용. 정액제 보다는 비율로 부담을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음(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월세 지원 및 일괄적인 금액지원이 합리적인지 검토 필요)
20. 강동구 인력개발센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많음. 기본부터 문제가 있음. 추후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21. 가정어린이집은 취사부를 고용할 경우 운영비로 고용해야 하고, 인원이 부족한 소규모 어린이집은 재정곤란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보육도우미를 취사부 전용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 요구
2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할 것
23. 요보호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무엇이며, 탈시설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 필요
24.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양육시설 종사자 대비 낮은 인건비를 받고 있어, 사기저하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25. 공동생활가정은 업무특성상 가사도우미의 역할이 큼. 서울시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거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파견할 것

26.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직접 지도점검 강화 및 지도점검 실시 시 보육 분야 전문가 투입 필요
2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교육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어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방안 필요
28. 여성안심택배 설치시 여성가구가 많은 지역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안심택배를 설치해야 할 수 있는 기준 필요
29. 국공립 어린이집 등 클린카드 사용이 낮고,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위탁선정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0. '젠더자문관'을 위상에 맞고 실효성 있게 활용할 것.
31. 여성안심특별시-‘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점검 통해 발견된 사고 처리, 특히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32. 여성가족정책실 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 간호사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발생빈도 높은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환경 개선 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노력할 것.
33. 성 격차, 임금 격차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와 협력 체계 갖추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힘 쓸 것.
34.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기관임에도 인력 등 상황이 열악함. 센터 역할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
35. 민간어린이집 친인척 고용 현황 조사. 조사에 그치지 말고 민간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성숙을 위해 관리 감독할 것.
36. 온마을돌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온마을돌봄협의체 준비를 철저히 할 것.
37.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방안 마련할 것.
38. 키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해 돌봄의 질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 보장할 것.
39. 현재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의 컨설팅인력과 멘토링인력 모두 외부인력으로 진행되고 있음. 내부인력으로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0.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보육 분야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참여할 것.

41.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한 2017년, 2018년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유사 지적사항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 철저히 할 것.
42.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의 시비, 구비 매칭 비율 정할 때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 거쳐 추진할 것.
43. 현재 대체조리사 4명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원활한 지원 이루어지도록 해결책 마련할 것.
44.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자치구마다 달라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처우가 다른 것은 문제 있음. 개선 방안 마련 바람.
45.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지만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안 되어 있음. 휴게시간 보장 방안 강구할 것.
46.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이 공백기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47. '안심이앱' 관련,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홍보와 꾸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함
48. 관외 아동복지생활시설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49. 아동복지생활시설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
50.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12시간 이상 강의하는 것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령금액과 법적 조치 근거 확인이 필요함
51.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52.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형식적 절차에 준해서만 일하고 있음(수의계약을 위한 분리 발주, 선지급금 지급, 공사비 허위 증액, 교부금 전용통장 미관리, 폐기물 및 준공보험료 처리 미흡 등). 수탁기관 기능보강사업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53. 복지본부의 경우 기능보강사업비가 여성가족정책실의 4배 수준이지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초금액의 25%를 삭감하여 편성함
→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54. 여성가족재단 실시 연구용역 결과를 시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 등 조정 필요
55. 여성능력개발원 위탁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
5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방향 검토 필요
57. 외국인지원시설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 검토 필요

□ 여성가족재단 : 19건

1. 키움센터 설치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인식차이 및 기능차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길 바람.
2. 성인지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보임. 성인지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3. 젠더브리프, 젠더그래픽스, 젠더레터 등 통합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람.
4. 연구용역의 주제를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신중하게 하기 바람.
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오탈자 및 내용이 틀린 것이 많음. 향후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하기 바람.
6. 교사·원장은 겸직 안 되고 상근 의무가 있음. 원장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강의 시 어린이집 관리에 소홀하게 됨. 강의시간뿐 아니라 이동시간도 포함하면 어린이집을 비우는 시간 증가. 이에 따라 아이들이 케어 받지 못함. 교육 일정이 평일에 집중되어 있음. 강의일정 조정 및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함
7. 총괄하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자리 비우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8. 형식적인 성인지 컨설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깊은 연구가 필요
9. 재단의 설립목적에 벗어나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기관을 확장하고 있음.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중복 또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여 기능 개편이 필요
10.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내용, 방식, 인력풀 효과 미비, 타 기관과의 중복, 운영 미숙으로 보육계 불만 고조. 집단교육방식 효율성 떨어지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도 사업이 상당부분 중복
11. 보육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사업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길 바람
12. 보육서비스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별화 필요
13. 연구보고서 목차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허술하고 미완성 된 연구결과물로 제출함. 보고서 확인 후 연구결과와 서울시 정책을 연계한 지원 방안 마련 요구

14. 서울시 수의계약 제도운영개선 참조하여 빈번한 유찰 등으로 수의계약 악용하는 사례 방지
15. 회의진행경비 과다 책정됨. 개선 바람.
16. 연구과제 수행 결과가 실제 정책 시행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음.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17.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강사로 출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간 강의횟수가 너무 많음. 강의로 인한 보육 공백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바람.
18. 청년여성 '원더' 플러스 사업의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구성 시, 여성 경력단절의 현실적인 원인(제도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 등)을 고려할 것
19. 연구과제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등 조정 필요

□ 여성능력개발원 : 9건

1. 여성인력개발기관 취업률 산정기준 제각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총괄·지원 기능 강화할 것
2. 여성가족정책실 직접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성과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프로그램 등을 재검토해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주기 바람.
4. 서울광역새일센터로 지정되었음에도 기존의 역할과 차이점이 없어보이는데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람.
5. 여성을 개발·발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관점 변화가 필요하는 등 성평등 의식 고취관련 교육과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변경 필요
6. 통합전산망에 대한 투입 예산 대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사용율이 낮는데 사용 필요성 등 검토 필요
7. 여성능력개발원의 여성일자리 총괄기능 관련 예산 비율이 낮아 총괄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8. 여성능력개발원의 최근 3년간 운영평가 결과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고민 필요
9. 여성일자리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정책담당자 등 관계자 참여 필요

◆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

□ 서부여성발전센터 : 9건

1. 회계 항목이 혼용되고 있어 회계규칙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함
2.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함
3.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동의서류 구비해야 하며, 공무원의 위원 위촉을 지양해야 함
4. 기능보강사업 진행 시 수의계약을 위해 고의로 같은 공정임에도 금액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함
5.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업체들의 견적서 간 내용이 터무니없는 형식적 견적서가 들어왔음
→ 견적서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함
6. 특기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함
7. 수의계약 시에도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전문가·상위기관 검토 등)을 갖추어야 함
8. 기능보강사업을 보다 성의 있게 집행해야 함
9. 취업성공패키지 20대 여성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다양성 필요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1건

1.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내부 운영지침 수정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으로 준수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13건

1. 매출에 비해 사업수입은 초라함. 입주민에게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함
2. 센터 사업 시 행사비용 등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입주민 상주시간 관리 철저히 할 것
3. 여성취업·창업·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성과가 초라함. 이에 대한 개선 필요함
4.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 조직운영, 사업계획, 사업관리 등 점수가 낮음. 운영에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각오로 더 노력해 달라
5.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가 업무미숙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

6. '공예혁신 지원사업'은 신기술 융합 공예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 명칭에 맞는 사업 내용 찾아 볼 수 없음. 혁신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 내용 마련할 것.
7. 공예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성과 내기 어려움. 현재 1년 주기로 되어 있는 입주 연장 심사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할 것.
8. 더아리움의 핵심 기능은 창업지원인데, 현재 센터 직원 중 전문적인 창업지원 역할 수행할 인력 부재. 센터 내 창업지원 역할 수행할 전문인력 구성 방안 마련할 것.
9. '2017년, 2018년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많으며,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지적사항 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10. 비정규직이 많고 이직률이 높아 인력구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11. 회계규칙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12.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실적이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이 미진해보임. 입주기업의 판로개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13.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 연계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 : 14건

1. 여러 번에 걸쳐 제출받은 자료가 다 다름. 자료제출 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 바람
2. '아이조아아빠교실' 교육방법을 형식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체험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할 것
3. 국공립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서비스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업이 중복됨. 한쪽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음
4. 교육 시 유관기관 기관장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5. 민간위탁 평가서를 보면 정규직임에도 이직률이 많음.
6. 자치구 센터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가 처벌이나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7. 자치구 대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보완책 필요함
8. 시간외 근무 산정 시 정액이 아닌 실제 시간외 근무로 평가할 것
9. 현재 임대료를 과도하게 지불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시 소유 건물 등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임대료를 절감해주시기 바람.

10. 투입되는 예산대비 성과가 미비함. 광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자치구 등과의 협조를 하기 바람.
11. 대체교사 파견시 매뉴얼 숙지여부, 성인지 관점에서 벗어난 사항은 개선
12. 운영 인력 대비 임대료가 과도함
13. 현재 대체조리원 인력(4명)으로는 전체 어린이집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체조리원 증원 방안을 마련할 것.
14. 채용시 수탁기관과 연계된 학교 위주 채용 지양 등 채용의 투명성·공공성 확보(센터내 10명 중 5명이 숙명여대 출신임)

□ 서울상상나라 : 4건

1. 사업명, 행사명, 전시명 등 명확성이 부족해보임. 외국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명칭을 사용해주기 바람.
2. 고객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들 요청사항 반영여부 추진 사항 확인, 검토
3. 서울시 수의계약 제도운영개선 참조하여 빈번한 유찰 등으로 수의계약 악용하는 사례 방지 필요
4.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서울시 투자출연집행 매뉴얼 준수(월10만원에서 5만원 조정 검토)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7건

1. 학대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 하는 경우 등도 있기에, 원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신중을 기해주길 바람.
2. 입소 후 보호의 기능 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의 비중도 높는데 ‘임상심리상담원’ 수가 입소 아동에 비해 부족해 보임. 임상심리상담원을 늘려주기 바람.
3. 9월 말 기준으로 프로그램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이 있어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됨. 시정해주기 바람.
4. ‘18년 예산 불용액이 높아(교육비,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는 등 개선 필요
5. 기능보강사업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 여부, 현장대리인의 자격 현황 및 4대 보험료 납부 여부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6. 수의계약 시 현장대리인계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구비하여야 함
7. 기능보강사업의 체계적 집행이 필요함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 1건

1.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반영바람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건

1.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 취·창업 중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바람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1건

1. 거주외국인과 외래관광객 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인지 정체성 분명히 정립하여 향후 방향 설정할 것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9건

1. 1인 가구 지원사업시 1인가구가 '60세 이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을 볼 때, 성인지관점,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
2. 집행률 저조한 사업은 철저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뜻함.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고 예산 편성할 것.
3. 인력구조 문제(인력구성 불안정 및 높은 이직률)를 해결하여 조직안정화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4. 회계 질서가 잘못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5.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이후에는 분기 혹은 반기별 계획을 통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람.
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오탈자 및 내용이 틀린 것이 많음. 향후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하기 바람. 또한 업무보고서 상 세입, 세출 현황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 기본적 회계 관리 및 정확한 자료 제출 필요
7. 특정사업의 경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잦은 경향이 있는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 시의성 및 금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람.
8. 위기가정 지원 사업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람.
9. 후원금을 급여, 수당, 연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해주시기 바람.

□ 복지본부 : 49건

1. 사회서비스원 설치 관련, 담당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음. 이후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발표하길 바람.
2.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서비스의 5% 정도를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이 수치로는 해당분야의 서비스를 선도하는 것은 무리로 보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길 바람.
3. 9월 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이후에는 분기 혹은 반기별 계획을 통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주기 바람.
4. 최근 5년간 각종 수당 및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환수율은 매년 저조한데 구체적인 환수 계획 등을 수립해 환수하기 바람.
5. 장애인 탈 시설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장애유형, 환자유형 등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6. 거리노숙인 복지관련 샤워차량이 3대로는 부족해 보임. 제대로 된 노숙인 수요파악을 해보고 샤워차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람.
7. 광역푸드뱅크 신규 부지가 중랑구인데 현 부지예정지는 악취가 너무 심해서 푸드뱅크로는 적합하지 않아보임. 다른 지역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8.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하는 단독 물리치료행위는 위법임. 확인 필요.
9. 복지재단 성과급의 내규 근무평정 기준 조정 필요. 재단 성과급 지급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조정 필요
10.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이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와 차별화 되지 않음. 연구기능도 약하고 방향성 확립 없이 사업을 계속 확장해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필요
11. 무연고자 사망. 연락이 안 되는 입소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 파악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됨.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할 것
12. 입소시설에 수급자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 고령, 치매, 통풍이 있는 일반 어르신은 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움. 노인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동등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3년, 30억 소요됨. 시스템 연동에 관한 현장의 요구가 아직도 반영이 안 됨. 타 시스템과 연계도 미흡. 내년에도 10억 예산 편성했는데, 편성 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필요

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 필요
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연령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6. 자치구에 복지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해야 함
17. 2017년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서 소재불명, 실종 등으로 미조사자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및 후속조치 필요.
18. 서울시 장애인재활체육시설 보조금 지원은 전국에서 제일 낮음. 보조금이 적어 비장애인 이용률을 높여, 오히려 장애인이 이용 못함.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상이한데 지침을 바꿀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이용 현황 실태조사 할 것.
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련, 장애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현재는 거주형, 자립형으로 구분되는데, 반자립형의 형태를 제안함. 현장에서 반자립형에 대한 욕구가 많음. 유형에 맞게 예산과 인력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 서울시가 지침을 만들어 줄 것
20. 그룹홈은 상근자 한분이 회계,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함. 1인 시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임. 상근시설장(전담관리인력)배치 필요
 - 그룹홈은 종사자 구직난에 있음. 이직률도 높음. 문제될 수 있는 부분 개선필요
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간외수당(초과근무)의 지급에서 교대, 비교대 차등을 두지 말고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
2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고령화문제가 심각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찾동 방문간호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필요
23. 고령 특화 그룹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이라도 퇴소하지 않고 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미지원은 시설 자체부담으로 이는 결국 장애인 소득분으로 충당됨. 복지부 기준에 미달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 할 것
25.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을 단순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전담인력에 대한 일방적 해고발생 가능. 역량과 경험이 있어야 함. 또한 예산 일률적 배분은 연계사업을 가볍게 보는 것임. 시설과 협의 했는지 검토 필요.

26.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업은 노동법을 지켜야 함. 지금보다 비용 더 들어감. 모든 장애인들에게 표준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필요. 현 활동지원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비현실적인 단가산정, 중증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한 임금체계 등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기존 서비스기관에서 발생시킨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마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27. 사랑방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경로당활성화 사업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수혜자 요구에 맞는 사업운영의 검토가 필요
28. 쪽방주민 폭염 지원 사업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냉방기 보급, 무더위 쉼터 확충 등)적 검토가 필요함
29.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시 지도점검 평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회계감사 등 각종 결과가 공정하게 반영되어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이 적정한지 등의 관리 방안 검토 요구
30.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과 사후관리 필요
31. 찾동 사업시 수혜자 입장에서는 방문 간호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 검토 필요
32. 서울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시 회계, 계약, 물품관리 등에 대하여 해마다 지적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책 방안이 필요함.
33. 은둔형 어르신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은둔형 어르신을 위해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검토 요구
34.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 편성시 사업분석에 대한 검토, 단계별 예산 집행률 확인 등 개선이 필요함
35. 희망두배 청년통장
 - 1) 민간재원이 점점 줄고 있음. 민간재원과 시비를 매칭 비율로 정하지 말고, 민간재원을 정액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2) 자치구별 신청인원에 비해 경쟁률 편차 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 검토 바람.
 - 3) 가난 증명하는 면접 방식 개선 필요.
 - 4)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으로만 사용 목적 한정하지 말고, 실제 욕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 5) 금융교육 외에 네트워크 지원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36.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
 - 1)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도·감독 강화 방안 검토할 것.
 - 2) 인증지표 중 감사 항목에 외부감사 포함시켜 공신력 확보하고, 인증 심사위원 신중히 구성할 것.
37.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 1) 인증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주려면 인증 기준 및 절차 철저히 마련할 것
 - 2) 데이케어센터 인증기준 중 종사자의 노동권에 대한 기준 포함시키고,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종사자도 포함할 것.
38.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대부분 여성으로 폭언,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대책 수립할 것.
39. 찾동 대체인력 부재로 업무 가중된다는 의견 많음. 개선 방안 마련 바람.
40.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함.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바람.
41. 자치구별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과 재정자립도 등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확충할 것.
 - 1) 강북구,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는데 장애인복지관이 1곳밖에 없음. 장애인복지관 확충 예산 반드시 반영할 것.
 - 2) 강북구, 25개 자치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는데 시립노인복지관이 1곳밖에 없음. 강북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예산 반드시 반영할 것.
42. 강북구에서 농아인쉼터 조성 공간 마련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통보함. 내년도에 강북 농아인쉼터 조성 예산 반드시 편성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 처리 바람.
43. 복지관 임원 및 종사자 결격 사유 실태 조사 상 결격자가 많아 이에 대한 조치 계획 마련 필요
44.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제도적 해결에 나서야 하며 직접 대면하여 해결해야 함
45.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같이 법인 내 문제가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으므로, 수탁 법인에 대한 친인척 현황 조사 및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함
46. 복지재벌 법인들에 대한 총 위탁금액과 법인전입금, 종사자 현황 등의 조사가 필요함
47. 일부 소관기관에서 동종 성격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48. 기능보강사업 관련 자료들이 미비하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49. 2018년 1월 석면건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석면건축물에 대해 별도관리를 해야 함에도 관리가 허술함

□ 서울시복지재단 : 32건

1. 5, 6, 7, 8대 대표가 모두 같은 단체 출신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이 보기엔 의혹이 생길 수 있음. 향후에도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람.
2. 신규로 설치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복지재단의 역할과 일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조직을 새로 만들기보다 복지재단에서 총괄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 바람.
3. 복지재단은 복지본부의 썩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문제가 있음. 이후 복지본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역할은 선제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람.
4. 성과급이 단순수치로 작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두 배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주기 바람.
 - 재단에서 무슨 성과지표를 달성 했기에 2017년에 비해 성과급 예산이 크게 증가했는지 보고 할 것
5.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에서 실제로 잘하는 곳을 인증해주기 보다 각 기관에서 인증 기준에 맞추려고 본 업무를 못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증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 바람.
6.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의 대상으로 예측한 시설이 30개인데 9월 말 기준 6개밖에 신청하지 않았음. 사업의 홍보나 인증 후 혜택 등을 검토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주기 바람.
7. 연구 사업 및 수행 사업의 대부분을 서울시에 수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기관의 사업 등을 수주 받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8. 공동연구원에 여성가족재단 연구자가 많음. 여성가족재단도 업무가 많기에 자문위원 형식으로 활용하고, 복지재단 내 인력 위주 활용과 다른 좋은 인력을 찾을 것

9.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인증 사업 집행률 저조한 사항(인증관련 신청업체가 저조함)에 대한 원인분석 등 현안과약과 개선할 수 대책 제시
10.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증 사업 사업비 집행률 저조
1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인증 신청업체가 저조한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등 현안 과약과 향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
12. 찾동과 주민자치회, 사회보장협의회 하는 일 중복여부와 갈등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
13. 복지재단 정체성에 맞는 복지정책 연구 실시 필요
14. 불용률 최소화할 것
15. 희망두배 청년통장
 - 1) 선발인원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할당하지 말고 자치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 2) 대상 확대 검토하되,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할 것
 - 3) 청년의 욕구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검토할 것
16.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스템 점검하고 더 공정한 절차와 기준 준비해서 공신력 갖출 것
17. 찾동 현장공무원(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대체인력 없어 어려움 겪고 있음. 개선 방안 마련할 것.
18.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지표에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구체적 지표 마련할 것.
19. 위촉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할 것.
20. 성과급 지급 너무 과다함. 개선 바람.
21. 집행 규모 비해 수의계약이 과다히 많고, 동일업체 대상 수의계약 건수가 많으며, 종류가 다양함

→ 반복적 수의계약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22. 석면철거공사의 경우 관련 조례 안전 제거 관리 절차를 따라 시행해야 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시설에 고지하여야 함
23. 석면철거 관련 규정 및 근거 확인이 필요함
24. 고독사 관련 연구에서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 외 1인 가구 및 고위험 자살군 문제, 정신건강인력 문제 등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25. 여론조사 용역비용이 과도하고, 재단 홍보 등 불필요한 외주 용역이 많음.
26. 시범운영사업에 대한 복지재단의 확실한 의견 제시가 필요함

27.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함
28. 공사 관련 도면, 내역서 등 서류 검토 후 내역이 타당하며 실제로 가능할 경우 선정하여야 함
29. 사업별 조정 금액이 관행적으로 30% 이상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0. 불특정기관 감사 외 해당 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 후 사업이 종료되는 것을 개선해야 함
31. 수의계약에 대한 현장대리인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32.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전용 통장을 개설하도록 해야 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33건

1. 50플러스재단과 복지관, 일자리, 창업 등 유관기관과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음. 연구 기능도 약함. 재단의 정체성, 방향성을 확실히 할 것
2. 타 기관에서 하지 않는 용역을 많이 함. 또한 용역계약서 착수일자 없음. 연구기간이 짧음.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 되는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불용시켜 반납하거나 다음연도에 좀 더 알차게 집행할 것
3. 컨설턴트 사업 실적이 미비함
4. 캠퍼스와 평생교육센터와의 교육의 차별성을 확실히 해 주길 바람
5. 고액 강의료 지급에 대한 지급기준 시정 필요
6. 해외통신원 사업 실적 및 모집개요와 다르게 모집됨.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바람
7. 캠퍼스 교류와 협력으로 서재공간을 시민에 개방하고 있음. 실적 부풀리기보다는 의미가 있어야 함. 양적·질적 확대할 것
8. 보람일자리 평가를 통해 잘하시는 분들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9. 연구 시 필요한 위촉연구원이 없고, 외부 보조연구자를 이용. 연구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 내부 위촉연구원을 채용해서 효율적인 운영 필요
10. 연구수행 기간이 하반기에 집중됨. 연구과제 정해져 있고, 연구인력도 있는데, 상반기 연구가 진행 안 된 부분 상세한 답변 필요. 내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
11. 2016년,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연구 기능 활성화 및 강화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2018년에도 반복하여 발생되어 정책연구 관련 된 기능 개선 필요

12. 조직도내 정책개발실 인원이 타 부서 인원보다 적은 것에 대한 개선 필요.
13. 정책연구실 연구용역이 유사기관과의 중복되는 과제는 지양, 50플러스 재단만의 고유영역의 연구가 필요함
14.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프로그램 수 확대 필요
15. 유사기관과 중복되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사회·지자체 등에서 하지 않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구 및 발굴이 필요
16. 외부 회계감사 총평이 3년간 일률적으로 같아 개선이 필요함
17. (신임 재단 대표에게) 50플러스의 향후 정체성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추진할 것.
18. 올해 사업 아직 안 끝났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불용액 예상치를 5%로 동일하게 작성함. 행감자료 정확하게 작성할 것.
19. 2016년부터 불용액 점점 늘고 있는데 올해도 10개 이상 사업에서 불용 예상으로 작성함.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 위촉연구원에 대한 처우 다른 유사기관보다 낮음. 연구의 질 담보 등을 위해 위촉연구원 처우 개선할 것.
21. 공동연구원 위촉 시 동시에 수행 가능한 연구의 수 제한하는 내부 규정 마련해서 연구의 질 담보할 것.
22. 50플러스세대에 대한 연구와 정책 생산하는 50플러스재단에서 50플러스센터까지 연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23. 50플러스사업 중 재단 본부 홍보협력실에서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 협력'사업은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사업인데 홍보협력실의 현재 인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조직 보강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24. 서울시 50플러스세대 219만 명인데 재단, 캠퍼스, 센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체계는 2만 명에 불과함. 연구를 통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타겟팅할 필요 있음.
25. 상담을 통해 50플러스에 대한 파악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임. 상담을 통해 매뉴얼과 자료로 만들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6. 50플러스세대는 복지수혜자이면서 경험과 경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도 하는 세대임. 50플러스세대의 경험과 경력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7. 향후 50플러스센터와 캠퍼스 설치 시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설치할 것.
28. 연구사업 잔여 예산을 전용하여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잘못된 회계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합목적 예산 사용이 필요함

- 29. 재단의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
- 30. 사업 관행에 따른 인력 채용 계획의 개선이 필요
- 31. 유사 기관과의 협력을 강구하여야 함
- 32.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현황, 세입·세출 내역 오류가 많고 부정확. 개선 요망(노인관련시설 포함)
- 33. 서부캠퍼스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된 바, 향후 공직선거 등에 있어서 재단의 정치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

◆ 노인·장애인·자활 관련시설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1건

- 1. 사업별 집행률이 저조함. 계획을 과도하게 세움. 사업계획 세울 시 전 년도를 답습하는 부분을 지양 할 것

장애인인권센터 : 1건

- 1. 인강학교 실태조사에 대해 진행사항과 문제 발생 후 조사에 들어간 시기는. 조사 잘 마무리하길 바람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1건

- 1. 장애인 이동수단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저조한 편인데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해주기 바람.

해맑은마음터 : 2건

- 1. 17, 18년도 인권침해가 발생.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고 다시 복직함.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설에 있어도 되는가.
- 2. 인권침해는 시설들에서 종종 일어남. 인권지킴이단 내부고발. 시설에 대한 문제가 표출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늘편한집 : 1건

- 1. 구내식당 식자재 계약은 후원업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지양, 개선 요구

신아재활원 : 9건

1. 수용자들의 고지혈증 예방 대책 방안 마련 필요
2. 석면 철거 공사 관련 실험기관의 결과 데이터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
3. 석면 실험 데이터를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함
4. 석면 샘플링 및 평면도 등 관련 자료가 부재함
5. 기본적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6. 지도점검 결과 비지정후원금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 후원금 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수할 것
7. 오래된 시설임에도 회계부분에서 감사를 지적 받음. 추후 반복적인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조치 바람
8. 예배 시 장애인카드에서 현금이 인출 되었다는 인권실태보고서 이후 조치결과 확인필요
9. 중증장애인들이 노령화됨. 시설의 애로점.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

강북노인종합복지관 : 3건

1. 연도별 사업집행현황을 보면 법인전입금 매번 불용이 많음. 전입금 집행액 잔액이 서로 안 맞음
2. 천장 텍스 및 바닥재 교체 공사 중 천장 공사의 경우, 석면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어야 함
3. 시방서 및 계약규정에 대한 숙지 후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1건

1. 복지관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찾동복지플래너가 수행하는 서비스 중 복되는 사례 있음. 일원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2건

1. 돌봄노동자(7만 명) 중 실제 어르신돌봄종합지원센터 이용하는 인원 적음. 이용 활성화 방안 필요
2. 최근 3년간 예산 및 인력규모는 증가했지만 그에 반해 실적은 기존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음. 업무분장 및 조직개편 등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람.

□ 시민건강국 : 26건

1. 고양정신병원과 관련하여 2018년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경찰 고발·수사 의뢰된 사안이 2014년 특정감사 결과와 대동소이한 점, 2014년 특정감사 결과가 2017년 재수탁 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은 집행부가 부실하게 지도·점검을 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에 대한 소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2.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실시되지 않는 등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하고, 사회보장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병원 등의 위탁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4. 민간위탁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기존에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시설) 운영 잘하고 있는지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 결정할 것.
5. 마을의사 사업. 찾동에서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보건소 안내함. 의사가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며, 행정력 낭비임. 사업이 서로 연결될 필요가 있음. 5명의 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것은 인력낭비임. 반복해서 여러번 찾아갈 필요가 있는지 사업에 대한 보충이 필요함. 관련 계획 제출 요망
6. 우리아이건강관리의사사업이 축소된 이유 확인, 검토
7. 은평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 조치결과 확인 요망
8.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년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지. 직영 운영전환으로 고용 불안정해지고 있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개선하기 바람
9.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연차별 확대 계획이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음. 당사자 사적 공간 부족. 탈시설 욕구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정신장애인들도 자립생활센터가 필요
10.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실질적인 전달체계를 관리해주는 부분 필요. 모범적인 모형 만들 것을 제안
11. 공공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지속 강구
12. 야간, 공휴일 근무시 해당 수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외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13. 지역보건관련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등 조정 필요

14. 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최고 수준의 전문가 참여 검토 필요
15. 직영 및 시립병원데 대한 임상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6. 자살 예방 실적이 좋은 자치구에 인센티브 제공들에 대한 사항 검토
17. 금연 성공기간이 6개월인 것이 너무 적고 그 이후 흡연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
18. 아이존, 2006년부터 10곳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 구체적 확충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것.
19. 시립병원, 서울시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 안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
20.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유기동물로 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안락사 외에 다른 처리 매뉴얼 마련 바람.
21. 시립병원, 행정직이나 관리·운영직에 비해 전문직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많음. 내부적으로 원인 파악해서 개선 방안 마련 바람.
22.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제공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한 것은 문제 있음.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분석 거쳐서 예산 삭감 여부 결정할 것
23. 격무부서의 부서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함
24. 서남병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2019년 예산에서 손실보전금이 삭감됨 → 병원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25. 민간건축물 화장실 남·녀 분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행정적 조치 필요함
26.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분양계획을 재수립하고 조속히 이전을 추진해야 함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전체 병원 공통 : 1건

1. 치과 의료기구 세균검사를 통해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함

서울의료원 : 20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기 좋게 제출하기 바람.
2. 노숙자 등 치료비 지원이 과잉진료가 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정책 지원을 해주길 바람

3. 서울의료원 조직원들이 좀더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과 인식개선이 필요함
4. 의료취약계층 무료간병사업이 종료되면서 간병사들이 일을 못하게 됨.
고생해서 일하신 분들인 만큼 계약직이라도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해 달라
5. 서울의료원 및 병원들 채용문제 관련 제보가 있음
6. 서울의료원 직원 채용 시 지역에서는 채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지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많이 해 달라
7. 임상연구비 관련 연구과제 심의위원회가 없고, 유사율이 높으며, 부적
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 실시할 것
8. 서울의료원이 중추가 되어야 함.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투자를 늘려야함.
9. 결손처분 관련 미수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10. 임상연구과제 선정, 심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수와 임상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 임상연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11. 의료 진단의 정확성을 위해 내구 연한이 지난 의료장비 단계별 교체 검토.
12.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필요
13.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같이 전문진료센터 설립운영 이 필요하고 나아가
로컬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 검토 고려
14. 요양급여관련 규정 준수로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
15. 사회사업실 상담건수, 진료비 지원 등 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6. 사회사업실 인력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인력확충 방안 고려
17. 무료공동간병사업 중단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22명의 간병사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마련 바람.
18. 진료비 감면 대상자 중 직원 및 가족 감면자가 50% 이상을 차지함.
과다한 진료비 감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19. 서울시 특정감사 결과 상 일반 행정처리 미숙에 대한 지적이 많아 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 기능보강사업 관련 서류(원가계산서 및 시방서, 현장대리인계 등)가 부
재하고 행정처리가 미숙함

어린이병원 : 6건

1. 어린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규 진료 대기가 7~8개월 걸림. 정신병동 폐쇄 이후에도 의사 1인당 진료일수가 2~2.5일에 불과함. 진료적 체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의료인력 관리 방만하고 태만하게 운영. 진료일수 늘려 대기인원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2. 임상연구 정액제로 지급. 심의·평가기준 없음. 학술지게재여부 없음. 자각할 필요 있음. 추후 설명해 달라
3. 의약품 구입관련 집행잔액이 없음. 추경을 하고도 예산이 바닥남. 예산 편성시 계획 정확히 세워서 운영할 것
4. 발달센터 치료프로그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음. 공공기능의 역할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5. 발달센터 직원들 간 협업이 잘 안됨.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6. 외부강의를 줄여 환자를 생각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은평병원 : 3건

1. 정신진료관련 로컬병원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방안 마련 강구
2. 의료장비 구입시 활용도 등 다양한 분석과 규정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석면공사 전 사전절차인 석면분석 성과보고서가 누락되어 있고, 처리 비용 서류,이행각서 상 동일시행 여부 관련 서류가 누락됨
→ 공사비 집행에 대한 체계적 확인이 필요함

서북병원 : 1건

1. 기능보강사업 관련 서류가 비교적 충실히 구비되었으나 관련 필수 서류 일부(하자보증증권, 현장대리인 재직증빙 서류, 폐기물영수증 등)가 누락되었음. 보다 주의를 기울여 집행해야 함

보라매병원 : 2건

1. 임상연구과제 선정, 심의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수와 임상연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 등 임상연구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2. 정규직 전환심사 시 공식적 문서와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투명하게 심사할 것.

서남병원 : 1건

1. 현재 공식인 호흡기내과·비뇨기내과 전문의를 조속히 초빙해야 함

◆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신보건시설

□ 보건환경연구원 : 1건

1.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위원회 구성 관련 제대로 구매해서 사용할 것

□ 공공보건의료재단 : 3건

1. 외부 용역을 통한 연구보다 자체 연구 사업 비중을 늘리는 방안 고려
2. 재단 설립시 6급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현재 미편성되어 있어 향후 6급이 재편성 되는지에 대한 검토
3. 연구과제 선정 평가 위원회 구성 등 규정안 수립

□ 정신건강복지센터 : 4건

1.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
2.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으로 전환. 종사자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되고 임금하락, 고용불안을 전문인력이 대거 퇴사함.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중요해짐. 역할 중요해짐에도 숙련자가 떠나 정신건강서비스 질 하락. 이로인해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방임·방치될 처지에 놓임. 이에 대한 대책 필요
3. 자치구 직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 노력과 개입이 필요.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4.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오히려 중대해진 시점에서 지역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대책 마련 검토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5건

1. 모든 사업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단순 교육만 시행되고 있어 능력 있는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함
2. 유족지원팀 인원이 양적·질적으로 인력배분 자체가 과다함
3. 유가족 모임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고, 많이 미흡함.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
4. 전체 예산대비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에 대하여 검토하고 상담사업, 위기관리사업 등 센터내 주요 사업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 있음.
5. 수능 등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대비한 자살예방 관련 사업 검토 및 고려

□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 : 59건

1. 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7개 자치구는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18개 자치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유를 파악하고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하도급건설공사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점검개소당 적발건수가 수치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하도급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3. 최근 3년간 도로사업소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하루에 3개소 이상의 현장을, 많은 곳은 하루에 10개소를 점검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리적으로 내실 있는 검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하자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북부 및 강서 도로사업소에 대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관련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안전점검 소홀”, “건설기술자 경력 미검증”, “하자담보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불량”이 지적받은 바 있으나 안전총괄본부 및 도로사업소는 이에 대한 경위 및 조치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경위 및 조치사항을 재 파악하여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5.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관련하여 자치구와의 업무 협력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판단되며, 전문가 활용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철저히 할 것.
6. 은평새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뉴타운, 삼성지구 등 예측했던 인구수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임. 또한 본격적으로 상주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7. 서울시 옥외지진대피소 대다수가 학교운동장, 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상황대응메뉴얼에서 대피동선 검토 및 반영은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실제상황에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

8.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기관의 검사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식 인증된 안전검사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9.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B/C) 평가가 낮게 나옴에 따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경제성 평가 시 교통 속도, 사고율 등의 인자만을 고려해 판단할 뿐 주민편의는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 편의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 올해 10월 기준 실공정률이 100% 미만 공사 현황 제출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교량안전과만 “미만공사 없음”으로 회신하고 그 외 다른 부서는 별도의 회신이 없었는 바 향후 요구한 자료에 대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것.
11.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 맨홀상태평가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E등급 맨홀 65,660개 중 위험상태로 분류되는 D, E등급 맨홀은 20,776개로 전체 31.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맨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12. 일반적인 시설물 안전등급과 맨홀 관리등급은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일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
13. 6개 도로사업소 재포장 공용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7년까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며, 공용기간이 2~3년이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4. 노들북고가교 현장의 거더 후단부 및 슬래브 하단 조인트 부위의 콘크리트 열화 및 탈락, 교각점검로 부식 및 연결부 취약 등의 안전사고 요소가 다수 발견된 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즉각 조치할 것.
15. 장기간 미사용한 제설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화하게 되므로, 경화된 제설제는 분쇄하여 사용해야 함. 그러나 서울시 도로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쇄기는 1대뿐이며 1일 분쇄용량은 48톤으로 재고량 대비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신규 특수 분쇄장비 도입 또는 효율적인 제설제 관리대책 수립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16. 최근 4년간 포트홀 발생건수, 면적, 피해보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포트홀 발생이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언론보도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3등급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의심이 되므로, 경위를 파악하고 포트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포트홀 발견 신고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포트홀 신고건수가 연평균 3만 5천건에 달하는 등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므로 신고 후 포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없도록 주의할 것.
18. 서초~방배로 간 도로 개설공사(서리풀 터널)와 관련하여 금년 2월 개통식이 아닌 관통식에 구청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거창한 행사가 거행되었던 바,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행사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는 불합리는 없어야 할 것임.
19. 서울시는 공동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도로함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금년 5월 동공탐사 분석프로그램 개발 완료로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공동탐사 실적을 살펴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이와 같은 기술은 자체 기술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 한강상 PSC교량 안전강화공사는 교면포장 정비와 상판 보수를 하려는 것으로 교면포장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교면포장 기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또는 신기술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공법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21. 서울시는 2014년부터 노후포장도로 정비를 위해 평균 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서울시 포트홀 발생 건수는 3만~3만 7천건으로 변화 추이를 보면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움. 포장공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
22. 서울시는 2014년 8월부터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순수 국산기술을 활용한 공동탐사장비를 자체 설계로 제작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탐사속도 향상 대비 탐사결과 분석속도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분석속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23. 최근 들어 제설 이후 도로 위에 백색의 잔존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제설제 품질 검증 및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24. 동부간선도로지하화 사업 관련하여 지하터널의 자동차 매연을 내부 정화하여 지상으로 배출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물포터널 공사와 서부간선도로지하화 공사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 모두 내부 정화 후 내부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5. 원효대교북단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용산방향 램프 교대에 대형 균열이 방치되어 있고, 강상자형 거더 단부 도장 보수 시 측면 웹판과 하면 플랜지 도장 마감선이 불량하며, 북단 하류측 보행로에 조형물 고정 스테인레스 밴드 돌출로 보행안전에 위해(危害) 요소가 있음이 확인되는 바,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 즉시 조치할 것.
26. 서울제물포터널 2공구 현장사무실을 지지하는 하부 강재 연결 상태가 산소용접기로 임의절단 되어 있으며, 일부 강재는 하부 플랜지가 심하게 부식되어 있음.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 즉시 조치할 것.
27. 월드컵대교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액된 데에는 서부간선도로와의 연결, 월드컵대교 D램프 삭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크며, 해당 공사가 지연될 경우 성산대교 보수공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020년 8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28. 월드컵대교의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치 계획이었던 램프D 설치 취소로 인해 반발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램프D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장기간 불편을 감수한 인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마련할 것.
29. 서울시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재원 투입현황 대비 시 건설보조금을 비교해 볼 때 급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미루어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특혜 의혹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할 것.
30. 월드컵터널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심한데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관리도 안 되고 있으며, 이용자도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할 것.

31. 월드컵대교 램프D와 관련해 설계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므로 발주청에서도 설계용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2. 도로사업소 노후도로 포장공사 관련하여 6개 도로사업소마다 단위면적당 포장비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내 도로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우므로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할 것.
33. 동남권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분석 및 도로체계 기본구상 관련하여 금액 변동 없이 2차례 준공기한이 연장된 것에 미루어 용역수행업체에 무리하게 강요한 부분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용역 발주 전 계획단계에서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
34. 건설업혁신대책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말단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하위 단계의 업체 또는 인력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5.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도로계획과의 매수청구 보상현황을 보면 유독 서초구만 보상이 많이 이뤄진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보상예산 편성 시 자치구별 차별이 없도록 주의할 것.
36. 서울시 PSC 교량 관련해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 발생 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후레시넷”이라는 업체에서 보강공사를 거의 독점하다 시피 했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사발주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
37. 광축매 도로포장 신기술 관련하여 그 효과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시민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38. 서울시내 교량의 수중구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39. 하저터널은 재난 발생 시 훨씬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저터널 발생 시 상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40. 도로사업소별 페아스콘 처리현황을 보면, 동부도로사업소는 목표 대비 실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부당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

41. 평택대교 붕괴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데,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형사소송건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42. PSC교량 긴장재 긴급보수 관련하여 2016년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보수를 시행한 업체가 2017년, 2018년에도 긴장재 보수 용역을 수행하며 총 100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합 사항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추후 보고할 것.
43. 서울시 교량 하부공간 점용현황을 살펴보면, 점용허가의 원칙인 공공적 또는 공익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용자가 다수 발견됨. 특히, 잠원고가 하부 점용자는 리버사이드 호텔이며, 점용시설 종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바 적법하고 점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부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44. 강서도로사업소 2017년 12월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설물 보수보강 하자관리 부적정이 지적된 바 있으며, 지적된 특정 안전점검업체가 다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경위를 파악하고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45. 서울안전앱 관련하여 집계된 사용자수는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다 판단되며,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므로 서울안전앱 활용도를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6. 동부도로사업소 발주 도로공사 변경내역을 보면 업체가 낙찰 받은 이후 설계변경으로 당초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예산액과 금액이 같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타 사업소에 비해 동부도로사업소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7. 공동은 배관공사의 터파기 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다짐 불량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 후 되메우기 시 점검 및 관리 강화방안을 모색할 것.
48. GPR탐사 차량의 탐사속도에 비해 분석속도가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으므로 분석인원 충원 또는 기술개발을 통해 분석속도를 향상시킬 것.
49. 송파구 배명사거리 옆 모범약국 부근 도로 함몰사고가 발생해 차량 바퀴가 크게 손상된 사고가 있었음.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보고할 것.

50. GPR탐사와 관련하여 탐사가능깊이가 1~1.5m인데, 지하철 역사, 공동구, 광역상수도관 등은 더 깊은 곳에 매설되어 있어 노후화 또는 불량으로 인해 더 깊은 심도에서 발생하는 공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51. 현재의 GPR 탐사 차량은 보도에 대한 공동 탐사는 불가능하므로 보도상 공동을 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52. 공동이 지하에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암반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므로 지반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지하탐사 점검주기를 결정할 것.
53.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 2003년 실시한 설계가 10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 설계변경되는 것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주변 도로망 구축과 연계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주변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4.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대해 재검토하고, 램프를 간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
55. 월드컵대교 건설의 설계변경, 공기연장과 설계사는 물론 시공사, 감리단, 발주처도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며, 재설계 시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당초의 D램프안대로 시공할 것.
56. 월드컵대교 원설계사인 유신과 삼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시에서 이와 같은 설계오류 재발방지를 위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철저히 할 것.
57. 월드컵대교 램프D 설치 불가와 관련하여 공법상의 문제인지, 예산상의 문제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고할 것.
58. 지하의 가스배관 설치에 따라 흠다짐이 부실하거나 지하 폐자재 매립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굴착공사 현장감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59. GPR 탐사와 관련하여 탐사연장이 6,478km인 반면 2014부터 2018년까지의 탐사기간 동안 탐사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 있음. 탐사 구간 상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

□ 소방재난본부 : 60건

1. 드론 및 실시간 영상시스템 등은 상당히 선진적인 예산으로 재난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
2.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흥업소 등과 같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취약지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할 것.
3.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같이 서울에 위치한 위험물저장소 등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체소방시설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특수 건강 이상 소견자 후속조치 계획에 보면, 이상소견자가 800명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연간 1인당 1백만원, 1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나머지 치료가 필요한 700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5. 특수 업무직에 속하는 소방공무원 질환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2.8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맞추어 시스템을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
6. 최고의 직장이자 최고로 존경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체력검증 미실시자에 대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바, 미실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
7. 소방공무원의 경우 외부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바, 영양사 및 취사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채용 및 식단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8. 소방행정타운, 용산소방서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전체 소방공무원 자녀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직장어린이집 및 아이돌봄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서 평가항목 중에 긴급자동차 통행방해 위반 단속 건수를 반영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 없이 무리하게 구청으로 통보하여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소방서평가항목 중 단속건수를 과태료 부과건수로 변경하고 차량에 탑재된 영상매체 장비 등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

10.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재산 조회를 실시 한 후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을 해버린 사례가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철저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11.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급, 1급, 2급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진압 시 사용이 가능토록 도면을 확보하고 소방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현장대원들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돕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입력토록 할 것.
12.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의 경우 건물주와 소방점검업체 간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 소극적인 점검이 실시되는 등 부실점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인력과 예산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건물주 처벌 및 소방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3. 현재 소방서장 직급체계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동일직급으로 운영되어 조직정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경찰관 직급체계와 유사하게 인구수에 비례해 소방서장의 직급을 1단계 높일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직급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토록 할 것.
14. 화재안전특별조사 보조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비전문가에 대한 채용이라는 비판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장기간의 교육을 실시하여 채용목적에 부합한 인력을 운용을 추진할 것.
15. 강서구에 소방차량진입곤란 구역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16. 과거 소방훈련은 주로 대형건축물에만 실시되었으나 초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학교 등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17. 업무보고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을 70건이나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결과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추적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실시할 것.
18. 전체 소방관 중 여성이 소방위 계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한 만큼, 여성소방공무원의 간부비율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19. 소방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월간, 연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이 특별조사통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20. 몸짱소방관 달력 제작 및 판매는 화상환자들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되면서 42,500부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소방대원의 상품화라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당초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할 것.
21. 제천화재 시 출동한 선착대가 해당건물에 대한 도면이 없어 진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재피해가 커졌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미등록된 서울시내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2급)의 도면을 조속히 확보하여 소방안전지도에 탑재토록 할 것.
22. 화재현장에서 무전기, 사다리차 등의 장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부터 철저한 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할 것.
23. 서울시내 영업 중인 목욕탕, 찜질방 등은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소방서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할 소방서는 보고된 일부 시설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당해연도에 특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보고 방안을 강구할 것.
24.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원이 차단되고 농연으로 인해 비상구 유도등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광물질을 활용한 피난유도선은 유용한 방법이라 판단되므로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5.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에 PTSD 고위험군이 369명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심리지원단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26. 최근 3년 공사 관련 계약실적을 보면, 총 310건 중 15건 정도가 5천만 원이 초과됨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예산 쪼개기,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상당한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27. 최근 5년간 암행감찰반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사찰 및 미행을 해야지만 적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소방감사반 운영에 따른 적법성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
28.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장비 보유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미비한 장비확보에 노력할 것.
29. 소방활동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편성금액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
30. 소화전과 관련해 예산 확보기관과 집행기관이 달라 예산 집행률 및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1. 생활안전대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긴급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32. 소방대원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소방현장에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방관서 체력단련장은 환경이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할 것.
33.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15~`18까지 예산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면 본부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바 시민안전파수꾼의 양성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
34. 용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처리는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것.
35.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소방관서의 권한이 강하다고 느껴지고, 소방관서의 인허가 담당 교체주기가 너무 길어 민간에서는 불만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청렴성을 고려해 인허가 담당자의 합리적인 근무기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36. 한반도 지진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관서 지진성능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7. 22개 소방서에 소방안전체험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에 13개 소방안전체험교실에는 지진체험시설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하게 설치 계획을 강구할 것.

38. 성동소방서 소방안전교실에 최신시설이 설치되어 이용률이 증가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타 소방안전교실도 체험시설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할 것.
39. 공직기강확립과 관련해 검·경찰에서 통보된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
40.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
41. 여성공무원 고충상담관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2. `18년 서울시 외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완비증명발급 업무에서 다수의 부적정 발급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에도 철저를 기할 것.
43. 소방차량, 진압, 구조장비 등에 대한 노후률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4. 소방공무원이 출동 시에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는 소방대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면체세척기 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과 호흡장비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세척장비 등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관련 매뉴얼을 만들도록 할 것.
45. 심리지원단에 고위험군 소방대원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46. 소방안전지도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면이 미확보된 건축물이 많다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도면을 확보할 것.
47. 직원들이 지휘관을 행정지휘관과 현장지휘관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으며 특히 갈등구조(간부VS비간부, 내근VS외근)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사운영 및 체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48. 근무성적평정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근무성적평정 공개가 없다보니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개선할 것.
49. 기동복 교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서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정확한 의견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50. 언론보도 따르면 자살하는 소방관이 순직자의 3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의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여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1.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유독가스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군대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일정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연재를 설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불연재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
52. 소방행정타운 내 훈련타워의 난간 보강재와 창문부분이 위험해 보이므로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최초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할 것.
53. 소방행정타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자 중심(소방대원)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 할 것.
54. 소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철저히 하되, 공기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을 건설할 것.
55. 현재 기술발전 등으로 위치의 제약이 극복되고 있으므로 본부 위치 재배치 문제는 추가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할 것.
56. 소방공무원 신입생 교육과정 중 퇴소하는 교육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57.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추가 확보 등을 통해 안전하게 건설할 것.
58. 소방행정타운 생활관 비상계단 폭이 좁고 경사도가 심해서 위험한데, 1.5m 규정에만 딱 맞추려 하지 말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 것.
59. 소방행정타운 각 동의 옥상에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
60. 소방행정타운 내 장래의 필요성에 대비해 소방헬기 착륙장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

□ 물순환안전국 : 35건

1. 빗물펌프장 펌프의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 사용되는 펌프가 있으므로, 펌프 교체 또는 점검 등을 강화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 및 관리를 자치구에만 맡겨두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그 설치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기 조성된 빗물마을에 설치된 투수블럭, 빗물저금통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것.
4.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사업수행실적을 엄격히 평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해당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한강 수질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5. 물재생센터 슬러지 함수량에 따라 슬러지량, 감축처리비용에 차이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슬러지 함수량 저감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6.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일부 단체가 독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착순 접수방법 등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7. 다자녀가구 대상의 하수도사용료 감면금액이 미미하므로 감면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8.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재질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덮개 재질 선정과 관련하여 경제성, 재질 적합도, 제품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것.
9. 빗물펌프장 123개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펌프 30대가 운영 중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교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10. 재난관리기금을 각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11. 하수도 사용료 고액 채납자의 채납액이 소멸시효를 넘겨 미징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채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12. 물재생센터 공단화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하수처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13. 청계천 복원사업 등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하천복원에 따른 토지보상, 주민참여, 교통대책 등 관련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14. 금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던 은평, 도봉, 노원 등이 침수취약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침수취약지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15. 여름철 폭우 이후 청계천에 악취 및 동물사체 발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해 청계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속 시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성격을 명확히 하여 필요 시 근거 조례를 제정도 검토하여야 하며, 임시 개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한강 주변 시설물 안전문제, 어민 의견 등 검토 후 추진할 것.
17. 일정규모 이상 개인정화조는 악취저감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해당시설을 철저히 조사·점검하고 미설치자는 행정지도 및 형사 고발하는 등 도시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
18. 하수관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시 조사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편성할 것.
19. 서울시 내 유출지하수에 따른 도로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0. 노후 주유소 중 시정명령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과 함께, 불이행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21.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보완 방안 마련할 것.
22. 비상시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 임시운영방안을 검토했음에 불구하고 올여름 기습 폭우시 운영하지 않아 강서·양천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동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3.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로 일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유출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피해자인 서울시는 관련 협의체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24.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과 달리 정책적으로 활용방안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므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5.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세입결손액이 증가추세에 있는바,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것.
26.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공사장 인근에서 유출 지하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7.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28. 물재생센터 악취와 관련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9.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과 관련하여 전체 체납자 명세, 재산유무, 압류여부, 소멸시효 여부 등 꼼꼼히 검토 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30. 사유지를 공공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 하수도 점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1. 물재생센터별로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기준에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검토하여 독점적 사용이 아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32. 기본계획에 불투수층 감소 목표 달성년도가 20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등을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3. 제물포터널 환기구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환기구의 위치가 공원 내로 계획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34.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 저장되는 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35. 전문적인 하수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적의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24건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청된 자료 작성이 부실하고, 질의 답변이 무성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추후에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우수 설치현장에 시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 중인데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것.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의 설계변경 및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4.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선거철을 앞둔 시기에 전례없는 터널 관통식을 개최하였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집행할 것.
6.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중 꽃마을 명달로 확장공사를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기존 시공사에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 해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7. 신림-봉천 터널 발파공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월드컵대교 관련 원설계 부실에 따른 서울시 재정 부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서울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 재질 선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재질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추진 과정을 재검토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10. 서울역 7017프로젝트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장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과다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추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책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11. 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이 설계 오류 등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관련자들에게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추후에는 공사 초기단계에 서부터 설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2. 허위경력 기술자가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있으므로 경력 및 실적 서류를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참여 배제 등의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13.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 중 과도한 하도급 및 불필요한 재하도급이 발견된 바 상세 내역 및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가 정립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14. 건설알림이 사이트 내 자료 업데이트 등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않고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바, 인터페이스 점검과 함께 콘텐츠 보강을 추진할 것.
15.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 설계과정에서 원 설계자의 부실설계로 인해 서울시에 금전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6. 양평유수지 저류조 설치공사 현장 내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공사현장 위험물저장소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것.
17.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는 최초 설계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1년 동안 총 29건의 실정보고와 총 4회의 설계변경으로 최초 공사비 대비 185%가 증가하여 공사비가 과다 증액되고 행정절차 또한 뒤바뀌는 등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차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설계가 부실한 사업의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예산낭비와 부실한 공사가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8. 종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 중 교통정리를 목적으로 모범운전자를 배치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약 19억원의 부당수당을 지급한 바, 차후로는 근거없는 부당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19. 강서구에서 월드컵대교로 진입하는 D 램프 설치계획이 변경되었는 바, 당초 설계대로 강서·양천 방면에서 월드컵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D램프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
20.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페스티벌 사업을 토목공정을 맡은 기존 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는 회계질서를 위반한 행위라 판단되므로, 적법성을 검토하여 조치할 것.
21.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특별관리를 통해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2.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태양광 방음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20년 이후 기부채납 시 성능 보증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부담이 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태양광 방음터널 임대운영 계약기간이 20년으로 협약된 것과 관련하여 지금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태양광 방음터널이 하천변을 따라 설치되는데 태양광 모듈이 1m²당 17kg으로 태풍 등에 따른 강한 바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기술심사담당관 : 11건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위원 선임 시 여성정책 담당관 등의 비전문가를 무리하게 참여시키기 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 중에서 여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성평등법에 기초하여 성별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특정 업체와 시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업체들을 상대로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부과된 과태료는 철저히 징수할 것.
3. 2019년도 건설현장 폭염 대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한편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적용할 경우 검증절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4. 위원회 운영 시 여성위원을 확보하는 것에만 기준을 맞추려한다면 필요한 수준의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전문가들의 사회진출 확대추세를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계획을 수립할 것.
5. 폭염경보 시 임금보전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더 열악한 민간현장의 상대적인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
6. 기관별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주기가 너무 길어 지적부터 환수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원(임기제 등)을 보강하여 점검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7.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많은데 설계변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 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8. 월드컵대교 D램프 삭제와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원설계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는데 벌점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며, 또한 해당 회사 임원이 건설상을 수상하였는데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 소속된

임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상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할 것.

9. 신기술 활용실적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활용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품질시험소 보유 장비 중 대체시험기가 없는 시험기가 있고, 해당 시험기기의 수리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체시험기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시험기의 수리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11. 품질관리 현장확인기동반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인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보고 불량건설자재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확실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서울기술연구원 : 18건

1. '18년 1월 조례 공포 이후 원장 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원구원 정상화가 지연되며 많은 우려를 야기했는 바, 앞으로는 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2. 업무보고에 언급되어 있는 플랫폼, 마스터플랜연구체계 구축 등은 개원 준비단계에서 수행되었어야 한다 생각되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바,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립하여 연구원의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3. 기술연구원 올해 예산이 66.8억 편성되었는데, 집행률은 24%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연구사업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조속한 연구인력 충원과 연구과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4. 기술연구원의 연구추진 지연사유로 원장 부임 지연은 남득이 어려움. 게다가 원장 부임 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예산 집행률이 24%로 저조하며, 내년 출연금 역시 1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이므로 올해 명시이월된 예산과 차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
6. 기술연구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일반직은 정원 대비 거의 채용이 이뤄졌으나, 연구직은 아직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연구직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할 것.

7. 기술연구원의 비전 및 목표가 지나치게 과하고 복잡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판단되므로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
8. 타 연구원의 경우 위탁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교훈 삼아 향후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확보한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탁용역을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빗물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할 기술용역 테마 중 이와 같은 현안도 포함시킬 것.
10. 연구원 연구과제에 하수도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데, 실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먼저 정책적인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도록 할 것.
11. 기술연구원의 장애인 직원수가 전무한 실정인데, 향후 장애인 고용 및 환경조성 등 배려가 필요할 것.
12. 기술연구원의 자체연구와 위탁연구 비율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원의 우수인력을 최대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기술연구원의 외부수탁용역을 권장하여 자체 수익 창출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구원의 연구실적 홍보 등 대외홍보에도 노력할 것.
14.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바 있으며, 기술연구원도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우수 연구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유출 방지를 위한 대비를 할 것.
15. 서울연구원의 기존 기술공학분야 업무를 흡수하여 서울연구원은 인문사회분야, 기술연구원은 기술공학분야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6. 서울시 산하 서울기술연구원, 물연구원, 서울연구원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며, 기술연구원에서 기술분야는 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7. 연구원 및 각 부서가 불필요한 발간물 및 연구실적 보고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할 것.
18. 한강수중보과제와 관련하여 신곡수중보 존치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향후 기술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이 논란 야기 소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시 객관적이며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재생본부 : 37건

1.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위촉직 종사자 대다수가 4대 보험 미가입된 상태이므로, 법규에 따라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도록 보험가입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전체활동가 및 파견자 등에 대한 근로환경, 인원 총수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하여 관리할 것
2. 한강사업, 삼포레미콘 공장 이전 사업 등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바, 향후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3. 정비사업 구역 내 지분 쪼개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하여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를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조합원 수 증가 등에 따른 추정분담금 재산정시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되, 이와 관련한 사업장내 주민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4. 광화문광장 조성시기와 관련하여 목표연도(2021.5)를 역사광장 조성(2023년)과 GTX 역사(驛舍)조성 사업의 목표연도(2023년), 녹색교통위원회 활동시기(2023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시기 등과 연계하여 그 조성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본부 소관 위원회 위원이 타위원회 및 용역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용역 사업 참여 위원이 위원회 심의 및 자문위원으로 중복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본부 소관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며,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이 다수임에도, 사업기간 연장 사업 중 용역비를 추가 지급한 사례가 거의 없어 용역 부실 초래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7.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물리적 환경 등) 및 후보지 선정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 등 선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
8. 용역 입찰 시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실적 등 관련자료의 증빙 없이 관성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용역 입찰 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응찰업체와 특수관계가 의심되는 자 등 부적절한 평가위원 배제 및 평가위원 명단의 온라인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할 것
10.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정책방향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할 것
11. 돈의문박물관 토지소유권, 사업비 정산, 관리운영상의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부서가 없는 만큼, 돈의문재정비촉진사업의 주관부서였던 도시재생본부가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과 같이 예산 심사과정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편법적인 사업추진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돈의문박물관은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12. 돈의문재정비촉진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던 정동사거리 십자형 교차로 사업이 돈의문마을 사업 추진으로 백지화되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목적과 방향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임. 그러나, 재생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재생사업의 목적이 희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클린업시스템 상에 27개의 법정 공개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조합이 있으며, 그 중 자금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공개율을 높이도록 조치할 것.
15. 지역재생전문관 모집 시 전문관 제도의 목적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격기준 제시로 목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만큼 추후 모집시 도시재생에 필요한 현장 활동가에 합당한 자격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과 전문관 채용시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7.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간이 금년 말에 완료되는데 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기간제한 없이 신속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운영기간 만료 후 재생지역의 관리방안과 코디네이터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18. 체비지 관리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공공시설물을 지어 무상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중 2차례 무상 양여하고 남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불가 통보는 불합리하므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 할 것.
19. 도시재생사업의 인지도 조사 결과, 인지도가 낮고 주민 참여 없는 홍보방법 일색이므로 주민참여를 전제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해 주기 바람
20. 도시재생사업의 협의체 구성 및 활동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관리할 것.
21.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도시재생 1단계 사업 중 최하위이므로 지역별 안배가 필요하며 특정 사업대상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
22. 빈집매입업무 추진 시 빈집 매입가격이 상승되지 않도록 사전안전 장치를 마련하되, 매입한 빈집의 활용도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입지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매입기준을 신중하게 마련한 후 매입업무 추진할 것
23. 도시재생활성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24. 정비사업 기반시설(국공유지) 무상양도와 관련 위법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업무처리기준의 폐지 등을 포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25. 양천구 신정4구역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화해)와 관련하여 해당구청에 책임전가 행위를 중단하고, 해당 사업장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적극 대비할 것
26.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동상계, 우시장, 4.19사거리 등은 지역발전본부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음. 타부서 소관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성과관리 등에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대안사업과 희망지 등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적 제약 요건을 해소할 것
28. 도시재생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활동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활동가들에 대한 인적관리와 함께 보완 교육 등을 병행할 것
29.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마련하되, 대체, 주말근무 등 활동가들의 근로조건 유연화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노동·임금조건 변경·시행할 것

30.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역량 및 성향에 따라 주민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되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
31.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평가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마련하여 시행할 것
32.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건비 지출 등센터와 관련한 업무과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 직무 해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33.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이 불가하고 클린업시스템에도 등재되지 않는 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4. 규제적 성격이 강한 지침, 방침서와 오래되어 현실에 들어맞지 않는 지침 등은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할 것. 예를 들어 2009년에 수립된 종교시설처리방안의 경우 사업자측의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사업 지연을 가중시키고 있음
35. 예산 편성이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 이월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 설계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것
36.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한 의원 요구자료 요청에 대해 일부 자료(정비기반시설 감사원 감사결과)를 누락시켜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37. 재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변화된 현재,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관련부서간 용역결과를 공유·활용하는 등 도시재생의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해 부서간 긴밀한 협력할 것

□ 도시계획국 : 29건

1.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한 재생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구체화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자치구들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2. 고도지구/경관지구 내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대하여 지역맞춤형 재생형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관리계획이 필요하므로, 강북/성북 등에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3. 도시기본계획처럼 상위의 선언적 도시계획에서는 주민참여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만,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하위계획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노력이 부족해보임. 도시계획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4. 서울연구원과 일부 업체에 용역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연구역량의 소진,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니 시정할 것
5. 시민세금으로 수행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내용 및 결과물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산사이트 등을 통해 용역보고서가 공개되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
6.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역결과 공개, 용역관리 일원화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용역비에서 MP에게 수당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가 위촉하여 서울시를 대신해서 용역사를 지도 감독하는 MP에게, 지도 감독을 받는 용역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이니 시정할 것
8. 2017년 초 용역발주, 관리, 활용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2018년에 수의계약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등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상황인 바, 도출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
9. 위원회 위원 선정시 학회 추천 외에도 평판 조회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10. 위원회 안전 관련 상임기획단의 검토의견을 가급적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공개하기 바람
11. 도시계획은 100년 대계의 성격이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역세권임에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조정하기 바람
12. 캠퍼스타운의 거버넌스를 보면 모두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생 도모를 위해 지역 주민, 상인 등도 적극 참여토록 할 것.
13. 캠퍼스타운 성과지표 용역결과서를 제출 받았으나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완할 것
14.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국비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왔음에도 성과가 미진하므로, 타 자치단체와 TF를 구성해 전국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바람

15. '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점을 앞두고 있고, 실효 시설 대부분이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기준마련 등 준비 작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원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
16.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비오 톱은 조례로 규제되고 있어 위헌요소가 존재하는 바, 비오톱1등급 토 지에 의한 개인재산권 침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
17. 비오톱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강하게 구속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제도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18. 경관협정사업처럼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업이나 제도들은 존폐여부를 검토 한 후,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19. 여의도·용산 개발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의지가 중앙정부에 의해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하되,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다 긴밀히 논의 할 것
20. 영등포구의 경우 상업지역이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구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정량적 배분이 축소되었는데, 상 업지역 배분시 정량적 사항 외에도 입지여건과 상업지역 현황 등을 다 각적으로 고려할 것
21. 영등포 메낙골 근린공원 실효시 반발이 예상되므로, 종상향 및 공원확 보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2.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비사업 지연에 대한 민원 을 해소하기 바람
23. 용산공원 조성은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이 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바람
24.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노후화된 아 파트지구가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5.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지원액을 현재의 33억원 보다 대폭 늘려서 신규수립 및 재정비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

26.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등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정비 권한을 주는 형태로 법령 개정을 검토해서 건의할 것
27.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행정처분 건수가 전년 대비 미미하게 증가하고, 단속 지역도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단속 지역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더욱 노력할 것
28. 부동산 실거래가를 국토부는 일일 기준, 서울시는 신고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 통계적 격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일원화 할 것
29. 도시재생이라는 거대담론에 매몰되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기회가 상실되고 이에 따른 주택공급량 감소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유발되었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여의도·용산 관련 개발사업은 조속히 정상화 할 것

□ 주택건축국 : 14건

1. 2013~18년까지 불법건축물 위반건수가 6만 4천 건에 달하므로,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현실화와 건축법 개정 및 기타방안을 모색할 것
2. 불법전매 포상금 제도는 국토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신고포상금은 시에서 주고, 벌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 포상금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시정요망
3.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 녹색건축물을 조성했음에도 무용지물이 되어 건물마다 몇 십억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바,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낭비를 최소화 할 것
4. 감사원 지적이 있는 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을 얻지 못한 한국사회투자가 기부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한국사회투자가 아직까지 사회주택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
5.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관련 보증금 대출여부 확정 전 주택계약을 요구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83회 임시회) 아직까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6. 사회주택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한 차례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함.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회주택 실거주자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7. 사회주택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회 위촉이 예상되는 인사들과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사회주택 적격성 심사시 채점표의 구성이 허술하므로, 정량적인 평가 요소를 세분화하고 차별성 있게 설계하여 정량적 측면에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9. 공개공지를 사유화하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단속 등을 강화하여 대중의 휴식을 위한 조성취지에 맞게 시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0.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관리 위탁업무가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 주택건축국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으니 공사의 임대주택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
11. 매입형 임대주택 하자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아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커뮤니티 공용 공간에 화장실, 하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12. 서울시 주택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서울시 내 부서간 협의 부족에 원인이 있음.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임대주택 추가공급, 세제 혜택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
13. 민간위탁은 행정업무간소화 및 창의적 활동을 위한 것임에도 북촌문화센터는 운영프로그램이 상투적이며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주택시장동향 및 주택통계와 관련한 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가 매우 부실하고 성의가 없었음. 용역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실태 및 주거수요 등 기초통계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보다 성실히 임할 것.

□ 지역발전본부 : 8건

1. 동남권에 사업과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균형발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역별 형평성과 균형을 갖도록 사업 안배에 노력할 것
2. 해외시찰을 다녀온 공무원이 곧바로 인사이동 할 경우 시찰의 목적이 희석되므로, 근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출장자 선정에 주의할 것
3. 해외여비를 상당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곡지구 해외기업 유치 실적 이 저조하고, 효과가 미미한데 이에 대해 검증할 것
4. 마곡 입주기업이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입주가 용이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5. 현대차 GBC 개발사업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소통·협의를 할 것
6. 지역발전본부의 '18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7. 지역거점발전계획에서 소외된 서남권 3개구를 배려하고, 지역거점 계획에 따라 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8. 마곡산단 관리에 있어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수행할 것

□ 도시공간개선단 : 10건

1. 공공건축물 설계·발주와 관련된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특혜나 이권 개입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고, 벌점·제재 업체 현황 등을 공유하여 설계공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2. 설계공모 통합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등에서 공공건축가 위주로 운영되는 사항을 개선할 것
3. 발주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많은데 용역을 소액으로 나눠서 추진한 것은 아닌지, 그 동안 수행되었던 용역들을 모두 재점검할 것
4.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5. 도시건축박물관 및 도시건축센터 운영 시 특정 단체들이 아닌 전체 건축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6. 도시건축박물관과 도시건축센터의 기능상 차별성을 명확히 할 것

7. 지하 유희공간 개선과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공간 활용 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며,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것
8. 올해 수행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일부가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공개 조치할 것
9. 단장 이상 부분공개 결재문서의 모든 내용이 가려져 있는데, 문서 생산 시 공개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10. 2017 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과평가 결과 사전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므로, 제2회 도시건축비엔날레 준비 시에는 지적되었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서울주택도시공사 : 19건

1. 가든파이버 라이프동 푸드코트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년부터 수차례의 전대계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입점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백한 업무소홀 및 태만임. 가든파이버 전대관련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2. 생활대책대상자 보상업무 관련 비위조사, 수사결과 등에 대한 의원 요구자료 중 누락된 자료가 상당 존재하는데 고의 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불성실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법령, 조례상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3.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찰 과정에서 낙찰 1순위가 최종 낙찰자와 다른 경우가 많고, 위탁관리업체 중 공사 퇴직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임대주택단지의 35%를 관리하는 등 공사와 이들 업체간 유착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자체감사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것
4. 하도급관련 감사원 및 서울시 지적이 계속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일련의 비위사건과 관련 내부 감사기구와 법무기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직설계와 인사혁신을 통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6. 혁신방안 수립과정에서 임직원 및 노동조합 의견반영, 외부 전문가 컨설팅절차를 거칠 것
7. 임직원 행동강령상 신고의무 규정이 없어 퇴직예정 임직원들의 퇴직심사 신고서가 제출된 바 없음. 또한 퇴직자에 대한 특혜방지조항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반적으로 검토 할 것

8. 분양가심사위원회에 10년 넘게 위촉된 민간위원이 있는 등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공정성 훼손 및 비리발생 우려가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9. 임대주택 무자격자 입주 방지대책을 보완할 것
10.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사비 증액이 있어 당초 계획마련 시 공사 내부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의심되므로, 앞으로 사업 진행 및 사업비 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1. 가양4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내년도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플래카드가 걸려있음.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및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12. 가양4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1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이를 시정 할 것.
13.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원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리방지를 위해 노동이사에게 충분한 의사결정의 기회가 제공되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것
14. 문정지구 복합용지 관련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서울시 산하기관 중 SH공사의 정보공개율이 최하위인데, 이는 폐쇄적인 운영에 대한 방증이므로 시정 조치할 것
16. 시설물 관리 모바일 앱을 올해 7월 오픈하였는데 검색이 쉽지 않고 설치도 되지 않는 등 이용자 편의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공적임대주택 중 매입형 임대주택의 비중이 크며, 특히 6개 자치구에 서는 매입자제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18. 종합입주관리 용역의 경우 특정 2개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령상 근거도 없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동일업체가 2개 용역에 1위일 경우 1위 업체는 발주금액이 비싼 용역을 체결하고, 낮은 발주금액 용역은 2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
19. 자산심의위원회 등 내부 심의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등으로 비위발생이 우려되므로 유의하기 바람, 외부 위촉위원 중 10년 가까이 위촉된 위원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원칙과 기준을 세워 위원회의 혁신 방안을 강구할 것

□ 도시교통본부 : 68건

1.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금, 노사단체협약,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검토 필요
2.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시 삭제 필요
3. 버스회사 평가결과, 일부업체 지속적으로 상위권인데, 평가방식 개선 필요
4. 지하철 안전문(PSD) 관련 고정문 조속 교체 필요
5. 택시요금 인상 추진 관련 승차거부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
6. 9호선 혼잡도 심각한데, 4량 편성 개선 필요
7.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관련 사업 지연 문제
8. 우이신설선 적자 대책 필요
9. 운행의사가 없는 택시면허 인수 등을 통해 택시 감차 필요
10. 카카오 택시 목적지 표기 삭제 요청
11. 버스CCTV 설치 관련 저가불량제품 사용사례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 개입 필요
12. 마을버스 신규노선 예산지원 필요
1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무자격자 관리 철저
14. 앱택시 도입 후 고령운전자 기기조작 중 사고 증가 우려 있으므로 대책 필요
15. 택시 사납금 폐지 검토 필요
16. 시내버스 교통사고 관리를 통한 근본적인 감소 노력 필요
17.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18. 버스기사 음주측정 관련 측정기 성능 관리 등 필요
19.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증가, 부정승차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20. JC데코와 협약 종료 후 중앙버스 승차대 재설치 관련 신중한 처리 필요
21. 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이후에도 설치 미비
22. BIT 설치 및 유지보수 일원화 필요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업체에 대한 세심한 사전검토 필요
23. 택시기사들이 콜 거부를 승차거부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콜 거부 방지대책 필요
24. 택시 소등을 승차거부로 판단하는 등 야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25.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점검을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복장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음
26.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타 시도 정책 적극 벤치마킹 필요
27. 카카오택시 이용 기사들이 장거리운행만 하려고 하니 단거리 이용이 어려워짐.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 해결 필요
28.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관련, 국토부와 협의여부, '22년까지 착공 가능한지, 경제적 타당성(B/C=1) 미흡한 경우 대책, 사업의 우선순위 등 지적
29. 남산터널 요금결제 관련 하이패스 결제 검토 필요 지적
30. 택시 도급제에 대한 조사 및 단속 필요
31. 서울메트로 전적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패소했는데 당시 시에서 승소를 확신한 이유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비용손실 발생 지적. 공사 통합시 예산절감효과 의문 지적
32. 택시기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확정판결 전까지 운행한 사례 관련 강력한 처분 필요
33. PSD 설치공사 불법 재하도급 문제 지적
34.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에 따른 유턴불가, 교통혼잡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35. 승객이 기준인원 이하인 버스노선 폐지 필요.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동일구간 운행노선은 폐지 필요
36.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신규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개선 필요
37. 단거리 승객 콜 거부를 막기 위한 카카오 택시 목적지 삭제 요청
38.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에도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음. 택시감차 등 노력 부족
39.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가스 발생 등 시민 피해 지적
40. 스마트카드복지재단 기존 연구용역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직접해야 하며, 복지재단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연구 필요
41. 마을버스 카드단말기 고장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보상절차에 대해 마을버스회사에 정확한 안내 필요
42. 자료 불성실 제출 개선 요청
43. 효창공원 보행환경개선지구 미착공 등 보행특구사업 지연 지적
44.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시범사업 관련 특정업체 독점 문제 지적
45. 보행사업 유사명칭 과다

46.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백화점 등 판매시설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경감 혜택만 받고 있음. 제대로 된 감독 필요.
47. 교통유발부담금 일제정비를 위한 시스템 개발, 입증책임은 유발부담금 납부업체에 부여하는 개선방안 요청
48.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감사공영제 도입 등 통해 외부회계감사 개선 필요
49. 시 금고 변경 관련, 도시철도채권 시민 구입시 불편 해소 필요
50. 9호선 3단계 캐노피 설치율이 저조, 추가설치 및 기준 마련 필요
51. 따릉이 양적 성장 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확대 필요
52. 따릉이 관리상태 관련하여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노후자전거 교체 등 관리 필요
53. 대중교통 조조할인제도 효과가 거의 없는데 조조할인 보다는 운행시간 조정 등 필요
54. 자전거도로 강남편중 및 이용자 수 강북편중에 따른 자전거 인프라 불균형 해소 필요
55. '17년 행정사무감사시 스마트모빌리티 면허관리, 단속규정 미비, 사고 우려 지적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지금이라도 대책 필요
56. 시내버스 재정지원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임직원 고액연봉 지급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에 문제 있으므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등 강력한 지도감독 필요
57.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 및 교통혼잡 대책 마련 촉구
58. 따릉이 사업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피해 고려
59.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요청
60. 소형 마을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 필요
61. 택시민원 중 단거리 콜 거르고 장거리 콜만 받는 경우 대책 필요
62. 재정사업 전환하기로 한 4개 도시철도 노선의 B/C는 계획수립당시 우이신설선보다 낮음. 정부협의를 등 충분한 논의 거쳐 시행착오가 없어야 함
63. 불법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중 동일인 중복지급 의혹 제기
64. 지하철 이동 동선이 긴 역사, 상가가 위치한 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 필요
65.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연장 검토시 요금인하 방안 검토 필요
66.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업체 결손처리 없도록 관리 당부
67.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은데 서울시의 대책 필요
68.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간이분리대 설치 필요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23건

1. 북공관 소음 등 환경분쟁 민원사항 철저 관리
2. 자전거 주차 회원등록제로 무단방치를 막는 방안 필요
3. 자전거 증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확대 필요
4. 하남연장선 차량개조 관련 신호장치 하드웨어 누락문제 지적
5. 도시철도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관리 철저 필요
6. 도시철도 공사 반복적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7. 라돈 수치 등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 안전사고 및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필요
8. 민자사업 공구의 싱크홀 가능성 철저 관리 촉구
9. 지하철 미술작품 설치시 작품가격의 적정성, 작가 선정의 근거 모호, 특정작가 작품 편중, 대여가 아닌 무조건적 구입을 통한 전시실태 지적
10. 9호선 혼잡도 해결 위한 9호선 3단계 구간 증차계획 필요
11. 9호선 공사구간 싱크홀 발생 관련 지역특성을 감안한 싱크홀 대책 요청
12. 전자인력관리제 폐해 가능성 보완 요청
13. 공동도급시 불공정 하도급 관리감독 철저
14. 지상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감안할 때 지하 자전거주차장 건설시 자전거 방치 및 유지관리 문제 지적
15.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9호선 3단계 구간 캐노피 설치 요청
16. 라돈, 미세먼지 등 지하철 환기 관련 송·환풍기 필터 등의 청소를 통한 정거장 공기질 개선 필요
17. 모든 지하철에 장애인 인증 추진 필요
18. 올바른 시스템 담당자 미확인 처리, 무단투기 등 건설폐기물 관리 철저 지적
19.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관심 제고 필요
20.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 설계/시공 병행방식 도입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여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액 가능성에 대하여 사전검토 필요
21. 복합환승센터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민간의 지가 상승 이익 문제 지적
22. 소음과 진동 엄격 관리 요청
23. 쉴드TBM 용역계약 관련 쉴드 전문면허 자격유지를 실효성이 있게 관리할 필요

□ 서울교통공사 : 74건

1. 상가 공실이 많음. 감정평가 조정 및 단기임대 등 검토 바람
2. 정밀안전진단 관련 5개 회사 독식이 아닌 다양한 회사가 참여토록 개선
3.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임대부분 검토 필요
4. 지하철 노숙자 관련 이용객에 피해가 안가면서 상생 가능한 방안 검토 요청
5. 근무지 이탈 등 감찰 지적사항이 많음, 교육 등을 통한 지적사항 축소 노력 바람
6. 전동차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근로환경 악화 우려 해소 필요
7. 5호선 하남연장선 관련 전동차 신호장치의 하드웨어적인 개량은 빠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들어있음
8.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자체가 문제임
9. 5호선 하남연장선 신규열차 등의 에너지절약 방안 등 노력 필요
10.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체 관련 잘 검토하고 체크하여 원만히 진행 바람
11. 지하철 이용객의 신발면지 감소방안 강구 요청
12. 전동차 저가수주에 따른 안전성 문제 지적
13. 전동차 제작시 전력량, 미세먼지, 소음 감소방안 강구 요청
14. 내진 연구용역 선정 평가위원에 업체 관계자 참여는 위법사항으로 감사·조사 등 필요
15. 내진공법도 문제, 3차 선정 재검토 바람
16. 코레일 사고시 적극적 언론 대응 미흡
17.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수익창출 극대화 방안 강구 노력 당부
18. 9호선 1단계 구간 다단계 운영문제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 미흡
19. 9호선 1단계 구간 직영화 문제 지적
2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보건의 1인당 담당 근로자 수 충족 요청
21. 1인 승무제, 무인시스템 도입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2. 열차운행 사고 관련 코레일 등 철도기관간 원만한 해결방식 필요
23. 점자안내판 미설치, 불량, 미흡 등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4. 대피시간 관련 내부계단확장, 터널대피시설 보강 등 대책이 필요
25. 지하철 라돈, 미세먼지 수치 개선 바람
26. 역 사상사고시 단순보상이 아니라 감성적 접근도 필요, 이에 대한 서비스교육 당부

27. 승무원 자살관련 개선책 마련 필요
28. 전동차 신호장치 노후화 따른 개선 요청
29. 역사내 예술작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30. 몰카 탐지기의 운영대수가 많이 부족함, 구매완료 등 보고 요망
31. 지하철 석면의 조속한 제거 필요
32. 전동차 교체에 대해 의회에도 보고 필요
33. 방배역 사고영상 보니 CCTV가 일제히 사고지역만 현시, 주변 상황 확인 불가. 이에 대한 개선 필요
34. 심야버스, 마을버스 연계 등 신사업 추진시 사전에 상위기관과 업무협조 필요
35. 성범죄, 금품수수 같은 경우 확실히 업무배제 되도록 원칙 수립 필요
36. 소송 패소 비용부담 발생 등 책임있는 행정 필요
37. 해외사업 실적 제고 노력 필요
38. 직원 일률적 업무용 모바일 통신비 지원 관련 과도한 지원 지적
39. 비위자 업무배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 수립 요청
40. 전동차의 합리적인 가격 설정 필요
41. 채용 시험인 NCS에 대한 점검 및 적정성 등 고민 필요
42. 신규전동차 제작시 열차와 승강장의 단차가 적도록 하여 장애인들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43. 도착알림서비스를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바람
44. 교육의 중요하므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직원 역량강화 바람
45.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입찰구조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등 독점구조 심각
46. 여자화장실 등 비상벨 호출시 역무원 휴대폰 연결시스템 제안
47. 여유 자금운영이 너무 저리로 운영되고 있음,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적절한 관리 필요
48. 터널내 갑작스런 사고에 대한 승무원 조치 매뉴얼 필요
49. 자금운영 관련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필요
50. 1역 1동선 관련 마천역 등 16개 역사에 대해 확실히 이행가능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 강구 요청
51.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
52. 터널 내 연결송수관의 조속 설치(특히 단선구간) 바람

53. 임산부 배려석 홍보 미흡
54. 9호선 2,3단계 직영 승계 관련 문제점(노노갈등)에 대한 대처 필요
55. 승강장 안전문 자동발판 충분한 검토 후 추진 요청
56. 9호선 구간 캐노피 추가 설치 요청
57. 9호선 1단계 구간 시행사, 운영사, 유지보수사가 다른 문제, 국부유출 문제 등 추후 협상시 반영 필요
58.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 관련 특정기업이 차량 제작, 운영, 유지보수에 관여하여 과도한 정보를 갖게 되는 문제점 지적
59. 외국인 안내표기가 부실함,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바람
60. 역사 공기덕트 관리 미흡 관련 조사 실시 후 의회 보고 바람
61. 유실물 처리 관련 센터 부족 등에 따른 물류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고객편의 증진 요청
62.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화소수 등에 대한 개선 보완 필요
63. 무기계약직 112명 가족직원 의심스러움, 비리여부 조사 필요
64. 공사는 사기업과 달리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 확립 필요
65. 9호선 2,3단계 직영 관련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강도 등 개선 필요
66. 부정승차 근절방안 촉구
67. 전동차 저가 수주에 따른 품질저하 문제 지적
68. 내진보강 공사시 전문가 보강 등 전문성 갖출 필요가 있음
69. 양 공사 통합후 시민안전,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등 미흡,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노력 바람
70.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선제적 노력 요청
71. 지하철 역 광고 전면철수 관련 일방적 실시보다는 광고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 바람
72. 전동차 제작업체 간 선의의 경쟁구도 유지 및 협력업체 상생 위해 노력 당부
73.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사 경영자문수수로 발생 문제 지적
74. 9호선 1단계 구간 인사비리 의혹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주기 바람

□ 서울시설공단 : 35건

1. 장애인콜택시 직원 최저임금 충족, 군경력 인정 등 처우개선 필요
2.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근무환경 등 개선 및 폭언·폭행 노출에 따른 대책 요청
3. 상가 화재대비 관련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요청
4.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자전거 안전교육, 안전수칙 부착 요청
5.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소홀 문제, 공연대관업무 축소 요청
6. 소방점검 관련 용역업체 지급 비용 및 업체 선정 방식 관련 종합적 관리 필요
7. 소방점검 결과 개선점을 찾아 사고 방지 바람
8. 동물 해외이주 추진 관련 지속적 관심 당부
9. 어린이대공원 행사 유치 시 홍보활동 등 활성화 노력 필요
10. 사육사 사망 관련 안전사고 저감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11. 장충체육관 K과장 인사비리 의혹 관련, 직원 교육 철저 당부
12. 화장시설 부족 관련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화장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안 필요
13. 고용노동 관련 소송 패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사제도 및 규정 정비 미흡 지적
14. 장애인콜택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 통한 대기시간 축소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책 필요
15. 자료 일관성 부족 등 무성의한 제출 지적, 사고 즉시 보고 요청
16. 3년전 행정사무감사 당시 청계천 광고 일대 지역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아직도 미개선 지적
17.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사망사고 관련 원인인 조직내부갈등 누락 지적
18.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대관 관련 무상·유상 기준 모호 지적
19. 동물원법 개정에 맞추어, 동물복지 등 동물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등 지속 노력 당부
20.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
21.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및 유지보수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관리 필요
22. 비상임이사 중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가 미포함 지적, 2년간 이사회 미참석 비상임이사 확인 필요
23. 무연고 사망자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장례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른 운영 필요

24. 등록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률 저조 관련 등록절차 간소화 검토 필요
25. 향후 월드컵경기장 내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추진시 전시행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실질 성과를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 당부
26.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 양적확대보다는 질적 확대(관리수준 제고에 집중) 요청
27.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급증 우려. 수익구조 확보, 재배치를 통한 운영개선 등 확실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28. 공공자전거 직원 대상 생활임금 지급 현황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면밀 검토 요청
29. 따릉이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서버 확충도 필수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지속적 전산장애 예상되는 바, 대책 촉구
30. 2020년까지 4만대 구축관련, 자전거 사업 운영주체로서 공단 자체적으로 양적확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울시에 의견개진 필요
31. 직영 주차장 및 3자 위탁 주차장 관련 자치구별 적절한 안내 노력 필요
32. 고척스카이돔 누수 관련 폭설, 폭우에 대한 대비 요청. 하자보수 유지를 위한 3년의 연장기간 동안 거터 및 누수현상 등 근본적 문제 뿐만 아니라 예견된 문제까지 검토하여 개선 노력 필요
33. 공공자전거 4만대 확대 관련 안전교육, 안전장비관리, 관리시스템 정비. 안전모 회수율 저조와 안전장비 구비 대책 강구 요청
34. 수신호 체계 통일화, 내부인력 구성, 내구연한 등 자전거 사업운영 안정화 체계 구축이 선행된 후 확대 구축 추진할 필요 있음
35. 공단 법정 선임관리자 관련 적정 배치여부 지적

□ 서울특별시교육청(공통) : 1건

1.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교육청 : 246건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학생 1인당 지원 최고액인 연간 75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2. 시민학생 청원게시판의 개설 취지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3. 시민감사관 28명의 활동편차가 지나치게 크므로 유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4.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만큼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5. 성적우수 학생들만 선별하여 방과후학교 우열반을 진행한 학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징계 조치할 것
6. 특수학교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교육과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
7. 방과후학교에 현직 교사가 지나치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일정 정도의 범위 및 상한선을 권장이 아닌 의무로 설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8. 고교 급식 방식과 초·중 급식 방식 차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마련할 것
9. 연희미용고 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
10. 고액 학원비와 컨설팅료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
11. 특성화고 입학생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2. 대안학교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법적 규제 기준을 마련할 것
13.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등교정지 명령 등의 권한 행사를 주저한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할 것
14.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규명을 할 것
15. 학교시설 개방 시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6. 사립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만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7. 병설유치원 확대에 대한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
18.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시설에 대하여 보강 대책을 마련할 것
19. 유치원 국공립 40% 확대와 관련하여 여러 장애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0. 혁신교육지구의 실적 저조 및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감의 공약 정책 사업을 축소내지 최소화하여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1. 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인한 출근 시 교육공무직의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
22. 현재 운영 중인 87개의 위원회 중 6개는 3년 동안 개최된 실적이 없는 등 위원회 존재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개최가 원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할 것
23. 숙명여고와 같은 선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 교사와 자녀 학생이 같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24. 전년도 영양사 급식 납품 비리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
25. 사립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인한 폐원 등으로 학부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서울형 유치원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6. 교육용 PC 클라우드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7.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실화에 힘쓸 것
28. 일선학교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29. 일선학교 내 친인척으로 인해 성적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것
30. 직업학교 학생 선발 취지에 맞게 평가 준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

31.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직업학교 교과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
32. 디지털 도서관 회원 가입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할 것
33. 급식사무관을 행정직이 아닌 급식관련 전문직으로 조직 개편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4.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5.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36.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유인책을 제시할 것
37. 교육청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38.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아닌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것
39. 본청 슬림화와 관련하여 일반직과 전문직의 비율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0.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41. 혁신교육, 자유학기제, 무상급식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교육정책 사업의 홍보에 지역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2. 사립학교 발전기금에서 인건비 등이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
43.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영양교사 결원 시 기간제 영양교사 등의 인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44. 비정규직의 정규화, 인사 청탁, 채용시험 점수 조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인사 문제와 관련된 감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45. 일선학교 교사에 의해 발생한 학생 간 폭행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에게 사과 조치할 것
46. 교육정책국은 노사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전일제와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47. 꿈담 교실 시범사업 진행에 있어 학교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배분에 신경 쓸 것

48. 특성화고 신입생 미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9. 도서관 시설 노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할 것
50.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학과개편을 실시하고 우수교원과 학생에게 외국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51. 도서관 수장고에 대한 설치 대책을 마련할 것
52. 학원 단속에 대한 인력을 확충하고 정원 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법적 검토할 것
53. 학원 단속 과태료 등을 학원정화 비용 및 단속인원 충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할 것
54. 교육청은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55. 증축이나 신축 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6.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진공법이 학교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
57.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58. 학교운동장 인조 잔디 포설과 관련하여 재정적 문제는 대응투자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9. 체육관 신축 시 대응투자를 확대하여 추진할 것
60. 서울시교육청은 학사관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61. 상도유치원 관련 시공사 측의 고발에 대해 교육청은 건축, 건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 다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62. 상도유치원 붕괴 시의 대응 행태를 참작하여 비상시 교육장들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할 것
63.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요구 중심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64. 감사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65.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할 것
66. 일선학교 모든 홈페이지에 중요 행정정보 자료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7. 서울형혁신학교 내부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68. 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6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0. 교육청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사립학교에서 반복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것
71. 평생학습 축제에 많은 장애인 단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72.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대한 역할을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활동성과를 교육청에서는 철저히 지도점검 할 것
73.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74. 수영장 내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
75. 특성화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질 관리에 노력할 것
7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관심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
77. 60년도에 건축된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보수 보다 개축 또는 재건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78.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79. 개축 추진 시 기술적 측면 외에 교육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것
80. 공간기획추진단에 대한 업무를 재정립할 것
81. 1평당 620만원 하는 화장실 개선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것
82.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크 리스트에 따라 철저히 점검할 것
83.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
84. 불공정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85. 교육청에서는 석면해체 공사에 예비비가 사용된 만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86. 교육청 차원의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위촉 시 여성 위원 비율을 제고할 것
87. 교육청은 부족한 감사 인력 충원 방안으로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다 충실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8. 남녀 교사 성비 비율의 차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9.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시설개방 이용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90.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91. 교육청은 실습학생 안전 강화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안전수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92. 실습생이 급여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93. 교육청의 모든 신축건물 발주는 디자인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것
94. 교육청은 공모 설계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을 건축가로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95. 석면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던바, 예비비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할 것
96. 천장 텍스공사 시 제대로 철거를 실시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97. 서울시와 교육청의 매칭(협력)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할 것
98.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것
99. 학생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00.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월급제와 호봉제 행정실무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것
101. 코딩교육 교사에 대한 자격연수를 실시할 것
102. 교육청 관내 급식실 없는 학교에 급식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02.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104. 방과후학교 수강료 선납 문제를 재검토할 것
105. 서울시내 학교 중 급식실이 없는 학교에 급식실을 설치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06.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107.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108.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09.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
110. 학교 배정에 있어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11. 사립학교에 대한 수익구조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할 것
112. 학교 내 유희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13.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실시할 것
114. 교육지원청은 관내 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115. 상도유치원 붕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지의 지질구조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116. 교육감의 공약 정책 사업을 축소내지 최소화하여 교사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17. 현재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대하여 지역, 학생 수, 교육 여건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18. 사립학교 감사결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9. 총무과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동 조직을 부교육감 또는 기조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20. 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확대할 것
121. 유치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할 것
122.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시 실내 생존수영장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123. 돌봄교실 내실화에 힘쓸 것
124. 중앙통합방식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25. 인강학교와 교남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
126. 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인강학교의 공립화 방안을 마련할 것
127. 전문상담사의 방학 중 근무 방안을 마련할 것
128. 교육청별 인력이나 예산의 배부에 있어서 학교 수, 학생 수를 고려하여 지원할 것
129.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30. 상도유치원과 관련하여 시공사, 감리업체 및 동작구청에 대하여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
131. 시공사가 교육청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건물가액 및 아이들의 정신적 치료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132. 유희교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공간 활용 지침서를 만들 것

133. 꿈담 교실 보다 돌담교실이나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공간 구축사업으로 추진할 것
134. 석면제거 작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교실, 기타 시설물)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석면지도를 재정비할 것
135. 기동점검반 지원활동 시기가 학교 교육활동과 겹치지 않도록 신중할 것
136. 유휴교실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137. 지도점검이나 장학과 관련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만들어 철저히 할 것
138.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교육감 공약 사업인 8개의 특수학교 설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39. 공익광고비가 전년대비 급증되고 있는바 교육청에서는 공익광고비 예산 사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
140.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연장 및 처우 문제를 개선할 것
141. 혁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나 학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142. 학원을 단속할 공무원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3. 과도한 학원벌점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
144. 사립유치원장들의 조직적 댓글 움직임에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145. 교장의 일방적인 학교시설개방 이용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6. 유치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47.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시 사교육단체 등에서 민원 반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8. 영어학원 고액 교습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
149. 편법으로 재등록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 로드맵을 마련할 것
150.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밝힐 것
151. 청소년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152. 상도유치원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진행할 것
153.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4. 사립유치원 폐원 신고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155. 교육청 내 법령, 조례 등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

156. 일선학교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시 관련 조례규정에 맞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7. 공영형 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58. 안심유치원 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
159. 일선학교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것
160.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학부모회 운영비로 다과를 구매할 수 있으나 일선학교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인지하여 시정 조치할 것
161. 교육청에서는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할 것
162. 공립유치원 전임 원감들의 과도한 출장연수를 개선 조치할 것
163.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영형 유치원에 국공립수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모집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64. 공영형 유치원 4곳의 예결산서를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할 것
165. 공영형 유치원 개방이사 인력풀을 추천제가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할 것
166. 현재 학폭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167.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68.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장기간 불법영업 중인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재 제방안을 마련할 것
169. 학생들이 선도부를 이끌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170.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 불응 시 패널티 또는 폐쇄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71. 위클래스가 일선학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72. 전문상담사의 소속을 생활지도부가 아닌 교감 또는 교장 직제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것
173. 고액 입시컨설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74. 미인가 학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75. 도서관 고령이용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176.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화는 변호사나 장학사가 아닌 전문상담사가 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것

177.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 위험 등의 자문의견서가 전달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78.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교원 위탁채용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
179.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들에 대해 미납 학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 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
180. 2016년도에 발견된 미보수 하자 시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181. 20년 이상 장기간 학교용지를 방치하는 등 재정 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82. 드라이비트 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183. 공영형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에듀파인 도입, 재정 투명화 등 공영형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정비할 것
184. 의원요구자료 제출시의 모든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제출할 것
185. 안심유치원 선정 시 서류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할 것
186. 시의원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불만을 갖고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낸 공무원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187. 교육공무직렬 중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188. 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조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189. 시설관리 직렬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마련할 것
190. 사립유치원의 폐원 조치로 학부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는 대책을 마련할 것
191. 특성화고의 입학생 모집을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192. 특성화고에 대한 내실화에 힘쓸 것
193. 도서관에 점자책 도서의 보유수를 늘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
194. 특수학교에 1교실 1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95. 특수학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196. 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97.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98.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보다 공립학교 수를 점차 늘리고 재정상태가 나쁜 사립학교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99. 꿈담 교실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과 추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0. 수락고에 장애학생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01. 장애학생이 입학할 경우 해당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함.
202. 교육청은 장애학생이 상위 학교 진학에 따른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203. 학교평등예산제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4. 장애인 고용률 미달로 발생한 고용납부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5. 담당 교사가 (혹한기에는 교복상의를 입지 않고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교칙을 무시하고 학생들이 외투 안에 교복을 입도록 하고 어길 시 이를 적발하는 것은 학생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으니 이러한 점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
206.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7. 학교참여예산제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8. 일방적인 학교시설개방 이용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9.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210. 특수학교 폭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211. 석면 제거 및 텍스 교체 공사로 인한 잔재물 처리에 신경 쓸 것
212. 석면 등 잔재물 처리를 위해 2번 이상 예비비를 사용 후에도 동일 업체로부터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업체와의 재계약 금지 및 비용의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3. 사립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것
214. 민원해소를 위한 학교 현장방문 시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15.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단체들이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16. 금천구 관내 학교 주변에 도장 공장 유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교육환경보호 관련 법규 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조치할 것

217. 교원이 학생을 상대로 한 성 비위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
218. 특수교사들에게 북유럽 선진국 장애인 교육시스템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9. 유초·중등 전문직 선발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20.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우정 있는 학교’ 슬로건 공익광고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
221.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조속히 조치할 것
222.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교육비 및 교육급여) 사업의 불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3. 명예퇴직교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 조치할 것
224. 초등학교 위클래스를 확대 운영할 것
225. 일선학교 전문상담사에 대한 방학 중 근무를 확대 추진할 것
226. 학교 내 수영장 수질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치할 것
227. 특수학교 학생들도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28.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에 고발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내는 등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229. 고액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230.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할 것
231. 학교 신설 등에 무조건 반대를 하지 말고 교육수요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32.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233. 사립유치원의 공영형 유치원 전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만큼 동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234. 사립유치원 감사 시 비리의 경중이 있음에도 이를 일괄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사립유치원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235. 교원들의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
236. 감사관은 승실고 관련 사안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더불어 감사 결과에 대해 조속히 보고할 것

- 237. 자사고 폐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238. 학교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39. 학폭위 담당교원이 작성해야 할 서면양식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수당을 전면 재검토할 것
- 241. 특수학교 여학생에게 필요한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242. 청소년 성교육 실태파악이 교실에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43. 현재 시설개방 예약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44. 시설개방 활성화 인센티브가 학교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사용 기준을 제시할 것
- 245. 교직원 징계 경감 사유가 불명확한 만큼 징계 경감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
- 246.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관련 3법과 관련하여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것

교육연구정보원 : 1건

- 1.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육연수원 : 3건

- 1. 교육연수원은 강사인력풀 검증시스템 확인리스트에 인권교육과 장애인 지교육 이외 성평등교육 이수를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2. 청소년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담임지도에 청년예술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3. 교육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강의를 개설할 것

학생교육원 : 1건

- 1. 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사 협약 등을 통해 처우 및 근무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

유아교육진흥원 : 2건

1. 유아교육진흥원의 본원 이전 및 분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2. 유아교육진흥원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교육용 전력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학교보건진흥원 : 6건

1. 학교보건진흥원은 친환경센터를 통하지 않고 식자재를 구매 받는 학교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문제, 안전문제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
3. 학교보건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것
4. 학교보건진흥원 존폐와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할 것
5. 학교보건진흥원은 찾아가는 마음 건강 원스톱센터에 대한 이용자가 많지 않으므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6. 학교보건진흥원은 저소득층 학생 대상 심리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정독도서관 : 1건

1. 정독도서관은 시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시스템(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할 것

노원평생학습관 : 1건

1. 노원평생학습관은 시각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시스템(오디오북) 등을 설치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2건

1. 학생 안전사고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전공제회에서는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
2. 가해자 구상권 청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건의사항

810건

운영위원회

38건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23건

1. 시의회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2.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의회와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3.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투자·출연기관 대표들에 대한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전국체전 100주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방안에 대해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5. 시의원들이 광역을 대표해서 뽑힌 만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6.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보좌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람.
7. 시장이 시의원들과 원만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기 바람.
8.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공사를 시행할 때 지질이나 지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조사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질과 지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별정직 채용에 있어 적절한 경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 주시기 바람.
10.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등 시장 보좌 조직들이 직책에 맞는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람.

11.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유사한 질의나 답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따로 없고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의 조치결과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실명제 도입과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시정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시의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특정하게 명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12. 시의원과 시장의 면담창구를 일원화하고 면담자료 및 결과를 데이터화 해서 시의회와 더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13. 청년자치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일자리, 주거, 그 외에 건강, 보건의 문제도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내용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청년자치정부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청년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청년자치정부의 일원화 또는 자치정부 안에서의 청년의 모든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조직을 구성해 주었으면 함.
14. 청년의회가 제시하는 안전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15. 업무부담 등으로 자살하는 직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16. 지난 10월 18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시청사에 기자회견을 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 등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청사방호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이 미숙하였음. 관련해 유감표명을 해주기 바람.
17. 지난 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보면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현안 및 예산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음. 이 조례에 명시된 협의체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음. 특히, 교섭단체 대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더 많이 해서 시의회와 협치가 좀 잘되도록 힘써주기 바람.

18. 행정사무감사를 잘 모니터링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각 부서마다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장의 시정철학이 모든 부문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9. 임기제공무원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잔여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함. 시금고로 새롭게 결정된 신한은행과 협의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도심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진입하여 나갈 때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진입할 때만 징수하는 등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의회가 말을 맞추어 상호 견제와 감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함.
23. 제7기 민선 시장 이후 시의원 면담 실적이 1건인데 시정 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공유를 통해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히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함.

□ 시의회사무처 : 15건

1. 지역구에 우편발송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부에 우체국 유치 검토
2.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충원 방안 마련
3. 상임위원회 회의장 모니터 설치
4.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량 구매 검토
5. 태블릿PC, 노트북 등 기능이 비슷한 기기 지급사유 및 1종만 보급 가능한지 검토
6. 법제지원팀의 입법지원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현 인원이 적정한지 검토
7.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검토

8. 교류협력팀 현원 및 업무를 재정비 하여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 마련
9. 중증장애의원보조요원을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한지 검토
10.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발언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이나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시기 바람.
11. 의회혁신을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의 일반직공무원들을 외부로 전보 검토
12. 비용추계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정 필요 검토
13. 조례상 비용추계 처리기간이 14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10대 의회 평균 처리 기간이 3.9일임을 감안, 조례상 처리기간을 평균처리기간에 맞추어 단축 검토
1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민원행정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센터와 시민권익담당관 역할의 통합 검토
15. “업무처리규정”에서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사담당관으로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조례 위배 여부 검토

□ 서울혁신기획관 : 4건

1. 청년자치정부 준비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진행사항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기 바람
2. 서울혁신기획관이 신설된 이후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생태계도 조성하고 활동가들도 양성하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잘 고쳐나가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바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의회에도 잘 설명하고 중앙정부에도 개선을 요구하기 바람
3. 서울혁신기획관은 제10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늦게 하는 등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음. 시정
4.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전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 해주기 바람.

□ 비상기획관 : 3건

1. 수당부분도 타위원회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17, 2018년 용역비로 편성 받은 예산을 민방위관련 예산으로 지출되었음. 제출된 자료나 예산집행 내역도 너무 무성의 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기준과 원칙을 지켜주기 바람.
2. 2017. 2018년 안보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3. 민방위 포상금 지급 제도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 정보기획관 : 7건

1. 9월말 현재 26% 예산집행률은 아주 소극적이라고 보여짐. 예산은 있지만 그럴듯하게 공공와이파이설치를 확대할거라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의지가 없어보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람.
2. 챗봇, 공공앱, 엠보팅,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활용한 사업 추진에 있어 시 직접 기술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시민 관심과 이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필요.

3. 기존의 디지털 시장실에서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한다는 취지로 디지털 시민시장실로 명칭을 바꿨지만 아직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수립 및 검토바람.
4. 전산, 전기, 통신 등을 전공했다라도 과거와 현재의 기술 차이가 있으니 직원들을 재교육하여 업무능력을 높이기 바람
5. 서울시차원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통신 복지 정책 개발에 힘써주길 바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정보기획관은 사이버 공격관련 소관국인 바, 사이버 공격 대비 보안 업무를 비상기획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바람.
7. S플렉스센터 공사기간 연장 등을 원인으로 피소된 간접비(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만전을 기해 대비하고,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가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민생사법경찰단 : 5건

1. 단장으로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 바람.
2.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되어 7개월 동안 단장으로 활동했는데 복귀하게 되면 민생사법경찰단의 문제해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3. 수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상해를 당한 경우 직원들의 안전 및 보상 등에 대한 대책방안도 마련 하시기 바람.
4. 수갑 등 수사 장구류 사용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2017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건의함.
5. 민생침해사범의 신속처리율에 대한 자료가 없음.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가 대부분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므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람.

행정국 : 10건

1.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성 강화를 위해 직영과 민간위탁을 구분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연가 활성화를 위한 5급이상 간부의 연가를 실시함에도 행정국장이 연가를 쓰고 있지 않음.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사회로 확대가 가능함. 연가활성화 하기 바람.
3. 서울시 연수원의 강당에 몇 명이 사용 가능하며 서울시 신입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에 맞는 시설 운영을 실시하기 바람.
4. 서울기록원에 등재된 것이 변형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됨. 허가받은 자도 기록의 훼손을 못하게 하여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해야함
5. 청소년 봉사활동 강화방안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람.
6.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과 블라인드 앱 등의 소통 창구는 표현과 자유를 공고히 하고, 조직 내부의 자정능력 향상과 제도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개인과 특정 부서 등의 인격을 훼손하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내용들까지 여과 없이 게시되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인사 고충을 비롯한 조직 문화 화합을 위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기 바람.
7. 국외훈련의 경우 영어권 나라에만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훈련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로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최근3년간 서울시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자와 해당부서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기 바람.
9. 동 단위 자봉센터 예산 없어 열악한 처지,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10.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가 차지(63%)하고 정책 개발, 플랫폼운영 등 순수한 사업비는 36.7%에 그침. 사업비가 4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재무국 : 3건

1.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21%까지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은 15%로 인상하겠다고 함. 최종적으로 확실하고 빠른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기 바람.
2. 복수금고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오류 등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처음 시행하는 복수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3.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고 지정 출혈경쟁에 대하여 평가 항목이나 배점 변경 또는 금고기간 연장 완화 등에 대하여 고려해볼도록 하고, 시금고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변경으로 인한 혼란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에 신경써주기 바라며, 시민들이 시금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평생교육국 : 21건

1.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25개 자치구를 배려하지 않고, 자치구마다 여건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비율의 매칭사업은 오히려 양극화와 불균형을 촉진시키는 수단과 방법임. 서울시 매칭사업의 전면적인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 매칭비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함.
2. 서울시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한 사업은 보라매수련관의 생명사랑센터의 사업만이 있음. 이는 특성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청소년자살예방 목적에 맞게 예산마련이 있어야 함.
3. 청소년미디어센터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을 고려하여 설치·유치하여야 하고, 다른 청소년시설에도 청소년유해시설이 있는지 조사하여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인사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히 살펴보기 바람.
5. 평생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심의 기간 관리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기초실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람.
6. 민주주의 시민학습 관련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통해 많은 자원을 파악한 뒤 결정하기 바람.
7. 청소년 시설 통합정보 시스템 관리 비용을 시립시설은 시에서 지불하지만 구립시설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서울시가 시와 구립을 묶어서 시스템 비용을 지불하도록 조치해 주기바람.
8. 평생교육 진흥원에서 전국 1만 여명에게 ‘다들’을 발간하여 발송하고 있는데 이 중 서울시민과 개봉률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후에 제출바라며 아직 서울시민들은 평생교육 진흥원에 대한 인지가 매우적음.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제출해주기 바람.

9. 대안학교 학생들도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시에서 발표한 급식 단가와 대안학교의 급식 단가가 달리 책정되어 있음. 대안학교 급식관련하여 서울시 및 센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람.
10. 청소년 아지트 사업 관련하여 동주민센터는 오후시간대에 각종 프로그램과 회의가 있어서 유휴공간이 없을 듯 함.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에 노인정은 주로 비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하고 관리는 인근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1.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회계, 인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2. 각 위탁업체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과 목표를 세워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수영장, 헬스장 등 강사 및 직원의 예절교육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
14.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개선과 보조금 지급 시 관리감독 계획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
15. 가출청소년의 쉼터는 응급실과 같은 곳이라 생각함. 전문적인 치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청소년의 상태를 이해하고 쉼을 제공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위기의 성격에 맞춰서 특성화된 쉼터 필요함.
16. 교육재정의 악화 및 개정에도 조례상전출금 비율은 그대로인데 시-교육청 협력사업은 증가하고 있음. 수요에 맞춰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17. 장학재단 이사장은 급여나 적절한 대우도 없이 책임을 지우고 있음.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합당한 대우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18. 폐교를 활용한 체험시설 - 서울시에서 2시간 이상 걸리는 캠핑장을 이용할 사람들은 소수이며 민간 캠핑장에 비해 경쟁력이 없음. 요즘은 지자체마다 캠핑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까지 할 필요는 없음. 재검토바람.
19. 시립 청소년 시설 수탁 개수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56개 청소년 시설중 7개 단체가 3개 이상의 청소년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소수의 청소년 단체가 다수의 청소년 시설을 수탁운영 하여 현실에 안주하려하고 법인의 인사교류로 인한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법인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바람.

2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용어가 차별적 요소가 있어 부적절해 보이니 개선 바람.
21.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근거법률, 예산 및 업무가 서로 다른 별개의 기관임. 그러나 꿈드림 업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함으로써 두 기관의 업무를 청소년복지센터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따로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남.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 할 것을 건의함.

□ 인재개발원 : 15건

1.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서울시는 최근 4년간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으로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원에서는 개선 의지나 노력이 안보이고, 오히려 성과 목표를 낮게 잡음. 인재개발원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람.
2. 신규자 심층인터뷰 시행시 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근무부서 관리자에게 질문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3. 청사강북이전 발표 전에 청사 증축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용역을 했더라도 발표 이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람,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조사가 청사 강북이전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4. 역량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역량평가팀에 근평을 받는 직원이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람.
5. 역량평가 고액과외에 대한 대책 강구
6. 역량평가 수행시 서울시 직원들이 평가자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7. 신규직원의 경우 현장에서 실무가 힘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 채용 시 면접과정에서 심리기법 등 면접기법을 발굴할 것.
8. 인재개발원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시 본청사에서 집합교육을 받는 방법 검토
9. 신입교육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교육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함. 시대와 연령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방법 검토바람.
10. 민족도조사의 항목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11.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출제 문제 중 7건의 문제오류가 발생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방안 마련할 것.
12.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 2017년 대면검증을 하다가 2018년 다시 서면검증을 하는 등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혼동이 없도록 할 것.
13. 서울시 공무원 시험의 검토를 전년도 합격 공무원에게 하는 것은 전문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공무원 시험 유출에 대한 보안 방안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람.
14. 시험문제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15.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하여 2019년 부터는 타 광역시와 동일한 날 짜에 시행되므로 위탁업체 또는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시험 출제를 맡기는 것을 검토해 보기 바람.

□ 감사위원회 : 15건

1. 감사분류에 따른 구분에 의해 재무감사를 시행해 주기 바람.
2.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임. 시와 유관기관 등 더 적극적인 감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디지털재단의 본부장이 승진 최저연수인 4년을 채우지 않고도 승진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인사규정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 요청함.
4. 민관협력담당관에서 NPO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한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공익 활동 촉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감사 하시기 바람.
5. 특정감사 중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해당 감사가 모두 부실한 것으로 보임. 청소년시설 감사시에는 청소년시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등의 방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함.
6. 감사원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그 이상으로 서울시 내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조사하기 바람.
7. 교통공사 지하철 내진설계 공사에 3천2백억 투입되었는데 비리 의혹이 있어서 감사청구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8. 보상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인데 감사위원회도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9. 하수관로 관련 특정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음.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전수조사로 깊게 살펴보길 바람.
10. 서울시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11. 기강감찰팀 업무에 관한 운영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람. 개혁과 혁신이 없다면 기강감찰팀을 해체하고 민간위탁 점검팀 또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찰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2. 서울교통공사 5~8호선 보조배터리 대여서비스가 152개역에 설치되어 잘 운영되다가 업체 운영난으로 중지되었으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재개한다고 했다가 보류된 상태로 방치 되어 있음. 철거관련 서울교통 공사와 운영 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상황이며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조치하기 바람.
13. 서울시 천만인소와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차이점이 없음 굳이 두 개로 나눠서 하지 말고 통합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14. 서울시 천만인소를 굳이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음 정보기획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15. 국가권익위 조사 서울시 청렴도가 17개 광역시 중 16위임. 박원순법시행(2014년) 이후에도 청렴도 계속 하락함. 청렴도 관련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낮으며, 연중 집행해야 할 예산을 연말에 몰아치기 하는 문제가 있음.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도 7.41점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하락함. 예산과 인사분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연중 집행성과관리계획 추진실적 전략목표인 공무원 청렴도 향상 목표치를 7.21에서 7.28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음. 청렴도 및 공직기강의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건

1.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명칭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에 어려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 27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이메일로만 제출하면 확인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USB로도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실시하여 주기 바람
2.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사업은 홍보가 활성화 되면 시민들의 활용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적은 예산으로 소외계층의 필수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 관련 예산 증액 등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람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초과 근무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서울시 공무원직무발명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포상금 지급보다는 승진에 대한 가산 점수 부여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5. 최근 서울시 본청 채무가 증가세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증가원인에 대한 대시민 설명이 필요함
6. 지방이양일괄법은 중복규제에 대한 부분이 많아 건수가 부풀려져 있고, 재정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이 미비함. 서울시가 서울형 지방분권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안을 개선하기 바람
7. 인천시에서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사물인터넷 적용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서울시의 경우는 어린이집이 130평 이하는 실내공기질 관리하는 의무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8.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대금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땅을 내놓은 기간이 오래되었는데도 매각되지 않고 있음. 서울시 재산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이 곤란하면 민간에 임대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검토함으로 재산 활용도를 높여주기 바람

9.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NGO를 통한 민간지원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 단순히 남북교류문제가 아니라 외교문제이며 주변국가와의 정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기관과의 총체적인 협력 사업을 만들어 가야함.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따로 조성된 만큼 인력구성에 있어서도 사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하기 바람.
10. 민간위탁 수익창출형 사업 관련 실적이 제각각임. 적자가 나는 곳도 있는데 '수익창출형'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 및 정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11.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인사 교류 관련 아주 드물게 인사교류가 이뤄지고 있음.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 협조와 사업추진의 혁신 등을 만들어야 함.
12.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참석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됨. 실제 시장이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정리가 필요해 보임.
13. 현재 시행중인 유연근무제가 서울시 3급 이상 고위직의 전유물로 비춰지고 있음. 유연근무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모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14.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채용이 늘어갈수록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있음. 충원계획에서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서울디지털재단의 성과급 대상에서 비정규직이 제외되었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시정되어야 한다면 시정조치하기 바람. 또한, 기초실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울시 전 부서 중 특정부서가 1년 내내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음.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17. 마을변호사 사업 관련 매년 상담 실적이 늘어나고 있으나 마을변호사 1명당 월평균 1건의 상담을 하고 있음.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상담신청 절차와 실제 상담약속을 정하기까지 번거롭고 어려운 경향이 있음.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18. 최근 채용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교통공사 채용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처음 친인척관련 자료를 작성한 것은 내부적으로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선의로 시작된 것이지만 비위사실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정황이 확인됨. 이에 대해 서울시의 확실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은 안일한 서울시의 태도가 사건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 1차적인 대응과 책임은 서울시교통공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와 사건이슈화가 서울시의 비정규직정규직화 기조를 흔들리는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상황판단과 적극적 대응 바람
19. 민간차액보육료 지원관련 10월 5일 자치역량평가협의회 결과 시와 구분담률 7:3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후 55:45 비율로 예산 반영됐으며, 더군다나 차액보육료 지원은 박원순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이번 분담률결정에 따른 자치구에서의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재정분담 문제로 구청과 시가 이견이 생기는 만큼 기초실예선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시의 부담률을 올리는 선례에 대한 우려는 인정하나 보육료 지원만큼은 부담금액이 큰 액수라 할 수 없으며 정책의 무게감이 큰 만큼 현재 결정된 시와 자치구의 예산분담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바, 2020년 시부담률 올리겠다는 계획보다 시기 앞당겨 조정이 가능 할 수 있도록 노력 촉구.
20. 민감차액보육료, 고교 무상급식 등 서울시는 현재 재정분담에 따른 자치구와 시의 이견이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시행에 있어 자치구의 재정 대책에 대한 논의시간도 주지 않고 시차원의 정책실시 발표만 있는 상황이 발생함. 모든 정책 시작 시 재정부담되는 주체들과 협의하고 긴밀한 논의로 결론에 도달해야하는 민주사회에서 서울시는 선발표 후논의로 논의중 빈번히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관련 규정 안맞으면 그제서야 시의회 협조를 구하는 뒤죽박죽식 정책시행절차에 대한 조속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정책 진행 시 다급한 사업추진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단계를 갖춘 시스템 마련하기 바람
21.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관련 공공영역에서 수익구조를 만들고, 이윤창출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확장과 개발을 위해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2.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인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음.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역할 및 기능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높은 인용률은 반성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징계회피 기회를 주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만큼 소청심사위원회가 면피용 단계로 둔갑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 바람
23. 상생상회 렌트프리 관련 안국빌딩은 공실이 5개층이나 있는데 5년을 계약하며 근거도 없이 4개월만 렌트프리를 받음. 통상 민간에서는 1년에 2개월 정도 받는데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음. 앞으로는 민간 임대와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계약되지 않도록 꼼꼼히 조건 등을 검토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24. 상생상회 관련 상품선정 기준이 대폭 변경이 되어 당초 상생상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됨. 상생상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상품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5. 상생상회 집객 관련 상회 주변에 인사동, 북촌 등 유동인구가 많으나 정작 상회 앞으로는 유동인구가 적은 것으로 현장 확인하였음.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만회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6. (유급병가 제도 등)정책 시행시 사전 절차를 전부 거치고 시민들에게 발표되어야 하는데, 의원발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소수당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됨. 향후 중요 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7. 특별조정교부금 상황을 보았는데 2,230억임 10%가 시·구 공동사업이고 90%가 자치구 사업임. 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됨. 특히 자립도가 비슷해도 구별 차이가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없음.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경제진흥본부 : 31건

1. 서울페이(제로페이) 홍보 관련 좀 더 신경써주길 바람
2. 시립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실적이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타 지역 참여율 제고 바람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관련 금천구의 우수장도 특화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토바람

4. 창업 관련 시설이 마포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반면, 구로구 , 금천구 등 산업입지가 밀집된 서남권 지역에는 그렇지 않음으로 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지 말고 창업 관련 시설을 어느 한쪽에 치우지치 말고 공정성 있게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바람.
5.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후 구시장 상인의 신시장 이전과 관련하여 원만한 협의와 노량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람
6. 스마트앵커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에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도심제조업 집약지는 중기부와 산자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역시 더 노력해야 할 것임. 특히 봉제산업의 경우 인력 노령화가 진행되었으므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후진 양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도심제조업 노동자 급여 등에 투자와 관심이 필요함
7. 도시계획국의 간판개선사업과 경진본부의 동네상권 로고 사업이나 우리 가게 예술가 사업을 결부하는 등 서울시 부서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였으면 좋겠음
8. 신보의 부실채권이 7,800억에 달하며 채권연장을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지속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9. 경진본부 투자유치과에서 상호저축은행 인수 후 사회적은행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공기업담당관실에 따르면 경진본부에서 3개의 공기업에 출자를 해줄 수 있는지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공기업과 법률검토결과 산하 공기업의 출자가 불가능 하여 사회적은행 설립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10.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사업 관련하여 사업 업체 선정 시 공정성 시비 없도록 잘 추진하기 바람.
11. 2013년부터 G밸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하기 바람.
12. 대부업체 관련하여 법정금리의 인하로 인하여 불법사금융 업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서울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서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

13. 전통시장 청년상인육성으로 일부 폐쇄적인 상인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자치구별로 잘 운영 중인 기존 상인들의 점포를 거점화 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동화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4.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예산 관련 세부 사용내역과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매체, 타겟마케팅 등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하기 바람.
15. 덜위치칼리지 소송 관련 1심 재판결과 교비 75억원 유용에 대해 특가법상 횡령죄 적용, 기소된 이사 3명에 대해 집행유예 가 선고된 이후 2심 진행 중인데 향후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16. SBA 관리 시설 중 임대료 분쟁이 있거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가 있음. SBA에서는 기업에서 폐업하고 나가는 경우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함. 이런 경우 서울시도 일부 손실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 바람
17. 창업 보육 시설 입주 업체 관련 정보가 거의 비공개로 되어있음. 서울시가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입주 업체의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임. 자료를 보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또한 입주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없다 보니 실적이 없는 기업이 계속 입주해 있음. 관리가 미흡해 보임.
18. 자치구 소상공인회별 예산지원 편차가 큼. 사업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소상공인회가 없도록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및 예산지원 절차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함.
19. 정부는 지난 6월 블록체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 반면 서울시는 5년간 1,233억을 투입한다고 발표 함. 서울시의 투입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며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나 법령 정비 없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자칫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비취질 수 있음.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바람.
20. 서울시는 스마트 앵커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종로구의 경우 다수의 봉제인들이 산업을 꾸리고 있으며 높은 수요에 따라 종로구는 창신1동 스마트앵커 시설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위치한 동대문아파트에 스마트앵커를 건립하겠다는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만큼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바람

21. 양재 R&D사업의 경우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등 사업 초반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 현재 사업진행경과를 살펴보면 창업허브 등과 비교해 사업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래 목적과 계획에 맞는 사업 확장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 보고 바람
22. 서울페이(제로페이)는 금융사업과 연결되어 향후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로 참여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상호 점검체계를 만들어 사업 안정성 확보해주기 바람
23. 우리나라 자영업 지원사업의 경우 경로의존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자영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적정숫자보다 2-4배정도 많은 자영업인 수 때문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특히 50-60대의 자영업 창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생활을 위해 참여할 일자리가 부재하기 때문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24. 전통시장 관련 송파 새마을 시장에 방문해 보니 소비자를 위해 재미와 활력을 준다는 취지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시설이 빈약함.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람.
25. 성수IT센터는 최근 리모델링 후 운영을 재개하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디지털재단의 경우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26. 스마트앵커 매칭 국비 확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건의
27. '메이드 인 서울', 소그, 동대문 쇼룸 등 브랜드가 소비자로 하여금 일관되게 인식될 수 있도록 브랜드 사업 정돈 건의
28. 장기안심상가 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시 시민건강국의 남녀화장실 분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29.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이주반대 상인에 대한 단전단수 사태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역할이 필요함
30. 서울영화제가 서울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예산액이 부족해 보임. 실제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노력바람.
31. 다양한 접근채널을 위해 과학도서관에 e-북 구비 필요 및 장애로 인해 과학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체험장 구비를 건의함.

□ 일자리노동정책관 : 24건

1. 취업알개서비스 1,2월에 이용이 불가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공백기간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면접정장 대여 이용시 공인시험은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이 있었으므로 확인바람
2. 남부기술교육원은 의회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도 삭감하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길 요구.
3. 정규직화의 가장 큰 효과는 노동에 대한 인식변화이며 고용의 안정화를 만드는 것임. 그러나 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등이 필요하므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4. 뉴딜일자리와 관련하여 일자리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며 추진하길 바람
5. 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휴센터 등 각각 하는 일은 비슷하거나 동일한데 이를 통일성 있게 노동자지원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휴센터는 불만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
6.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관련하여 폐쇄되는 근로자 쉼터에 대해서는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7.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나, 무기 계약직과 같이 힘 없는 자들에 대하여 정규직들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 바람
8. 통계가 정확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세워짐. 기간별,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등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람
9.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과정의 공개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지원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검토해주시기 바람
10. 뉴딜일자리가 단순 일자리 창출에 매몰되지 말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 취업 되는 경우에도 정말 필요한 자기 경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함.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11.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중앙정부의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바람.

12. 하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이중적으로 지원혜택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지표를 축소해서 평가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규정대로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람.
14. 칼폴라니연구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15. 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안과 지원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6.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 설립, 이를 통한 정규직전환 방식을 상당히 채택했음. 그러나 여러 조건과 근로내용에 대한 협의안이 정리 되지 않은 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노동관련 문제 발생여부 및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지도, 관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순 교육이 아닌 현장에서 적용하고 서울시 기조에 맞는 노동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기 바람
17. 노동권익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 전담팀의 필요성하다고 생각됨.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8. 시구상향적 사업과 뉴딜사업이 중복 되고 있다고 생각됨.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 단체가 이중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세세히 검토하고 실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기 바람.
19. 장교청년일자리센터 상담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됨. 이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훈련생들의 경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연계가 가능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21.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미흡해 보임. 현장의 기간제 업무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 구성할 것을 건의함.
22. 농수산공사의 경우 생활임금을 인상에 따른 임금 증액분을 맞추기 자회사 부담을 상인들에게 70% 전가하였음. 자회사 통한 정규직 전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고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 서울시에서 면밀히 살펴보길 건의함.

23. 기술원 노동교육 1년에 2차례 의무교육이라 단기 교육생에게는 진행 안되고 있음. 뿐만아니라 뉴딜, 창업 등 일자리 사업 추진시 역시 노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폭 넓힐 것을 건의함.
24. 노동복지센터 접근성에 따라 상담 건수 많이 차이. 재원 투입 등 지역 자치 단체와 함께 확대 노력해야 함.

□ 서울시립대학교 : 23건

1. 도시에서 학교란 사회의 중심으로 대학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있는 곳이 대학임을 감안하여 향후 대학 정원보다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를 감안하여 미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2. 부설연구소의 연구실적 제고에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연구주제(여성, 일자리, 사회현상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3. 서남대학교 인수와 관련 결과적으로 유치하지 못하고 도시보건대학원만 설립되어 있으나 실제 그 규모가 매우 작음. 도시보건대학원을 확장하여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4. 시립대 대학원 학생 사고와 관련 유가족과 친구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내는 등 진상규명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또한 각종 학내 안전사고 대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5. 비전임교원의 강의 질이 전임교원의 강의 질보다 무조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연구여건이 보장된 상황에서 강의를 진행할 때 강의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됨. 또한, 전임교원 강의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만큼 전임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6.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연구 및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마스크나 연구용 고글 등의 실험보호장구 등을 배치할 것
7. 학생들의 건강 및 질병을 사전에 검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림
8. 장학제도 관련 가계 곤란 장학금 수혜율이 낮아지고 있음. 시립대 신문을 보면 학생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중 경제적 곤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지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9. 시립대 행정처장의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단위로 교체되고 있음. 서울시와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10. 글로벌 역량강화를 목표로 국제화가 추진 중인데 외국인 전임교원 충원과 외국인 재학생수가 부족함.
11. 교원 이직 현황과 사유를 잘 살펴보기 바람.
1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보면 청소노동자 분들이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음. 특히 녹지관리 기간제 노동자분들의 고용형태에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13. 학생 민원사항(편의점, 안경점, 위탁 받은 식당, 자판기, 문구점, 카페 등의 수익을 학생들의 식사비용을 절감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교내 관통하는 오토바이도 방지해주시기 바람.)에 대해 신경써주시기 바람.
14.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 연도별 선발인원이 특정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모집전형을 관리하기 바람.
15. 기숙사 신청시 원거리 신청자에 대해 배려해주시기 바람
16. 학교 혼자하기보다는 동대문구청과 협의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거리 학생들이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7. 대학평가 중 기숙사, 교내 저서 실적 등 미흡한 부분해 대해 개선하여 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18. 수시전형의 경우 미등록률이 많은 경우 정시전형에서 채워지고 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수시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9. 시설 관련 공학관의 냄새가 심함. 이는 냄새를 제거하는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냄새 배출을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큰 예산이 아니어도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람.
20. 불친절이나 늦게 시작하는 수업 등 학생이 불만이 많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1. 해외출장 보고서 관련 지연되는 부분이 많음. 보고서가 늦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22. 업무보고 일반현황의 교직원 통계를 성별분리 통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람.

23. 위원회 회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12명 참석 또는 참석 /미참석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음. 보고형식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람
- 참석/미참석이 누구인지, 성명으로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형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서울연구원 : 18건

1. 최근 5년간 이직현황을 보면 '18년도에 4명이나 이직했고, 그 중 2명이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이적을 하였음. 신설된 연구소인데도 그 처우가 더 좋아서 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파악하여 연구원들이 연구에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2.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장의 정책만 연구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앞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을 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3. 구정연구센터는 서울시에서 좀 더 일찍 시작해야 했던 일 같음.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할 때 여러 용역 관련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나갔음. 구정연구센터가 안착될 때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잘 신경써주시기 바람.
4. 서울형 주민자치의 모델 구상과 전략 추진 등은 대의제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모델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그러나 관련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에 대한 검증이 있고 나서 확산해도 되는데 주민발안제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새로운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면 권력 기구화될 소지가 있는데도 추천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등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맡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5.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수탁과제 비율이 매년 50건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비쳐질 수 있음, 서울연구원 외부수탁과제 수를 줄이고 서울시의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독자적 연구를 추진하고 이 연구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연구체계를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진단을 하기 바람.
7. 공공투자 관리센터 타당성 분석이 1 이하인데도 추진하는 경우 60% 정도 됨. 이러한 결과를 연구원에 통보받고 단순히 연구원은 타당성만 검토하고 실제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피드백 받지 못하면 그 역할이 충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향후 타당성 분석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8. 매년 20~30%의 외부위탁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일반정책, 교통, 행·제정, 도시계획설계 순임. 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이나 도시 정책까지 연구용역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외부위탁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감소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9. 연구원별 연구실적과 관련 올해 최고 많이 한 연구원은 18개, 적게 한 연구원은 '0'으로 연구원별 연구실적 차이가 크다고 생각함. 특정 연구원에게 일이 집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연구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따른 연구 분야 중복 문제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공사와 서울메트로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는 등 서울시 정책적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함. 올해 2명의 연구원이 기술연구원으로 이직한 만큼 향후 두 연구원 간 상호간의 역할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11.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등의 구매편차가 있음. 물품 구매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사전에 연도별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에 맞게 일괄 구매 방법 등을 강구하기 바람
12. 서울연구원의 핵심가치가 연구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13. 서울시의 현안연구가 많은데 거시적인 연구는 적은 것 같음. 거시적 연구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14. '4차산업' 관련하여 미래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본적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주기 바람
15. 연구결과 활용도 관련 연구결과에 비해 활용을 못하는 것들이 많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3~4년 지난 연구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임.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연구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기 바람

16.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관련 예컨대,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 한강을 다 하는데 한강대교 마다 특성 반영이 미흡하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연구내용이 충실하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17. 2018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정부수치는 있는데, 서울의 통계는 왜 발표가 되지 않는지?
18. 무엇보다 '성평등', '임금의 성별 격차해소'를 위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며, 본 의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농수산물공사 : 18건

1.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도매권역 임시매장에 잔류중인 청과직판 상인들의 월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배려해주시기 바람
2. 가락시장 하역노조 법인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청소 업무나 힘이 덜 쓰는 적합한 업무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3. 한국청과 경매사가 출하대금에서 운송비를 부당하게 정산해서 출하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4. 재정건전성을 매우기 위해서는 유통경로의 다변화를 통해 수익 발생이 날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
5. 갈등관계에 있는 가락시장 내 조직과의 소통을 통하여 가락시장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
6. 하역노조 인원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서울시나 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도와주셨으면 좋겠음.
7. 취임이후 소통이 7회 정도 가지셨는데 도매법인 같은 현장의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8. 하역노조 인원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서울시나 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도와주셨으면 좋겠음.
9. 직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람.
10.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친환경유통센터와 학교가 충분히 협의하여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 식재료(소고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11.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의 실효성 낮다는 의견이 있으니 불법거래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 운영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람.
12. 공공기관으로서 채용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 쓰길 부탁드립니다.
13. 농수산식품공사 여성이 많이 없는데 채용 시 중장기적으로 여성임원 배출, 여성인원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4. 케냐, 베트남 사례와 같이 도매시장 시스템 수출하는 컨설팅 업무를 공사가 하게 될 텐데 공사의 컨설팅 업무는 해외에서 한국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실제 매출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리의 농업기술 등 여러분야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개발 바람
15. 뚝방길에서 서문으로 제3센터 들어가는 곳에 고장난 차단기가 하나 있는데 철거해 주시고, 그 곳에 있는 주차부스가 대형 차량들로 인해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개선 조치 바람. 또한 제3센터 안에 쓰레기장 있는 곳 건물 고가 밑에서 쉬고 있는 미화원분들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람.
16. 제3친환경유통센터 입구 기둥 한편에 금연이라고 쓰여 있는데, 옆 기둥 주변에 흡연 장소가 있음. 빠른 개선 조치 바람.
17. 가락몰 유통인 배송차량을 활용하여 '생방송 가락동 365'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방안을 건의 드림.
18. 도매권역 잔류 중인 임대상인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닫힌 마음을 잘 풀어주시고 원활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음.

□ 서울산업진흥원 : 13건

1. 진흥원 대부분의 직원들은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중임. 기관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무에 신경써야함. 남성 육아휴직 현황 확인해보니 남자는 여자만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남자직원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평가, 승진 등에 제한받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됨. 남성 직원들이 육아휴직 장려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2. 이사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의 회의록 모두 익명처리 되어있음. 향후 익명 처리하지 말고 제출바람.
3. 창업허브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등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향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기 바람.

4. 대표이사 지시사항 문서 5건임. 3년간 합쳐도 지시사항인 총 20여개로 타 기관과 비교해볼 때 적은 편임. 향후 이를 염두 하여 활발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과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
5. 채용관련해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어 있으나 합격결과는 개인별로 통보하고 있음. 최근 채용 관련한 비리들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채용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바람.
6. 진흥원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진흥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기관으로 인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 글로벌센터 운영 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 하고 있음. 최근 외국인 다문화담당관에서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는 의견도 있음. 동대문 글로벌센터는 공간제공의 기능만 할 뿐 교육실적 등 센터 이용률도 낮음. 전반적인 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하기 바람.
8.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련, '17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연장 해지가 된 적이 있음. 개선점을 면밀히 따져서 운영해 주기바람.
9. 녹색산업센터 및 성수 IT 종합센터 등 민간 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녹색산업센터의 경우는 위탁사업 재수탁 불가, 성수 IT 종합센터의 경우는 낮은 평가를 받음. 위탁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산업진흥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바람
10. 현금성자산 운용관련 상당한 금액이 운용되는 만큼 세밀한 관리 바람.
11. 성수 수제화 공간 관련 수제화 창업 입주 업체를 위한 공간이 일부 다른 용도로 쓰여 지고 있음.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용도에 맞게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2. 진흥원 외국인무역인 지원 사업이 분산되어 있음. 글로벌센터에서도 무역 및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유통마케팅본부에서는 유사한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자문단 구축, 유통인 양성 등을 지원함. 중복된 사업을 여러 팀에서 진행하고 있음. 면밀히 검토하면 글로벌센터에서 충분히 통합 운영가능해 보임. 불필요한 중복 지원 업무 안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람.
13. 진흥원 내 위원회 관련 자료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고, 성별 구분해서 통계자료 제출바람. 향후에도 이렇게 제출바람.

□ 서울신용보증재단 : 31건

1. 창업 시 컨설팅을 심도 있게 해서 창업보다는 취업으로 유도하거나, 창업을 보류하게 해서 창업 실패자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창업 후에는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람
2. 여성, 사회적 배려기업에 보증지원을 많이 해주길 바람
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을 준수해주기 바람
4.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재단도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5.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적인 약자를 위해 보수적인 운용보다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해주기 바람
6.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주기 바람
7. 광고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광고 진행 시 목적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람
8. 안정적인 운영보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증지원을 해주기 바람
9. 패소사유를 분석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바람
10. 대위변제나 채권추심 시 은행과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람.
11. 창업보증 시 데이터 분석 후 적합한 창업인지 안내하고, 적합한 창업이라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진행해주기 바람
12. 신용보증재단의 내부적인 조직, 인사관리 및 시민 만족도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13. 신용보증재단 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례 등을 취합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나 시의회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14.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이 저조한데 분기별로 확인하여 개선하기 바람.
15. 채무감면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고액보증업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관리를 잘 해주기 바람
16. 금감원으로부터 불법채권 추심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경쟁 입찰에서 제외바람.
17.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8.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서울페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기 바람.
19. 지점별 보증업무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력충원, 배치 등의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바람.
20. 폐업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장조사에 그치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21. 비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22. 임원추천위원회, 구상채권 상각절차 등 이사회를 통한 구성과 의결이 절차적 타당성에 의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
23. 채무불이행 삭제요청에 대한 잦은 민원이 있음.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4.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부터 실행과정이 매우 오래 걸림.
25. 소상공인지원사업 관련 자영업협업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은 공간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고려하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24개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 비대면 서비스 30%대 확대 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무방문대출 가능하지, 자기진단코너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 신용 문제가 없을 때만 가능한 조건으로 다른 시 중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 대상자만 무대면 서비스 이용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신용 취약자도 무방문 대출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7. 자영업지원센터 사업 노하우 전하는 교육지원 많은데 자영업자 힘들어 하는 이유는 이미 부실한 재정상태나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로, 기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사업방향성을 이런 쪽으로 더 맞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사옥 공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실제 임차인 유치가 곤란하다면 일정 공간은 어려운 사기업이나 공익위해 운영하는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29.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취지는 경제적 약자층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됨. 단순히 찾아오는 시민들만을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이 떨어져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마련하기 바람.
30. 장애인의무고용, 북한이탈주민, 청년의무고용 준수율 등 고용 관련 목표를 준수해주시기 건의
31.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임원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 디지털재단 : 16건

1.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 의원님 모두 서울디지털재단이 가장 느슨한 조직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올해 예산이 117억 정도 되는데도 서울연구원과 차별성이 없고 그 설립 취지에 맞는 명확한 목표와 연구가 없어서라고 생각함. 재단의 설립된 목적의 취지를 잊지 말고 이에 재단만의 독특한 연구에 매진하였으면 함.
2. 노원구 시립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프로그램을 성동구 제4차산업혁명체험센터 에서도 운영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해주시기 바람
3. 정보접근성, 앱 접근성 등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서울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비율로 인해 직원들 간 과도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에도 디지털재단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에 맞는 성과급 지급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
5. 직원 공개채용과 관련 '17년 3차, '18년 5차 까지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음. 이는 적합한 인력이 지원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정책 기조와 같이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내면 더 많은 인재가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6. 디지털재단 정체성과 관련하여 연구목적 기관인지, 사업목적 기관인지, 위탁사업 수행 기관인지 등 역할이 불분명함. 디지털재단 설립목적에 맞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재단의 정체성을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람

7. 이사장 지시사항 중 서울페이 관련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므로 디지털재단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과제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8. 채용과정에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통해 지원자격, 서류면접 등 절차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9. 디지털재단 관련 고유 업무는 싱크탱크이지만 보고내용이든 위수탁 관련 사업 등을 살펴보면 설립취지에 맞지 않은 드론페스티벌과 같은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디지털재단이 싱크탱크임을 명심하고 고유 업무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기 바람
10. 재단 중기계획을 확인하면 인원이 해마다 증원되는 것으로 확인됨.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 재단의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확인하고 인원 증원에 따른 중장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1. 도시사회 혁신 관련 디지털활용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서울시에 제안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채널 있는지 또는 향후 마련할 예정인지, 어떻게 발전시킬 예정인지 등에 대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12. 시의회 업무보고와 관련, 행정적인 보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디지털재단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 연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고를 해주기 바람
13. 재단 홈페이지의 정보접근성 부족 및 직관적인 UI 구성 보완 요청(모바일)
14. 성과급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재단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
15. 공유경제 모델 기술독점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방향 설정 건의
16. 다양한 공적자료가 서울시에서 활용될 수 있게 재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제안

□ 기후환경본부 : 40건

1. 차량정비센터는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제설차, 소방차 등 여러 종류 자동차를 정비하고 있어 행정국으로 조직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인력 노령화에 따른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행복한 불끄기 행사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 홍보는 실효성 또는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주민자치협의회, 동(통)장 등 지역 공공기관, 유관 단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 시책을 홍보, 추진하기 바람.
3.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통한 수소차 충전소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높은 전기차 수리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수리비용 편의성 제고,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BRP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부문 추진 실적이 미미함. 공공건물 BRP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5. 자치구별 폐현수막 재활용률의 편차가 크고 전혀 추진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는데,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자치구 협의 등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하기 바람.
6.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제작한 장바구니에 대한 시민 호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재질을 이용하고 디자인을 개선하기 바람.
7. 시민(주민)참여사업, 녹색서울시민실천공모사업 관련, 매년 반복 선정되는 유사, 동일 사업 중에 우수 사업은 시책 사업에 반영을 검토하고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람.
8. SR센터 예산 편성과 같이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편성하기 바람.
9. 재활용품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수거량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업무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 SR센터 인력 충원도 적극 고려하기 바람.
10. 미인증, 불법 시중 유통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한 단속, 고발 등 필요 조치와 음식물 분쇄기를 통해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1. 음폐수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함에도 강동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 일정 이 반복해서 연기·지연되고 있음. 해당 자치구나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기 바람.
12.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녹스버너·가정용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2022년 25만대 보급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동향 파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대책 또는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PM10 환경기준과 예보등급(나쁨) 구간이 불일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및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기 바람.
14. 2022년 기후변화당사국회의 유치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15.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다수 있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집행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바람.
16. 2022년 태양광 용량 1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신청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적극 대처하기 바람.
17. 미니태양광 보급시 빛 반사, 음영 등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관 문제 개선에 적극 대처하며,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18. 20년 이상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9. 사전 선별시설 설치·운영으로 소각 발열량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각용량을 증대시키기 바람.
20. 노원자원회수시설 적정 소각 용량에 대해 재검토하고, 독서실 등 주민 편의시설의 방음 등 시설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2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2. 실행가능한 현실적인 전기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충전인프라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안전검사·정비기준 마련 및 정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
23. 일부 자치구의 경우 매립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재활용, 소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4. 에코마일리지 내실화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단체 가입 및 실질적 에너지 절감을 독려하고, 개인 가입자 및 인센티브 지급 통계를 세대수로 통일하기 바람.

25. 에코마일리지 지속성 확보를 위해 유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사용처 다변화 및 미사용 마일리지 통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26. 북한과 대기질 공동대응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7.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확대를 통해 정확한 지역별 대기질 자료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공포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시민 참여를 유인하기 바람.
28. 음식물 분쇄기(디스포저) 불법 유통 및 불법 개조 사용되고 있어 하수 관관거 및 하수처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9. 경찰청 등과 협의를 통해 경찰버스 공회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차량 외 휴식공간 설치도 검토하기 바람.
30.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추진 간, 올해 ‘폐비닐 사태’ 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구 반입수수료 증액부과비율 완화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해줄 것
31.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도 분진청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소차량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람.
32. 대기오염물질 대기측정소 운영을 확대하고, 이동식 간이 측정기 보급을 활성화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33. 실현가능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34. 기후변화백서 작성 시 각 사업별 전년도 실적 대비 구체적 목표 설정
35. 자치구별 기후변화시책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들에 예산 지원
36. 기후변화기금의 융자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37. 승용차요일제와 마일리지 정책의 효과성 분석(온실가스 감축 효과, 참여자 대비 예산집행 적정성 등)
38. 승용차 마일리지제 현실성 있는 목표 설정
39. 기존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독려
40. 승용차 요일제와 승용차 마일리지제 적극 참여 시민, 단체 등에 포상

□ 푸른도시국 : 29건

1.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 않고 재조성하는 비용 또한 불필요하다고 봄. 특혜 시비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예산 집행이 부진함. 공원보상 등 과도한 업무를 고려해서 조직 인원 충원 등 효과적인 업무배분을 해주기 바람.
3. 생태경관보전지역 사유지 매입 및 운영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4. 푸른도시국 학술용역 수행기관이 일부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형평을 기해주기 바람.
5. 문화비축기지 운영 예산을 조금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작성하길 바람.
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보상대상지 선정에 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7. 미보상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인지 검토 바람.
8.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책 관련, 공채를 발행해서 보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9. 시민참여예산이 집행과정에서 불용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선정 검토 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10. 서울역새축제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 바람.
11. 공원 내 '자전거 이용 확대'와 '자전거 통제' 민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바람.
12. 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과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13. 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 및 취사시설 확대를 검토 바람.
14. 여의도 스케이트장 운영이 특혜 시비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15.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공원녹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음. 특히 공원녹지 부족한 금천, 구로구의 공개공지 확보율이 우수하여 지속추진 요구되며, 현재 주택건축국 업무와 중복 추진되고 있는바 생활권 녹지확보라는 측면에서 푸른도시국 주도로 확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6.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에 따른 대응책으로 순차적 보상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보상순위가 낮은 토지소유주에 의한 공원이용제한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보상대책과 함께 현재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다각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됨.
17.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비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람.
18. 에코스쿨 조성 확대를 검토 바람.
19. 놀이터일반에 대한 점검 : 유아체험놀이터, 창의놀이터 호응이 좋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 바람. 그리고 무장애놀이터의 경우 시설이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 무놀이기구 및 공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를 검토 바람.
21. 경의선 호창역광장과 같이 한국철도시 설공단의 경의선숲길내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요구하는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람
2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심기, 가로수 수종 변경 검토, 건물녹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2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시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보상
24. 생애주기별 테마공원(숲) 조성과 관련, 초기 시행이니 만큼 정확한 평가 필요.
25. 생활권공원 경계지역 흡연 관련, 공원 경계지역 흡연규제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보건소 등과 협의하여 행정지도, 금연구역 지정 등 검토
26. 공원녹지 수경시설의 위생관리 및 수질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27.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28.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및 불법시설물 단속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기 바람.
29. 사업예산 집행이 부진하며, 이월예산 비중이 높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람.

□ 서울대공원 : 14건

1. 서울대공원 내 노조가 많으므로 소신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또한 단일화 등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2. 직원이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3. 서울대공원의 자산(토지, 건물 등) 및 동물자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서울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각종 정비 및 공사시 과천시와 원만한 협의 및 행정절차 등 준수를 통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5. 아시아코끼리 등 동물이 폐사율을 낮추도록 동물관리 매뉴얼 개선 및 사육사 등 인력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6. 동물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음.
7. 종보전사업은 서울대공원의 주요 비전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서울대공원 사업이 시설개선, 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종보전연구는 실적이 미미함. 장기적 측면에서 종보전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및 성실한 집행,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장기적으로 종보전 허브의 목표 설정에 적합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이 요구됨
8. 번식개체수 증가에 따른 2018년 교환, 임대실적, 반출실적은 있으나, 개체수조절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동물현황 자료가 성의가 없으므로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동물자산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올바른 계획 수립이 가능함.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영국 '요크셔야생동물원'으로의 이주가 결정되어 이주를 준비하던 에버랜드 북극곰의 사망에서 보듯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서울대공원 보유 동물들에 대한 사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0. 동물 진료수의사 충원 시 활용 분야, 업무량에 대한 검토 사전 실시
11. 동물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집행 실적 및 운영 실적이 감소하고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확대 필요함.
12. 식물보전연구 예산 집행률 저조하며, 확대가 필요함.
13. 숲 해설 용역 등 업체 선정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해 주기 바람.
14. 노조 활동이 많은 서울대공원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를 잘 듣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 : 28건

1. 입상활성탄 분석결과와 대표성 확보 측면차원에서 샘플 수, 검사 시기와 방법 등에 조사 설계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함.
2. 일괄적으로 모든 정수지의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를 6년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각 정수지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있음.
3. 각 정수지별 입상활성탄 흡착능의 통계적 유의미 차이 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필요.
4. 입상활성탄 신탄 가격동향, 기술 발전 등을 면밀히 검토.
5. 원격검침 3요소(디지털계량기, 단말기, 통신망)의 완벽한 구축이 필요 함. 해당 업체가 다르므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고, 데이터 수신율 조건이 입찰공고문에 없는데 수신율의 기준을 설정하여 검침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6. 공원음수대 허술한 청결관리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귀결되므로 음수대 관리부서인 푸른도시국과 협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음수대의 관리에 만전을 할 것.
7. 수질검사 인력 1인당 음수대 대수가 사업소별 차이가 있음. 1인당 업무량이 균등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재배치가 필요함.
8. 내구연한 경과된 관 교체전까지 내부 세척 등 유지관리가 중요. 물세척 주기 검토 및 노후 밸브 정비 시급하고, 대형관로 물세척을 시행하기 전제 조건이 관망 이중화,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조속히 조치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9. 도로 굴착 관련 차로 전폭 복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바람.
10. 원격검침 임대망 사용시 비용이 연간 50억초과됨. 스마트도시법 관련 고시 개정으로 지차체가 교통, 환경 등 총19종 서비스를 연계해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을 고려하여 임대망, 자가망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 바람.
11. 상수도공사에 앞서 지장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하기 바람.
12. 슬러지 시험 성적서가 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상이함. 확인을 위해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재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13. (잇따른 누수 관련)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및 내실 있는 관리 감독하도록 감리 사전교육을 강화 시키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14. 해외건설 사업 관련 서울시와 국토부의 소송 등은 사전 계획시 충분한 검토(법률검토 등) 부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15. 슬러지 비소 및 불소성분 검출에 대한 서울대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결과보고가 있었음.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슬러지 배출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를 요함
16. 슬러지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은 운반비와 처리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노후 설비(탈수기) 교체하기 바람.
17. 슬러지 재활용 기술개발 업무를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8. 배수지향 청소시 사용하는 세정제 성분검사를 하였으나 업체에서 밝히지 않는 물질에 대한 검사는 부재. 성분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가 요구되며, 세정제가 직접 도포되는 배수지향 벽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가 필요.
19. 홈페이지 거짓과장행위신고 코너는 2년간 신고접수된 사항이 없음. 유사 성격의 민원접수사항에 통합운영하던지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0. 현장감사시 일부 정수센터의 오존 냄새로 오존누출이 의심되었음. 오존누출의 인체 위해성은 심각하므로 누출오존감지센서 설치 등 안전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21. 오존 접촉지 방수·방식 공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수행하였다고 하는 오존접촉조 방수/방식재 내오존성능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 의문시됨. 물연구원의 심도 있는 연구수행이 요구됨.
22. 석면 포함된 건물은 30년 경과 노후화 되면 비산먼지를 발생하여 석면 질환 피해자 발생하므로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면 포함 건물 공개 및 제거 등 비산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3. 공사로 인한 누수사고 많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공사업체와의 협의 등을 강화하여 누수사고 예방
24. 사업소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입회 현황을 잘 검토하여 특정 지역의 기술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정
25. 대형건설사들에 의한 손괴 예방을 위해 사전 행정지도 및 지도감독 강화. 손괴 시 패널티 부과 등 강력조치 검토
26. 수도계량기 구매 특수조건으로 하자율 2%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년 3개월)은 과도한 제한으로 검토 바람.

27. 아리수 음수대 설문조사 관련, 설문조사 간 미흡사항으로 도출된 사항 (청결관리 등)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28. 서울시의 누수 요금 감면이 다른 6개 광역시보다 관대한 편으로 사용자 과실, 재발방지 가능한 반복적인 누수에 대한 감면에 대해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조례 개정 검토 바람.

□ 한강사업본부 : 24건

1. 세계불꽃축제 행사 당일 푸드트럭과 임시매점 등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등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함.
2. 재정난으로 하천점용료도 내지 않는 서울마리나의 불꽃축제 특수를 노리는 바가지 상혼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3. 한강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임. 무단투기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나 감독, 계도가 필요해보임.
4. 5월경 반포 한강공원 수양버들 꽃가루 날림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검토.
5. 수영장 위법행위 등은 행정사무감사 지속 요청사항이므로 관리감독 철저히 바람.
6. 한강숲 조성 등 자연성회복사업 추진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검토 필요함.
7. 유선장 및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철저히 바람.
8. 주차장 스마트파킹 도입 전까지 출차 지연 보완 대책 마련 필요함.
9. 난지캠핑장은 캠핑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 대피로 및 통로 설치 금지 등
10. 한강 드론공원이 한국모형항공협회 관리로 일반인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 특정단체의 독점적 이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특화된 관리가 요구된다면, 민간위탁 등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수립 후 의회에 보고 바람
11. 한강유람선 전체9개 선착장중 실제 이용되는 선착장은 3개소로 이용저조함. 뚝섬 선착장은 하천점용 허가서에 점용 목적 누락되어 관리가 부실함. 행감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한강유람선 선착장 활성화 방안 수립과 적극 관리가 필요함
12. 수상훈련장과 중복사용되는 양화조정 면허시험장, 수상택시 도선장과 중복사용되는 반포조정면허시험장은 각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13. 한강예술공원의 민원이 제기 되었던 작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특
정작품은 주민들이 선호하나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공공미술의 주
인은 시민으로 설치와 해체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
14. 한강숲조성사업은 지속추진할 사업이지만, 조성후 식재 관리에 유의해야 함.
식재시 뿌리부분 결속 제거 철저 및 식재 후 관수 등 철저 관리 필요함.
15. 뚝섬문화복합시설 및 새빛섬, 수상택시 등 정책사업의 수행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용 저조시 다양한 시설 활용을 모색해야 함
16. 한강수상택시 운영관리를 민간에 전담하지만 이용저조 및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 필요
17. 한강공원시민이용홍보는 철저 준비해서 기간내 수행토록 해야 함
18. 여의도 한강 파크골프장, 시니어놀이터 등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공
간 확보필요. 광나루 지구 등에 계획중인 사업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19.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 검토 제안(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성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일관광 프로그램)
20. 한강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의 뱃길을 이용한 다양한 통일사업 추진 검토
21. 단속전담 채용 시 젊은 층 인재들 적극 발굴 및 현장활용 강화 필요
22.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한강 하천점용
허가 시 관계절차 준수할 것.
23. 인공암벽장은 드론공원과 함께 민간위탁 등 검토 필요함.
24. 한강투어패키지 여행객수가 급격히 줄었음.
한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다
른 기관의 한강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에너지공사 : 17건

1. 공사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중점 분야’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검토할 것.
2. 열병합 발전소 추진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강서구 청소과
집하장이 이전이 안되어 지체되고 있음. 열병합 발전시설의 증설이 제
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신중한 검토 요구.
3.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사
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등 태양광 보급 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5. 중·소형 연료전지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솔라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과 충전소의 결합이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집중형 충전소 건설 대행사업과 같은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전기차 충전소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7. 노원, 강서 등 집단에너지 공급 받고 있는 임대주택 지역의 노후 2차측 배관 교체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교체함에 따라 관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노원구 8만 세대에 대한 관로 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을 시행할 시, 자체 투자심사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0. 건축물 관리 관련, 석면 제거를 신속히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태양광 디자인 관련, 임직원과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과천시 지역민원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천시에 기부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종전의 1%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2차생성물(질소산화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많음.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미세먼지 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공사의 적극적 대처 방안 수립 바람.
14. 제3차에너지기본계획(204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비율 40% 수준 확충)을 기반으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바람.
15. 순 손실을 줄이고 흑자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16. 수요반응자원 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7. 태양광 패널(모듈)은 사용자가 관리하기 어려움. 관리의 소홀로 태양광 패널에 먼지나 이물질 오염시 효과가 떨어지므로 청소전후의 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변인 : 7건

1. 외신관련 왜곡보도가 없도록 외신 번역시 품질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2.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관련 3년 연속 헤럴드가 선정됨. 한 업체가 계속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여러 업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바람
3. 해외순방시 민간전문가 지원을 위한 경비사용은 일체 없으며 출입기자 단 취재지원 목적으로만 사용 관련
4. 가짜뉴스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및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아닌지 검토 바람
5. 홍보요원채용 관련 민원과 같이 작은 실수가 시민들의 행정 불신을 야기 할 수 있으니 채용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6. 대변인실 조직관련 전문적인 조직컨설팅을 받아보기 바람
7. 해외언론 프레스투어에 참가한 언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프레스투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홍보평가는 서울시에서 데이터로 하고 있는지 효율적인 외신 프레스투어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의한 평가관리가 필요함

□ 시민소통기획관 : 5건

1. '19년도 서울미디어메이트 창작 등 예산증감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그 효과나 실적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2. 제3시민청은 지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주시기 바람
3. 내년부터 서울사랑 광고면수를 확대해서 광고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4. 시민청 권역별 홍보를 위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필요
5. 저작권 등록 실적을 보면, 상품류, 등록번호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잘 알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주시기 바람

□ 문화본부 : 9건

1.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치구를 설득하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태도 필요
2. 삼청각 청소용역직원 징계 건 관련 원만한 해결 필요
3. 문화축제기획에 있어, 단기 1회 행사에 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관광 성수기에 장기적인 행사로 기획해서 문화축제로 관광진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4.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자주재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관광부서와 연계 사업 등으로 수익창출을 하는 방법 모색 필요
5. 자치구 연계 문화사업 추진 시 자치구 간 형평성 고려 필요
6. 문화본부에서 건립 추진 중인 통일문화센터가 중앙부처가 마곡지구에 건립 추진 중인 통일센터와 명칭이 유사하므로 명칭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7. 디자인정책과와 디자인재단 간 유사사업 통합추진 필요
8. 무형문화재 지원금 횡령 고소고발건 관련 손해배상 청구 후속조치들을 잘 진행할 것
9. 클래식홀 건립 관련 연구용역비가 중앙투자심사 탈락 등의 변수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광체육국 : 12건

1. 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안전수칙 관리 철저
2. 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3.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100년 스포츠 역사를 조명하고 보존할 수 있는 체육박물관 건립 검토 필요
4.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필요
5.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우선 추진 필요
6. 강북구가 관광특구에 포함 될수 있도록 검토 바람
7. 글로벌마케팅에서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 전통문화도 많이 알리는 고민을 해 주기 바람
8.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9. 1월 조직개편시 관광체육국과 관광재단의 사업 이관에 맞춰 균형 있는 개편이 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람

10.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에어비앤비(공유숙박)로 인한 주민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방안 구상 필요
11. Able 뉴스에 나온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무장애 관광매뉴얼 내용을 다시 체크해 주기바람
12. 원모어트립 예산이 시스템 유지보수와 홍보부분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상품 및 콘텐츠 발굴과 육성에 예산 지원 강화 필요

□ 교통방송 : 7건

1. 라디오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대표 프로그램이 있는데 TV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 필요
2. 협찬광고 수입이 증가되어 더 좋은 품질의 방송 제작으로 시민들이 좋은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교통방송이 최근 공정성이나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편파성 논란이 많은데 편파성 없는 방송이 제작되도록 노력 바람
4. 최근 1인 미디어가 수준 있게 급부상하고 있는데, 다양한 미디어환경에서 tbs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 혁신 필요
5. 최근2년간 광고협찬 수입현황을 보면 뉴스공장에 대한 의존도가 많고 다른 프로그램의 수입은 저조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6. 최근 3년간 성희롱 등 예방교육 명단을 받았는데 법령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대리참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망
7. 교통방송 TV 채널을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 필요

□ 서울역사박물관 : 9건

1. 장애인의 백인제가옥 관람을 위해 필요한 접근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현상변경 등 가능한 범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람.
2.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무상 기증 유물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 확보 및 관리에 수십억의 비용이 드는 문제를 생각할 때 수중에 관한 엄격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3. 자원봉사자의 서비스 질 제고, 고령화 문제 해결, 청년층의 활동참여 유도, 자긍심 고취를 위해 활동 실비 인상, 휴게 공간 환경개선 등 봉사자 대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기 바람

4. 소장 자료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서 자료(유물) 보호 여건이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
5. 기존 홍보방식과 더불어 유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교육 자료를 만들어 이 유물이 있는 역사박물관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지도 확대를 위해 노력 할 것
6. 좋은 전시기획을 하고 유물을 많이 전시한다 해도 시민들이 많이 오고 사랑을 받아야함. 박물관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함. 내년에 용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7.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만족도 제고와 박물관의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카페와 식당 시설 등 이용 환경과 편의성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8. 통합수장고는 서울역사박물관 외 다수 박물관의 자료가 수장될 것이므로 보고 주체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9. 학예인력 양성 뉴딜일자리 채용에 전시 경험 경력자를 우대하는 가점제 적용은 경력이 없는 취업 준비생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박물관에 들어와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람

□ 서울시립미술관 : 12건

1. SeMA 벙커 안내공지를 자세히 올려서 민원이 발생하되 않도록 하기 바람.
2. 도슨트는 서울시민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직장인들도 도슨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녁시간대 교육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비엔날레전 관람시 주제가 난해하고 어려워 편안한 느낌을 못 받았음 20억 원이 들어가는 전시인데도 관람객들이 공감하지 못함. 향후 관람객이 공감하는 전시를 해주길 바람
4. 북서울미술관에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전시회를 개최해 주기 바람
5. 천경자 기증 소장품에 대해 북서울미술관에서 전시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6. 작년에 개편한 홈페이지 포맷이 보기에 불편하고 자유게시판 코너는 현재 일반홍보와 안내만 올라 있음. 시민과 쌍방향 의견교환으로 개선해 주기 바람.
7. 세마인 후원회 일반회원이 100여명 밖에 없다는데 활성화되길 바라며, 후원회 홈페이지도 활성화 운영되길 바람.

8. 북서울미술관의 방문율을 더욱 증대 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람.
9. 임대업체의 연간 평균 수입부분을 예측 할 수 있으니, 임대업체가 중도 계약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할 것
10. 전시만족도 결과가 좋도록 분발하기 바람
11. 백남준기념관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관람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기바람.
12. 시와 잘 협의해 서울사진미술관 개관 전에 반드시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7건

1. 세종문화회관은 해당 법률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의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 마련이 필요
2. 세종문화회관 정규직전환과정에서 서울시교통공사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길 바람
3. 좋은 공연유치를 위해 2~3년 전 사전대관 검토바람
4.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연 기획 고려해주기 바람
5. 꿈나무오케스트라는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데, 현원을 확대하여 음악 교육혜택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재)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의 수탁기관으로서 서울시 재산인 세종문화회관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데, 사실상 세종홀을 전시·컨벤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므로 전시·컨벤션 유치에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대관 관련해서는 공연장 대관도 중요하지만 자체기획 공연을 적절히 배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기회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도 필요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14건

1. 홈페이지 티켓 예매 절차가 어려우니, 간편하게 개선해 주기 바람
2. 좀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힘써 주기 바람
3.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을 잘하길 바라고 자료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람
4. 단원의견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원모집 절차 진행해 주기 바람 음악감독은 연말까지 선임하여 주기 바람
5. 야외공연 용역업체는 한 업체가 계속 선정되면 비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업체 선정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람

6. 순회공연을 통해 문화도시서울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되지 않도록 수입 및 후원금 유치에 더욱 노력 할 것
7. 시민 공연에 일부 자치구가 수년간 참여하고 있지 않는데 자치구에 소요 과약을 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자치구의 시민들이 고르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8. 교육프로그램 관련하여 단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청소년, 영유아와 부모동반 프로그램 신설을 요청함
9. 유료회원 수입이 굉장히 낮는데, 유료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10.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을 임의로 사용 하는 부분 지양할 것
11. 서울시향 높은 수준의 공연이 필요하지만 경영도 중요시해야 함. 경영 본부와 대표이사간의 소통 채널 유지가 중요함
12. 피지컬프로그램 및 직원 역량 교육에 직원 참여율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구성 및 시간대 조정 필요
13. 야외 음악회 안전계획 미수립에 대한 지적 재발을 방지하고, 용역 안전 관리 부분을 특별히 점검하여 주기 바람
14. 예산항목이 2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도 있는데, 지원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 바람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11건

1. 재난 발생 시 장애인 대피 요령 마련
2.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공모 시 더 많은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3. 청년예술지원사업 운영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대하는데 대한 인력운영 방안 마련
4. 문화재단 산하 각 창작공간 마다 직원이 장르별 청년예술지원(최초 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기존 창작공간의 운영에 차질이 있어 보이며, 창작공간 조성 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므로 청년지원과, 창작공간운영을 분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
5. 재단 내 예산 전용 최소화
6. 최초,유망,메세나 지원 등 예술인 지원단체 사업에 있어 선정과정에는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으나 결과보고 단계 및 환류에 있어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 될수 있으니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

7. 대표축제 지원 사업의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되니, 결과 평가의 기준은 조금 더 높이고, 지원 기준은 문턱을 낮추어 다양한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바람.
8. 시설 설립 및 인테리어, 시설유지관리 관련 계약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사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람
9. 신당창작아케이드 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 모색
10. 서울예술치유허브 프로그램 운영 기간 확대 방안 마련
11. 2019년 경영진단시 적자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부분도 함께 검토 바람.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4건

1. 꿈꾸는 공장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을 1명 추가할 수 있을지 확인 바람
2. 예산절감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람
3. 거마비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협의 및 관리하여 앞으로는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4. 방만한 경영보다 실속 있는 경영이 필요하며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대화가 더 필요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3건

1. 서울빛초롱축제 후원/협찬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서울관광재단과 관광체육국의 주도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체계정립이 필요함
3. 시, 자치구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운영효율성 제고 노력할 것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4건

1. 민원지원팀은 약·강성 민원을 전담하므로, 보상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주기 바람
2. 상담영역에 대한 재단 내부 기준마련 준비 필요
3. 오상담·오안내가 없도록 기관별 업무분장 현행화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
4. 민원인 만족도 제고 및 업무 효율을 위해 상담 안내와 연결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여성가족정책실 : 7건

1. 신입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으나 여성분야 근무경력이 전무한데, 서울시 여성 및 보육 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람.
2. 여성, 보육 등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여성 및 보육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3. 수유실 중 사용 안 되고 있는 유휴공간을 '열린육아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4. 어린이집 CCTV를 감시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교사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갖도록 해 줄 것.
5. 보육교사 인권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방안 등 검토할 것.
6. '안심이앱'에 대한 시연 및 관제센터 방문 추진
7. 기능보강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직(기술직 및 토목직 등)으로 구성됨 팀 편성 등 조직 개편 필요

 여성가족재단 : 3건

1. 젠더책임관, 젠더담당주무관 등 조직 및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길 바람. 현재로서는 인력부족 및 중복 업무로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임.
2.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임.
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포함시켜 심사의 객관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 **서울상상나라 : 1건**

1. 주요업무보고 자료 조직현황에서 안전요원, 시설관리요원 빠져 있음. 같은 직원이라는 인식 갖고 근무조건과 처우 면에서 정규직 직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할 것.

□ 복지본부 : 10건

1.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애초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주기 바람
2.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사업 준비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할 것.
3. 찾동에서 민간 영역(나눔이웃사업, 이웃살피미 사업,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검증 통해 효과성과 향후 추가 투입에 대한 검토할 것.
4. 시민건강국과 긴밀히 협조해 의료와 복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5. 서울시복지재단 등의 연구 결과 적절한 시기에 나오도록 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 편성된 예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나오기 전에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한 것은 문제 있음. 정해진 예산 집행 절차 준수할 것.
7. 시설에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노숙인들이 자활의지 가질 수 있도록 초동단계에 더 많은 노력 기울일 것.
8. 노인 고독사 방지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마련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해 주는 방안 강구할 것.
9. 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시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정해서 편성할 것.
10. 자치구별 재정, 시설 등 확보 필요성,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할 것.

□ 서울시복지재단 : 2건

1. 소풍사업(소규모 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사무국장 역할 중요함.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바람.
2. 찾동사업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이웃끼리 네트워크 형성해서 의지할 수 있는 체계 만들어 줄 것

◆ 노인·장애인·자활 관련시설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2건

1.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의 연령 제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주시기 바람.
2. 장애인복지콜사업. 50+보람일자리 인력 운전원 안전상 문제없는 지 파악하고,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 기할 것.

□ 시민건강국 : 6건

1. 서울의료원 무료공동간병사업 중단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22명의 간병사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논의 바람.
2. 이용 현황 낮고 장소 넓고 접근성 좋은 수유실을 '열린육아방'으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바람.
3. 복지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 복지·의료사업 연계성 있게 추진할 것.
4.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지소 없는 자치구에 보건지소 설치 적극 검토할 것.
5. 강북권 어린이병원 신설 계획 차질 없이 진행할 것.
6.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등 식품 관련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권한으로 강력하게 제재 조치할 것.

□ 서울의료원 : 1건

1. 내구연한 3년 이상 지난 고가 의료장비 많음. 예산 한계로 교체가 어렵다면 '리스' 방식 검토해 보기 바람.

□ 공공보건의료재단 : 1건

1. 대부분의 연구 또는 사업이 12월에 끝남. 일찍 끝내서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 : 5건

1.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안전관리규정 점검 및 평가 메뉴얼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하게 될 것이므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 및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서울시는 지하공간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종각역 주변 “유휴 지하공간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송파구 종합운동장 사거리 지하보도 역시 지하공간을 재생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지하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3. 광흥창역 자전거도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임. 자전거도로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이나 도로 안전분야와 관계가 있는만큼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에 대해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4. 한강교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발전시설 설치조건, 경제성, 발전전력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임.
5. 지반 붕괴사고가 일어난 가산동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택국 소관사항이지만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본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 소방재난본부 : 1건

1. 신입 교육생이 소방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 훌륭한 소방관이 되도록 양질의 지도편달을 바람.

□ 물순환안전국 : 4건

1. 빗물마을에 설치된 투수블럭, 빗물저금통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해 주길 바람.

2. 우수지 관리 기본계획의 용역기간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
3. 서부간선도로 지하수 유출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전문가와 시급히 현장 조사를 추진바람.
4.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빗물펌프장, 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비 규모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랍.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3건

1. 건설현장근로자 편의시설 중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의 경우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 신속히 해주길 바랍.
2.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 덮개와 관련하여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재질 선정을 재논의 해주길 바랍.
3.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공사현장에서 석면철거 작업 시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랍.

□ 서울기술연구원 : 7건

1.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로 조속한 충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복무규정 52조에 있는 안전교육 실시를 철저히 할 것.
3. 복무규정 38조에 있는 가족돌봄휴직은 좋은 제도라 판단되며,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촉매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실내 실험 결과와 현장 적용 결과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성 및 효용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랍.
5. 기술연구원 고용인원의 남녀 성비는 현재 7:3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
6. 기술연구원은 향후 실용적인 용역 및 연구에 비중을 높여 주기 바랍.
7. 기술연구원의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도시문제의 자체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산학관 연계를 적극 활용할 것.

□ 도시재생본부 : 16건

1. 2019년 1월 17일자 조직개편 계획에 따르며, 정비사업(주거사업과, 재생협력과) 관련 부서가 주택건축국으로 편제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도시재생사업의 의미와 현황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3. 용역 카르텔 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4급 이상 지도교수 이름과 논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의회 경시 행위이므로 주의할 것
4. 고도지구, 경관지구,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주거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층주거지에 특성화된 도시재생 도시관리계획 구역 신규 도입을 검토 바람
5. 주거환경개선 3가지(소규모주택정비, 집수리, 공공기반시설 정비) 기법에 대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계획 마련 요망.
6.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앵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추가 지원방안, 제도 보완 요망.
7. 가꿈주택 집수리 자부담 비율을 신청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8. 집수리 신청, 선정, 지원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9. 집수리 관련 통합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10. 집수리 담당부서의 전문성, 통합성, 인력충원 필요
11. 광화문광장은 조성한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1,000억 이상을 투자하여 지금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그 필요성 측면에서 시기상조이므로 재검토 필요
12.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방침의 개정 및 폐기를 건의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일몰제) 제1항 중 단계별로 일몰 연수를 1년씩 연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중 2년 연장을 30% 동의시 4년 연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직권해제)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2항 폐기 요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직권해제)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6항 폐기 요구
- 2009. 9월 방침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므로 폐기 요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2년간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사전협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불가할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직권 조정토록 할 것

13. 빈집 매입과정에서 실제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4. 정부 각 부처 수행 용역 보고서를 통합 관리하는 '프리즘'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용역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방식처럼 실수요자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빈집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적정 가격의 빈집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부동산 신탁은 일부 소수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등 전횡을 일삼고 있지만, 공공관리제 적용 등 도시정비법의 규정 사항을 적용받지 않아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신탁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표준계약서, 표준정관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

□ 도시계획국 : 6건

1. 캠퍼스타운은 학생들의 창업 외에도 주거환경 안정 등 복합적인 사안이 있는 만큼 경제진흥본부로의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것.
2. 최근 5년간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민원 174건 중 조정비율은 1% (2건)에 불과함. 합당한 민원은 적극 검토하고, 조정된 건은 조속히 마무리 해주기 바람
3. 2003년 종세분화로 인해 종전보다 용적률이 낮아진 경우 주택이 낙후되었음에도 낮은 용적률로 인해 건축행위가 어려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용적률 등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보고 바람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상임위 보고 바람
6.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이 준공되면 용역 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하기 바람

□ 주택건축국 : 20건

1.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강화 정책에 대응한 서울시의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며, 기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확보된 세수가 일부 자치구로 배분되고 있는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3.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부분의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 40만원에 형성되어 있음. 청년이 부담하기에 높은 금액인 만큼 청년주택 공급시 예산지원해 주기 바람
4. 2020년 건설형 임대주택은 7,872호를 계획 중인데 비해 행복주택은 1,300여호 뿐임. 중장기 공급계획에 대한 일관성 있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기 바람
5. 사회주택 입주조건인 월평균소득 70%이하의 최저임금수준의 맞벌이 정도인데, 입주자격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에서는 1년 이내에 이전고시를 하고 해산토록 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법적 장치를 고민하기 바람
7. 어려운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기 바람
8. 역세권청년주택 공급목표물량 달성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규정 완화 등 사업자의 입장에서 지원책을 점검해 주기 바람
9.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행복주택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분양 후 다른 주택과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주기 바람
10. 청년의 주된 고민은 주택 임대료인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서울시 대출기준 완화하는 등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개선해주기 바람

11.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에 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성동구치소 부지, 도심내 업무빌딩 주택 공급, 빈집 매입 공급방안 등을 검토할 때 국토부-서울시-자치구 간 협의를 거쳐 주기 바람
12. 북촌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한옥 화재예방 주민참여형 용역 계약체결시 화재관련 전문가가 없는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였음. 용역을 줄때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1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서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13개 뿐이므로, 감사원 지적과 같이 타 자치구 거주자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14. 도심 내 오피스를 주거로 공급하겠다는 시장 발표가 있었는데 조례개정 등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람
15.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 보증금 지원제도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16.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시 기부채납을 줄이는 등 절차 단순화를 통해 참여업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17. 재건축, 재개발 구역의 직권해제로 주택 순증효과가 사라졌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지원하되, 반드시 해제되어야 할 지역은 해제하는 등의 세밀한 정책시행이 필요함
18.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상업지역에 주택 공급, 유희용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서울시 부동산대책은 잘못되었음. 과도한 재건축 규제, 직권해제가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직권해제 등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의무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검토바람
20. 역세권청년주택 용산구 한강로2가 사업자변경 근거가 법률상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 해 주기 바람.

□ 지역발전본부 : 20건

1. 동북권 사업에서 중랑, 동대문, 성동은 배제되어 있음. 균형개발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 한국무역협회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관리운영기간이 50년으로, 통상적인 BTO의 사업기간에 비해서 장기간이므로 재검토 필요
3.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부속시설 관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동북4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여짐. 광역이나 현장지원센터와의 위계와 기능을 분명히 하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19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고가도로 하부는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취약지역이므로 대기오염과 소음, 공기질 등을 장기적으로 측정하여 사업대상지로 적합한지 여부 등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6.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시 싱크홀·화재·침수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7. 혁신성장 거점 조성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형 개발방안 수립 시 본부차원의 접근보다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8. 사전협상대상지의 공공기여 관련 대상지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공공기여분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 마련 필요
9. 잠실운동장, 컨벤션시설의 유동인구 증가분에 대한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 요망
10. 올림픽주경기장 등의 역사성·상징성을 고려한 잠실운동장 개발방안 마련 요망.
11. 공공기여분에 대해 지역인프라 확충 등 광역적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12. 조직의 위상과 역할 정립 위해 자체 용역도 필요한 상황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거점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잘 추진해 주기 바람
13. 지역거점발전계획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30 생활권 계획을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바람
14.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용산개발 사업추진이 중요하므로,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 의원의 의견을 필히 수렴하기 바람
15. 마곡엠벨리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은 시민지향적, 생활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16. 마곡 MICE단지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치밀한 설계가 필요함

17. 지역거점발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과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강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바람
18. 현대차 GBC 관련 사업 추진관련 공공기여를 현물로 기부채납 받을 때 사업비 과대계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리 등에 서울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19. 현대차 GBC 사업 지연에 따른 현대차의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사업 축소 및 공공기여분 감소에 대비한 방안 마련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한 노력 필요
20. 지역발전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자체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기 바람.

도시공간개선단 : 2건

1. 현재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여러 문제점들은 면밀한 사업기획과 의회와의 긴밀한 공유없이 졸속 추진된 결과로서, SH공사의 대행사업을 위탁개발로 전환 추진한다 하더라도 시의회의 승인 여부는 불확실함.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구 노력 필요
2. 서울시 도시환경의 많은 비중을 민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서울주택도시공사 : 18건

1. 세빛섬에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도심 주거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세운4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마곡산업단지 LG컨소시엄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토지사용료 문제는 공사 내부의 법적 검토와 같은 기본적 사전검토가 결여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주의 필요
4. 노인인구 증가,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노인친화 임대주택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5. 과거 육상선수단이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외부를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기 바람

6.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인사혁신 TF 재구성 등 인사개혁이 필요함.
7. 비위사건 관련 직원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비위사건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공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임
8. 공사의 경우 사장교체, 직제개편, 명칭 변경 등이 빈번하며, 직제개편 및 명칭 변경을 홈페이지 연혁 등에 구체적으로 게시할 필요 있음
9. 맞춤형 임대주택 특정감사 관련 과거 지적 10건, 신분조치 13건 등의 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필요
10. 최근 경실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여 경실련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1.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공사의 청렴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SH공사의 각종 비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직원 교육 프로그램 등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바람
12. 개포구룡마을에 운동시설 등 주민이용 가능시설 확충 필요
13. 임대주택 부적격자에 대한 권익위원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공사가 패소한 사례가 있으니 관련 업무 추진시 무리한 소송을 지양하기 바람
14. 세곡2지구 율곡사우나 토지수용 당시 SH공사에서 지장물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1년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5. 보상 부장의 전결규정 기준이 30억인데, 금액이 너무 크므로 최종결재권자에게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16. 임대료 동결로 인한 손실이 매우 높고, 그중 장기전세가 손실의 절반을 차지함. 보증금을 부채로 잡지 않거나 일반분양으로의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17. 마곡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마곡을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람
18. 다가구 매입임대 유희주차장을 활용한 저층밀집지역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교통본부 : 9건

1. 신림선 박종철역 신설요구 관련 12월까지 답변 필요
2. 의원이 발의한 김포공항 활성화 조례 제정안 관련 협조 요청
3. 따릉이 인근 자전거 점포상이 따릉이 수리 제안
4. 위례과천선 노선 결정시 경제적 타당성 위주가 아닌 주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선정 필요
5. 수서역 차량기지 이전 적극 협조 요청
6.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관련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검토 필요
7. 택시 미터기 계량 및 수리 검정을 위한 품질시험소 방문시 불편사항 개선 및 추가 대행장소 필요
8. 위례신도시 교통 관련 행정협의회 적극 참여 요청
9. 송파공영버스차고지에 지역연고 버스업체 수용 검토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7건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계획과 건설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 필요
2. 자전거 주차장 관련 영상물 설명 요청
3. 진접 차량기지 노선변경 필요
4. 지하철 미술작품 설치 관련 청년작가나 유망작가들의 작품을 전시공간에 활용, 구입보단 순환대여 방식, 광고수입을 통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대 건의
5. 동북선 도시철도 보상문제 원만한 해결 요청
6. 우이경전철 환승 검토 요청
7.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 인근 삼성교 차선 확장 검토요청

서울교통공사 : 5건

1. 정기권도 카드로 구매 가능하도록 요청
2. 테마역사도 좋지만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 필요
3. 대공원 어린이집 홍보 확대 요청
4. 공사 펜싱팀 격려 필요
5.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의원 민원사항에 대해선 진행사항 보고 요청

서울시설공단 : 2건

1. 지하도 상가 투자비용 회수 관련 상인과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2. 장애인콜택시 이용등급제 폐지될 경우 수요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대응 요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65건

1. 내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사항을 보고할 것
2. 사립교원 선발 시 과도한 채용배수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3. 방과후학교의 기존 문제점을 재점검할 것
4. 급식 식자재 안전성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학교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
6. 전문상담사 방학 중 근무 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
7. CCTV 사각지대 관제인력 문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D중학교 바닥 진동에 대하여 정확한 진위를 파악할 것
9.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교육감 임기 내 가시적인 조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10.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 서울시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
11.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구축할 것
12. 자유학기제 진로지원체험 프로그램 멘토가 매뉴얼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3. 17개 도서관이 분야별 전문도서관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상담 수요에 따라 상담교사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5. 혁신교육지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도입을 추진할 것
16.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에 보다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7. 수험생에게 수능 예비 소집일에 안전대피소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할 것
18. 청렴시민감사관의 명칭을 재검토할 것
19.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안정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
20. 방과후 위탁업체가 강사비 미지급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21.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교육 허용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22. 감리업체에서 작성한 업무일지를 동작구청으로부터 제출 받도록 할 것
23. 감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4. 반복되는 의원요구 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것
25.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
26. 위센터에 대한 조직 개편을 실시할 것
27. 학생교육원과 학생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생존수업 담당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8. 시설사업비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한 만큼 학교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29.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적발 시 적극적으로 계도 및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30.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단률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것
31. 체육시설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32. 저소득층 여학생들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무료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3. 시민감사관 및 감사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만큼 유치원 감사 진행 시 별도의 인력을 이용하여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4.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 설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
35.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자재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6.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부금 납부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할 것
37.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8. 교육청에서는 국정기조에 맞게 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9. 통폐합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40. 교육지원청의 감사 조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상시 감사나 지도점검을 위해 인력을 확충할 것

41.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것
4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환급금액이 적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5년간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
43. 공립학교 유휴 교실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4.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교원 위탁채용이 아닐 경우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5.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학들에 대한 제재방법을 강구할 것
46.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교육감의 SNS를 통한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
47. 다양한 형태의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48. 감사관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관련 비위·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할 것
49. 현재 감사 중에 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장학지도를 실시할 것
50. 실행 오류가 많은 전자도서관 어플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1.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에 지워지는 볼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52.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 시행 시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아닌 외부평가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토록 할 것
53.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시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외부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
54. 공영형 유치원이 관계 법령 및 업무협약을 준수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컨설팅을 수행할 것
55. 교재교구비, 행사비, 운영비 등 공영형 유치원의 방만한 예산 운용 및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56. 기본재산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익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
57. 사립학교 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무 인력 및 감사인력을 확충할 것
58. 시민감사관의 기본 감사역량 증진을 위한 역량 교육을 실시할 것
59. 공립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고할 것
60.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확한 지침을 학생들에게 안내할 것

- 61. 한빛맹학교와 효정 특수학교 영양사 배치 누락에 대하여 보고할 것
- 62. 학교로부터의 시설 점검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63. 학교마다 체육 코치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64. 학교 교실 실태 파악을 하고 유희교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특수학급, 돌봄교실, 유치원 등에 우선 설치할 것
- 65. 일선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시 학운위 회의록 및 회의에서 사용된 모든 유인물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개토록 조치할 것.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1건

- 1. 관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징계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사법 처벌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1건

- 1. 송중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것

교육연구정보원 : 4건

- 1. 서울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연구에 힘쓸 것
- 2.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연구정보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많은 연수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할 것
- 3. 교육청은 서울형혁신학교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고 내부의 고충해결을 위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4. 교원의 성비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추진할 것

학생교육원 : 1건

- 1. 학생교육원 서부권에 안전체험관과 동시에 실내생존수영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학교보건진흥원 : 1건

- 1. 학교보건진흥원은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기타(자료제출 등)

1,465건

운영위원회

13건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 9건

1. 서울시 전체 지방채 발행 현황
2. 서울시에서 현재 소송 중인 사건 내역 일체
3. 비서실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의 관용차량 이용 관련 과태료 현황
4. 시의원들과 시장과의 면담 요청 내역(구두 또는 서면). 면담이 불가능하다면 불가이유 및 사유서 포함
5. 청년자치정부 실현 관련 시장 방침사항 자료 일체
6. 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나 면담 내역 일체
7. 안국빌딩 신관과 구관의 임대료 비교 자료.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비실명 처리 된 자료 실명 처리하여 제출 바람.
9. 제9대, 제10대 의회 임기 동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시 시의원들에게 공지 또는 교부내역을 공유한 자료

시의회사무처 : 4건

1. 의원체육대회 체육복 구매업체와의 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 제출.
2. 입법법률고문 현원 25명 명단, 임명연도와 최종학력 제출
3. 제9대 의원에게 제공한 노트북 등 반환된 물품 처리방법과 사용연한이 미경과된 사무기기 보유현황 자료 제출.
4. 시민권익담당관의 활동내역 제출

□ 서울혁신기획관 : 22건

1. 사단법인 마을 전.현직 정회원. 임원직 명단/법인설립자본금/회비납부 현황
2. (사)마을이 2018년 추진한 고유사업 사업명/ 사업계획서/실적/ 예산
3. 청년활동지원센터 연도별 사업예산
4. 서마중 팀장급 이상 전.현직 임직원 명단 /주요 경력/ 출신학교
5. 협치자문관 전.현 명단 /주요경력 /출신학교
6. 청년허브 대관 규정, 현황
7. 청년자치정부 운영 계획(방향), 관련자료
8. 청년의회 제안 사항, 서울시 반영결과
9. 2018년 무중력지대별 이용현황, 회원수
10. NPO지원센터 예산집행현황
1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현황
(대상 : 뉴코리아여성연합,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드림빅연구소)
12. 2019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중복지원 할 경우, 사유와 구체적인 설명
까지 기재하여 제출
13. 2018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중복지원 단체 및 예산집행 후 반납내역 제출
14. 밥차 사업 법률 적합성 검토보고서
15. 청년수당 수립 전 연구용역과 최근 추적조사 결과 보고서
16.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수탁자, 지원 금액,
수탁기관, 재계약 현황, 각 기관별 종합성과평가보고서)
17. 최근 3년간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지방보조금현황(사업 및 기관별 연보
조금액, 보조금 지출액, 사용내역)
18. 2020청년기본계획, 최근 5년간 연도별 시행계획서
19. 최근 3년간 청년 허브 연구용역현황(건별금액, 용역수행기관, 수의계
약여부 등)
20. 민간위탁기관별 사용료 수익금 현황 및 사용내역, 사용근거 제출
21.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위원회 중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
거하지 않고 이행한 사업심의 의결내역
22. 최근 2년간 인권교육 담당했던 강사들의 이력과 강의 내용 제출사업명
비교 및 미래혁신포럼 집행현황

□ 비상기획관 : 3건

1. 2017. 2018년 안보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2. 민방위 포상금 지급 제도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3. 2급 기밀에 대해 의원들이 비치인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하기 바람.

□ 정보기획관 : 7건

1. 최근 3년간 민간위탁 및 용역 대표, PM 명단
2.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공분야 자격여부, 자격증
3. 사물인터넷 시범사업 추진내역(6개구)
4. 2018년 엠보팅 참여실적
5.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개선방안 계획
6.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근 3년간 시행계획
7. 최근 3년간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민생사법경찰단 : 5건

1. 2017년~2018년 현재까지 사무관리비 사용한 지출내역
2. 5년 이상 비리 및 징계 받은 직원 현황(건명(비리내용), 조치일자, 전출날짜 등) 관련 해당 자치구 담당 업무 포함
3.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에 조직관련 요구사항 및 수용현황
4. 각 자치구 별 경찰단에 파견된 직원현황(11월1일자 기준)
5. 5년 이상 비리 및 징계 받은 직원 현황(건명(비리내용), 조치일자, 전출날짜 등)

□ 행정국 : 7건

1. 시민카드 연계시설 현황(2018. 11. 6.제출)
2. 고시출신, 시민단체 출신 포함 5급 이상 임용일 첫 보직 및 이후 보직 현황 (2018. 11. 6.제출)
3. 자원봉사센터 재단화 추진 관련 진행사항 등을 제출바람
4.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 시간 및 업무내용 등 자료제출 바람.
5. 친절·불친절 공무원 접수 사유
6. 국장급 이상 공무원 휴가 내역
7. 최근 1년간 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임금, 복지 등 비교표 제출할 것

□ 재무국 : 8건

1. 2014-2018 구세, 시세, 환급이자 과오납 구분해서 의원별 요구자료 작성 제출 요망
2. 최근 3년간 해외연수에 참가한 직원의 직책과 명단을 제출할 것.
3. 해외연수에 갔었던 분들의 직책과 명단을 보고해주기 바람.
4. 최근3년간 공유재산 5억이상 20억 미만 매각 현황
5. 시금고 변경 관련 업무추진 중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항
6. 시금고 지정관련 출연금 등에 관한 매뉴얼 작성하여 보고바람.
7. 금고지정 시 약정체결 기간 조정사항이 있는 지 검토 후 개정사항을 보고하기 바람.
8. e-tax 이용 그룹현황 제출할 것.

□ 평생교육국 : 20건

1. 청소년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30개 기관의 평균이 90프로인데 이를 신뢰할 수 없음. 시설이용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 모두다 신뢰가 안 됨
2. 서울시부터 청소년 시설에 대한 미션과 비전을 명확히 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 바람..
3. 문해교육 예산이 2019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예산이 사업으로 남아있는 것과 사업이 없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평생교육국안에서 어떤 사업에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름. 다시 편성해서 문해교육이 평생교육국의 사업으로 남길 바람
4.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많은 원인을 분석하여 제출할 것.
5. 2018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 제출할 것.
6. 성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이용률 표기한 박람회 참석 5천명 명단 제출
7. 회계사 감사 시 작성한 재무재표 등 자료 제출하기 바람
8.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정규 직원 중 명지전문대 출신 채용 현황(경위, 면접관, 채용일 등)
9. 청소년 해외교류 사업의 선발기준과 공개모집 자료 선정 인원별 인적사항 제출
10. 평생교육진흥원 시장 방침서, 민간위탁 시장 방침서
11. 시민대학 관련 2017년, 2018년 예산안 비교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 비교)
12. 시민대학 관련 2017년, 2018년 인력 비교표(시간선택제, 임기제, 일반직 등 분류)

13. 화곡청소년 수련관 62개 예산중 30개 이상의 집행률이 50% 미만임 7개 사업중 사업명은 있으나 예산편성과 집행률이 없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재보고 하기 바람.
14. 화곡 청소년 수련관 예산편성과 집행률 관련 자료제출.
15.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관련 - 2017.2018년 각 자치구별 공공급식 대상 시설 총수 제출 할 것. (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및 공공급식시설로 구분하여 제출, 어린이집의 경우 100명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소규모 어린이집 구분할 것, ② 대상시설 총수 중 자치구에 참여 신청한 시설 총수 및 현황)
16. 2017. 2018년도 500원 지급 시설수, 300원 지급 시설 수 현황 재요구
17. 평생교육국 운영 시설 56개 운영현황(운영방식-자치구에 위임인지 민간위탁인지, 위탁일 경우 수탁자가 누구인지,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서울시 지원 예산금액 현황 표 제출할 것)
18. 마포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중 예산집행은 없는데 참여인원과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음 검토 후 조치해 주기바람.
19.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의 퇴사율과 입사율 비교해서 제출할 것
20.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정규 직원 학력 관련 제출

인재개발원 : 5건

1. 2월22일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질의 한 내용과 답변 제출.
2. 인재개발원장 강의자료 제출
3. 변호사 경력채용임용 관련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정책법률자문 변호사 채용공고 및 2016년 당시 응시원서, 경력, 자격취득 내용 등
4. 최근 3년간 교육훈련계획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회의록, 강사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할 것.
5. 교육훈련심의회 회의록, 강사선정심의회 회의록, 교육훈련계획서

감사위원회 : 2건

1. 최근 3년간 재심의 현황 중 상급자의 부당지시가 포함된 감사사건 목록 제출
2. 감사직류(5급) 11명에 대하여 최초임용일, 현직급일, 감사직류 전환일 자료

□ **기획조정실 : 33건**

1. TF중심 조직문화 전문가 6명 명단 및 프로필
2. 시범사업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현황
 - 공공기관, 배치 및 소진 현황 등
3. 격무부서 구분을 위해 2018년 월별, 일자별, 직급별 자료 요청
4. 20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총괄
5. 출자출연금 의회승인 요청 3년치 자료 요약 제출
6. 10억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내용
7. 자치구별 직원의 남녀 현황
8.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3년간)
9. 지방이양일괄법에 관한 건의, 요구사항 제출
10. 먹거리 자문관 실제 급여 지급내역 제출
11.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확대 관련 지적사항 관련 자료,
12.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결과(세부적으로)
13.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 동별, 월별, 상담건수
14. 차별적 보조비율(128개사업) 1조 320억 관련 자료 제출
15.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 에 관한 더 세부적인 내용
 - 세부금액, 인원 등
16.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2019년 신규채용 목표치가 1,200명에 불과한지?
 - 2019년 신규채용 목표치 산출 근거
17. BSC 좋은 일자리 만들기 목표 설정 기준
18. 정규직 비정규직 성과급 현황
19.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내용 제출 (창출 내역 등)
20. 민간보조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 진행상황 보고
21. 민간위탁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 진행상황 보고
22. 직급별 남녀 성비 3년치 유연근무 참여율
23. 2018년 예산 편성 관련 지침
2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직급별 현황

2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많아 유동적으로 조종할 수 있게 조례 제정 후 국감에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자문 내용
 - 상위법 위반 관련 자문 받은 자료 제출
26. 3년간 공무원소청심사 인용 건
27.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교육이수과정, 선발과정
28. 상생상회 위치 선정 관련 논의 자료 및 회의록
29. 상생상회 상품 관련 각 지역에서 상품 추천한 내용의 자료
30. 상생상회 집기 관련 비교견적서
31. 상생상회 매장운영용역 계약 관련 매달 용역비 지급내역
32. 투자출연기관 23곳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명단
33. 2018년 현재까지 시민참여예산 사업별 집행률

□ 경제진흥본부 : 31건

1. 2017년 지원업체(대지와 바느질), 2018년 지원업체(임광어패럴) 등 기부등본, 선정승인서류, 현장심사시 건물 사진 등
2. 가맹거래 및 대리점거래 개정 내용
3.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 추진 내역 및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사업 8개 시장 선정내역과 사업 내용
4. 귀농·귀촌교육 세부내용
5. 2019년도(2차 년도) 스마트앵커 선정 후보지 2개소(구로구, 강북구) 현황
6. 마켓홀 사례 관련 시장요청사항 내용
7.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사업비 100억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이상에 대한 심의사항(추후제출)
8. 외국인 등록 대부업체 현황
9.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집행저조 사유 및 향후 계획
10. 서울농장조성 예산 집행 저조 사유
1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상세내용
12.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 17. 이현재 의원 요구자료
 - 19. 박주민 의원 요구자료
 - 21. 김병관 의원 요구자료
 - 24. 박주현 의원 요구자료
 - 32. 소병훈 의원 요구자료

- 33. 황 희 의원 요구자료
- 34. 운영일 의원 요구자료
- 13.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온라인 홍보(세부사항)
- 14. 경제진흥본부 소관 센터(시설물) 등 층별 용도 및 공실현황
- 15.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 신기술 보급 현황 및 2018년 농업기술 주요현장 지원 현황
- 16. 최근 3년간(2016~2018년) 경제진흥본부 청렴도 평가 결과
- 17. 2018년 농업기술센터 초과근무 내역
- 18. 2018년도 도시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협업내용
- 19. 공공테스트베드 17개 과제의 과제명, 업체리스트
- 20.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의 기업명
- 21.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재된 34건에 대한 중재내역
- 22. 최근 3년간 광고비 집행내역(언론사별)
- 23. 서울페이 투자심사 자료 및 가맹점 모집현황
- 24. 2018년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농업 체험 프로그램 자치구별 참여 현황
- 25. 최근 3년간 서울시립과학관 각종 프로그램(교육, 행사 등) 자치구별 참여 현황
- 26.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총 매출,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37건에 대한 자료
- 27. 장기안심상가 선정기준 계량화에 대한 자료
- 28. 의류제조업체 공동브랜드(소그)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 29. 서울 창업디딤터, 서울창업허브, 글로벌창업센터, 창업성장센터, 창업 카페 지원기업별 매출 등 실적, 기업별 지원액수, 고용인원수, 창업연계실적('17년, '18년 기준)
- 30. 서울시립과학관, 과학전문도서실 도서목록 (종이, e북 구분)
- 31. 노량진수산물시장 갈등 중재 관련 공문

일자리노동정책관 : 28건

1. 휴 서울노동자 쉼터 일평균 이용자 수 / 직업
2.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연 강사 프로필
3. 직원 급료 제수당
4. 4개 기술교육원 교직원 임명에 관한 공문

5. 강소기업 선정리스트
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논의사항
7. 노동권익센터 복지센터 휴센터 인원 직책 급여
8. 감정보호 가이드라인
9. 서울 희망일자리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내용
10.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
1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년간 15명의 직원들이 퇴사함.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인적관리 방안
12.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사고이월 가능여부와 사유
13. 칼폴라니연구소 예산지원 근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사유
14.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2년 연장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
15.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이용 실적 및 실효성 여부
16. 공무원 투자기관 노동존중 강의내용 강사명 강사료
17. 뉴딜일자리 3년간 민간일자리 연계된 실적
18. 강소기업 18년 재협약 해지요청 한 사유
19. 시구상향 용역수행 기관 선정과정
20. 사경센터 지도점검 내용 체크리스트
21. 사회적기업 시작부터 개수별로 설립된 현황 개수 표로
22. 2018년 좋은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조직위원회 구성 내역/ 참여단체/ 명단, 좋은일자리도시협의체 참여단체/명단
23. 생활임금신고센터(2016.07~현) 접수내용/조치내용
24. 뉴딜일자리 참여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공공기관, 자회사, 서울시 부서 명단 제출
25. 생활임금 산입범위 변동내역 2015~2018년(통상임금기준으로 작성)
26. 공공부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소속, 직업, 경력 등 자료
27. 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사전심사제 이후 승인된 노동자의 소속(기관), 인원, 직종, 업무, 성별과 관련된 회의록 일체
28. 서울의료원 10월 개최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명단, 경력 자료 일체

□ 서울시립대학교 : 21건

1. 4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유명 로펌취업률
2. 2019년도 서울시립대가 기획조정실로 예산 요청한 자료
3. 최근 5년간 입학 취소 현황
4. 군 이러닝 수강 현황
5. 최근3년간 교수지원장학 수혜현황
6. 총장직선제 관련 서울시립대학교로 교육부로부터 온 공문 통보 사본
7. 용산, 세운 캠퍼스 세부 추진현황
8. 재학생 해외파견 세부 현황 및 귀국 후 활동내용
9. 시립대로 편입하는 학생현황
10. 최근 3년간 대학홍보 관련 신문 지면 광고자료
11. 직장 어린이집 정원수, 원아 모집방식, 현재 원아 교직원 현황
12. 신문구독현황(신문사별 부수별 금액별)
13. 대학교 평가 관련 평가 영역별 순위 지표 제출
14. 3개년 자치단체별 전형유형별 현황
15. 교직원, 학생 성별분리 통계
16. 외국어 학당 입학 학생 수 증감현황
17.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18. 2016년 이후 청소·경비 노동자 중 축탁인원/기간제인원
(연도별, 채용시기 표시, 계약기간, 남녀구분)
19. '18.10월 부설연구소 연구용역 실적 및 연구소 현황조사 자료
20. 2018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공무원 범죄 비위사건
- 징계의결 회의록,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 결정문 등
21. 성별분리 통계(업무보고, 행감자료 #66)

□ 서울연구원 : 26건

1. 작은연구 좋은서울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및 보고서 확인
관련(2016년 2건, 2017년 2건)
2. 2017년 직제개편 내용
3. 서남권 타당성조사 검증 과제
4. 서울연구원 보수규정, 임원 및 퇴직금 규정
5.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배포처 현황

6. 2018년 연구보고서 발송 목록
7. (주)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와 '행동경제학' 주제의 2개 위탁연구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사유
8. 2017~2018 연구실적 리스트(2건 이하, 10건 이상자)
9. 최근 5년간 자산관리 대장(동산, 부동산, 집기류 등)
10. 비품 및 차량운반구,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및 최근 5년간 변동 내역
11. 연구원 학력 외 주요경력(2~3가지로 요약, 석·박사)
12. 업무분장 현황(2018쪽), 연구원별 연구실적(2173쪽) 및 2018년도 인센티브 2000만원 이상자 현황(2168쪽) 현황에 대한 비교표
13. 인센티브 2000만원 이상자(부서, 성명, 직책, 사유, 근거)
14. 최근 5년간 유연근무자 현황
15. 조직진단 및 포괄임금 자료
16. 순환보직제 근거
17. 최근 3년 연구연수자 명단(대상자, 심의결과, 확정자, 연수기간 등)
18. 카피킬러 도입시기 및 검사결과
19. 연구원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연구 보고서
20. 최근 3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의견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자료
21. 2018년도 연구과제 활용도 조사결과
22. 인센티브 2000만원 이상자 연구실적
23. 석·박사 경력과 학위 등 학교별, 성함 순으로 제출
24. 최근 3년 위촉연구원 자료(별도 엑셀 서식)
25. 최근3년 연구자문위원회 명단 경력 전공 성별 선임기간 현황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 목록
26.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 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

□ 서울농수산물공사 : 32건

1. 휴대용 방사능검사 기기 선정 시 전문가 자문 내용
2. 센터운영위원회 21명의 위원 인적사항
3. 중도매인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4. 초과근무수당 관련, 초과근무자 성명, 직급, 시간 등(1년치)
5. 직원 채용 관련 가족 및 친인척 명단, 소속부서
6. 일본산 수산물 수입 내역(현별로 표시)

7.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수산물 현황(5년치)
8. 2013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변화된 내용
9. 도매시장 조례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른 중도매인 장려금 지급내역(3년치)
10. 도매시장 업무규정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 승인 규정 관련 서울시 조례 중 불승인된 조례 내역(5년치)
11. 자회사 직급별 임금, 초과수당 현황
12. 자회사 24시간 근무자 관리 현황
13. 노점상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경력
14. 시설현대화사업 변경내역, 설계용량 근거자료
15. 친인척 고용세습 관련 일제점검 세부자료
15.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명단, 회의날짜, 수당 등)
16. 가락·강서시장의 안전성검사 장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
17. 장비별로 입찰시기와 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
18. 가락·강서시장 장비 공동구매가 안 되는 사유
19. 가격심의위원회 선임 사유(동일인이 2년 이상 선임 사유)
20. 최근 3년간 공사 사회공헌활동 관련 비용부담 주체, 지원단체 선정방식, 직원들 직접 봉사 여부
21. 계약재배의 효과, 장·단점, 품목 선정 사유
22. 수입농산물의 품목, 수입지역, 업체 결정 시스템
23. 2017~2018년 자회사와 계약 관련 서류(교통 분야)
24. 최근 5년간 임대료 체납 현황,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내역, 사전 절차 및 관련 근거
25. 최근 4개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출하선도금 지급 내역(연도별/거래방법별 /도매시장법인별)
26. 도매시장법인 연도별 사회공헌 상세내역(3년치)
27. 111회 이사회 위탁수수료 단일화 추진 보고자료
28. 도매시장법인의 주주현황, 출자비율(10년치)
29. 채소2동 세부 건축 개요(지목, 건폐율, 용적률 등)
30. 경영진단 및 조직재설계 용역 결과
31. 용역회사의 자회사 전환 관련 용역 결과
32. 수산물 납품업체의 직접 가공 예외품목 허용 사유

□ 서울산업진흥원 : 28건

1. 최근 2년간, 공통경비지출내역
2. 최근 2년간, 업무추진비 30만원 이상 내역
3. 직급별 초과근무시간(시간외수당 지급내역)
4. 가족이나 친인척 채용현황(명단, 입사일, 근무처 등)
5. 임원 및 간부의 공무 국외출장 여비집행 내역
6. 최근 2년간, 고유 및 수탁사업 현황(수탁사업은 최초 시작연도, 신규는 신규 명기, 예산)
7.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관련 남,녀 명단
8. 하이서울브랜드 세계일류상품 보유기업 28개사 리스트
9.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추진 관련 타당성 용역보고서
10. sba-서울연구원 관련 공동연구계획서
11. 최근 3년간, 매체별 광고 홍보비용 지출 내역
12. 임대건물 내 입주기업 연체현황(소송중 6개 업체 포함)
13. 산학진흥재단 파견인력 현황 및 진흥원으로 파견 온 인력 현황
14. 대표이사 지시사항에 있는 '서울평양 교류협력' 추진내용 관련 실적
15. 조직도 현황 (팀장 이상급)
16. 관용차량 현황
17.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현황(직무, 입사일, 계약기간, 파견업체 포함)
18. 대표이사 선출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이사회, 서울시, 의회 추천명단)
19. 최근 3년간, 퇴직자 및 신규 임용자 명단
20. 뉴딜일자리 고용계약서
21. 최근 2년간, 사업별 예산현황
22. 뉴딜일자리 사업의 현황, 상세사업별 예산현황 및 계약기간
23. 근무 중인 뉴딜일자리 업무 상세내용(부서,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
24. 최근 펀드 수익률 자료
25. 다누리 시민청 매장 관련 운영업체 계약현황(사업명, 계약기간 및 방식)
26. 하이서울 쇼룸 제품 홍보 매뉴얼
27. 2017년도 외국인무역인 지원사업 지원결과 자료 (수출성과 포함)
28. 2018년도 외국인무역인종합지원센터 예산지출내역 및 해외전시참가내역 (참가기업명단 및 외국인무역인 참가자수, 결과보고서 포함)

□ 서울신용보증재단 : 41건

1. '15년~'17년 파산으로 인한 손실 현황(업체수, 금액)
2. 최근 3년간 10/8~연말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3. 통계청 5년 생존율
4. 최근 3년간 여성기업 5년 생존율
5. 여성가장 등 사회적 배려기업 5년 생존율
6.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지원 실적 감소 원인
7. 최근 2년간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일자별 집행 내역
(업무추진비 중 큰 금액 영수증 첨부)
8. '18년 임원 및 간부 해외출장 내역
9. '18년 초과근무수당 일자별, 월별, 직급별 지급내역
10. 부서별 업무일지
11. 고액대출자 상위 5% 명단
12. 직원채용관련 가족 친인척명단
13. 최근 2개년 클린신고센터 접수 내용
14. 3억원 이상 고액보증 현황
15. '16년~'18년 광고 및 홍보 내역(매체별 구분)
16. 최근 3개년 채무불이행자 명단
17. 최근 3개년 회생지원보증 취급실적
18. 채권 추심위임기관 2곳 계약서
19. 재보증기관 계약서
20. 최근 3개년 보전금 및 손해금 현황
21. 보증지원 및 대출실행 시 6개월 선이자 수취 여부
22. 창업전 컨설팅 유무에 따른 폐업률 비교·검토 자료
23. 채권매각 및 채권소각 진행 현황
24. 지점별 정책보증별 보증 및 사고발생 분석 자료
25. 거버넌스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업 내용
26. '18년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현황
27.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법 및 현황
28.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29. 조직별 인원현황(직종, 정규직/비정규직 및 성별 구분)

30. 연도별 장기미회수채권 감면 현황
31.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리스트
32. 자치구별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선정업체 현황
33. 자치구별 우리가게 전담마케터 선정업체 현황
34. 무기계약 종료 관련 윤OO관련 서류,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35.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3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및 진행 절차
37. '18년 구상채권 상각 관련 이사회 회의록
38. 자영업지원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관련 사업별 상세내용 및 예산편성
39. 2019년 자영업 지원센터 관련 예산 편성안
40. 조직현황 성별분리통계 자료 요청
41.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시 사용자 인원수 추가 요청

□ 디지털재단 : 21건

1. 강북거점 교육기관 프로그램 현황
2. 최근 3년간 자체수익사업 또는 디지털재단 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익금액 관련 자료요구
3. 공무국외 여행 결과보고서 및 세무 예산집행내역
4. 재단 홍보 및 광고 내역과 예산
5. 성과급 지급 내역 및 관련 근거
6. 재단법개년 입찰 및 계약 세부내역
7. 재단 사업을 통해 서울도시문제를 해결한 사례(연구, 교육)
8. 재단 국외출장 관련 계획서(기안문)
9. 스마트시티 사례집 관련 제작 세부사항
10. 전 직원 학력 및 경력 자료
11. 서울페이 관련 내부보고서
12. 사회적 기업 계약 실적
13.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운영 성과
14. 법인카드사용내역(2018.9.20. 롯데슈퍼 은마점)
15. 관용차 블랙박스 영상 자료(2대)
16. 개포디지털혁신파크 cctv 1년치 영상
17. 재단 인사위원회(특별승진) 개최 및 결과보고 자료

18. 고충처리운영회 개최 및 운영 관련 자료 일체
19. 보상휴가제 자료 일체
20.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 전환 관련 기초실과 논의한 이메일 수발신 자료 제출
21. 무기계약직 연봉표와 각종 수당 지급표

□ 기술교육원 : 12건

○ 공통

1. 각 기술교육원별 국기예산집행자료(2016-2018.09까지) 세입세출 세부내역
2. 각 기술교육원별 시비, 국기별 업무 분장표
3. 각 기술교육원별 인건비 규정 가이드라인
4. 각 기술교육원별 교육받기 전 기재직/미재직 나눠서 취업률 재보고 (2016년~2018.09)

○ 남부기술교육원

5. 식자재납품평가위원회 외부 위원 명부(이름, 성별, 소속 구분)
6. 외식조리학과 식자재납품업체 리스트(2014년~2018.09): 거래업체명 /대표자명/구매내역/금액/변경시 변경사유 작성
7. 외식조리학과 재료비 거래명세표 및 재료비 입금내역, 국가시험 또는 국가시험대행 포함 시험감독위원 참석 명단(2014년~2018.09)
8. 2018년 3건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심의의결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름, 성별, 소속), 징계와 관련된 2016년, 2017년 법인 감사자료 제출

○ 중부기술교육원

9. 식당위탁사업 관련 명단: 업체명, 계약기간, 대표자명, 업체주소(2015~2018.09), 변경시 변경사유 적시
10. 시비 국비 구분하여 업무추진비사용내역: 부서명, 집행일자 및 시간, 장소, 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적시(2016~2018.09)
11. 2018년 원장 급여인상 결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의사록
12. 2017년 2월 지급한 퇴직위로금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규정

□ 기후환경본부 : 12건

1. 서울시 각 자치구별 청소용역 민간위탁현황(2018년 현재)
 - 자치구명, 업체명, 용역 직원수, 주요업무·지역, 계약기간
2. '최근 2년간 수의계약 관련' 홍보물, 브로셔 및 영상물 등 샘플 제출
3. 최근 2년간 시민참여 예산(2017~2018)
 - 사업명, 개요, 예산 및 집행현황, 당초 예산안 대비 상임위(예결위) 감액사업 현황, 사업 및 용역수행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4. 서울시 차원 기후환경 국제회의 유치 검토 사례 유무 및 국제회의 개최 실적
5. 노원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시설 현황
6. 2019년 자원회수시설 정비계획(최근 5년간) 및 향후 자원회수시설 중 장기 대·보수 계획
7. 2015~2017 그린카 보급사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현황
8. 왕십리뉴타운 흥익어린이집 석면피해 조치현황
9.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유럽국가 추진 현황
10. 프랑스 자동차 등급제 추진 현황
11.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 실시일 지하철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12.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현황 중 10만원 초과 지급건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자료 및 참석 위원 명단

□ 푸른도시국 : 23건

1. 통의동 마을마당 조성사업 설계에 관한 자료
2.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국비 지원 및 국공유지 실효제외 16회 건의 공문서 및 답변서
3.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13회 건의 공문서 및 답변서
4.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 관련하여 국회 계류중인 법안 내역
5. 2017년, 2018년 문화비축기지 사업설명서, 성과계획서
6.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구성, 역할, 예산 편성 및 지출내역
7.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사유지 매입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내역

8. 2017~2018년 문화비축기지 운영예산 세부계획, 프로그램 운영예산 세부계획
9. 문화비축기지 용역별 예산집행내역, 수의계약 건수별 예산집행 내역
10. 문화비축기지 협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참석 수당, 참석 인원, 횟수 포함)
11.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26번 수의계약 현황 중, '문화비축기지 포스터 게시판 및 현수막 거치대 제작' 수의계약 상세자료(사진 포함)
12. 2017년 문화비축기지 운영예산 18억원에 대한 상세 자료(프로그램 공모사업 포함)
13.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14. 공원 내 자동제세동기 사용 현황 및 결과
15. 여의도공원 스케이팅장, 푸드트럭 승인관련 자료
16.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2002년부터 공원별 대상현황, 보상현황
17. 시설을 30% 이상 공원 관련 기 제출한 도면자료 관련, 공원별 공원조성계획 최종작성일
18. 최근 5년간 공원별 시설설치 예산집행 내역(도면자료 관련)
19. 부산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책 자료
20.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율
21.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42번 관련, 어린이대공원 보유물품 구매 견적서 (기타 항목 포함)
22. 2018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단속 건수 및 대상 현황
23.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단속결과

□ 서울대공원 : 13건

1. 아시아코끼리 폐사 및 관리 현황
2. 폐사동물현황 관련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므로 면밀히 검토 후 제출
3. 노후 동물사 리모델링에 대한 연차 계획
4. 2018년 서울대공원 내 개발제한구역 위반시설 지적사항 내역
5. 종보전연구 2018년 예산서 및 세부집행내역, 미집행분 행정감사 이후 집행되는 부분 내역 제출
6. 서울대공원 전체 시설 안전등급
 - 미리내다리 안전점검 결과 포함

7. 향후 해양관 시설 안전관리 대책
8. 최근 전시동물이 줄어든 이유(종별)
9. 동물교실 관련 입장료에 포함된 세입 자료
10. 동물 질병 예방 관련 계획서
11. 가격평가에서 동물종수, 마리수가 보유동물과 상이한 이유
12. 종보전 관련 사업의 실적 감소 이유
13. 서울대공원 비전 실행 용역 중간평가 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 23건

1. 정수센터별 입상활성탄 운영 후 흡착능 감소현황
2.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기본계획
3.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도입 관련 예산 집행 내역
4. 한강수계 입상활성탄 재생연구 결과 보고서
5. 수돗물시민평가단 명단, 활동실적, 각 단원별 홍보실적
6. 2017년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실적 현황
7. 광암정수센터의 활성탄의 재질 현황
8. 본부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 명단
9. 석면 건축물 현황 : 기후환경본부 조사 결과와 비교
10. 2008~2009년 서울시 내진보강 용역 결과
11. 사업소별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대상 가구 및 잔여 가구, 현재 교체율
12. 본부 자체 경영실적 평가서(2016~2017년)
13. 2018년 전보계획
14. 수돗물시민평가단 명단, 활동실적, 각 단원별 홍보실적
15. 시설물의 노후도 순위 및 시설용량 순위
16. 2008년 이후 신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평가 자료
17. 2008년 내진보강 평가보고서 총괄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18. 2016~2017년 월별 진동에 의한 누수현황
19. 내진 실태 전수조사 세부내역
20. 관망 이중화 계획서
21. 2008년 서울물연구원 관 세척 주기 용역 자료
22. 2018년 녹에 취약한 상수도관 정비, 노후 밸브 정비 예산편성 증액 사유
23.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자치구와 주고 받은 공문과 자치구에서 작성한 시행계획 자료.

□ 한강사업본부 : 25건

1. 수달 서식지 조성 관련 계획 자료 제출
2. 한강 생태공원화 사업 계획 및 결과 제출
3.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 현황 제출
4. 한강숲 별도 사업비 세부 내용, 사업실적
5. 신반포 나들목 등 3개소 증설 관련 사업개요 및 추진 과정 제출
6. 한강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내 육갑문 현황(위치, 관리방법 등)
7. 3년간 사용수익허가 위약 적발 현황
8. 테니스장 누락된 시설 유지보수 자료 제출
9. 육갑문 설치되지 않은 나들목 현황 자료 제출
 - 안전등급 현황 제출
10. 최근 3년간 수상안전점검 횟수 및 일지 제출
11.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제출
12. 집행률 30% 미만 사업, 사업별 지연사유
13. 국토부 하천구역 내 식재 기준 제출
14. 조정면허시험장 3개소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면허시험/면제교육 현황)
15. 조정면허시험장 시설허가기준/하천점용허가제출
16. 자전거관제센터 예산(주차장 전용)지출 내역
17. 자전거대여 월간 유형 현황 데이터수지분석 평가결과(관제센터 각 장 비명칭, 내구연한 등)
18. 스마트파킹 도입 관련, 주차장 관계자 의견 정리된 것 있으면 제출
19. 올해 예산 세부집행(계획)내역 제출
 - 올해 안에 발주 가능한 금액 제출
20. 자전거 이용객 최근 5년간 평균(1일, 연간)
21. 주차장 감면기준, 수영장과 캠핑장은 있으나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감면기준이 없는 이유
22. 서울함공원 운영된 각 프로그램별 용역 결과
 - 내년 예산 증액 사유
23. 공공예술공간 작품별 제작비 및 설치비 분리하여 제출(부가세 19억원 세부내역)
24. 인공암벽장 산악연맹 운영 자료 제출
25. 한강 홍보물(자료) 제출

□ 서울에너지공사 : 17건

1.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회의비 및 활동경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2. 최근 3년간 지역난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3. 최근 3년간 열수송관 보수현황 세부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4.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SPC 출자(안) 이사회 승인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5.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자동의안 처리 이후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6.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7. 임원추천위원회(1~3차)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8. 정관 변경 시, 서울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9. 정원 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0.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1. 직원 개별 업무분장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2.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실사 및 평가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3. 외부수열과 자체생산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4.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26명으로 운영하는 사유를 제출하기 바람.
15. 수요반응자원사업 예산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6.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관련 기후환경본부와 논의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17.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실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 대변인 : 7건

1. 해외언론관련 대행사 선정과정 평가위원 명단 및 점수자료
2. 해외순방시 민간전문가 지원을 위한 경비사용은 일체 없으며 출입기자단 취재지원 목적으로만 사용 관련
3.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신설 관련 부산시와의 차이 관련 내용 설명
4. 해외미디어 취재지원시 대행업체 의존대신 필수적인 부분 제외한 시 자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관련 설명
5. 기자설명회/프레스투어 추진 절차. 대변인실 역할, 최근 3년간 실국본부에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사례가 있다면 그 내역
6. 1백만원 이상 지출한 간담회 자료(4건) 세부내역
7. 간담회 지출내역 관련
 - 같은 간담회임에도 지출내역에 음식점명이 다르게 표기된 사유
 - '한강프레스캠핑 다과물 구매' 건 관련

□ 시민소통기획관 : 14건

1. 소통자문관 출근부, 급여내역 및 활동내역 자료 요구
2. 2018년 서울미디어메이트 원고료 지급대상 82명, 원고료 50,000원에 대한 자료
3. 서울영상창작가 심사위원 명단
4. 서울영상창작가 위촉식 참석 명단
5. 서울영상창작가 팀별 창작수가 격월 1편 제작기준에 맞지 않은 사유
6. 2016~2018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서울미디어메이트 경력, 운영비 지급내역, 활동사항 자료 요구
8. 시민청 만족도 조사 설문지
9. 2018년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내역 및 사유
10. 국제공모전 모든 공모작품과 공모작품 중 외국인 작품과 관련한 자료 요구
11. 민간포털 협력마케팅 7억 5천 6백만 원의 세부집행내용 및 서울 등 타 지자체(광역) 브랜드 검색 현황
12. 내손 안에 서울, 라이브 서울, 서울을 가지세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주요 목적 및 사이트 주소 등

13. 6개 외국어홈페이지 현황, 언어별 유지보수비용 등 예산, 도메인 각자 운용 사유
14. 소통자문관 출근부, 급여내역 및 활동내역 자료 요구

□ 문화본부 : 13건

1. 지역문화축제 서울시 자치구 선정 방법 및 2018년도 예산집행내역
2.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용역 제안서 평가 관련
 - 제안서 평가위원 풀 선정방법, 선정절차 등
3. 통합 수장고 관련 계약서 등 자료일체
4. 성락원 매입 방안
5. 최근 3년 사립박물관 지원내역, 지원대상 선정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및 셋대박물관 사업신청서와 결과보고서
6. 서울도서관 인력 현황
7. 행감 요구자료 44번(공공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46번(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사례) 보완자료 제출
8. 행감 요구자료 58번 대학협력프로젝트 착수, 중간, 정산 및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9. 행감 요구자료 59번 유지보수 관련 서울시 지원내역 : 해당없음 관련 내용 보완 제출
10. 행감 요구자료 60번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사업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추진계획, 추진현황 보완 제출
11. 행감 요구자료 4번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내역
12. 행감 요구자료 26번, 94번 민간위탁사업 관련 내용 보완 제출
13.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자세한 예산집행내역

□ 관광체육국 : 22건

1. 무장애관광지원센터에서 진행중인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개선 업소 리스트
2. 특장버스 입찰 관련 자료
3.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 보고 요청
4. 장충체육관 대관업무 과장의 특정 청소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결과물 제출
5. 2018년 기준, 해외핵심여행사 공동상품 개발 관련 관광객 유치실적

6.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세부 집행내역
7.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8.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18.7.1~7.13 공무국외여행 경비 세부 집행내역
9.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회의록(사무처장 부적절한 출장 및 근무태도 관련)
10. 자치구 장애인체육회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
11. 잠실야구장 위탁업체가 2016~2018년 용역 준 금액
12. 서울관광재단 설립 당시 주소
13. 잠실야구장 적환장 정리 후 사진
14. 2018년도 예산 및 증감을 포함함 2019년 주요사업(10억 이상) 계획
15. 시티투어버스 서비스 평가 결과
16. 무장애관광지원센터 협약서, 실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9년도 사업계획
17. 2017년 세입 미수납액(93억)에 대한 내역
18.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수리비 지출 목록에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사업이 전국체전 준비을 위한 국비매칭사업이라는데 감액 및 증액 내역
19. 월드컵경기장 잔디 개선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비용 관련 자료 제출
20. 공개간담회 논의사항(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부적절한 출장 및 불성실한 근태)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의원님께 설명·해명하거나 서면으로 해명해 주기 바람
21. 잠실야구장 현장답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2. 서울시체육회 채용 관련 수사 또는 내사 관련 자료

□ 교통방송 : 5건

1.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 PD, 작가, 기자, 아나운서 등 각 직군별로(이름은 성만 기재) 비정규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여부, 직접고용 일시,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명시해서 제출할 것
3. 유지보수 용역계약서 및 비용추가된 부분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 내역서
4. 장애인 착취 사건 관련 야구장 및 하청업체의 정보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위탁 업체 목록
5. 프리랜서 등 업무위탁 계약서 샘플

서울역사박물관 : 9건

1. 유물 수집의 기준과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
2.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관련
 - 교육대상 자치구 선정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 내역
3. 일제강점기 관련 교육운영 실적
4. 자원봉사자 전원 명단
5. 2016~2018년 사업 계약, 시설 및 장비 보수계약 집행내역 중 조달청 구매 계약 내역
6. 2016~2018년 사업계약, 시설 및 장비 보수 계약 집행내역
7. 시민 상대 직원 친절교육 관련, 최근 3년간 직원 친절교육 실시 현황
8. 2016~2018 유물평가위원회 위원 현황 및 심의·평가결과 내역
9. 구입 유물의 전시 활용 실적 및 활용률 내역

서울시립미술관 : 7건

1. 시민미술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3년간 매년 1억 7천만원으로 동일한데 정확한 집행현황
2. 북서울미술관의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으로서의 관련사업 추진내역
3. 세마병커 시설관리지침, 운영대책, 하자담보기간 현황
4. 소장작품 목록, 금액, 설치장소 현황
5. 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 절차 및 계획(결과 및 회의록)
6. 2017~2018년 소장작품 관련 회의운영(참석자, 참석수당, 회의 횟수)
7. 2017~2018년 가격평가심의위원회 소장작품 최초금액과 결과금액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2건

1. '드가 : 새로운 시각' 전시관련 소송 진행 경과 제출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p38에서 신분상 조치 중 강등, 견책과 관련한 상세 내용 제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6건

1. 주택임차 대상 외국인 단원 고용계약서 자료 요청

2. 서울시향단원이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전문예술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3. 최근 3개년 교향악단 단원에 관한 인건비, 급여자료 요청
4. 공통요구자료 중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에 제출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 및 답변 자료 제출 요청
5. 2017~2018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 실적 현황 및 사용내역 자료 요청
6. 2017~2018년도 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액 사유 자료 요청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7건

1. 연희단 2019년 사업설명서 및 소요예산, 예술청 관련 자료
2. 거버넌스25 사업 기본계획
3. 감사 결과 통보 후 직원 교육 내역
4. 예술지원사업 정산 회계검증 용역 업체 선정 및 과업 관련 내용
5. 동숭아트센터 매입 관련 여론 수렴 과정, 매입 절차 및 세부자료 일체
6.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 명단 및 이력, 입주공모 심사 개요
7. 최근 2년간 외부기관 겸직 현황(세부일자, 신고일자 추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15건

1. 2017 서울디자인위크 인지도 조사 관련 내역 일체
2. 서울디자인클라우드 명칭 변경 관련 자료 일체
3. 트레이드쇼 수주실적액 및 운영성과
4. 서울재활용플라자 셔틀버스 운영현황
5. 꿈꾸는 공장 인건비 관련 내역
6. 춘계 패션위크 결과에 따른 홍보가치의 산출 세부자료
7. 대표이사 취임 이후 채용된 비서 인적사항 일체
8.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 인적사항 일체
9.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일체(이력서 포함)
10. 대표이사 취임 이후 각각의 공모전 심사위원 인적사항 및 공모작품 접수내역 일체
11. 디자인클라우드 관련인사 항공료, 숙박비 등 제공 내역일체

12. 파올라 안토넬리 강연 참석자 및 강연사진
13. 6월 13,17일, 9월5일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4. 5월 5일 서울디자인재단 DDP경영단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5. 살림터 살림2관 크레아 정산 내역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11건

1. 용역 계약서, 결과보고 등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MICE 서울홍보관 제작
 - 지도/가이드북 제작
 - 원모어트립 운영 및 개선
2. '16년/'17년 빛초롱축제 사업결과보고서
3. 홍보TF 세부 운영경비
4. 디스커버서울패스 세부 집행내역
5. '19년 사업계획에 대한 '18년 예산
6. 요구자료 137p, 48,61,63번 출장 세부집행 내역
7. 빛초롱축제 협찬실적 (재단/조직위 구분)
8. 내국인용 디스커버서울패스 발행을 위한 연구용역 준공후 보고서 제출
9. 디스커버서울패스 자료 일체
10. 재단 수입/지출예산 상세내역
11. 사업집행내역
 -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 서울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사업

□ 재단법인 120 다산콜재단 : 5건

1. 재단 설립 후 월별 응대율 현황 제출 요청
2. 만족도 질문지 제출 요청
3. 자산 취득비 집행률 현황 및 낮은 사유
4. 연간 교육계획 및 강사 수당 등 상세 내역서 제출
5. 고소·고발 관련 현황 (재단 설립 전~현재까지)

□ **여성가족정책실 : 24건**

1.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관련 보육교사 업무 스트레스 해소 계획 상세 자료
2. 열린 어린이집 관련 사업계획서 등 세부 자료
3.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등 세부자료
4.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교부 신청 및 교부한 자료
5. 어린이집 법규 위반사항 세부내역(어린이집별로)
6. 어린이집별 클린카드 미사용 내역(구체적으로)
7. 서울 어린이집 인증 평가기준, 탈락사유 등 상세한 자료
8. 어린이집별 방문간호사 현황(자치구별 방문횟수, 어떤 케어 했는지 등)
9.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별로 평가보고서(관련 자료 일체)
10. 시간제보육제 지원관련 자치구별 운영 현황(예산 등 상세히)
11. 외국인방법 자율 활동내역, 지원내역
12. 1인가구 지원관련 자료(자치구별, 연령대별 등 상세히)
13. 박원순 시장 공약사항 시행 중인 것, 시행하려고 계획 중인 것 등 관련 자료
14. 2017년, 2018년 예산 중 전액 불용된 사항 관련 자료
15. 성인지 모니터링 70건에 대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15건’
16. 소규모 사업장, 방문사업자 등 성희롱 사각지대 방문교육 시 ‘지원 방안 설명 매뉴얼’
17. 직장맘지원센터 기능강화 계획
 - 1) 광역 센터 설치 계획
 - 2) 현재 설치된 센터 기능강화계획
18. 일반형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시범전환 추진계획
19. 우리동네키움센터 구상안(가형, 나형, 다형, 라형)
20.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연구용역 결과
21. 시정운영 4개년계획(여성·가족 분야, 성평등 분야)
22.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산술식 관련 자료(지원비 산출근거)

23.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 관련 상세 자료

- 1) 종류별 리스트
- 2) 수의계약 시행 시 관련서류(계약서, 공사 원가계획서 등)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3) 공사과정에서 착공 과정 관련 서류
- 4) 현장대리인계 및 공사 전후 비교사진

24.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평가 현황

여성가족재단 : 12건

1. 성인지 강화 방안 마스터 플랜 연구 사업 관련 자료 일체
2. 젠더책임관, 젠더담당주무관 등 역할 및 업무분장
3. 수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근무상황기록부(최근 3월)
4. 수탁사업 계약서 제출
5.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연구결과 및 서울시 일 자리사업과 연계한 정책지원 방안
6. 수의계약 현황(업체 명, 업체주소, 업체 사업자 주소 등) 재제출
7. 외부 회계감사 평가보고서 결과
8. 수의계약(2016·7년 원격보안 관제 및 취약성 점검용역, 유찰2회, 에이쓰리 업체) 세부 내역 재제출
9. 결산서 세부내역
10. 재단의 공무원(촉탁) 급여명세 요구
1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단
 - ‘지역사회 안전 돌봄 공동체 조성 지원 사업’ 구체적 내용
12. 2018.05.0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영수증

여성능력개발원 : 3건

1. ‘여성일자리거버넌스협의체’ 결과보고서
2. ‘청년여성원더플러스’ 교육내용
3. ‘청년여성원더캠프’ 교육내용

◆ 여성·아동·외국인 관련 시설

□ 서부여성발전센터 : 2건

1. 최근 3년간 재산조성비 예산액 및 세부집행내역
2. 최근 3년간('16~'18) 기능보강사업 중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 1) 현장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등)
 - 2) 해당 회사 근무사실 증빙 서류(4대 보험 납부 증빙 등)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 2건

1. '특화프로그램' 교육 내용
2. 센터 직원의 급여테이블, 유사 타 기관과 비교자료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9건

1. 내부 강사비 지급규정 및 집행 상세 내역
2. 공예혁신지원사업
 - 1) 기획서
 - 2) 목표 대비 성과
 - 3) 서울공예포럼 상세 내용
3. 행사비 세부내역 정산서
4. 사업수익금 세부내역
5. 2017,2018 입주업체별 월별 매출, 개별, 총계
6. 보조금 환수내역 : 사업비 환수 조치결과 숫자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
7.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8. 임금체불, 세금체납부분, 위탁사무 퇴직금 미지급, 협약사항 위반사안,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 처리, 위탁사무이외 시설장비 사용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
9. 서울시 지도점검, 카탈로그 지출대금, 온라인, 선지출, 카페 공간조성 계약 부적정, 부적절하게 지급한 내역 구체적 자료

□ 육아종합지원센터 : 14건

1. 2017년 세입·세출내역, 지출세부내역 정산서
2. 강사비 지급규정, 아이조아원장교육 회차별(어느구, 원장, 어린이집)
3. 어린이집지원사업 중 자치구 사업 구분, 프로그램별 총 강의시간, 강사료 총액
4. 아이조아원장 프로그램 내역
5. 장난감 대여비, 연회비, 체험비 등 수입내역, 통장사본 등 전체자료 요구
6. 조직도, 직원현황 : 학력, 경력 사항 포함 / 직원 채용공고 내역 등의 전반적인 현황
7. 이사회정관, 직원현황(직종별 고용형태 포함) 세부적으로
8. 면접심사위원 명단 등 세부사항 요청
9. 긴급대체 교사 파견시 매뉴얼
10. 자치구별 월별 실적 분석자료
11. 아동학대 예방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책자
12. 보육반장 상담 길라잡이 책자
13. 아빠교실 교육 내용
14.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현황

□ 서울상상나라 : 6건

1. 만족도 조사내역(상세히)
2. 교체비용 최초공사 업체, 계약서 등 세부내역
3. 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 계획서 등 세부내역(상세히)
4.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시행여부 및 관련 자료
5.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 1) 현장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자격증 사본 등)
 - 2) 해당 회사 근무사실 증빙 서류(4대 보험 납부 증빙 등)
6. 정원 외 안전요원, 시설관리요원 현황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2건

1. 기능보강사업 수의계약에 대한 현장대리인 관련 서류 제출
 - 1) 현장대리인 기술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 2) 해당 회사 근무사실 증빙 서류(4대 보험 납부 증빙 등)
2. 폐기물 처리 관련 처리 및 정산 현황 서류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 2건

1. 강사이력, 강의시간, 강의횟수, 강사료
2. 프로그램별 실적 (※거주외국인, 외래관광객으로 구분 작성)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5건

1.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보 매뉴얼
2.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한부모가족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충’ 간담회(1.24.) 내용
3. 한부모권익증진포럼 ‘한부모에게 워라벨은 있는가?’(10.24.) 진행 상황, 내용
4. 법인에서 후원 및 지원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사항(최근 3년), 유사한 사항이라도 제출
5.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및 연대사업 집행 관련 세부자료 일체

복지본부 : 47건

1. 서울사회서비스원 추진 계획안 최종(신)본
2. 장애인 택시 관련 위탁운영 현황, 운영 세부내역
3. 40~50대 고독사 위험군 자료
4. 쪽방촌, 노숙인 자활 업무추진 업무협약상 대표 프로필
5. 5년간 복지본부(재단)의 감사내용(일사·특별감사 등)
6. 최근 3년간 노인보호시설 무연고 현황
7. 장애인 노인학대 현황(영업정지 등)
8.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생활가정시설) 등 현황
9.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입소 노인시설 현황 및 운영, 지원현황, 수급자 비율
10.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미조사대상, 기타대상에 대한 상세자료
11.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 및 용역 결과보고서
12.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내역, 전체 시설의 전체예산 대비 보조금 예산 비율
13.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유형, 그룹홈 유형 및 서울시 지침 및 복지부 지침

14.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시간외 수당 18,19년 예산 산출내역 및 근거
1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인력 현황, 서울시 배치인력현황, 시보조로 배치인력 현황
16.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산출근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세부내역, 18,19년 예산 세부내역
17. 사회서비스원 공청회 당시 장애인분들이 주장한 내용 및 주장내용에 대한 합리적 반론 정리자료
18.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불용사유
19. 어르신복지시설 사업계획서 / 집행내역 / 추진내역
20. 사회혁신추진반 사업내용 / 일자리 내용 / 고용현황 및 고용형태 등
21. 진행 중인 재판 진행과정 및 사전 절차 등 상세 자료
22. 사회서비스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품질 제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23. 월남전 참전자회 명판교체사업 사업내용
24. 부정수급자 미환수금 환수계획 (상세히)
25.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사업계획서 및 전반적 운영 현황
26. 노인돌봄기관 수행 평가 최근 3년간, 기관명 명시해서 상세히
27. 최근 5년간 장애인 실태 조사
28. 지도점검 상세 내용 및 내외부 감사결과 / 감사 결과 총평
29. 공공요양시설 자치구별 입실, 공실 현황
30.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범사업
 - 1) 2017년, 2018년 인증 신청 취소기관의 취소사유서
31. 보건복지부 인원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 현황(장애인, 중증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등) 및 개선을 위한 2019년도 예산 편성 현황
32. '독거어르신 건강 안심 솔루션' 사업 구체적 내용
33. '50+재단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확대' 구체적 계획
34. 프로보노 모범사례 발굴 사례 정리 자료
35.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 이후
 - 1) '보육' 관련 논의 진행상황
 - 2) 수탁 만료되는 법인에 대한 운영계획
36. '장애인, 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센터' 운영계획
37. '서울형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 구체적 내용

38.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 1) 사업개요
 - 2) 2017년 시범사업 결과
 - 3) 2018년 진행 법인 명단
39. 찾동사업 중 지역공동체 조성 관련 사업(이웃살피미 사업 포함) 내용
40. 2018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41. (최근 3년간) 복지본부 사업 중 부정수급자 현황
 - 사업명, 인원, 금액
42. 석면건축물 조사 상 석면건축물 관련 상세자료
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대상자 및 환수금액 현황
44. 언론보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45. 쪽방상담소 관련 동자희망나눔센터 민간후원계약 만료에 따른 이후 추진과정 및 내년 계획
46.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 내용
47. 복지관 임원 및 종사자 결격 사유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조치사항, 최종조치결과 등 관련 자료

□ 서울시복지재단 : 27건

1. 2018.05.04. 대표이사 판공비 사용 내역 (간담회 참석자 명단, 논의 내용)
2. 인사 및 복무규정
3. 2016~2018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공고문 및 응시자격, 채용전형(절차 및 방법)
4. 2016~2018 공동연구원, 위촉연구원 별 명단, 경력, 상세 급여 지급내역
5. 조사용역비 지출업체 및 지출 상세내역
6. 2016~2018 실무회의 수당지급내역, 지급명단 및 소속, 금액
7.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운영비 세부내역
8.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실적, 집행상세내역, 심사날짜 등
9. 급여지급내역
10. 지역단위 취약계층 위기 회의 참가자 상세내역

11. 2016~2018 성과급 지급 내역
12.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경력 및 위촉일
13. 심사위원 경력, 위촉일
14. 수의계약 내용
15. 서울시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위원회 경력(상세히)
16. 기금에 있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최근 3년간)
17. 감사보고서, 감사한 사람경력
18. 기금,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관한 공인회계사 업체 경력, 결산보고서 총평자료
19. (2016년~2018년) 위촉연구원(※학위 구분), 행정보조원
 - 명단, 연구내용, 근무기간, 표준근로계약서
20.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범사업
 - 1) 인증기준
 - 2) 2017년, 2018년 인증 통과하지 못한 기관의 인증지표별 점수
 - 3) 데이케어센터 3곳 - 동작구 삼화센터, 엔젤센터, 낙수센터
 - 인증연도
 - 인증지표별 결과
 - 인증 이후 모니터링 결과
21. 희망두배 청년통장
 - <최근 2년> 청년 대상 금융·문화 교육프로그램
22. 찾동 추진지원단 활동 내용, 사업, 향후 활동계획 상세 자료
23. 최근 2년간('17~'18) 자가 건축물인 경우 위법 건축물 등재 여부(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4. 법적 규정에 의한 내진성능검사 실시 여부(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5. 기능보강사업 중 천장 공사 관련 폐기물 및 석면처리 결과서(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6.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계약관련 서류(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27. 2천만원 이상 비교견적이 있다면 타 업체의 비교 견적서류(장애인·자활 관련 시설 포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19건

1. 50플러스컨설턴트사업, 각 캠퍼스별 17,18년 컨설턴트 명단, 인건비 지급내역, 활동기간
2. 2016~2018 위탁채용 관련 급수 및 이름, 채용내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3. 캠퍼스별 프로그램 강좌명, 강의횟수, 수강인원, 강사료지급내역 2017~2018
4. 사업수익 상세내역
5. 캠퍼스별 단기 근로자 고용현황(고용 목적, 기간, 급여지급내역, 출생연도)
6. 해외통신원 모집내용 관련 선정내역, 원고료 지급내용, 활동기간, 지급금액 등
7. 단체 지원사업 및 공유사무실 관련 캠퍼스별 연도, 이름, 모임 인원수, 성격, 2016~2018, 비교가능하게 제시
8. 공유사무실
9. 홍보마케팅 용역 과업지시서
10. 50플러스 세대 실태 관련 연구용역예약서, 과업지시서
11. 50플러스 일자리 분석 및 신규 일자리 연구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12. 계약직 22명에 대한 상세 내역
13. 연구과제 목록 및 진행중 연구의 세부 연구계획 내용
14. '기관 및 기업과의 촘촘한 협력체계를 통한 50+파트너십 강화' 상세 내용
15. '50+ 정책 중장기 발전 전략' 상세 내용
16.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상세 내용
17. '50+세대 유형화 및 특성별 지원 방안' 연구 상세 내용
18. 2016년~2018년, 50플러스재단 내 전문연구인력(변화 시 퇴직, 고용 연계 등 상세 내역), 계약직 연구인력(근무기간, 연구내용, 표준근로계약서)
19. 최초 위탁계약시 법인전입금 약정 금액, 최근 5년간 집행내역(노인,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포함)

◆ 노인·장애인·자활 관련시설

각 노인종합복지관 공통 : 2건

1. 찾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
2. 50플러스센터나 50플러스캠퍼스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일자리사업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종량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복지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공통 : 1건

1. 특화사업, 후원사업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이 필요

강북노인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1건

1. 상담관련 사업 예산 집행 저조, 개선이 필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5건

1. 「똑똑 도시락 지원」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등 세부 사업 내역 / 도시락 전달 과정 등 실적관련 자료
2. '웰다잉프로그램' 상세 내용
3. '도시락치매예방지원사업' 상세 내용
4. 용역 중 조달청 수의계약 건에 대한 당시 입찰 공고문, 각 입찰업체현황, 입찰금액 등 관련 자료
5. 수의계약 업체의 계약 관련 일체 서류

성북노인종합복지관 : 1건

1. 천장보수공사 및 외부테라스 공사 관련 하자보증증권, 현장대리인계, 폐기물처리확인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2건

1. 상담 사례집
2.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역(장소, 대상, 인원)

□ 시민건강국 : 41건

1. 2014년 병원 특정감사 이후 조치결과 상세자료
2.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공문과 첨부자료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출 자료 및 보고서
4. 2014~2018 직원명단 제출
5. 2017년 3월 10일 서울시 신청사 회의 참석 심사위원 명단 제출(경력 등 인적사항 제출)
6. 고양정신병원 2014년부터 정기점검 및 특정점검 결과
7. 2017년 3월 재수탁 평가 보고서 및 심사위원이 제출했던 서류
8. 영양꾸러미사업, 업무보고 이후 조치결과
9. 서울시 금연구역 별 과태료, 건수
10.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관련 자료(은평, 강남)
11. 한의학나눔치료 16~18년 건수, 실적
12.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예산 편성안 상세내역
13.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구결과서 제출
14. 공공보건의료재단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 제출
15.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 신설 협의 요청서
16. 지역의료보건계획 7기 / 현재까지 한 중간보고서
17. 2017~2018 보건지소 관련 예산,집행 현황/완공현황
18. 야간, 휴일 진료 기관, 지정 현황, 지원액수 등 상세 자료
19.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관련 상세 자료
20. 지역건강 포괄을 위한 보건의료 강화사업 상세 자료
21. 자살 예방 관련 사업 예산
22. 마을사업 관련 예산 / 세부사항
23. 보건소 금연성공률 (자치구별)
24. 흡연실 설치 현황(자치구별)
25. 안전한 먹거리 위생점검 관련 위반사항/고발사항/행정처분사항
26. 민사소송건 1건 세부내역
27. 2018년 시범사업 내용
28. 2018년 시범사업 중 2019년 예산 편성된 사업, 편성 안 된 사업 구분 제출.

29. 시민건강국 사업 중 찾동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사업명, 내용)
30. 서울형 유급병가 최신 추진 현황
31. '건강돌봄 하나로 네트워크' 사업개요, 회의록
32.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내용
3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사업 내용
34. 아이존 자치구별 현황
35. 수유실 현황
36. '유기·유실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추진' 사업 상세 내용
37. '동물정책 청년 네트워크' 진행 경과 및 진행 계획
38.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안
39. 시립병원 추가 건립 계획(시장 방침, 내부 논의사항, 중장기 계획안 등)
40.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상황 및 계획서
41. 서울시 각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 처우 관련 자료
 - 직급, 처우, 최근 3년간 이직현황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전체 병원 공통 : 14건

1. 주52시간 임산 각분야별(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직원배치 현황(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인원충원, 인건비상승, 인건비 충당 개략적으로
2. 직종별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 생활임금 지급여부, 정규직 전환 계획
3. 임상연구비 관련 연구윤리 위반 지적받은 사항 현황 / 윤리위반 지적사항 내용 / 연구자명
4. 각 병원 자체 또는 노조 관련 진행중인 소송 현황 및 주요내용
5. 강의로 인한 외부 출장 현황
6. 임상연구비 정산내역(16~18)
7. 임상연구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자, 예산액, 지출액, 잔액, 학술지 게재여부
8.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선정평가기준서, 채점표 등
9.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평가 기준, 채점표, 결과 등
10. 계약직, 외부용역 통해 고용된 직원 현황 및 직종
11. 정규직 전환 현황 및 향후 전환 계획

- 12.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중 사용연한 3년 이상, 1천만원 이상 기기 목록
- 13. (2015년~2018년) 성범죄 관련 사건 발생 개요, 처리내용, 방지 매뉴얼
- 14. 최근 2년간('17~'18) 기능보강사업 계약 및 준공관련 서류 일체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공통 : 1건

- 1. 고객만족도조사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공통 : 6건

- 1. 최근3년간 결손처분내역(2015~2017)
- 2. 최근3년간 진료비 감면현황(진료환자수, 감면금액, 취약계층 등)
- 3. 연도별 임상연구비 내역(연구자, 지출잔액, 학술지 게재 연부, 학술지명 등)
- 4. 연도별 연구과제 응모내역 및 심사내역(17,18)
- 5.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위원명단, 기준, 채점표, 심의회의록 사본제출(17,18)
- 6. 연구과제 평가심의위원회 심사위원명단, 기준, 채점표, 심의회의록 사본제출(17,18)

서울의료원 : 12건

- 1.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회의록, 연구계획 제출 목록
- 2. 요양 급여, 최근 3년간 진료비 0심사청구 삭감현황
- 3. 민원 심평원 통보 급여대상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건
- 4. 심평원기준 진료비 삭감현황
- 5. 병원에서 비급여 수가 심의 없이 진행한 건(최근 3년간)
- 6. 시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등
- 7. 결손처분, 미수금 채권 소멸시효 현황
- 8. 수가규정, 진료비 감면 내규
- 9. 서울의료원 총진료대비 감면, 감면대상자중 감면률 등 기재
- 10. 의료비 체납 현황 중 체납사유 / 조치사항
- 11. 보조금 횡령사건 관련 세부 사항
- 12. 소속직원 장례식장 이용 시 혜택(본원, 강남분원)

어린이병원 : 7건

1. 발달센터 사업 추진 경과
2. 발달센터 관련 환자 민원 접수 현황
3. 365일 교육프로그램 내용 일체
4. 발달센터 사업내용, 연령별, 치료프로그램, 내용
5. 2018년 5월 정신병동 폐쇄 절차, 결정 방침서
6. 2016~2018 의약품 구입관련 예산 및 지출 내역, 전용관련 상세내용, 추정내용
7. 기능보강사업의 안전평가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은평병원 : 1건

1. '17년 기능보강사업 중 석면해체 공사 관련 자료

서북병원 : 2건

1. 교통편 불편, 결핵전문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률 낮음. 개선 방안 마련 바람.
2. '17년 본관2층 구축 및 재배치 기능보강사업의 시공사 결정 이후 계약·착공·공사·준공 관련 서류

보라매병원 : 3건

1. 2018년 정규직 전환 심사 자료 일체(면접관 평가표 포함)
2. 소속직원 직계·비존속 가족에 대한 의료혜택 자료
3. 소속직원 장례식장 이용 시 혜택

동부병원 : 1건

1. 소속직원 장례식장 이용 시 혜택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장비구입,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
2. 자원순환센터 악취검사 내용 및 결과

공공의료보건재단 : 6건

1. 국외출장 관련 규정 / 최근 2년간 출장 관련 출장자, 출장목적, 예산소요현황, 출장보고서
2. 조직별 정원, 현원
3.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 모델 구축'중간보고서
4.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서북권) 연구 내용
5. '서울형 건강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형성 연구' 중간보고서
6. 동향 리포트

정신건강복지센터 : 4건

1. '정신장애인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사업 상세내역
2.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사업 상세 내역
3.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매뉴얼
4. 정신건강예방컨텐츠 마음 봄(우울), 정신건강예방컨텐츠 마음 봄(불안) 소책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3건

1. '자살의시도자 위기관리 사업' 상세 내역
2. '자살유족 종합서 비스 사업' 상세 내역
3. 「흔들리며 피는꽃」 리플릿

□ 안전총괄본부 · 도로사업소 : 13건

1. 도로사업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17.12.)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의견 정리하여 제출할 것.
2.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기관 목록을 제출할 것.
3. 맨홀 상태등급과 시설물 상태등급 단일화 방안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
4. 도로사업소 재포장 공용기간 상 편차가 큰 것과 관련하여 해당 도로사업소 공사의 감리 및 시공업체 자료 제출할 것.
5. PSC 교량 긴장재 보강공사 가능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
6. 광축매 도로포장 신기술 관련 성능검증결과를 제출할 것.
7. 광축매 도로포장 신기술 관련해 (주)비앤디네트웍스의 제품 설명자료 제출할 것.
8. 하저터널 관련해 재난 종류별 상황대처 매뉴얼을 제출할 것.
9.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 관련하여 행정처분 검토내용 자료 제출할 것.
10. 최근 3년간 건설업체 영업정지 관련 자료 제출할 것.
11. 동부도로사업소 발주공사가 다른 도로사업소와 비교해 설계변경을 통한 금액 증가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동부도로사업소가 다른 도로사업소와 발주과정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 자료 제출할 것.
12. 공동탐사용역 업체 현황을 제출할 것.
13. 공동탐사 기술향상 및 개선 현황을 제출할 것.

□ 소방재난본부 : 9건

1. 건축허가 동의 관련한 건축허가 동의 절차, 최근 2년간 건축허가 동의 현황(건수), 2018년도 건축허가 동의 과정 시 지적사항 보완요청 현황 및 내용 제출
2. 최근 3년간('16~'18.9월 말) 공직기강확립 교육 내역 제출
3. 시민안전파수꾼 관련 시민안전파수꾼협회 인원 및 명부, 사업내역, 시민안전파수꾼협회 법인등기, 설립현황, 임원현황 제출
4. 교통사고 과실 정도에 따른 세부 기준 제출
5. 최근 3년간('16~'18. 9월 말) 소방시설, 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사유 및 해당 소방서 명시) 제출

6. 최근 3년간('16~'18. 9월말) 암행 대상, 사유, 방법, 조치사항 제출
7.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등 후속 조치 제출
8. 소방시설 관련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처분 내역,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 제출
9. 금천소방서 추진 관련 자료 제출

□ 물순환안전국 : 19건

1. 신곡수중보 가동 관련 용역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본.
2. 물재생센터 부지제공 유상의 경우 선정방법, 월임대료, 무상의 경우 무상제공사유 관련 자료.
3. 하수도 사용료 연도별 결손 및 체납건수, 별도 체납자 및 결손자, 1천만원 이상 28명 각 체납금액 자료.
4. 최근 5년간 재생센터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체결현황 자료(기간, 예가, 낙찰자, 낙찰가, 낙찰방법, 수의계약일 경우 1인 2인 전적 명시).
5. 서남물센터 개방 체육시설 이용 1위 서남클럽, 탄천: 탄천축구회, 일원동 주민회 조직 현황 자료.
6. 사유지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용역 결과 사본.
7. 난지센터 악취방지 덩개 선정관련 자문회의 개최 차수별 개최일시, 장소, 자문위원 참여소속, 성명, 전·현근무처, 직위, 경력사항, 이력서 일체, 자문회의별 회의록 일체(원본대조필).
8.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덩개 재질 선정 시 계획, 검토, 결정관련 수발신 공문일체(공문서 형식은 불문, 관련된 모든 업체 포함).
9. 우수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 3곳 관련 현황자료.
10. 빗물펌프장 점검날짜, 배전반 교체 및 수리실적, 자치구 수리 요청내역.
11. 수질보전 관련 지원 단체에서 제출했던 사업실적, 평가위원들이 평가했던 최근 3년간 자료.
12. 물재생센터 편의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클럽의 사무실 위치, 센터 주민 협의회 위원 중 관련 클럽 위원이 있는지 등 상세내용 파악된 명단 자료.
13. 노후주유소 시정조치 관련 '16~17년 이행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 재조사 결과자료.
14. 불법 가정용 오물분쇄기 현황 자료.
15.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지하침수 방재시설 효과 재검토 자료.

16. 원심탈수기 이용 시 슬러지 처리 단가, 원심탈수기 신규 구매절차 관련 자료.
17.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본 조례 개정사항 관련 자료.
18. 2018년도 침수피해 가구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 관련 자료.
19. 서울시 저영향개발과 관련된 자료 일체(방침서, 운영매뉴얼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10건

1.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현황 자료.
2. 남산예정자락 재생공사 관련 도시재생위원회 별점부과위원회 명단, 부과점수표 등 관련 자료.
3.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공사현장 안전사고 현황(안전사고 발생사유, 예방대책, 예방대책 운영실적) 관련 자료.
4. 안전품질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 자료.
5. 안전품질점검 미이행 시 제재 현황 자료(행정처분 등 포함).
6. 서릿풀 터널 관련 꽃마을 병달로 도로확장 사업(29억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적절성 검토 자료.
7. 서릿풀 터널 관통식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자료.
8. 월드컵대교 설계오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추진현황(2019년 1월말 이후 제출 바람).
9.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공사와 관련하여 모범운전자 일당을 지급한 자료 일체(최초 지급한 경우부터 현재까지 모두 포함).
10. 월드컵대교 설계 오류 업체(유신, 삼보)에 대한 패널티 및 벌점내역.

기술심사담당관 : 3건

1. 2018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별 위원장 현황 및 위원별 회의 참석현황 제출
2. 신기술 활용실적 저조에 따라 워크숍, 소개의 장, 직원교육, 포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참여인원 현황 자료 제출
3. 2017년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활동결과 적출 및 시정조치완료내용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 도시재생본부 : 19건

1.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 공공개발센터를 행정2부시장 직속 공공개발 기획단으로의 확대 개편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2. 도시재생엑스포 대행용역 선정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공개 필요
3. 한강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지역의견도 과도한 시설로 보고 있으므로 자연성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일부 또는 전체) 재추진 여부 결정시 보고 요망
4.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 바람
5. 빈집 매입 시 매입 대상으로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나오면 보고 바람
6.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부의 용역계약을 전수 조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종합감사 시 보고하여 주기 바람.
7. 실국본부에서 진행중인 활성화사업 관련, 소관 실국을 구분하여 사업이 수행되면 도시재생의 정책적 목표 아래 통합적인 점검, 성과 관리가 될지 우려가 되는데, 통합적인 관리운영과 성과를 내기 위한 점검, 개선방안에 대하여 준비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8. 해방촌 신흥시장 공사 지연에 대해 추후 설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9. 앵커 시설 매입시,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
10.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시유지 현황
11. '16년 ~ '18년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생 및 재생사업 참여현황 자료 제출
12. 2018년도 체비지 실태조사 결과 제출
13.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공급 현황(비교해서)
14. 본부 소관 위원회 위원의 연임여부, 중복위촉 및 용역참여 현황 자료 제출
15. 석관1구역 단독주택재건축지역 직권해제 관련 주민 피해 보상 및 실질적인 구제 방안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16. 광화문 기술검토 실시결과와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 및 회의별 회의록 제출
17. 광화문광장 조성관련 지역주민 반대 민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18.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일자리 창출 현황 및 도시재생사업별 평가한 자료 제출
19. '16년 ~ '18년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수료생 현황 및 재생사업 참여현황 자료 제출

□ 도시계획국 : 21건

1.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의 미시행률은 외곽(강북 4구)쪽으로 갈수록 높음. 별도 보고 바람
2. 그 동안 경관협정사업이 5건 밖에 없는데 향후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 바람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기 전 사전 보고 바람
4. 자연경관지구 조정 검토 대상지로 수유, 화곡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바람
5.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해주고, 조속한 처리 요망
6.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의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등 산복도로 상단부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도움을 줄 것
7. 도시기본계획처럼 상위의 선언적 도시계획에서는 주민참여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주민과 밀접한 하위계획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노력이 부족해보임. 도시계획 시민참여 확대 방안 고민하고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 바람
8.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 결과 공개, 용역 관리 일원화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정리 후 보고 바람
9. 용역비에서 MP에게 자문비를 주고 있는데 용역비 안에 MP비용이 들어간다면 편법으로 이용된 것임. 유권해석 받아보기 바람
10.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실행계획에 반영된 성과지표 자료 제출
11.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경위, 활동내용, 운영비용과 포커스그룹 활동내역 상세 자료 제출
12. LUCI 2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 자료 제출
13.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개선,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 설명 자료와 지구단위계획 심포지엄 관련 자료 및 도시계획 시민참여 관련 자료 제출
14. 최근 5년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서울시 안전 상정 및 처리·지연 현황 자료 제출
15.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향 조정으로 인한 추가 주택공급량, 임대주택 공급량, 물량 산정방법 등 자료 제출
16. 도시계획국 소관 7개 위원회의 10년간 심의위원 용역 참여현황 자료 제출

17. 수의계약 건수 기준 최다업체 10개 및 10개 업체가 수행한 용역현황과 최근 3년 총계로 계산하여 용역비 최대금액 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18. 도시계획국 5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대학, 지도교수 등 김인제 위원장이 기 요구한 자료(7번) 제출
19. 용역 보고서 공개 관련 자료(어디에,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제출
20.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지표 개발 용역 결과자료 제출
21. SETEC 용역보고서 (요약본) 제출

□ 주택건축국 : 11건

1.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산자부의 기준과 다르게 서울시가 설계기준을 변경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세대 수별로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보고해 주기 바람
2.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하여 추진지구 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 변경은 민특법 제23조에 위반되었으므로 검토 후 보고 바람.
3. 2018년 신규 등록 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별 현황자료(4년 단기, 8년 단기 구분, 연도별 월별, 지역별, 임대사업자수, 임대사업자 연령, 임대사업자 1인 임대 호수, 임대 전체 호수) 제출
4.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자료 제출
5. 2019년, 2020년 각각 행복주택 준공예정물량 내역(건설형) 제출
6.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직원 경력인정 서류 제출
7. 한국사회투자 적격심사의 객관적 평가를 했다는 증거자료 제출
8. 청년임차보증금 2달간 집행율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니터링 결과 제출
9.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18~'22까지) 재정투입계획을 시비, 국비, SH 구분하여 소요예산 병기하여 제출
10. 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 , 아파트 준공 후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 상세현황(자치구/단지명/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미해산사유/잔여 조합 자금/조합 인력/비고)
11.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관련 자치구별 건축사고 발생현황

□ 지역발전본부 : 12건

1.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 추진시 바닥면 매연 흡입시스템 및 비상차량통제장치 등 최신 기술 도입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상임위와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하기 바람

2.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지역발전본부의 역할을 고민해 주기 바람
3. 현대차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관련 자료 제출
4. 지역거점발전전략 수립 관련 용역 중간보고 내용제출
5.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등과 충돌되지 않도록 연계하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시의원 등과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이러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6. 현대차GBC 사전협상과정에 대한 협상조정위원회 회의록 포함, 사전 협상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 제출
7. 공공기여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8. 전략용도 설정기준과 그 결정과정에 대한 자료
9. 현대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GBC 사업이 취소될 경우 등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 계획 제출
10. 현대차 GBC 사전협상 감사원 감사 관련 협의 진행사항 자료 제출
11. 마곡 마이스산업 관련, '18년 8월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시 나왔던 주요 내용 자료 제출
12. 마곡 마이스 산업 관련 '16년, '17년 용역을 두 번 추진한 사유와 관련한 용역보고서 제출

□ 도시공간개선단 : 9건

1. 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 설립 일정 지연과 관련 운영위원인 2명의 상임 위원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음. 재단 설립 일정 및 제2회 비엔날레 운영인력 규모 등 진행사항을 별도 보고 바람
2.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기관소개서, 3년간 결산서, 정관 제출바람
3. 2017 비엔날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용역보고서, 용역 참여 연구진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4. 2017 비엔날레 출연금 집행내역 중 총감독 운영 상의 보수 및 자료료 세부내역 제출
5. 최근 4년간 공공건축가 활용현황과 최근 4년간 공공건축가 활동제한 유형별 현황 중 상세 제한 내용 및 이유에 대한 자료 제출
6. 최근 3년간 도시공간개선단 발주 용역 수행 현황 자료 제출
7. 서울건축포럼의 기관소개서, 3년간 결산서 및 정관 제출
8. 건축정책위원 중 도시공간개선단 용역 수행 현황 제출
9. '설계공모 표준 업무지침 개발 및 보완을 위한 조사·분석 용역'의 결과 보고서 제출

□ 서울주택도시공사 : 37건

1.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복지 개선 계획 마련 후 보고 바람
2. 자산매각절차 관련자료 제출
3. 위원회별 위원 위촉 근거자료 제출
4. 서울투자운용 관련 기제출 자료 제출
5. 도시공간디자인 추진실적(현황) 제출
6. 16~18 전직원 교육활동 실적, 교육참가자 피드백 내용 제출
7. 교육프로그램 강좌별 실제 진행된 교육내용 제출
8. 학습동아리,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의 개설된 강좌수와 실제 진행된 내용 제출
9. 근속년수별 남녀 직원수 현황 제출 [인재개발처]
10. 조직진단 용역결과보고서(17년) 제출 [기획조정실]
11. 미션·비전용역 초안 및 변동 내역 제출 [미래전략실]
12. 개방형 간부(부장이상) 임용현황(성명/부서/직위/계약기간/주요경력) 제출.
13. 최근 3년간 연간 10억 이상 예산투입된 단지 및 2019년 10억이상 예산투입예정 단지의 임대관리 시설 유지보수 현황 제출
14. 임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퇴직예정임직원이 신고한 퇴직심사 신고서 서식에 규정된 항목을 나열하여 정리제출(최근5년간)(실명은 일부 블라인드처리)
15. 마곡도시개발사업 토지보상내역(위치, 면적, 보상대상자(성명) 보상가격 포함) 제출
16. 마곡도시개발사업 산업시설 용지 분양내역 제출
 - 구역번호, 위치, 면적, 분양가격, 매입업체명 및 대표자명(킨소사업인 경우 별도로 표기)
 - 대금납부방법 및 분할납부인 경우 총 회차, 최종대금(잔금납부일), 소유권이전일, 현재집행단계 등 포함
 - 공사 주택관리업체 선정관련(요구자료)(주거복지사업처)
 - 위탁관리업체 입찰현황 (최근3년간, 업체명, 계약금액, 최종선정 등 포함)
 - 위탁업체 및 수의계약 현황 (최근3년간)
17. 분양가심사위원회, 설계관련 위원회 위촉현황 제출
 - 성명, 위촉년도, 참여현황(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

18. 가든파이버사업단의 현대백화점과의 계약서 제출
19. 매입임대주택의 주택하자보수 관련 통계 제출
20. 임대주택 퇴거 요구 관련 명도소송 승소건수, 패소건수 제출
21. 임대주택관리업체 대표자 및 업체명 보완 제출
22. m^2 당 관리비 단가 책정기준 제출
 - 관리비단가 상위5곳에 대한 세부책정내용
23. 공사출신 퇴직자가 운영또는 재직하는 업체현황표에 추가하여 업체별 총 계약금액 제출
24. 세곡2지구 율곡탕 부지건 민원발생 요지 및 경위 제출
25. 매입형 임대주택 잔손보기 통계현황 제출
26. 관리비 세부항목 제출
27. 임대주택 무자격 입주자 관련 유형별 현황 중 유형별 사례 3가지씩 샘플링 추출해서 상세내용 자료제출 제출
28. 입주 시에 자격 있었는데 거주하면서 무자격자 된 자 현황 제출
29. 유지보수공사 제한경쟁입찰사의 신청서류, 입찰평가서(정량,정성) 평가항목, 내용, 평가위원의 구성현황, 경력사항 제출
30. 유지보수공사 하도급업체의 직원 현황 제출
31. 퇴직자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운영현황(17개 업체) 제출
32.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제반 규정 제출
33. 돈의문박물관 현물출자관련 법률자문 경위 및 자문내용 및 자문결과 제출
34. 임대주택관리현황 재제출(기존자료에 정오포로 재제출) 제출.
35. 임대주택관리업체 신정학마을, 신정푸른마을 입찰시 제외된 업체가 선정된 이유 제출
36. 위탁관리업체의 부당행위관련 감사한 내용 제출
37. 최근 3년간 위탁관리업체가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유의 상세현황 보고(엠컨트롤시스템, km, 준일개발은 상세히 작성)

□ 도시교통본부 : 27건

1. 택시승차대 2016년 재계약 서류
2. CNG 공급 계약현황
3. 시내버스 재정지원관련 인건비, 연료비 제외 내역
4. 무장애 정류소 설치업체 용역내역, 견적서 등 내역,
5. KT 설치(BIT 2,026대) 지원금, 인수 후 관리방안
6. 버스 행선지 표지 관련 회의, 예산 등
7. 버스종류별(시내·마을·공항) 민원, 사고건수 등
8. 법인택시, 개인택시 민원, 사고건수
9. 버스, 택시 대표 민형사 사건 현황
10. 서울교통공사 “메피아 복직 승소소송” 판결문, 대책, 손실예상액, 교통공사 정원에 미치는 영향
11. 안국역 테마역사 협조공문, 테마역사 선정결과 및 예산내역
12. 지하철 안전발판 추진현황
13. 도급택시 단속실적
14. 교통공사 정관 서울시 직원 파견관련 회의결과
15. 스마트카드 관련 법인별 지출 통장내역(영업비밀일 경우 정식공문)
16. 교통공사 정규직화 소송 관련 공사 경영자료(원가항목, 인건비 비중, 적자규모 등)
17. 김포공항 PSD 설치 불법 하도급 관련 정확한 자료
18. 정규직 전환자 관련 자격증 유무 현황
19. 스마트카드 버스업체별 월별 입금액과 실제금액의 차이, 사유 등
20. 2015~2017 교통안전시설 심의일, 그에 따른 설치결과
21. 우이신설선 초기 수요 및 요금 예측결과
22. 9호선 1단계가, 2·3단계보다 열차 편성이 많은 이유
23. 버스노동조합 지원 관련 감사원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답변한 자료
24. '18년 스마트모빌리티 관련해서 예산 사업내역, 결과, 전동킥보드 사고내역, 민원접수 현황

- 25. 버스재정지원 관련 운수회사별 대표자 외 가족 등 사무직 등재현황
- 26. 콜 접수 후 승차거부 신고건수, 사후조치
- 27. 2년간 시내버스 교통사고 현황 요청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 9건

- 1. 자료 180번(최근 3년 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 및 작업지연 내역관련 답변자료가 성의가 없음. 내용 확인하여 담당자 별도 보고 요망.
- 2. 최근3년간 안전사고 위로금 및 합의금 지급내역과 건물보상금액 및 향후 대책
- 3. 9호선 3단계 8개 작품 선정방식 및 현황
- 4. 9호선 등 미술작품 현황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명확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 5. 9호선 3단계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된 게 50%가 안 됨. 캐노피 설치기준이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6. 9호선 3단계 준공 관련 시운전계획
- 7. 영동대로 현대자동차 GBC 관련 교통영향평가 자료와 영동대로 관련 자문단 선정 위원, 선정방법 및 현황자료
- 8. 신림선 110정거장 명도소송 관련 조치자료
- 9. 신림선 역사 신설 관련 공사기간이 48개월이나 소요되는지 정확히 계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서울교통공사 : 37건

- 1. 4호선 이촌역 열차 운행 차질 관련 공사 적치물로 인한 것인지 사실 확인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서울교통공사 1종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집행현황
 - 최근 5년간 이 법에 의해 집행한 정밀안전진단 현황 자료
 -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비, 계약업체, 기타
- 3. 국내 도시철도 유사기관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입찰(PQ) 항목별 평가 기준 비교표(차이점)
- 4. 서울교통공사 퇴직 직원들이 정밀안전진단 업체 재취업 현황, 업체명, 현 직책, 취업년도, 교통공사 재직시 최종직책

5.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현황(2017~2018), 이사회 및 사장, 감사 지시사항 및 처리현황, 직무 감찰에 대한 현황(2017~2018)
6. 업무와 회계 감사 자료
7. 5호선 전체 신기술 적용 신조전동차 도입 시 30년간 운영에 따른 소비 전력량 및 예산 절감금액은?
8. 5호선 하남선 연장관련 전동차 ATO장치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만 개량한 이유는?
9.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점검 용역 결과보고서(2018.4월, 한국장애인협회 공동)
10. 지하철 역사 미술품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제출
11. 냉매 관련
 - 호선별 냉동기 개수, 냉매종류, 용량(합산기준 적용)
 - 냉동기 냉매 재주입 횟수 및 냉매 재주입량(호선별 평균)
 - 냉매회수 전문기기 보유현황(도시철도 ENG포함)
 - 냉동기 유지보수시 냉매 회수 방법은
 - 냉매 재주입을 하는 업체의 형태는
 -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5년간 연도별 구입한 냉매의 종류, 구입량?
 -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5년간 연도별 냉매별 사용량과 보관량은?
 - 도시철도ENG가 최근 5년간 연도별 구입한 냉매의 종류, 구입량, 사용량, 보관량은?
 - 8개 역사 냉동기 14대를 신규 교체하였는데 당시 발생한 폐냉매 총진량은?
 - 폐냉매 회수한 업체명 및 회수기기 종류
 - 폐냉매를 서울교통공사 또는 도시철도ENG 혹은 냉동기 설치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총량은?
 - 폐냉매를 재사용하여 타 냉동기에 보충한 적이 있는지? 그 총량은?
 - 폐냉매를 처리하고 정부시스템에 보고여부 및 그 사본
12. 몰래카메라 탐지기 현황
13. 일반정규직 전환자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현황, 정규직 전환자 전환 전후 임금차액
14. 전 역사에 대한 몰래카메라 탐지를 위해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몰카 관리대장

15. 도시철도공사에서 안전관련 임모 강사님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지 여부
16. 2013년부터 지금까지 5회이상 해외출장 다녀온 임직원 명단(사장 제외) 어디로 갔는지? 공사비용인지? 본인비용인지?
17. PSD 제작·설치를 위한 자회사 출자(증자) 관련 자료
18.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절부터부터 서울교통공사까지 김태호 사장 보다 오래 재직한 비상임이사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유지한 것인지?
19. 2018년도 공사와 자회사 전부 임직원 징계 현황
20. 2018년도 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 금품수수 및 성희롱 관련 징계 현황
21. 신조 전동차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납품 관련 양사 주요 부품 공급처 현황 및 부품 계약서, 양사 중국 제품 현황
22. 서울교통공사 노조인원, 노동조합 간부명단 및 직책, 근무처
23.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날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생명단, 교육회사명, 강사명, 교육비 입금내역, 자료사진
24. 노동조합비 공제 직원 전체 명단, 소속, 이름, 직책
25. 자회사 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명, 내용, 날짜,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생명단, 교육회사명, 강사명, 교육비 입금내역, 자료사진
26. 태성엘리베이터에 근무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출신 직원 현황
27. 이동편의시설 노후도 평가 기준
28. 실내용 및 실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 현황
29. 태성에스컬레이터 재직중인 현황, 공사와 용역계약 체결된 업체에 재직중인 현황, 용역계약 체결된 업체를 포함하여 승강기 유관업체에 재직중인 현황
30. 특정 금전 신탁이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31. 1억 1동선 확보 자료에서 27개역 불가능한 사유 및 향후 계획
32. 연도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연료전지 등) 설치 현황
 - 종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설치 방법(자체, 민간투자인지), 계약 조건(부지 임대료, 공사에 기여하는 부분, 시설투자 등)
33. 2017년도 8월1일자 인터넷 뉴스에 서울교통공사 민간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공동개발 MOU 업무협약서 사본과 그 이후 추진사항
34. 다국어 표기 정비 현황과 계획
35. 최근 3개년 간 유실물(휴대폰) 발생건수

36. 1,919명 명단 중복자 체크해서 제출, 안전업무직 신규채용 620명 중 친인척 관계가 있는 43명에 대한 자격여부 및 이력사항
37. 2019년 교통약자 승강편의시설 보충 관련 예산 확보내역

□ 서울시설공단 : 17건

1. 국민청원(장충체육관 K과장) 관련 최근5년 인사발령 내역, 청소용역 업체현황(10년), 이와 관련 감사조사결과
2. 최근 3년간 대행사무로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
 - 시설공단 내부 예산서, 정산서('18년 제외)
3. 2018년 예산 중 위탁받은 예산 사용내역
 - 경상적 위탁사업비 세부 사용내역(용역발주 견적서, 행사진행 세부 결산서, 정산내역)
 - 어린이대공원 동화축제 2억원, 시민참여 페스티벌(민간행사비) 1억5천만원
 - 자본적 위탁사업 세부 사용내역(15억 2천만원 중) (용역발주 견적서, 행사진행 세부 결산서, 정산내역)
 - 노후 시설물 보수 6억 6천만원, 동물원 노후시설 개선 3억 6천만원
4. 최근 3년 자산(물품, 동물, 건물) 자산조사결과 최근 3년 변동사유 제출, 서울시 자산과 공단 자산의 구분 및 관리현황
5. 법률 고문 자문내역(입찰 관련 자문 포함), 비용 등 현황(최근 5년간)
6. 어린이대공원 사자 사고 감사결과
7. 체련행사 지침, 공사감독처 1박2일 시행사유
8.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대관료 수입내역 및 증빙자료(통장)
9. 골목의 행복 따릉이, 혁신과제 시행계획 추후 보고 요청
10. 공무원(공공자전거) 임금항목, 레벨별 수당, 임금테이블(최저임금 저촉여부)
11. 공단 부서별 정·현원 자료
12. 공단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방법, 톤당 단가, 계약금액, 계약방법 등 자료 일체
13. 포유류 등 동물 탈출 등 위기사, 대응 매뉴얼
14. 최저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자료 제출 및 추후 보고 요청
15. 월드컵경기장 태양광 설치 사업 재개 시, 추후 보고 바람
16. 소방 점검 전문 용역업체 지급 비용, 업체선정방법, 입찰 관련 서류
17. 법정 선임관리자 근무처 현황 및 운영개선

□ 서울특별시 교육청 : 297건

1. 조례에 따른 교육청 업무추진비 공개 준수 현황을 제출할 것
2. 교육청 특별장학 대상학교 선정 지침을 제출할 것
3. 내년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내역 및 계획서를 제출할 것
4. 명퇴자 기간제교원 재취업현황 관련 사유를 제출할 것(취경공고 사례 포함)
5. 사립학교 시설개방과 관련한 이용규칙 혹은 절차, 규칙이나 절차가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것
6. 연희미용고 인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7. 급식납품비리(작년 영양사사건) 관련 사후조치 및 구체적 대책 자료를 제출할 것
8. 학부모, 자녀 동일학교 등·하원 학교 대상 감사계획을 제출할 것
9. 서울시교육청 인력풀 소속 청렴강사명단 및 이력서, 범죄이력서를 제출할 것
10. 청렴도평가 관련 방문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11. 최근 3년간 동일학교 내 교사 및 자녀 등원현황을 제출할 것
12. 교육청 교육정책 홍보 관련 효과분석, 평가항목, 의뢰기관 현황을 제출할 것
13. 클라우드 관련 답변을 구체적으로 기재출한 자료 외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PC기반 대비 클라우드 기반이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한지 등)
14. 클라우드 업체선정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내용, 평가 결과, 구축내용 등의 견적서를 제출할 것
15. 숙명여고 이외에도 서울시내 고등학교 중 교직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년 수업을 담당했을 때 갑자기 성적이 변한다든지 하는 사례분석(성적관리실태)과 관련한 전수조사 자료를 제출할 것
16. 5년간 직업학교 지원율, 취업률 자료를 제출할 것
17. 학교폭력 재심청구 통계 자료를 제출할 것
18. 5, 6년 전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증감 통계현황을 제출할 것
19. 특성화고 학생현장실습 매뉴얼을 제출할 것
20. NCS과목과 운영 진행상황(특성화고 운영 전략 및 대책 등)을 제출할 것

21.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공사 관련 조달청 입찰로 진행된 시설공사 현황을 제출할 것(입찰했던 기관, 선정된 공사업체, 감리업체, 하자보수 업체 내용 포함. 학교당 시설공사로 기재)
22. 하자보수개선충당 데이터를 제출할 것
23. 최근 3년 장학관, 과장 이상 징계 현황(사유 포함)을 제출할 것
24. 최근 3년 본청 이외 장학관(전문직) 및 과장급(일반직) 이상 징계 현황을 제출할 것(지역 및 산하기관 포함)
25. 동일학교 자녀 성적 자료 현황을 제출할 것
26. 송파구 관내 공·사립 한건물, 한부지에 초·중·고가 같이 있는 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27. 통합운영학교 현황을 제출할 것
28. 8월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에서 온 공문을 제출할 것
29. 사회적기업, 학교협동조합 구성원 구성현황, 예산지원현황 및 결산자료를 제출할 것
30.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제출할 것
31. 4년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관련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을 학교별로 제출할 것
32. 2017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것
33. 2013~2018년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
34. 2014-2018년 공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를 제출할 것(점검자 명단 등 상세하게 제출)
35.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범규위반 및 적발사례 자료로 제출할 것
36. 4개원 공영형 유치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할 것(개방형 이사 명단도 함께 제출)
37. 4개원 공영형 유치원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
38. 공영형 유치원별 법인이사 현황을 제출할 것
39. 학교급식시설 향상 및 컨설팅 전문기관과 MOU 체결한 자료를 제출할 것
40. 대관 사용료 징수 기준 및 버스 임차 기준을 제출할 것
41. 본청, 지원청 근무 변호사 채용 전 경력 및 타 기관 소속여부를 제출할 것
42. 공영형 유치원별 교원 및 직원 현황(이름, 재직기간 포함)을 제출할 것
43. 공영형 유치원별 '교원 공개모집 선발요강' 일체를 제출할 것
44. 공영형 유치원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여부를 제출할 것
45. 공영형 유치원별 교원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제출할 것

46. 공영형 유치원별 행정실장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제출할 것
47. 유아교육진흥원 건물에 대한 현황(교육동 부분 포함)을 제출할 것
48. 공유재산 관련 공향고 도시계획 변경 용역 자료를 제출할 것
49. 미개설 학교용지 3개교 현황 및 활용계획, 현재 활용 진행 중인 1개교 현황을 제출할 것
50. 체육관 대응투자 사업기준을 제출할 것
51. 체육관 3개년 집중투자계획서를 제출할 것
52.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증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53. 2017~2018년도 학교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실시 학교 현황 (공법 표기 포함)을 제출할 것
54.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8월 30일 이후 토목 감리자(업체) 업무일지를 제출할 것
55. 학교 주변 공사장 현황을 제출할 것
56. 2018년 2월 동작구청의 굴토심의 상정보고서, 심의결과, 심의의원 명단, 토목감리자 상주 여부 현황을 제출할 것
57. 교육청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것
58. 두런두런 프로그램 운영의 현재까지 각 기수별 운영 및 집행 결과(주요업무보고 95 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유아 658명 선정, 419명 자원 활동 등 상세내용)를 제출할 것
59. 민간위탁사업(교육청 및 산하기관 포함)의 규모, 개수, 소요예산, 위탁일, 계약기간, 수탁기관 등 자료 제출을 제출할 것
60. 두런두런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상세내용을 제출할 것
6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간, 현 실태 및 현황보고 자료를 제출할 것
62. 협력적 인성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자료를 제출할 것
63. 학생인권교육 5개년 계획 및 자료를 제출할 것
64.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계획 및 자료를 제출할 것
65. 학교 초중고 교사 수업시수 및 지난 5개년간의 변화과정 현황을 제출할 것
66. 떠드는 교실 해결을 위한 보조인력 예산 소요현황 및 실천방안을 제출할 것
67. 2017년 대안교육 관련 결산자료(기관별 제출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할 것
68.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69.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지급현황(위원수 10명, 1회 운영한 운영회만 해당)을 제출할 것

70. 위원회 수당 및 강사수당 기준을 제출할 것
71.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72. 평생진로교육국 산하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것
73. 강사 수당(방과후학교강사, 창체강사 포함)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74. 생존수영 학교 현황 및 강사 배치 현황(강사 지위, 강사 소지 자격증 포함)을 제출할 것
75. 수영교육 장소, 생존수영과 관련된 사업 및 수업계획서를 제출할 것
76. 생존수영 관련 인력(강사, 안전요원 등) 채용기준, 자격기준, 직책(직위), 수당지급기준, 처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77. 수영강사 학교별 현황을 제출할 것
78. 점자책 보유현황(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현황)을 제출할 것
79. 학업중단숙려제 관련 전문 기관 현황(주요사업내용, 예산 및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제출할 것
80. 지역교육복지센터와 대안교육관련기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을 제출할 것
81. 2015-2017년 정책 실명제 대상사업 현황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것
82. 2019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현장실태조사보고서(지원청별)를 제출할 것
83.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운영 프로그램 세부자료를 제출할 것
84. BTL사업으로 건축 개축된 학교 현황(연도별, 지역별, 그 때 당시 학교면적, 공사비, 리스료, 리스기간, 공사업체 등 자세한 내용 포함)을 제출할 것
85. 기관운영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제출할 것
86. 햇빛발전소 환경에너지교육 교재교구 개발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87. 교육환경개선사업 적정 자재 사용 체크리스트를 제출할 것
88. 최근 5년간 지원청별 적정자재 체크리스트 사용 결과를 제출할 것
89.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감사에 지적된 사례를 제출할 것
90. 5년간 정책자문위원회,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할 것 (회의내용과 자문위원 내용. 자문위원 내용으로 반영된 정책내용, 세부내용)
91. 유치원 CCTV 현황을 공·사립별, 자치구(위치)별, 시설별로 제출할 것
92. 교육청 신청사 설계계약서, 계약방법, 계약진행상황을 제출할 것
93. 서울시교육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 개방 사유 및 개방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할 것
94. 동대문구 대한노인지회 경로효행 장학생 선정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관내 초·중학교에서 선정기준이 모호해서 선정에 어렵다고 보고하였는데, 보편적인 기준은 왜 없는지, 관련 내용 확인 및 자료를 제출할 것

95. 학교강당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할 것
96. 체육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및 공기질 측정현황을 제출할 것
97. 교육청은 현장 실습생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할 것
98.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할 것
99. 상도유치원 붕괴 이후 진척 상황을 제출할 것
100. 공익법인 중 언론사 주식보유 공익법인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
101. 자율학교 지정현황, 혁신학교 종합계획,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제출할 것
102. 학습부진아 교육진흥계획, 학습부진아 실태조사자료를 제출할 것
103. 다문화기본계획,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현황 자료, 다문화교육 지원 센터 현황자료,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제출할 것
104. 진로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105. 초·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교사 및 학부모 연수현황 포함)을 제출할 것
106.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전용교실 구축 현황을 제출할 것
107. 특성화고에 있는 진로체험관 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
108. 연구학교 지정 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
109. 직업체험기관 지정현황, 분야별(공공기관, 대안 민간기관, 비영리 사회 단체) 현황을 제출할 것
110. 진로교육센터 및 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별도 표시하여 제출)
111. 학업중단 예방계획서를 제출할 것
112. 학교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자료 및 상담현황자료를 제출할 것
113.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내역을 제출할 것
114. 공립대안학교 및 대안학교 설치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
1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서를 제출할 것
116.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역, 학교폭력 예방연구 내용을 제출할 것
117. 2017-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를 제출할 것
118.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 예방학교사업 분쟁 조정지원 예산지원내역을 제출할 것
119.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할 것
120. 홈페이지 평가 실시 내역을 제출할 것
12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할 것

122.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 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관련)을 제출할 것
123.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제출할 것
124. 시설물 세부 안전기준을 제출할 것
125. 2018년도 시설물 정기점검결과를 제출할 것
12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 자료 및 시행내역을 제출할 것
127.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제출할 것
128. 학교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
129. 2018년 석면교체 사업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
130. 석면교체사업 관련 현황자료(교체 관련 계약내용 및 계약 담당자 현황 포함)를 제출할 것
131. 윤중중학교 2019년 학교환경개선사업 현황을 제출할 것
132. 영등포구 초·중·고 체육관 및 강당현황, 급식실 현황(미설치인 곳은 설치계획 포함)을 제출할 것
133. 상도유치원 고발 내용을 제출할 것
134. 서울형혁신지구 구별 예산을 제출할 것
135. 교육청 학생안전 매뉴얼을 제출할 것
136. 교육장, 장학관 임용 관련 근거 법규를 제출할 것
137.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 노조 성명서를 제출할 것
138. 서울시 고교 무상급식 예산현황을 제출할 것
139. 클라우드 구축 시스템 예산 지원 현황, 현재 시범학교를 제출할 것
140. 안심유치원 현황을 제출할 것
141. 혁신학교 지정 현황을 제출할 것
142. 유·초·중학교 수시점검 현황자료, 조치결과 및 감사관 이관현황을 제출할 것
143. 유치원 지도점검 시정명령을 완료한 유치원과 미이행 유치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144. 전문상담사 운영 현황 실태(인건비 포함)를 제출할 것
145. 인강학교 교원복무위반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할 것
 - 1, 2차 감사위원 명단
 - 감사 이후 조치 현황
146.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현황(변호사 이름 포함) 및 사업예산 현황을 제출할 것
147. 교남학교 및 인강학교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

148.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현원 현황을 제출할 것
149.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현원 현황을 제출할 것
150. 상도유치원 고발 현황 및 고발 내용을 제출할 것
151. 3년간 징계가 경감된 교사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
152. 교원 정·현원 현황, 정원 배치 관련 근거(조례, 규칙 등) 자료를 제출할 것
153. 유·초·중·고 일반장학 및 특별장학 지도점검 지침서를 제출할 것
154.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
155. 유아대상 영어학원과 단속 점검대상 학원 현황을 제출할 것
156. 학교 창호 안전바 미설치 점검 현황을 제출할 것
157. 상도유치원 건축 당시 감리자, 시공사 공사 내역서, 동작구청의 인허가서 내역을 제출할 것
158. 2018. 7. 19.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출할 것
159. 전체 노조별 단체 협약서를 제출할 것
160. 노조별 조합원 수 현황을 제출할 것
161. 에듀과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립학교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할 것
162.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유아 원감 연수 참석자의 복무 현황을 제출할 것
163.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9급 공채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
164. 교육청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 산정기준을 제출할 것
165. 2017~2018년도 유아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선발시험 1차 전형 서술형 문제지를 제출할 것
166. 2016~2018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수강료 본인부담금 세부현황을 제출할 것
167.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서를 제출할 것
168. 조상호의원에게 업무추진비 관련 문자를 보낸 공무원 신원 파악하여 제출할 것
169. 업무추진비 자료 미제출학교(대신디자인고등학교, 원일고등학교, 여명학교, 지구촌학교) 제출할 것
170. 공영형 유치원 지원예산 및 정산서, 2017년 예·결산서를 제출할 것
171. 개방이사 인력풀 명단(성명 풀네임 기재) 및 구성 원칙, 구성방법 자료를 제출할 것

172. 유아전문직 자료 일체, 채점 기준 등을 제출할 것
173. 공영형 사립유치원 임직원 프로필, 이사 프로필, 전직 교육청 근무자, 유치원 근무자들 많은 것 같으니 상세하게(플네임)작성하여 제출할 것
174. 유·초·중 지도점검 중 비리·적발 등으로 감사관으로 이관된 사례를 제출할 것
175. 한국유아교육 행정협의회 참석 관련 확인 및 조치 후 현황을 제출할 것
176. 2017~2018년 공영형 유치원 주1회 컨설팅 실시 관련 대장을 제출할 것
177. 공영형 사립유치원 교직원 현황을 제출할 것
178. 공영형 유치원 2018년 예산서를 제출할 것
179. 공영형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지침(규정)을 제출할 것
180. 2017~2018년도 유아장학사 합격자 중 유아교육진흥원 출신 합격자 명단을 제출할 것
181. 공영형 유치원 교직원(교사, 행정실 직원 등) 프로필 및 1년간 총 연봉(수당 포함), 교직원들의 가족관계(이사장이나 원장과의 가족관계) 현황을 제출할 것
182.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자 중 교원 성과상여금을 받은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및 성과상여금 착오 지급한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여부 현황을 제출할 것
183. 유치원 교원 출장과 관련한 매뉴얼, 단설 및 병설유치원 원감 복무 점검현황을 제출할 것
184. 공영형유치원 개방형이사 인력풀 명단과 관련하여 명단 추천자 현황을 제출할 것
185. 공영형 유치원 관련 유아교육과 전직원 출장내역을 제출할 것
186. 초중등교원 능력평가표(학부모, 학생용)를 제출할 것
187.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결 규정을 제출할 것
188. 서울 관내 유치원 원장, 원감의 2017년도 출장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
 - 이름, 소속(유치원명, 공·사립 구분), 직급, 출장일수, 지급금액, 비고
189. 현 시점 기준 서울시교육청 MOU체결현황을 제출할 것
 - MOU체결일, MOU 체결기간, MOU체결 주요내용 및 체결목적, MOU체결 기관명
190. 2년간 교육전문직(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겸직 허가 공문 실시 현황을 제출할 것

191. 교육공무직(시간제 돌봄, 청소)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최근1년)을 제출할 것
192. 교육청 돌봄전담사 직무분석 결과를 제출할 것
193. 스쿨존지역 내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관련 민원조치사항(3년치) 및 학교 내 교통사고 현황을 제출할 것
194.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제출할 것
195. 학교방문사전예약제 시행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
196. 꿈을 담은교실 예산 부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 제출할 것
197. 초과근무수당 신청내역 및 지불내역(시간제 및 전일제 포함), 그 내역에 발생한 원인(어떤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신청했는지)을 제출할 것
198. 교육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침과 다른 공문 발송(실수한 담당자에 대한 감사 결과)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
199. CCTV 유치원 설치 의무화 현황을 제출할 것
200. 장애인학생 희망 학교 수요조사 시기 현황을 제출할 것
201. 특수학교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 및 양변기 설치율을 제출할 것
202. 학교평등예산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출할 것
203. 2016~2018년 학교평등예산 예산집행 후 결산하면서 나온 정책평가 분석자료를 제출할 것
204. 공립유치원 교사 2017년, 2018년 채용현황을 제출할 것
205. 학교평등예산제 2016년도 설문조사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
206. 예방적차원 선행조치 지도감사 실적(3년치)을 제출할 것
207.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1차 전형별 응시자 점수 및 등수 현황을 제출할 것
 - 1차 전형 중 서술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1차 전형 중 논술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1차 전형 중 사업기획안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1차 전형 중 장학 능력 평가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208.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1차 전형 응시자 총점 및 등수 현황을 제출할 것
209.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1차 전형 합격자 점수 및 등수 현황을 제출할 것

210.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2차 응시자 총점 및 등수 현황을 제출할 것
211.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최종합격자 점수 및 등수 현황을 제출할 것
212.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 2차 전형별 응시자 점수 및 등수 현황을 제출할 것
 - 2차 전형 중 현장근무실태평가 온라인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2차 전형 중 현장근무실태평가 유선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2차 전형 중 현장근무실태평가 방문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2차 전형 중 심층면접평가 개인심층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 2차 전형 중 심층면접평가 집단토의 응시자별 점수 및 등수
213.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출제 선제채점 기준계획서(출제 시 채점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
214.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규정(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규정)을 제출할 것
215. 2016-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평가자 명단(각 평가자 소속, 각 평가자 직책 등 정보 포함)을 제출할 것
216. 2014-2018년 5년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교사 응시자, 교사1차 합격자, 교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명단 및 경쟁률 현황을 제출할 것
217. 2017-2018년 채점 면접평가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모든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포함)
 - 1차 전형 출제위원 명단
 - 1차 전형 선제위원 명단
 - 1차 전형 채점위원 명단
 - 2차 전형 출제위원 명단
 - 2차 전형 선제위원 명단
 - 2차 전형 현장근무실태 유선평가 평가위원
 - 2차 전형 현장근무실태 1팀 방문평가 평가위원
 - 2차 전형 현장근무실태 2팀 방문평가 평가위원
 - 2차 전형 심층면접(개별면접 1팀) 평가위원
 - 2차 전형 심층면접(2팀) 평가위원
 - 2차 전형 심층면접(집단면접 1팀) 평가위원

- 218. 2018년 1차 전형 채점위원의 응시자별 채점 성적을 제출할 것
- 219. 2014-2018년 5년간 유아교육전문직원 선발전형 원감 응시자, 원감 1차 합격자, 원감 최종합격자에 대한 명단 및 경쟁률 현황을 제출할 것
- 220. 2018년 1차 전형 채점자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된 모범답안 또는 채점 기준표를 제출할 것
- 221. 2018년 1차 전형 채점기준 변경 시 변경 전·후 비교표를 제출할 것
- 222. 전형응시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모든 응시자 및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포함)
 - 2017-2018년 응시자, 출제자, 채점자, 면접자의 현재까지의 근무 기관, 이전 소속된 교육지원청
- 223. 유선평가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모든 응시자 및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포함)
 - 2017-2018년 응시자별 온라인평가 및 홈페이지 의견수렴 결과
 - 2018년 유선평가자 별 응시자 평가 점수
 - 2018년 유선평가 배점 상세 기준
 - 2018년 방문평가팀의 평가자별 응시자 평가 점수
- 224. 현장근무실태 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모든 응시자 및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포함)
 - 2018년 현장근무실태 평가 배점 상세기준
 - 2018년 현장근무실태평가자 별 응시자 평가 점수
- 225. 심층면접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모든 응시자 및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포함)
 - 2018년 심층면접(개별면접 A팀, B팀) 평가자별 응시자 점수
 - 2018년 심층면접(집단면접) 평가자별 응시자 점수
 - 2017년 심층면접(개별면접, 집단면접) 평가자별 응시자 점수
- 226. 서술형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018년 서술형 문제지
 - 2018년 서술형 응시자 답안지
- 227. 장학능력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모든 응시자 및 위원 소속, 직위, 성명 포함)
 - 2017년 장학능력평가 평가자별 점수
 - 2017년 집단면접, 개별면접 평가자별 점수
- 228. 프리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2017-2018년 지필평가에 ‘흑색볼펜’ 아닌 ‘지워지는 펜’을 사용한 응시자 명단

229. 채점 기준안 자료 받았으나 직위, 성명 표기해서 다시 제출할 것
230.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감사사례(사건)에 대한 통계 등 정리자료(3년치)를 제출할 것
231. 교육정책국장 서류 관인 안 찍혀 있음(보완 요청), 출제 시험지 제출할 것
232. 유치원 전문직 가산점 현황(추가제출)을 제출할 것
233. 국립유치원 현황, 2017년 및 2018년 임용고시 유치원 고시 가산점 기준표를 제출할 것
234. 유아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합격자 명단을 다시 제출할 것
235. 2016~2018년 국립유치원 세입세출 현황 제출할 것
236. 2016~2018년 10월까지 국립유치원 전직원 근무현황을 제출할 것
237. 학교별 지하공영주차장, 다목적시설 등 민간인과 협약을 맺어 관리하는 시설현황을 제출할 것
238. 식재료 검수자료(2017-2018년) 납품품목, 일자, 납품자, 검수자, 확인자 현황을 제출할 것
239. 급식위원회 회의자료 (2017-2018년), 역할, 회의내용, 참석자 현황을 제출할 것
240. 영양(교)사 발주서 일자, 품목, 발주담당자, 접수자 현황을 제출할 것
241. 급식 관련 교육청 및 학교 보관 서류명 현황을 제출할 것
242. 영양(교)사 인적사항(발령일시, 현재직함) 조리종사원 포함하여 제출할 것
243.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조달(계약) 현황을 제출할 것
244. 2018. 10. 29. ~ 11. 6. 진행한 특수학교 감사 관련 자료(감사활동내용, 참여인원, 매뉴얼에 따라 조사했는지 여부, 점검사항, 면담대상)를 제출할 것
245. 공·사립 학교시설개방 사용료 현황을 제출할 것
246. 사회복지무요원 급여 지급 주체 규정 등 제출할 것
247. 유아전문직 관련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
248. 교육콜센터 상담사 수와 처리내용, 처리기간 등 자료를 제출할 것
249. 악성민원 대응메뉴얼을 제출할 것
250.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취업한 현황자료를 제출할 것
251. 2016년 개정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출할 것

252. 교육감 2기 출범 정책사업 정비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
253.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를 제출할 것
254. 유치원 CCTV 현황, 공·사립별, 자치구(위치)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255. 명예퇴직 후 기간제 재취업 현황을 제출할 것
256. 기간제교사 기간현황을 제출할 것
257. 기간제교사 중 4년 이상 장기임용 현황을 제출할 것
258. 유·초·중학교 수시점검 현황자료 및 조치결과 및 감사관 이관현황을 제출할 것
259. 사립 교원 비리유형 및 조치현황(법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을 제출할 것
260.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규정 상 어느 것이 공개이고, 어느 것이 비공개인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할 것
261. 전문상담사 위센터, 위클래스별 현황(수당 현황 자료 정확하게 제출)을 제출할 것
262. 특수학교 영양사 배치 현황을 제출할 것
263. 타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전문상담사 인건비 비교표(순위 포함)를 제출할 것
264. 2017-2018년 생존수영-특수학교 시행현황을 제출할 것
265. 7월 이후 유·초·중·고·특수 공기청정기 설치현황(변동사항)을 제출할 것
266. 미인가 국제학교 21건 및 그외 24건 교육시설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제출할 것
267. 노후건축물 점검 현황(전기점검 포함) 관련 특별·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상세내역과 조치내역을 제출할 것
268.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 매뉴얼을 제출할 것
269. 서울교육공간디자인 혁신 추진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내역을 제출할 것
270. 2019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관련 대상사업 현황을 제출할 것
271. 3개년 체육관 집중 투자계획 자료를 제출할 것
272. 2018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연수 및 컨설팅 운영 계획(안)을 제출할 것
273. 상근 시민감사관(임기제)들의 선정절차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74.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포함)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것
275. 2013. 10. 24.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후 현재까지의 전교조 노조 지위 관련 재판 진행상황을(사건번호 포함)제출할 것

276. 전교조 전임자 현황 및 인정근거(관계법령)를 제출할 것
277.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 그 학교의 대학 진학률, 전학률, 학업 중단률을 자료로 제출할 것
278. 교육청이 자체 광고물을 보급하는 매체 선정 기준과 근거를 제출할 것
279. 역사보조교재 지급된 각종 학교 목록을 제출할 것
280. 본의원이 첨부하는 단체들에 어떤 홍보효과를 기대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인터넷 매체의 경우 일일 홈페이지 접속자 수, 오프라인 단체의 경우 발행 부수 분석결과 명시할 것)
281. 해당 단체들이 예산을 내려 보낸 후 결산보고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제출할 것
282. 어떻게 한결같이 한쪽의 정치색채를 띤 시민단체에만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할 것
283. 역사보조교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출판사 목록을 제출할 것
284. 역사보조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의 중간 및 기말 한국사 시험지를 제출할 것
285. 역사보조교재 지급 당시 관련 공문 혹은 공문이 없다면 교육지침을 제출할 것
286. 서울시 전체학교 체육코치 파견 현황(종목, 인원, 파견된 학교명)을 제출할 것
287. 서울청소년창업동아리페스티벌 현황(2018년 계획 및 예산안 포함)을 제출할 것
288. 최근 1년 각급학교(중, 고) 학폭위 전담기구가 실태조사 시, 사용한 예산 현황을 제출할 것
289. 학폭위 전담기구 책임교사가 작성하는 서식을 제출할 것
290. 학교급(초중고)별 지원청별 1개교씩 성교육 내용을 제출할 것
291. 상담(교)사 학교 상담실적 현황을 제출할 것
292. 성교육 상담실적 관련 지원청별 상담횟수 통계자료를 제출할 것
293. 체육코치 배치 현황 및 기준을 제출할 것
294.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징계교사(교직원포함) 현황자료(연락처는 제외, 학교와 이름은 실명기재)를 제출할 것
295. 평양-서울 학생교류 사업 진행현황을 제출할 것
296. 은혜초등학교 폐교 진행현황을 제출할 것
297. 3년간 징계가 경감된 교사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

남부교육지원청 : 2건

1. 수영대회 관련 민원의 원인 및 결과를 제출할 것
2. 서울신흥초 복합화시설 수입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2건

1.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예산 편성 목적 및 타 교육지원청과 예산편성 차이는 이유를 제출할 것
2. 2018년 메이커교육 관련 교원연수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할 것

교육연구정보원 : 2건

1.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동영상제작 동영상클릭수, 런타임, 활용도, 제작비용 자료를 제출할 것
2. 교육연구정보원 원격연수내실화 강좌명, 강좌개수, 이수 수료기준을 제출할 것

교육연수원 : 3건

1. 교육연수원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명, 내용, 시간 현황을 제출할 것
2. 교육연수원 원격연수내실화 강좌명, 강좌개수, 이수 수료기준을 제출할 것
3. 교육연수원 인권인지교육 관련 별도 커리큘럼을 제출할 것

유아교육진흥원 : 1건

1.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 건물 관련 소유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학교보건진흥원 : 1건

1. 지난 3년간 학교보건진흥원 급식시설컨설팅 사업내용(상세하게)을 제출할 것

교육시설관리본부 : 2건

1. 교육시설관리본부 기관운영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제출할 것.
2. 교육시설관리본부 최근 3년 안전점검 실시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

도서관(공통) : 5건

1. 도서관, 평생학습관 급별 담당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것
2. 도서관, 평생학습관, 연수원 부대시설 현황을 제출할 것
3.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지급현황(위원수 10명, 1회 운영한 운영회만 해당)을 제출할 것
4.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별 책나래 이용률을 제출할 것
5. 점자책 보유현황(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현황)을 제출할 것

정독도서관 : 1건

1. 정독 도서관 이용현황을 제출할 것

평생학습관(공통) : 4건

1. 도서관, 평생학습관 급별 담당 업무분장표를 제출할 것
2. 도서관, 평생학습관, 연수원 부대시설 현황을 제출할 것
3.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별 책나래 이용률을 제출할 것
4. 점자책 보유현황(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서비스현황)을 제출할 것

학교안전공제회 : 2건

1. 최근 3년 학교안전공제회 지출내역을 제출할 것
2. 치료비 사전 지급 절차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추가 감사 요구**

● 대상기관 : 서울시주택도시공사

● 감사 요청 내용

가. 공사 직원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영농보상금 편취 및 생활대책 용지보상 청구 등의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

- 사업지구별 생활대책 보상(영농 등) 업무처리 시 위법 여부 및 결재 방식, 보상기준 등에 있어서의 적정 여부

- 재발방지 및 업무개선 사항 도출

나. 임대주택단지 위탁관리 업체 중 공사출신 직원이 운영 또는 근무하는 3개 업체에 임대주택 재고의 절반을 위탁 관리중인 것과 관련

- 임대주택단지 수탁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위법 여부

- 재발방지 및 업무개선 사항 도출

다.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하도급사에 공사직원(주거복지단 노원센터) 자택 무상수리 요구, 금품수수, 공사비 미지급 및 불법하도급 등의 비위사건 발생 관련

- 공사 주거복지단 소속 타 지역센터의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관련 비위사실 여부

- 비위 차단방안 및 업무개선 사항 도출